

국토연 2002-6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Locational Analysis and Spatial Reorganization Strategies
of Central Management Functions in Korea

●
박양호 · 김창현



연구진

연구책임 ·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책임 · 김창현 책임연구위원

국토연 2002-6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글쓴이 · 박양호, 김창현 / 발행자 · 이규방 / 발행처 ·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 제2-22호 / 인쇄 · 2002년 12월 28일 / 발행 · 2002년 12월 31일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 · 031-380-0426(정보자료팀) 031-380-0114(대표) / 팩스 · 031-380-0474
값 · 7,000원 / ISBN · 89-8182-205-0
<http://www.krihs.re.kr>

©2002, 국토연구원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서 문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국가체제를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의 국가체제로 개혁해 가는 일은 국가적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역간 격차문제는 항상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어왔고 격차해소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간 격차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 사회경제적인 수도권 의존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공공기관, 대기업본사, 명문대학 등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은 고급전문직종과 같은 고소득의 취업기회, 첨단 정보·통신업체, 금융기능 등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인력 및 하위기능의 연쇄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을 유발하여 지방의 사막화를 초래하고 있다. 산업생산기능의 물리적 입지 재편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정책이 수도권과 지방간의 발전격차를 해소하는 데서 그 한계를 이미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 나아가 세계경제의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발전촉진이 반드시 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의 발전촉진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이 핵심적인 정책방안 중의 하나이다.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이 지역발전 나아가 지역간 균형을 통한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긴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적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등 각종 국가정책에

서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이 핵심의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국외에서도 우리와 같이 수도권 과밀문제를 안고 있는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십 수년 전부터 21세기에 걸맞은 국가구조로의 혁신과 수도권 및 지방의 새로운 발전기회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국회 등 수도권기능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연구는 국토불균형 문제의 핵심원인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실태와 입지동향을 분석하여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이에 근거하여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가능성과 공간적 재편의 필요성을 논하고,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 전략과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결과가 21세기 분권·분산국가 모델의 형성에 초석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한 논의와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김창현 책임연구위원 등 전담 연구진의 협력·열정과 그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아울러 바쁜 가운데서도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서울 시립대학교의 남진 교수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02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이 규 방

요 약

본 연구는 국가적 과제로 부각된 국토균형발전,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위해 중추기능의 입지실태를 구명(究明)하고,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통한 국토재편의 전략과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토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개발관련 정책들을 수립, 집행하였지만 인구 및 산업과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지방의 사회경제적 수도권 종속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토불균형 문제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는 국가공공기관(政), 기업본사(産), 명문대학(學) 부문에서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실태와 입지동향을 규명하고,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어 정(政)·산(産)·학(學)부문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과 행·재정적, 법적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갖는 본 연구는 총 7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과 제2장은 서론과 이론적 검토 부분,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실태분석·외국사례 부분, 그리고 제6장과 제7장은 정책제안 및 결론부분에 해당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그리고 연구의 틀을 제시한다. 제2장 '중추기능의 정의와 이론적 검토'에서는 중추기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중추기능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추기능을 통제력을 갖는 기능이라 정의한다. 통제력에서 조직(본부),

경제력, 신망이 그 근원을 형성하고, 실천적 의미에서 그 각각에는 국가공공기관과 공기업본사, 대기업 본사, 명문대학이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중추기능은 중앙정부 기능(政), 대기업의 본사기능(産), 명문대학 기능(學)으로 구분된다. 중추기능 입지와 관련한 이론적 검토에서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수도기능론, 서비스기능의 중심지이론과 도시계층성, 사무활동 및 본사기능의 입지이론, 네트워크 도시체계론을 중심으로 검토하는데, 그 결과 네트워크 현상과 중심지 계층조직화 현상의 공존이 대부분의 연구결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론적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중추기능 입지와 지역변화에서 중추기능의 집중적 입지는 수도기능 일극화와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자기팽창효과를 통하여 인구 및 산업과 각종 기능이 특정 지역에 집적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중추기능의 분산적 입지는 수도기능의 다극화와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각 지역들이 기능 전문화·다양화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제3장 ‘중추기능의 입지동향과 영향력의 지역간 비교분석’에서는, 중추기능 입지동향, 중심(重心)변화, 지역중력지수에 의한 영향력을 지역간에 비교 분석한다. 최근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중추기능 입지의 지역간 분포에 다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46.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제조업 고용기회의 46.6%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추기능에 있어서는, 국가공공기관(政)의 경우 정부부처의 100%, 공기업 본사(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등을 포함)의 83.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 본사(産)의 경우는, 2000년 현재 100대 기업본사의 91%, 500대 기업본사의 82.6%, 3000대 기업본사의 71.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學)의 경우 2000년 현재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65%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다. 최근 10년 사이의 입지동향에 있어서는, 국가공공기관(政) 중 중앙 정부부처의 수도권 입지비중은 100%를 견지하고 있고,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본사의 수도권 입지비중은 0.9% 정도 감소하였으나 현재 83%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 본사(産)의 수도권 집중도에서는 100대 기업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에 94%에서 91%

< 수도권 중추기능 집중도 : 2000 >

인 구		46.3%	
제조업고용기회		46.6%	
중추기능	정(政)	중앙부처	100%
		공기업 본사	83.2%
	산(産)	100대 기업본사	91.0%
		500대 기업본사	82.6%
		3000대 기업본사	71.9%
	학(學)	20대 명문대학	65.0%

※ 중추기능 집중도는 기관 수 기준이며, 20대 명문대학은 중앙일보사 대학평가 기준이고, 공기업 본사는 2002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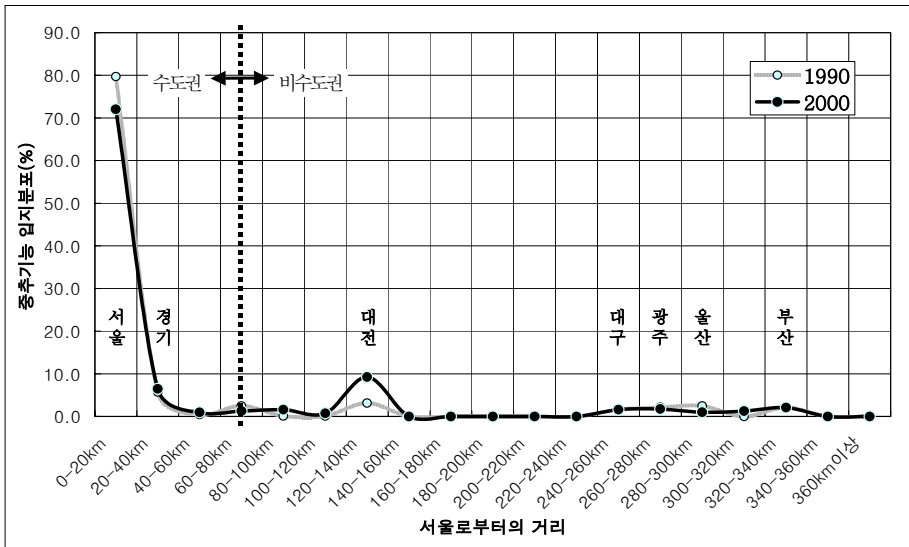
로 감소하지만 500대 기업본사의 경우는 82.6%로 변화가 없으며 3000대 기업본사의 수도권 집중도는 같은 기간 동안에 68.9%에서 71.9%로 증가한다. 대학기능(學)에 있어서는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수도권 집중도는 65%로 수도권 입지규제에도 불구하고 그 집중도에는 변화가 없다.

1990년대 이후의 입지이전경로에 있어서도 수도권 지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공공기관(政)의 경우, 특히 공기업 본사의 수도권 지향성이 높은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적 차원에서 일부기능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되었지만 대부분 청(廳)단위 기관이고 부처단위 기관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본사를 이전한 사례 18개 중 83%인 15개 본사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하였으며 지방(충청권)으로는 3개 본사만 이전한 데 불과하다. 그리고 경기도로 이전한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본사 15개 중 9개 본사가 분당, 평촌, 일산신도시로 이전하여 신도시에 대한 입지선호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기업본사 기능에서는 통신, 금융, 보험업 등은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로의 입지지향성이 매우 높고 제조업은 본사의 지방입지가 확대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증가한 100대 기업본사 중 금융·보험업 12개 기업본사 전체, 운수·창고·통신업 4개 기업본사 중 3개가 서울에 입지하며, 제조업체는 16개가 줄었지만 지방에서만 4개 기업본사가 늘어나고

있다. 500대 기업 중에서는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증가한 금융·보험업체 36개사 중 35개사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방의 충청권에서 6개 제조기업 본사가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에 3000대 기업본사 중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수도권 입지비중은 71.0%에서 85.6%로 증가하고, 금융·보험업의 경우 79.0%에서 88.2%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 본사의 입지비중은 66.7%에서 44.4%로 크게 줄어들고 있어 3000대 기업본사의 수도권 입지강화는 통신, 금융·보험업 등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에 별다른 변화 없이 수도권 집중성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반경 40km권 이내의 지역에 중추기능이 밀집되어 있어 이 지역이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분포에서 핵심지역이 되고 있다. 즉, 과천과 수도권 신도시의 대부분이 포함되는 이 지역에 현재 중앙 정부부처의 100%,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본사의 81% 이상, 100대 기업본사의 90% 정도, 20대 명문대학의 65%가 입지해 있다.

<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중추기능의 입지분포 : 정(政)·산(産)·학(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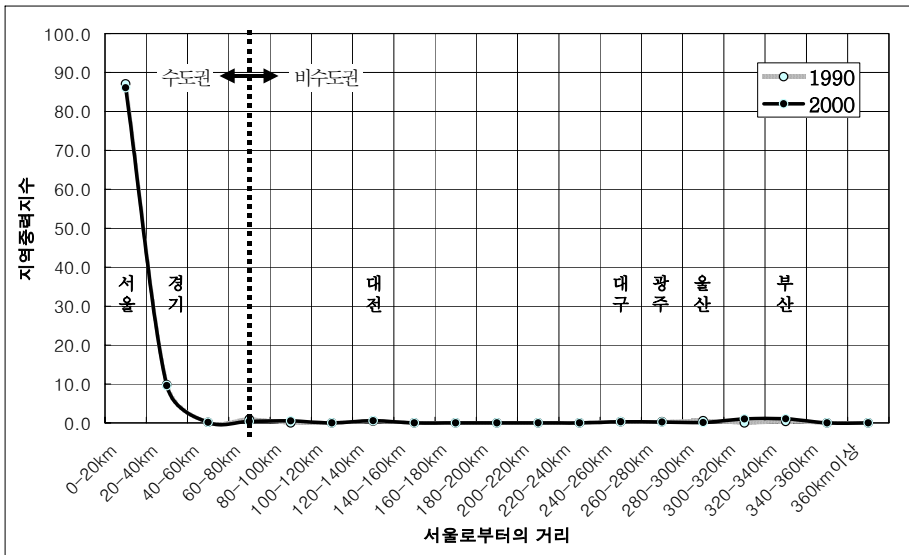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은 중추기능의 국토공간상 중심(重心) 변화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즉,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인구를 기준으로 한 국토공간상의 중심(重心)은 서울로부터 126km 지점에서 119km 지점으로 서울에 7km 정도 가까워지고 있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 국토공간상의 중심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 방향으로 5.2km(130.5km→125.3km) 정도 당겨지고 있다. 중추기능 중 국가공공기관(政)의 국토중심점은 서울반경 40km 이내에 계속 머물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본사의 경우는 서울방향으로 약간 끌어당겨지고 있다. 대기업 본사(産)의 경우, 100대 기업본사의 국토중심점은 미세한 변화를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서울반경 20km의 최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500대 기업본사의 경우 5.3km(45.9km→40.5km), 1000대 기업본사의 경우는 약 4.9km(62.7km→57.7km), 3000대 기업본사의 경우는 13km 정도(79.6km→66.6km) 서울방향으로 당겨졌다.

최근 10년 사이에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성과 지향성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중추기능에서의 수도권 흡인력이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력모형을 응용한 지역중력지수(regional gravitation index: RGI)를 이용하여 지역간 상호작용에 대한 수도권의 지배력을 측정된 결과,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지역간 상호작용에서 전체의 95% 이상을 수도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공공기관(政)에 의한 지역간 상호작용에서 수도권의 지배력은 전체의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대전청사로의 일부기능 이전에도 불구하고 1992년과 2000년 사이에 수도권 지배력의 감소는 0.4%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본사의 경우에는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수도권의 지배력은 전체의 98.4%에서 99.0%로 증대되고 있다. 대기업 본사(産)에 의한 지역간 상호작용에서 수도권의 지배력은 기업규모에 따라 약간 다른 특성을 보이기는 하나 매우 강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100대 기업본사의 경우 수도권의 지배력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전체의 99.5%에서 99.3%로 99% 이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변화가 미미하고, 500대 기업본사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지배력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전체의 96.9%에서 98.3%로 크게

증가하며, 3000대 기업본사의 경우 수도권의 지배력은 같은 기간 동안에 전체의 94.6%에서 95.3%로 증가하여 수도권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20대 주요 명문대학(學)을 기준으로 한 지역간 상호작용에서 수도권의 지배력은,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1996년과 2001년 사이에 전체의 90.3%에서 85.4%로 약간 감소하나,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교수 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1993년과 2001년 사이에 전체의 90.5%에서 91.1%로 증가한다.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지역간 상호교류작용에서 수도권의 지배력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여 수도권이 우리나라 중추기능을 지배하고 있으며 지방의 수도권 종속성이 매우 심함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로부터 반경 40km권내에 중추기능 지역중력의 95% 이상이 응축되어 이 지역이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핵이 되고 있다. 즉, 서울반경 40km권 지역이 수도권으로 인구, 산업 및 각종 기능을 끌어당기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중추기능 지역중력지수의 분포 : 정(政)·산(産)·학(學) >



제4장 '중추기능의 입지결정요인과 인과메커니즘 분석'에서는 중추기능 입지 결정요인에 관한 조사·분석, 중추기능 실태분석결과와의 종합, 이에 의거한 중추기능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을 도출한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추기능 중 민간 기업의 본사입지에서 기업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각종 정보 및 자금과 정부 등 국가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단체·업계와의 정보교환·수집, 자금조달 등 금융거래, 정부·행정기관 등과의 접촉, 우수한 인재의 확보 면에서 수도권의 입지여건이 지방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동시에 기업본사 지방분산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거대한 시장, 국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집중으로 인한 각종 정보와 자금의 집중, 국제교류기반의 충실, 고급인재의 집적, 교통 및 생활여건의 양호함 등이 입지선호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지방의 경우는 주력공장과의 업무연계가 입지선호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다.

기업본사를 지방에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서도 서울지사[지점·사무소]가 실질적인 본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향후 기업본사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서도 본사의 핵심기능보다는 교육·연수기능, 기술·연구개발기능 등 일부 부차적인 기능만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기업본사의 입지선호지역에서도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수도권이 갖는 입지상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충청지역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하여 국가행정기관, 즉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종 공공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그 주변에 집적됨으로써 각종 정보와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에 수익성 원리에 따라 그 입지가 결정되는 민간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즉,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수도권 집중이 기업본사 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추기능의 입지분포·영향력·입지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는 두 가지의 동태적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내적 메커니즘(inside dynamic mechanism)인데 이는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 상호간의 자체 공생(共生)메커니즘이며, 다른 하나는 외적 메커니즘(outside dynamic mechanism)으로서 수도기능의 입지와 집중, 중앙 집권적 정치행정구조, 정보 및 자금의 집중, 시장수요(인구규모)의 크기, 고급두뇌의 입지, 관련단체 및 업계의 입지, 고속교통·첨단정보통신 기반, 국제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등의 동인들이 상호 결합된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내적 메커니즘과 외적 메커니즘은 고도로 연계되어 정경협력, 사회적 관성, 네트워크 등의 요인으로 얽혀 있는 가운데 전체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성과 지향성을 원천으로 하여 서울을 핵(核)으로 하는 수도권이 중추기능에서 강력한 자력(磁力)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토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대전청사로의 일부 정부기능 이전,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입지선호 강화 등으로부터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을 위해서는 정부기능을 핵으로 하는 패키지 단위로 기능을 분산하고 그 물리적 받침점시로서는 신도시 내지는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방안은 정(政)·산(産)·학(學) 중선도기능을 어느 분야에서 찾느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에 기초한 전략이 중요하다. 넷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매우 혁신적인 방안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제5장 '중추기능 분산의 외국사례'에서는 중추기능의 분산에 관한 외국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전에서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호주의 캔버라 등은 수도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며, 독일과 말레이시아 등은 정부부처의 일부기능을 분산시킨 유형에 해당하고,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최근 그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추

진되고 있는 일본의 수도기능 이전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핵심 수도기능의 지방분산과 일부기능의 동경잔류가 유력하다. 외국의 기업본사 입지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 지방분산 경향이 뚜렷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동경(東京)집중성이 강한 가운데 일부 지방분산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기능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국립행정학교(ENA)를 수도와 지방으로 분산시키면서 본부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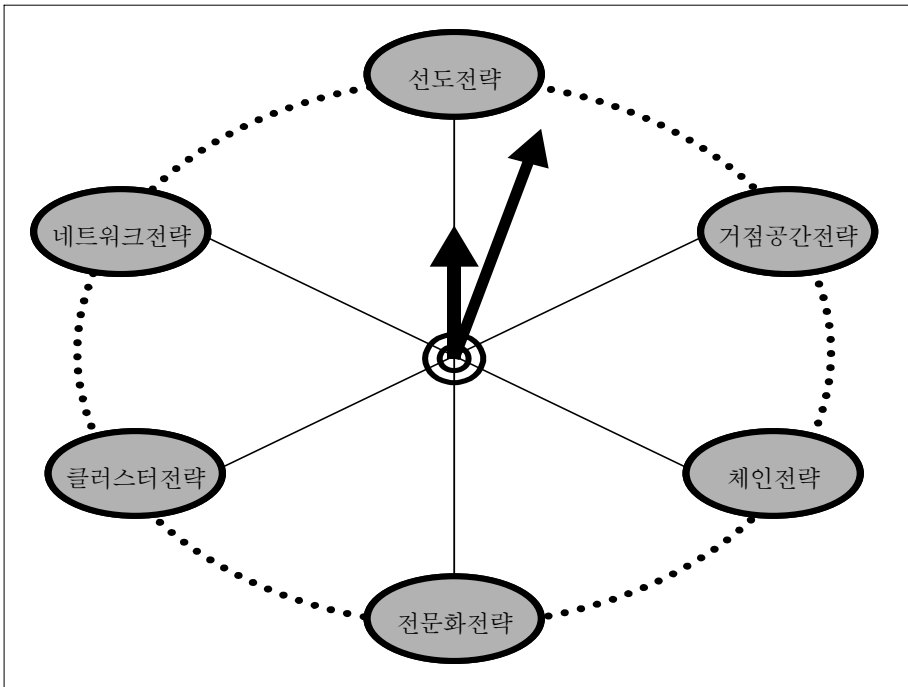
제6장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 전략과 방안'에서는 먼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해온 중추기능 지방분산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존 중추기능 지방분산 관련 정책은 수도권 규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의지와 수용여건이 지방이전에서 성공의 관건이 된다. 기업의 지방이전은 지원장치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민간부문의 지방 밀어내기 방식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대학의 지방이전은 개별대학의 공간수요에 의존하고 대학의 지방이전이 기존 지방대학의 육성정책과 직접적인 상충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부터 수도권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하고 국가공공기관의 분산이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을 촉발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방이전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의 내적 메커니즘과 외적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요소에 의거하여 향후의 여건변화를 전망한다. 중추기능 수도권 집중의 지속화와 지방분산 가능성이 병존하고 있으나 분산가능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이 전개되면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하고 있다. 이 때 수도권 집중의 블랙홀 역할을 담당하는 정(政)·산(産)·학(學) 중추기관이 수도권에 초일극의 지배력을 갖는 슈퍼 모노(Super Mono)형의 국토체제에서 탈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을 선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되 지역별로 특정부문에 전문화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일종의 「전문화된 다핵수도체제」(Specialized Multi-Capitals)로 국토공간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화된 다핵수도체제로 국토공간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5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을 수도기능의 분산차원에서 접근하고, 중추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을 지향하며, 분산하되 지방경제발전의 특화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산하고, 중추기능 중 지방분산이 용이한 기능부터 이전하며,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을 순차적 또는 병렬적으로 지방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모형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의 6가지 전략요소로 구성되고 6가지 전략요소를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모델(시계모델)이다. 6가지 전략요소, 첫째 정(政)·산(産)·학(學) 중추기관 중 선도기능을 갖는 중추기관을 선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① 선도전략,

<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 모형 : 시계모델 >



둘째 선도전략에 의거하여 지방으로 이전되는 중추기관을 지방에서 수용하는 공간을 만들되 지방의 거점도시에 조성하는 ② 거점공간전략, 셋째 공간적 이주(migration)에서 연쇄이주(chain migration)와 유사하게 선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을 뒤따르거나 병행하여 선도 중추기관이 입지한 거점공간으로 중추기관이 연쇄 이전하는 ③ 체인전략, 넷째 선도적으로 이전하는 중추기관과 뒤따라 이전되어 오는 타 중추기관이 거점공간에서 특정기능으로 전문화하는 ④ 전문화전략, 다섯째 전문화하되 관련 제조업체, 관련 서비스업, 관련 지원단체·조합, 관련 연구소, 관련 대학 등이 군집하여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⑤ 클러스터(cluster)전략, 그리고 여섯째 클러스터(cluster) 된 지역이 수도권과 타지역, 외국과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하여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상호 이동하고 교류하는 ⑥ 네트워크전략이다.

끝으로, 제7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분석결과와 정책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부록’에는 본문 내용에 담지 못한 시·도간 중추기능의 입지분포와 지역중력지수에 관한 세부자료 및 분석결과, 시·군의 센터좌표, 100대 기업과 분석대상 공기업·정부산하기관(2002)에 관한 상세자료, 일본의 국회 등 이전에 관한 논의와 기타 국가공공기관 지방분산과 관련한 외국사례, 중추기능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설문조사표 등을 수록함으로써 연구의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뿐만 아니라 차후의 중추기능과 관련한 논의 및 연구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 례

서 문	i
요 약	iii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1) 연구목적	2
2) 연구범위	3
3) 연구방법	4
3. 연구의 틀	5

제 2 장 중추기능의 정의와 이론적 검토

1. 중추기능의 정의	7
1) 개념적 정의	7
2) 실천적 정의	8
2. 중추기능의 입지관련 이론검토	10
1) 수도기능론(首都機能論)	10
2) 서비스기능의 중심지이론과 도시계층성	14
3) 사무활동 및 본사기능의 입지이론	15
4) 네트워크 도시체계론	15
3. 중추기능 입지이론과 지역발전 종합	18

제 3 장 중추기능의 입지동향과 영향력의 지역간 비교분석

1. 인구 및 산업 분포의 지역간 비교분석	21
1) 인구 분포의 지역간 비교	21
2) 제조업 분포의 지역간 비교	26
2. 중추기능 분포의 지역간 비교분석	30
1) 정(政) : 국가공공기관 분포의 지역간 비교	30
2) 산(産) : 기업본사 분포의 지역간 비교	42
3) 학(學) : 명문대학 분포의 지역간 비교	63
4) 중추기능 입지분포의 지역간 종합비교 : 정(政)·산(産)·학(學)	70
5) 중추기능 입지분포간의 상호 연관성	73
3. 중추기능의 국토공간적 중심(重心) 변화의 비교분석	76
1) 공간적 중심(重心)의 분석방법	76
2) 인구·산업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77
3) 정(政) : 국가공공기관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78
4) 산(産) : 기업본사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79
5) 학(學) : 주요 명문대학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81
4. 중추기능 영향력의 지역간 비교분석	83
1) 중추기능 영향력의 분석방법	83
2) 인구 및 산업 지역중력지수의 비교분석	87
3) 정(政) : 국가공공기관부문 지역중력지수의 비교분석	92
4) 산(産) : 기업본사부문 지역중력지수의 비교분석	100
5) 학(學) : 대학부문 지역중력지수의 비교분석	106
6) 중추기능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종합비교 : 정(政)·산(産)·학(學)	109
7) 중추기능 지역중력지수간의 상호 연관성	112

제 4 장 중추기능의 입지결정요인과 인과메커니즘 분석

1. 중추기능 입지결정 요인의 분석전제와 주요 대상	117
2. 기업본사기능의 입지결정 요인	118
1)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유리한 요인	118
2)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불리한 요인	122

3) 기업본사 지방소재 기업의 서울지사의 기능	126
3. 기업본사의 입지이전 결정요인	128
1) 기업본사의 이전사유	128
2) 기업본사의 이전경로와 이전기능	130
3) 기업본사의 지방이전 애로요인	133
4) 기업본사의 지방이전 지원조치	136
4. 향후 기업본사의 지방분산 동향	139
1) 기업본사의 지방분산 촉진요인	139
2) 기업본사 이전의 선호지역	141
3) 주요 입지선호지역간 선호요인 비교	143
4)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본사 기능	145
5. 대학기능의 입지결정요인	147
6. 중추기능 입지분포·지배력·입지결정요인 분석결과의 종합	148
1) 중추기능 입지분포 및 중심(重心)변화 분석결과의 종합	149
2) 중추기능 영향력 분석결과의 종합	151
3) 중추기능 입지결정요인 분석결과의 종합	153
7.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집적 메커니즘과 정책적 시사점	154
1)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집적 메커니즘	154
2) 정책적 시사점	156
3) 향후의 정책방향	157

제 5 장 중추기능 분산의 외국사례

1.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전	159
1) 정부부처의 행정수도 입지유형	160
2) 정부부처의 지역분산유형	170
3)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유형	176
2. 기업본사기능의 입지동향	184
1) 일 본	184
2) 미 국	189
3. 대학의 지방이전 : 프랑스의 국립행정학교(ENA)	193

제 6 장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 전략과 방안

1.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관련 정책의 내용과 평가	195
1) 중추기능 지방분산관련 정책의 현황	195
2) 중추기능 지방분산관련 정책의 평가	200
3) 중추기능 지방분산관련 정책평가의 종합과 시사점	202
2.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여건과 전망	203
1) 전반적인 여건의 전제	204
2) 중추기능의 집적 메커니즘에 근거한 요소별 변화 전망	204
3.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	206
1) 기본방향	206
2) 중추기능 공간적 재편의 전략모델	208
3) 중추기능 공간적 재편전략별 내용	209
4.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별 방안	210
1) 선도전략 방안	210
2) 거점공간전략 방안	213
3) 체인전략 방안	214
4) 전문화전략 방안	215
5) 클러스터전략 방안	215
6) 네트워크전략 방안	216
5.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17

제 7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231
SUMMARY	239

부 록

I. 국가행정기관 지방분산 관련 외국사례	245
II. 중추기능 관련 통계자료	267
III. 기업본사의 입지결정에 관한 설문조사표	308

표 차례

<표 2-1> 중심지체계와 네트워크체계의 속성비교	16
<표 3-1> 인구의 지역간 분포변화	22
<표 3-2> 서울로부터의 거리대간 인구분포 변화	24
<표 3-3> 서울로부터의 거리대별 지역분포	25
<표 3-4> 제조업고용기회의 지역간 분포변화	26
<표 3-5> 제조업고용기회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28
<표 3-6> 중앙행정기관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2~2000	32
<표 3-7> 중앙행정기관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34
<표 3-8> 공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	36
<표 3-9> 공기업 본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41
<표 3-10> 1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0~2000	44
<표 3-11> 100대 기업 중 시·도간 본사이전기업 현황	45
<표 3-12> 1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업종분포의 변화 : 1990~2000	47
<표 3-13> 5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0~2000	50
<표 3-14> 5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업종분포 변화 : 1990~2000	52
<표 3-15> 30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0~2000	54
<표 3-16> 30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업종분포 변화 : 1990~2000	57
<표 3-17> 기업본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 1990~2000	61
<표 3-18>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6~2001	63

<표 3-19> 20대 주요 명문대학 학교수·학생·교수의 지역간 분포변화	64
<표 3-20> 20대 명문대학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비중 변화	66
<표 3-21> 우리나라의 30대 주요 명문대학	67
<표 3-22> 30대 주요 명문대학 교원·학생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3~2001	68
<표 3-23> 중추기능 입지분포의 지역간 종합비교 : 정(政)·산(産)·학(學)	71
<표 3-24> 중추기능 입지분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종합비교 : 정(政)·산(産)·학(學)	72
<표 3-25> 인구 및 중추기능 분포의 상호간 상관관계	74
<표 3-26> 인구·산업·중추기능의 국토공간상 중심(重心)의 변화	82
<표 3-27> 지역수와 지역중력지수의 관계(I)	86
<표 3-28> 지역수와 지역중력지수의 관계(II)	87
<표 3-29> 인구 및 제조업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88
<표 3-30> 인구 및 제조업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91
<표 3-31> 중앙행정기관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 1992~2000	94
<표 3-32> 공기업 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 1992~2002	95
<표 3-33> 국가공공기관 종합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96
<표 3-34> 국가공공기관 종합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99
<표 3-35> 100대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101
<표 3-36> 500대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102
<표 3-37> 3000대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103
<표 3-38>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105
<표 3-39> 20대 주요 명문대학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107
<표 3-40> 20대 주요 명문대학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108
<표 3-41> 중추기능 종합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 정(政)·산(産)·학(學)	110
<표 3-42> 중추기능 종합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 정(政)·산(産)·학(學)	112
<표 3-43> 인구 및 중추기능 지역중력지수의 상호간 상관관계	113
<표 4-1>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유리한 요인	120
<표 4-2>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불리한 요인	123
<표 4-3> 본사 지방소재 기업의 서울지사[지점·사무소]의 기능	127

<표 4-4> 기업본사의 이전사유	129
<표 4-5> 기업본사의 이전경로	131
<표 4-6> 기업본사 이전시의 이전형태	132
<표 4-7> 본사기능 일부이전시의 이전기능	133
<표 4-8>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애로요인	134
<표 4-9> 기업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수단의 효과	137
<표 4-10> 향후 기업본사의 지방이전 촉진요인	140
<표 4-11> 향후 기업본사 입지의 선호지역	142
<표 4-12> 향후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본사 기능	145
<표 5-1> 일본 수도권기능 이전에 관한 주요 검토경위	165
<표 5-2> 일본의 수도권기능이전 비용 : 모델적 시산의 결과	167
<표 5-3> 일본 신수도의 인구추정(모델적 시산)	167
<표 5-4> 일본 수도권기능 이전의 비용항목과 비용산정 방법 : 재시산	168
<표 5-5> 일본의 수도권기능 이전비용 : 재시산 결과	168
<표 5-6> 독일의 수도권기능 분산	171
<표 5-7> 영국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실태	178
<표 5-8>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분산(예정)	182
<표 5-9> 스웨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태	184
<표 5-10> 기업본사로부터 분리된 본사기능의 입지와 장래의 입지의향	187
<표 5-11> 미국 500대 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 추이	190
<표 5-12> 미국 기업본사의 지역간 업종분포 변화 : 1969~1989	191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틀	6
<그림 2-1> 중추기능의 근원	8
<그림 2-2> 중추기능의 구분	9
<그림 2-3> 중추기능입지 관련 이론	10
<그림 2-4> 중심지체계의 완화와 네트워크체계의 형성	17
<그림 2-5> 중추기능 입지이론과 지역발전의 종합	18
<그림 3-1> 인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24
<그림 3-2> 제조업고용기회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28
<그림 3-3> 중앙행정기관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2~2000	31
<그림 3-4>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경로 : 1992~2000	33
<그림 3-5> 중앙행정기관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34
<그림 3-6> 공기업 본사 근무인원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2~2002	37
<그림 3-7> 공기업 본사의 주요 이전경로 : 1990~2002	39
<그림 3-8> 공기업 본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40
<그림 3-9> 1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0~2000	43
<그림 3-10> 100대 기업 중 시·도간 본사이전기업의 이전경로	45
<그림 3-11> 5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0~2000	49
<그림 3-12> 500대 기업본사의 업종별 수도권외 비중변화 : 1990~2000	51

<그림 3-13> 30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0~2000	55
<그림 3-14> 3000대 기업본사의 업종별 수도권의 비중변화 : 1990~2000	58
<그림 3-15> 기업본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본사 수) : 2000	60
<그림 3-16> 기업본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 1990~2000	62
<그림 3-17> 20대 명문대학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	65
<그림 3-18> 30대 주요 명문대학의 지역간 분포와 서울소재 대학의 분교입지	69
<그림 3-19> 중추기능 입지분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종합비교 : 政(政)·산(産)·학(學)	72
<그림 3-20> 인구분포와 중추기능 분포간의 연계성	75
<그림 3-21> 인구·산업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 서울로부터의 거리	78
<그림 3-22> 국가공공기관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 서울로부터의 거리	79
<그림 3-23> 대기업 본사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 서울로부터의 거리	80
<그림 3-24> 주요 명문대학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 서울로부터의 거리	81
<그림 3-25> 지역수와 지역중력지수의 관계 (I)	86
<그림 3-26> 인구 제조업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 1990~2000	91
<그림 3-27> 중앙행정기관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 1992~2000	93
<그림 3-28> 공기업 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 1992~2002	95
<그림 3-29> 국가공공기관 종합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 1992~2002	97
<그림 3-30> 국가공공기관 종합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 1992~2002	98
<그림 3-31>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104
<그림 3-32> 20대 명문대학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108
<그림 3-33> 중추기능 종합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 政(政)·산(産)·학(學)	111
<그림 3-34> 인구 및 중추기능 종합 지역중력지수간의 연계성	114
<그림 4-1>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유리한 요인 : 복수응답	121
<그림 4-2>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유리한 요인 : 1순위 응답	122
<그림 4-3>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불리한 요인 : 복수응답	124
<그림 4-4>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유리한 요인 : 1순위 응답	125
<그림 4-5> 본사 지방소재 기업의 서울지사[지점·사무소]의 기능	128
<그림 4-6> 기업본사의 이전사유 : 복수응답	130

<그림 4-7>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애로요인 : 복수응답	134
<그림 4-8>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애로요인 : 1순위 응답	135
<그림 4-9> 기업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수단의 효과 : 복수응답	137
<그림 4-10> 기업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수단의 효과 : 1순위 응답	138
<그림 4-11> 향후 기업본사의 지방이전 촉진요인 : 1순위 응답	140
<그림 4-12> 향후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본사 기능 : 복수응답	146
<그림 4-13>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	155
<그림 4-14> 국가공공기관 지방분산 시의 포함 기관	158
<그림 5-1> 일본 국가행정기관 등의 이전대상지별 이전(예정)기관	163
<그림 5-2> 일본 신수도 이전후보지	169
<그림 5-3> 말레이시아의 신행정도시 : 푸트라자야의 정부시설지구	175
<그림 5-4> 영국의 지역간 공무원 분포 : 2001	179
<그림 5-5> 미국 기업본사의 지역간 이전경로	192
<그림 5-6>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의 지방분산 사례	193
<그림 6-1> 정부대전청사로의 국가행정기관 이전사업의 원화요인 메커니즘	201
<그림 6-2>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향	207
<그림 6-3>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 모형 : 시계모델	208

CHAPTER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토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개발관련 정책들을 수립, 집행하였지만 인구 및 산업과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지방의 사회경제적 수도권 종속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에는 전국인구의 46.3%, 제조업 일자리의 46.6%가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 및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부(部) 단위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은 100%,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기업의 본사는 83%,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100대 기업의 본사는 91%,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65%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정(政)·산(産)·학(學)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은 고급전문직종과 같은 고소득의 취업 기회, 첨단 정보·통신업체, 금융기능 등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인력 및 하위기능의 연쇄적 수도권 집중현상을 유발하여 지방의 사막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및 산업과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그 중심에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수도권 과(過)집적이라는 현상이 유아등(誘蛾燈)처럼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산업생산기능의 물리적 입지 재편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정책이 수도권과 지방간의 발전격차를 해소하는 데서 그 한계를 이미 노정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동북아 나아가 세계경제의 4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발전촉진이 하나의 열쇠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이 긴요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이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요 국가정책에서 중요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5대 추진전략 속에 수도기능의 과감한 지방분산 추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정부에서 입안한 『비전 2011(VISION 2011)』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공공기관과 민간 중추관리기능 등의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공공기관의 이전이 핵심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각종 국가정책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통한 국토구조의 개선을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바 이의 실천을 위한 세부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연구가 절실하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목적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한 방안의 수립과 제시가 절실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목적에 갖는다.

첫째, 국토불균형 문제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는 국가공공행정(政), 기업(産),

대학(學) 부문에서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실태와 입지동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국가공공기관, 기업본사, 대학의 지역간 분포를 비교·분석하여 수도권 집중 실태와 입지동향을 파악하고, 기업본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입지 요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둘째,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근거하여 정(政)·산(産)·학(學) 부문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실태와 입지동향, 그리고 입지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중추기능의 공간적 분산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한 실천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셋째,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과 행·재정적, 법적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중추기능별로 제시함과 아울러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추기능을 정(政), 산(産), 학(學) 세 부문으로 분류하고 정(政)의 경우는 국가공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과 정부투자·출자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각종 공공법인(공기업)을 포함한다. 산(産)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본사를 분석대상으로 하는데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본적으로 100대 기업, 500대 기업, 3000대 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학(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요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분석을 행하는데 분석의 중심은 중앙일보사에 의한 20대 명문대학에 두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중추기능을 분석하는 데서 공간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인 시·도를 기본으로 하여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지역의 5

개 권역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포함하며, 충청권은 대전광역시와 충북·충남지역을, 호남권은 광주광역시와 전북·전남지역을, 그리고 영남권은 대구·울산·부산광역시와 경북·경남지역을 포함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권역단위 외에도 필요에 따라 공간적 분석범위를 다양하게 구분한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특성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권역을 지방으로 묶어 수도권과 지방을 대비하여 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6개 시·도 각각을 분석단위로 다루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중추성(中樞性)을 고려하여 서울로부터의 거리대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시·군이 분석의 기본이 된다. 시간적으로는 1990년과 2000년의 10년 동안을 기본 분석기간으로 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분석,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 설문조사, 연구협의회 등을 통한 전문가와 실무담당자의 의견수렴, 외국사례의 수집과 조사·분석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중추기능과 지역발전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문헌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중추기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중추기능 입지와 지역발전간의 연관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이어 받아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둘째, 실증분석에서는 먼저 중추기능별 입지분포를 지역간에 비교 분석하며 이러한 중추기능의 지역간 분포실태에 관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국토공간상에서의 무게중심인 중심(重心)을 각 중추기능별로 산정하여 서울로 근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중추기능간에 비교 분석한다. 중추기능의 중심 산정에서는 각 시·군의 센터좌표에 시·군별 중추기능 분포를

가중치로 적용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중추기능의 지역간 입지동향과 중심(重心) 분석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중추기능의 지역간 상호 교류작용에 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지역간에 비교 분석한다. 중추기능 영향력[지배력]의 지역간 비교 분석에서는 중력모형을 응용한 지역중력지수(regional gravitation index: RGI) 방법을 고안하여 중추기능 상호교류작용에 대한 수도권의 지배력을 진단하고 지역간에 비교 분석한다.

셋째, 중추기능의 입지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추기능 중 기업본사기능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방식을 이용하며, 대학기능에 대해서는 최근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산신도시 개발 관련 실무담당자, 그리고 이전의사를 타진한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학의 관계자 등과의 연구협의회, 방문면담, 통신매체를 통한 의견교환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끝으로, 외국사례의 수집과 조사·분석을 위하여 전자메일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직접 외국기관과 접촉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검색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3. 연구의 틀

본 연구는 그 내용구성 상 크게 중추기능에 관한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공간적 재편 전략과 방안의 세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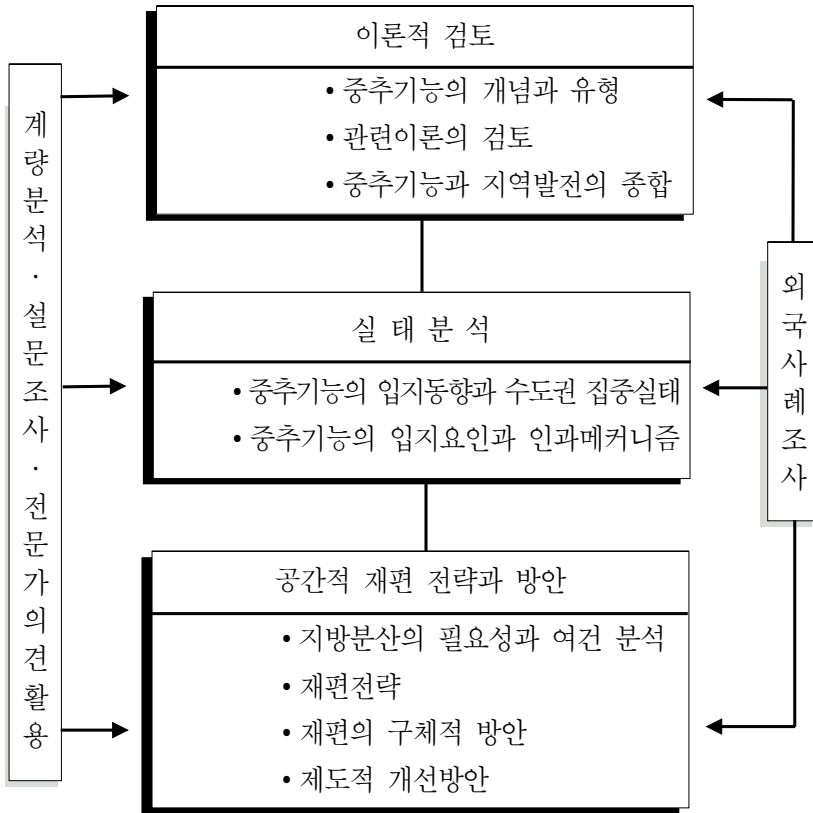
첫째, 중추기능에 관한 이론적 검토부문에서는, 먼저 중추기능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유형을 구분하며, 중추기능 입지와 관련한 이론들을 조사·분석한다. 다음으로 중추기능 입지와 지역발전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실태분석에서는 중추기능의 입지분포를 지역간에 비교 분석하여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실태를 파악하고, 중추기능별 중심(重心)분석, 지역중력지수(regional gravitation index: RGI)방법을 이용한 영향력[지배력] 분석방법을 이용

하여 중추기능에서의 수도권 중속정도를 구명(究明)한다. 아울러 중추기능의 입지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 인과메커니즘을 도출한다.

셋째,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 전략과 방안에서는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태분석에서의 결과를 반영하여,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모델, 그리고 전략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 전략·방안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실천방안과 행·재정적, 법적 차원의 제도적 기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틀



2 CHAPTER

중추기능의 정의와 이론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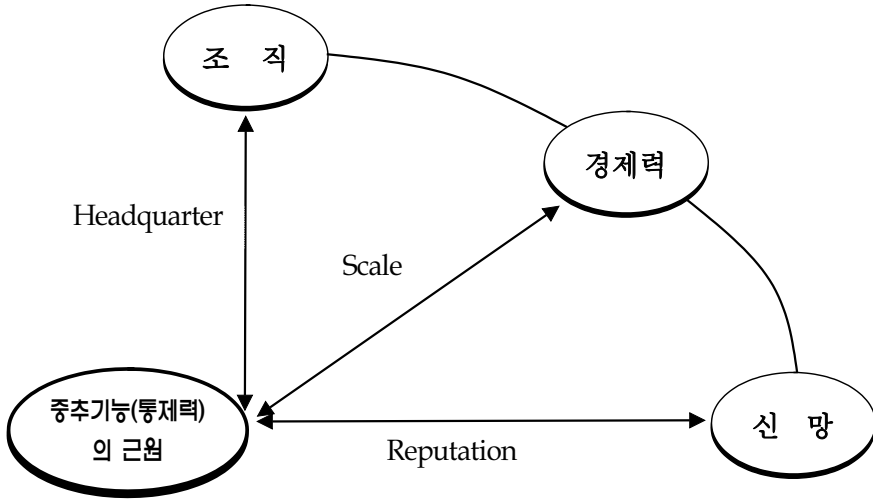
1. 중추기능의 정의

1) 개념적 정의

본 연구의 시작에 있어 먼저 중추기능에 대한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본 장(章)에서는 중추기능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이러한 중추기능이 지역발전과 어떠한 연계성을 갖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후술하는 중추기능에 대한 실태분석과 중추기능 공간적 재편방안의 도출에서 중추기능의 유형분류 기준과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중추기능이란 단순히 정의하면, “통제력(control power)을 갖는 기능”을 의미한다. 통제력이란 의사결정권을 지니거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통제력이란 일반적으로 ‘권력(power)’의 의미와도 동일선 상에 놓인다. 조직사회에서는 본부(headquarter)기능을 지닌 조직이 하부기능을 지닌 조직에 비해 통제력이 높다. 또한 자산(property)의 정도, 즉 경제력의 규모(scale)가 큰 조직과 인간이 높은 수준의 통제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적 또는

<그림 2-1> 중추기능의 근원



사회적 명성(reputation), 즉 신망이 높은 조직과 사람이 높은 수준의 통제력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추기능의 근원이 되는 통제력은 조직, 경제력, 그리고 신망으로 구성되며, 이들 각각을 연결하는 요소는 본부(headquarter), 규모(scale), 그리고 명성(reput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구성부분과 요소는 결합되어 있다(J. K. Galbraith, 1983). 요약하면, 중추기능이란 “조직(본부), 경제력, 신망을 근원으로 하여 통제력, 즉 권력을 갖는 기능”이라 정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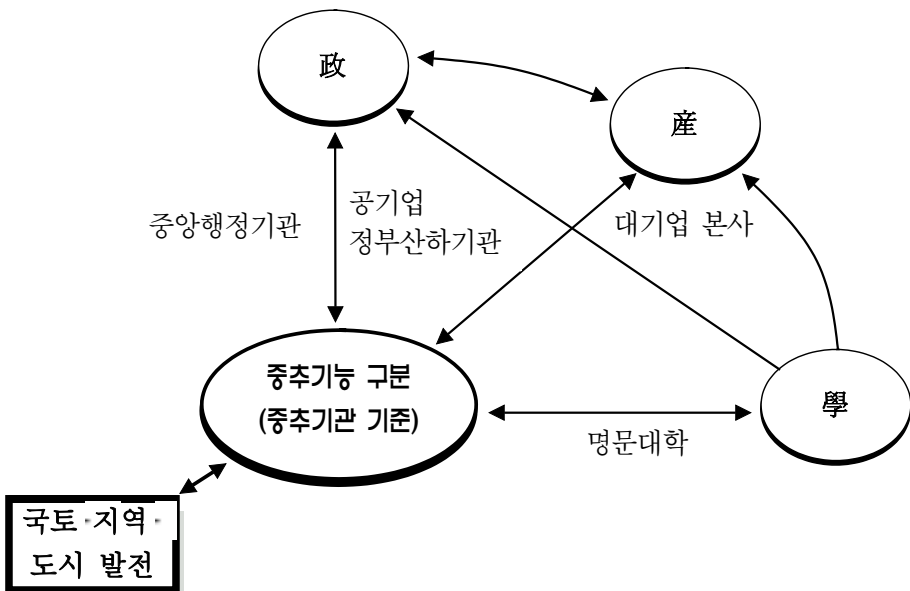
2) 실천적 정의

중추기능에 대한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중추기능을 갖는 기관의 구분을 통해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를 도출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국토·지역·도시 발전과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는 구분이 요구된다. 조직의 본부, 경제력, 신망의 측면에서 관련기관의 범위를 축소하여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2-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조직 본부의 경우, 정

부부문(政)에서는 국가공공기관(중앙정부기관과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을 포함), 산업부문(産)에서는 민간기업의 본사가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규모(scale)를 고려할 경우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체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신망의 경우는 사회적 명성과 관련되는 대학(學)부문으로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명문대학이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추기능을 중앙정부적 기능(政), 대기업의 본사기능(産), 명문대학 기능(學)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적 기능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이 해당되며, 기업 본사기능에는 민간의 대기업 본사가 해당되고, 대학기능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명문대학교가 해당될 수 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들 중추기관은 특정도시(특히, 수위도시)로의 인구유입, 특히 고급두뇌 유입의 결정력을 지님으로써 지역과 도시 나아가 국토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림 2-2> 중추기능의 구분



2. 중추기능의 입지관련 이론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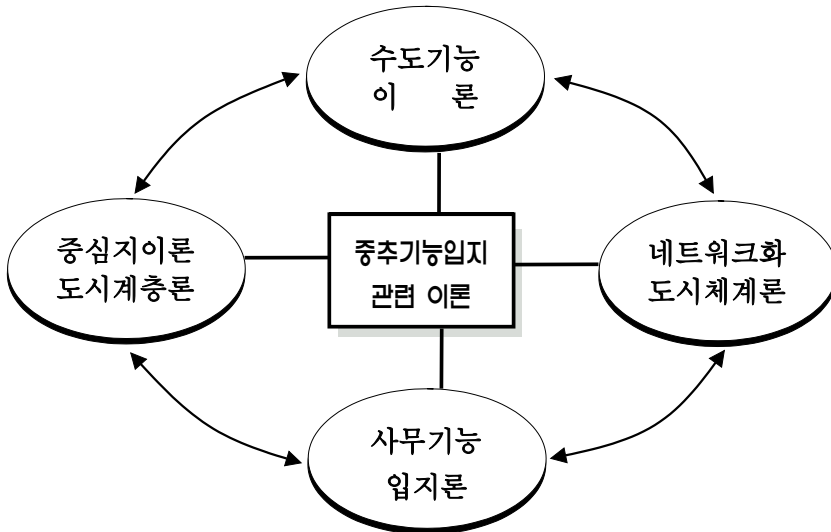
중추기능 입지와 관련한 이론은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4가지의 이론 블록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 이는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기능이론, 중심지·도시계층론, 사무기능입지론, 네트워크 도시체계론이다.

1) 수도기능론(首都機能論)

① 수도(首都)의 정의

중추기능 입지와 관련한 4가지 이론 블록 중 먼저 수도기능론을 보면, 수도(首都)란 국가의 통치기관 등이 소재하는 도시로서 정치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라 정의된다. 또는 수도(首都)는 일국(一國)의 최고통

<그림 2-3> 중추기능입지 관련 이론



치자와 그 통치기관들이 소재하는 도시로 정의되기도 한다¹⁾. 다른 한편으로, 수도(首都)란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각종 단체, 즉 공공적, 반관(半官)·반민(半民)적, 민간단체 등 기관의 입지 장소임과 동시에 국가의 정치이념 및 상징, 국가적 신경의 중심지로서 정의될 수 있다(임덕순, 1999).

② 수도(首都)의 기능

수도(首都)란 공간적으로 정의되는데 비하여 수도기능(首都機能)이란 비공간적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스페이트(O. Spate)에 의하면, 수도기능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가전체를 통제-통치하는 통어(通御)기능(head function)을 지닌다. 둘째, 전체 국민의 감정과 애국심을 모아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통합하는 국민결속기능(keystone function)을 보유한다. 셋째, 세계 각 국가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국가발전기회를 받아들이는 대외연결기능(link function)을 지닌다. 넷째는 인접국가와의 접경지역에 대한 안정과 안전을 도모하는 변경(邊境)조직-통제 기능(frontier-organizing function)이 그것이다(임덕순, 1999). 이들 4가지의 기능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수도기능의 수행에 장애를 받게 된다. 특히, 수도기능과 관련하여 지구촌 시대에 강조되는 국제관계 측면에서는 연결적 수도(link capital)와 전위적 수도(forward capital)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대외연결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도록 수도위치가 정해지며, 후자는 대외진출을 의도하고 있는 나라에서 진출방향 쪽으로 수도가 정해진 경우이다.

③ 수도(首都)의 입지

1) 한 나라의 최고통치자와 통치기관이 소재하는 도시와 수도(首都)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에서와 같이, 행정(내각), 입법(의회), 사법(최고법원)의 최고기관과 왕궁이 헤이그에 위치하여 헤이그가 정치와 행정의 중심도시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국제교역의 중심도시인 암스테르담이 네덜란드의 공식적인 국가수도인 경우를 볼 수 있다.

수도기능을 보유하는 기관·단체가 모여있는 수도의 입지조건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입지선정 당시의 정치적 목적과 결부되어 결정된다. 대체로 수도의 입지는 중앙-대륙적 위치, 주변-해양적 위치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특히, 국가통합의 관점에서 수도의 입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터키의 앙카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리아의 경우, '국토의 지리적 중심 가까이'로 수도기능을 이전시킨다는 기치 아래, 만성적인 낙후지역인 브라질의 내륙부 리오데자네이로의 수도기능을 이전하기 위하여 1891년 헌법에 수도이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1960년에 브라질리아로의 수도이전이 실현되었다. 즉, 새로운 수도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소재지라는 역할 외에 미개발지역에 대한 문명(文明)의 빛을 밝힌다는 임무가 주어졌다. 브라질리아는 계속 개척되고 있는 브라질 내륙부의 '프론티어'에 위치하는 연방수도라 할 수 있다.

④ 수위도시와 수도의 연관관계론

이블러(P. Iblher)의 논리에 의하면, 수도는 "사회전체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정치, 경제 및 사회통합이라는 세 가지의 기능영역 중 적어도 하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다른 도시단위를 상회하는 시설군(群)을 거느리는 도시단위"로 정의된다. 따라서 각각의 특화된 기능영역에서 복수의 도시가 거의 동등한 등급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실질적인 수도기능을 갖는 복수의 수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수도로서 기능하는 뉴욕, 정치수도로서 기능하는 워싱턴 D.C.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수도(首都)의 법칙'에 의하면, 최대도시는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국내영향력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탁월한 지위를 가지며, 어떤 도시가 국내의 다른 모든 도시를 일단 상회하게 되면 그 사실 자체가 다른 도시들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성장탄력을 그 도시에 부여함으로써 그 도시는 수위도시가 된다. 1968년 기준으로 137개 국 중 117개 국에서 최대도시와 정치적 수도가 일치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수도기능이 한 도시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는 나라들과 정도는 다르지만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나라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극단적인 집중의 예로서는 파리, 모스크바, 테헤란, 바그다드, 런던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기능에서 국내에 동급의 복수도시가 존재하는 예로서는 마드리드-바르셀로나, 앙카라-이스탄불, 로마-밀라노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적·정치적인 수도만이 존재하는 국가의 예로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동등의 권리를 갖는 복수의 구성원 사이에서 내적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국 당시 수도기능을 의도적으로 '수위도시'에 맡기는 것을 회피하였다. 정치적 중추시설이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로서는 남아프리카, 미국, 구(舊)서독 등을 들 수 있다. 구(舊)서독의 경우 본에 수도기능의 10% 정도만 입지하고 연방기관이 지방에 분산되어 있었다. 여기서 연방기관의 지방분산은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및 연방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었는데, 정치적 의지 표현(demonstration)과 정치적 풍조가 분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⑤ 지구촌시대의 수도기능도시(Capital Cities)의 기능과 정체성의 변화요인 : S. Campbell의 4가지 요인

최근에는 새로운 수도기능이론이 지구촌 시대에 부응하여 부각되고 있다. 캠벨(Scott Campbell)에 의하면(Campbell, 2000), 수도기능都市는 지구촌시대를 맞이하여 그 기능과 도시정체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그 요인으로서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정보도시적 요인으로 정보도시(information city)의 출현이다. 정보의 확산에 따라 수도기능이 점차 그 의미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국가의 역할이 변화하여 수도기능이 변화(changing role of the nation-state)한다. 즉,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도시의 기능이 수도기능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지구촌 경제도시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출현(rise of global economic cities)으로 수도기능이 변화한다. 즉, 국제적 경제도시의 출현과 이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중요시되면서 수도기능은 그 중요

성이 줄어들다는 것이다. 넷째는 가상네트워크에 의한 공간기능의 대체(from the spatial to the virtual)요인이다. 이는 사이버 네트워크가 장소적인 공간을 대체하여 물리적 장소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수도입지도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2) 서비스기능의 중심지이론과 도시계층성

중추기능 입지 관련 이론 중 서비스 기능의 중심지·도시계층성에 관한 이론블록을 본다. 서비스산업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가능한 한 하나의 지리공간상에 인접하여 입지하고, 서비스의 도달범위는 서비스기능의 고차성과 관련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서비스 기능은 넓은 범위의 서비스 이용권(圈)을 보유하는 고차위 서비스기능(high order services), 좁은 범위의 서비스 이용권(圈)을 보유하는 저차위 서비스기능(low order services)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중추기능은 이 중 고차위 서비스기능으로서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서비스 이용권(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의 인구규모와 그 기능의 집적정도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경향이다. 도시규모와 기능 집적과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데 직선형과 곡선형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직선형은 도시규모와 기능집적이 선형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시규모와 기능집적이 동시에 증가하는 형태이다. 곡선형은 도시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새로이 추가되는 기능의 수는 둔화된 비율로 증가하는 형태이다. 대체로 도시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직선형의 관계가 주류를 이루며, 도시성장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 성숙단계에 이르면 곡선형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추기능의 경우, 도시의 성장유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중추기능이 도시규모와 반드시 정(+)의 상관관계를 지니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의 워싱턴 D.C.의 경우 인구규모는 80만 명 정도에 불과하나 미국의 행정, 입법, 사법기능이 집결되어 있다. 도시의 성장과 관계없이 국가중추기능의 분포는 변화가 없는 경향이 있다.

3) 사무활동 및 본사기능의 입지이론

중추기능 입지 관련 이론은 사무활동 및 본사기능의 입지이론과 연관된다. 사무활동의 입지결정은 제약조건을 최소화하면서 입지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사무활동 입지결정에서 제약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비대칭적 권력관계로부터 연유하는 정부·공공 기관에의 종속성 (authority constraints)이고 다른 하나는 교통·정보에의 접근성 (capability constraints), 나머지 하나는 접촉수단의 확보가능성 (coupling constraints)이다(김형국, 1996). 이와 함께 입지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요인은 경제적 동지향의 기회추구를 위한 입지, 전통과 신망지향의 기회추구를 위한 입지로 대별할 수 있다. 사무활동 입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최적점을 찾아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무활동 중 본사기능의 입지변화에 대해서는 두 개의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권력의 전통적 중심지에 통제기능의 지속적인 집중을 옹호하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권력과 통제기능의 분포에 있어 근본적인 변동이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현실 속에서 본사기능은 누적적 인과관계를 통해 일정 도시, 가령 수도에 계속 집적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공간적 분산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일본과 한국 등의 경우이고, 후자는 미국의 경우를 들 수 있다.

4) 네트워크 도시체계론

중추기능 입지 관련 이론 중에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도시체계론에 대해서 살펴보자. 네트워크 도시체계는 도시결절점간 비위계적 관계의 네트워크 속성을 가지는 도시체계를 말한다. 즉, 전문성을 가진 도시들이 존재하여 전문화된 중심지들간의 수평적, 비위계적 관계가 도시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도시체계에서는 각 중심지간의 보완성이나 수직적 통합으로부터 시너지적인 외

부성을 공급받게 되며, 각 중심지간에 존재하는 자본·정보·지식·기술·인력·제품 등의 흐름의 상호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도시네트워크는 수직적 네트워크 관계를 벗어나 보완적 네트워크·시너지 네트워크로 전환되고 있다.

까마니와 살롱의 논리에 의하면(Camagni and Salone, 1993), 전후 30년간 도시화와 메트로폴리탄화 현상은, 고차적인 경제기능은 중심지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산업 및 주거와 같은 저차의 기능은 배후지와 주변부로 확산해 나간다고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이제 부분적으로 적합성을 잃어버렸으며, 기능의 수준과 이 기능이 입지해 있는 도시순위간의 관계는 더 이상 엄격한 일치성을 갖지 않는다. 즉, 기존의 중심지이론을 배격하고 있다.

그래험의 논리에 따르면(Graham, 1997), 크리스탈러가 생각했던 기능적, 위계적 도시체계는 분해되고, 특화된 도시특성에 기반한 상호보완적 국제분업이 통신과 교통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중심과 주변이 장거리에 걸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제 물리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 멀리 있는 두 개의 도시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지식집약적 도시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중심의 기능적 위계가 아니라 도시간의 분업적 네트워크를 이해해야 한다. 이제 도시는 각기 다른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여러 장소의 집합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도시간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관계를 네트워크 도시체계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표 2-1> 중심지체계와 네트워크체계의 속성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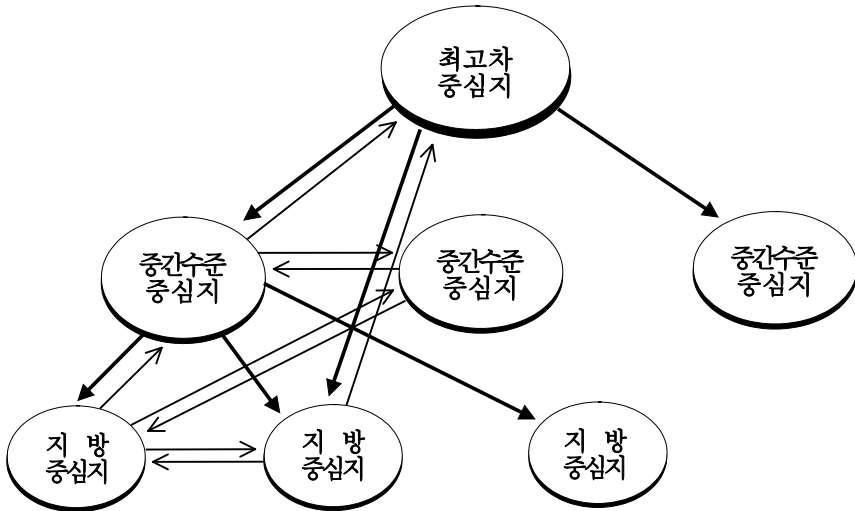
중심지이론	네트워크체계
중심성	결절성
규모의존성·단핵의존	규모중립·상호의존
일극집중의 경향	유연성과 보완성의 경향·특화
수직적 접근성	수평적 접근성
일방흐름	양방향흐름

자료: Batten, D. F. 1995. "Network Cities: Creative Urban Agglomerations for the 21st Century". *Urban Studies*. v.32 n.3: 313-327.

이러한 도시 네트워크 체계론에 의거할 경우 기존 중심지이론과는 다음과 같은 속성차이를 보여준다. 즉, <표 2-1>에서 보듯이, 중심지이론에서는 중심성이 바탕을 이루고 있지만 네트워크체계론에서는 결절성(結節性)을 그 바탕으로 한다. 중심지이론에서는 규모와 단핵(單核)에의 의존성에 근거하여 도시구조가 일극집중의 경향을 갖지만, 네트워크체계론에서는 규모 중립성과 상호 의존성에 의거하여 도시구조가 유연성과 보완성, 그리고 특화성의 경향을 갖는다. 또한 중심지이론에서는 수직적 접근성에 기반하여 일방적 흐름이 형성되지만, 네트워크 체계론에서는 수평적 접근성에 기초하여 쌍방향의 흐름을 형성한다.

중추기능 입지와 관련된 이론들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그림 2-4>에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도시체계에서 네트워크 현상과 중심지 계층조직화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결과로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네트워크체제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보화와 지식화

<그림 2-4> 중심지체계의 완화와 네트워크체계의 형성



자료: 이정훈. 1999. 『동경대도시권에서 도심고차업무기능의 교외이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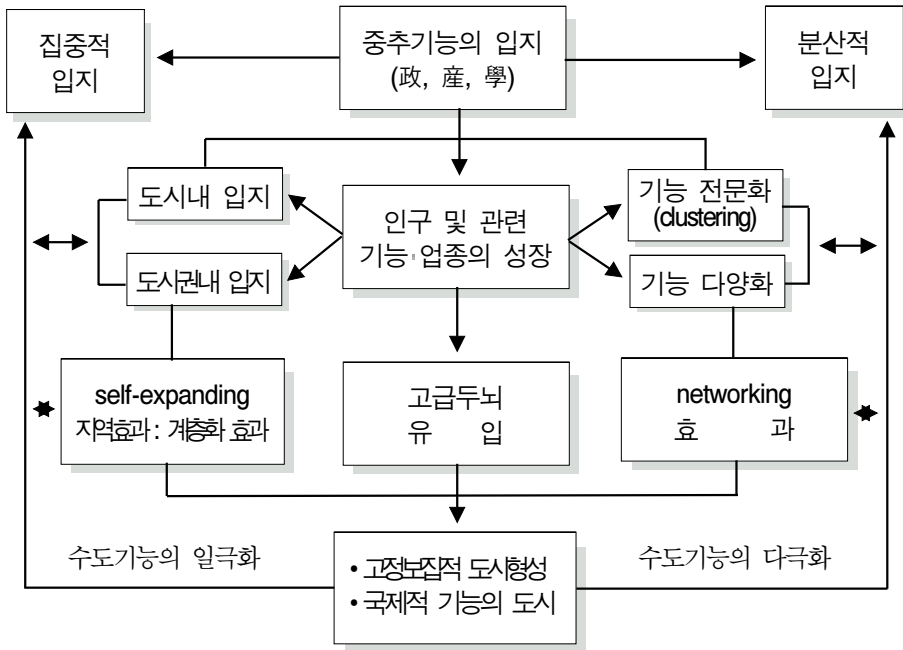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발달 상황, 첨단통신수단 및 고속교통수단 등의 물리적 하부구조의 확충수준, 도시화 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각 나라의 도시 간 구조는 서로 다른 형태의 도시체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중추기능 입지이론과 지역발전 종합

중추기능에 관한 개념적·실천적 정의, 중추기능의 입지관련 이론들에 대한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추기능의 입지와 지역발전간 연계성은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입지여부나 그 정도에 따라 인구 및 관련 기능과 산업의 성장이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의해 고급두뇌의 유입정도가 좌

<그림 2-5> 중추기능 입지이론과 지역발전의 종합



우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중추기능이 고도로 집적된 지역에는 인구 및 산업과 각종 기능이 집중되고 이에 따라 고급두뇌들의 유입이 증가함으로써 도시 또는 지역이 정보·자원·인재 등이 고도로 집적되고 국제적 기능을 가진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추기능의 입지와 도시체계에서는, 중추기능의 집중적 입지와 그에 따른 수도기능 일극화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될 때는 수도와 수위도시가 일치하는 가운데 수도권내로의 인구·산업 및 각종 기능의 집중과 수도의 자기팽창적 과정을 통하여 단핵의 도시계층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반면, 중추기능의 분산적 입지와 그에 따른 수도기능 다극화가 밀접하게 연계될 때는 도시의 기능 전문화·다양화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네트워크적 도시체계가 형성되어질 것이다.

3 CHAPTER

중추기능의 입지동향과 영향력의 지역간 비교분석

1. 인구 및 산업 분포의 지역간 비교분석

1) 인구 분포의 지역간 비교

본 장(章)에서는 앞 장에서의 중추기능에 대한 정의에 따라 중추기능별 입지동향을 지역간에 비교 분석한다. 이에 앞서 먼저 인구와 산업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다. 중추기능의 공간적 분포에 의해 인구와 산업의 분포가 크게 좌우될 뿐만 아니라 중추기능의 분포 또한 인구와 산업의 공간적 분포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먼저 인구의 지역간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의 남한지역에는 2000년 현재 4,6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전체의 46.3%인 2,100만 명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 이어 영남 지역에 전체인구의 27.9%인 1,3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호남지역과 충청지역에 각각 전체인구의 11.4%와 10.1%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간 인구분포를 1970년도와 비교해보면 지난 30여 년에 걸쳐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1970년 당시에는 수도권 인구

는 전국인구의 28.3%인 870만 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영남지역이 전체인구의 30.4%를 차지하여 오히려 영남지역 거주인구수가 수도권을 상회하였다. 호남지역 역시 1970년과 2000년 사이에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5%에서 11.4%로 크게 감소하였고 충청권 역시 같은 기간동안에 전국인구에 대한 비중이 13.8%에서 10.1%로 줄어들었다.

인구증가율에 있어서도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전국인구 증가율을 3배정도 상회하는 반면 지방의 경우는 전국평균치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에서 호남지역의 경우 절대인구수 자체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감소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평균 -0.4%에서 -0.8%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영남지역 또한 인구규모는 완만하게 상승하고는 있으나 1970년대에 전국평균을 상회하던 인구증가율이 1990년과 2000년 사이에는 전국평균의 1/3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지역의 경우 1980년과 1990년 사이의 연평균 0.2%에서 1990년과 2000년 사이의 연평균 0.5%로 인구증가율이 2.5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지역에 대한 인구정주기반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인구의 지역간 분포변화

구 분	인구수(천인)				인구증가율(연평균, %)				인구분담비중(%)			
	1970	1980	1990	2000	1970-80	1980-90	1990-00	1970-00	1970	1980	1990	2000
전 국	30,882	37,436	43,411	46,136	2.1	1.6	0.6	1.6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8,730	13,298	18,586	21,354	5.2	4.0	1.5	4.8	28.3	35.5	42.8	46.3
충청권	4,262	4,380	4,453	4,680	0.3	0.2	0.5	0.3	13.8	11.7	10.3	10.1
호남권	6,319	6,067	5,716	5,240	-0.4	-0.6	-0.8	-0.6	20.5	16.2	13.2	11.4
영남권	9,376	11,436	12,560	12,861	2.2	1.0	0.2	1.2	30.4	30.5	28.9	27.9
강원·제주	2,195	2,254	2,095	2,000	0.3	-0.7	-0.5	-0.3	7.1	6.0	4.8	4.3
지 방	22,152	24,138	24,825	24,782	0.9	0.3	0.0	0.4	71.7	64.5	57.2	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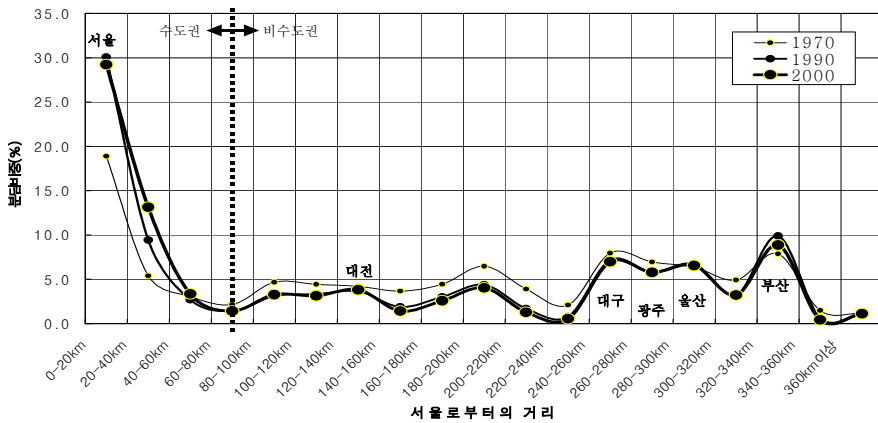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보고서』.

지역간 인구분포의 변화를 우리나라 수도 서울과 관련하여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보기 위하여 서울로부터의 거리대별로 인구분포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보도록 한다. 분석결과는 <그림 3-1>과 <표 3-2>에 제시되어 있는데, 2000년 현재 서울중심좌표로부터 반경 20km내의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의 29.2%인 1,350만 명이 살고 있다. 서울반경 40km내의 지역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40%인 약 2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반경 40km 이내의 수도권지역에 인구가 고도로 밀집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서울로의 인구집중현상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주변 경기지역으로의 인구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수도권 인접 충청지역에서의 인구성장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70년과 1980년 사이에 서울 반경 20km권에서 6.8%포인트로 그 증가폭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에 이어 부산광역시와 속해있는 서울로부터의 320~340km권에서 2%포인트가 증가하였고, 서울반경 20~40km권에서 1%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1990년과 2000년 사이에는 서울반경 20km권에서는 그 분담비중이 감소하고 서울반경 20~40km 권에서 가장 높은 분담비중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아산, 천안, 원주, 충주까지를 포함하는 서울반경 80~100km권, 대전광역시를 포함하는 서울 반경 120~140km권에서만 인구분담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구분포 변화의 특징은 지역간 인구증가율 차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즉,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1970년대에는 서울반경 40km 이내 지역과 부산이 포함되어 있는 서울로부터 320~340km지역만이 인구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서울반경 60km 이내 지역과 아산, 천안 등이 포함된 서울반경 80~100km권,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포함된 120~140km권에서 인구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 인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주와 자료: <표 3-2>에서와 같음.

<표 3-2> 서울로부터의 거리대간 인구분포 변화

서울중심과의 거리	인구수(천인)				인구분담비중(%)				연평균 인구증가율(%)		
	1970	1980	1990	2000	1970	1980	1990	2000	1970-80	1980-90	1990-00
0-20km	5,831	9,600	13,058	13,477	18.9	25.6	30.1	29.2	6.5	3.6	0.3
20-40km	1,665	2,384	4,086	6,053	5.4	6.4	9.4	13.1	4.3	7.1	4.8
40-60km	946	1,021	1,166	1,543	3.1	2.7	2.7	3.3	0.8	1.4	3.2
60-80km	665	655	626	651	2.2	1.7	1.4	1.4	-0.1	-0.4	0.4
80-100km	1,439	1,388	1,347	1,504	4.7	3.7	3.1	3.3	-0.4	-0.3	1.2
100-120km	1,365	1,386	1,438	1,445	4.4	3.7	3.3	3.1	0.2	0.4	0.1
120-140km	1,298	1,478	1,575	1,761	4.2	3.9	3.6	3.8	1.4	0.7	1.2
140-160km	1,131	1,008	811	654	3.7	2.7	1.9	1.4	-1.1	-2.0	-1.9
160-180km	1,372	1,388	1,307	1,191	4.4	3.7	3.0	2.6	0.1	-0.6	-0.9
180-200km	1,998	2,040	1,899	1,861	6.5	5.4	4.4	4.0	0.2	-0.7	-0.2
200-220km	1,202	1,000	734	582	3.9	2.7	1.7	1.3	-1.7	-2.7	-2.1
220-240km	644	506	341	248	2.1	1.4	0.8	0.5	-2.1	-3.3	-2.7
240-260km	2,454	2,840	3,107	3,216	7.9	7.6	7.2	7.0	1.6	0.9	0.4
260-280km	2,146	2,343	2,534	2,663	7.0	6.3	5.8	5.8	0.9	0.8	0.5
280-300km	1,964	2,364	2,911	3,019	6.4	6.3	6.7	6.5	2.0	2.3	0.4
300-320km	1,518	1,494	1,397	1,479	4.9	4.0	3.2	3.2	-0.2	-0.6	0.6
320-340km	2,431	3,699	4,285	4,087	7.9	9.9	9.9	8.9	5.2	1.6	-0.5
340-360km	457	379	275	190	1.5	1.0	0.6	0.4	-1.7	-2.8	-3.1
360km이상	358	463	515	513	1.2	1.2	1.2	1.1	2.9	1.1	0.0
합 계	30,882	37,436	43,411	46,136	100.0	100.0	100.0	100.0	2.1	1.6	0.6

주 : 서울중심과의 거리는 각 시·군의 센터좌표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보고서』.

지역간, 그리고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인구분포에 대한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전반적으로 대전이남 지역에서의 인구성장기반 약화,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충청권의 인구정착기반 강화, 서울도심으로부터의 인구탈출이라는 구조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3> 서울로부터의 거리대별 지역분포

거 리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0-20km	서울	과천, 광명, 구리, 안양, 고양, 부천, 성남	
20-40km	인천	의왕, 하남, 군포, 시흥, 의정부, 남양주, 수원, 안산, 김포, 파주	양주, 광주
40-60km		용인, 화성, 동두천, 오산, 이천, 평택	가평, 포천, 양평
60-80km		안성, 춘천	연천, 여주, 당진
80-100km		아산, 천안, 원주, 충주	철원, 음성, 진천, 화천, 횡성, 예산, 홍천
100-120km		서산, 청주, 제천, 공주	청원, 연기, 양구, 괴산, 홍성, 태안
120-140km	대전	보령, 문경	청양, 인제, 평창, 보은, 영월
140-160km		논산, 속초, 상주	단양, 부여, 옥천, 고성, 양양, 정선
160-180km		영주, 강릉, 익산, 군산	서천, 금산, 예천, 영동
180-200km		동해, 태백, 전주, 안동, 삼척, 김천, 구미, 김제	완주, 봉화, 무주, 진안, 의성
200-220km		정읍	부안, 성주, 양양, 거창, 장수, 군위, 칠곡, 울진, 입실, 울릉
220-240km			함양, 청송, 순창, 고창, 고령, 영덕
240-260km	대구	남원, 영천, 경산	함천, 장성, 담양, 영광, 산청, 곡성
260-280km	광주	포항, 진주, 밀양	구례, 청도, 창녕, 의령, 함평, 하동, 화순
280-300km	울산	경주, 나주, 사천, 순천, 광양, 창원, 마산	신안, 함안, 무안
300-320km		양산, 김해, 목포, 진해, 여수	보성, 고성, 영암, 장흥, 남해
320-340km	부산	통영, 거제	강진, 고흥
340-360km			해남, 완도, 진도
360km이상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

2) 제조업 분포의 지역간 비교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는 지난 30년 동안 큰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대전이남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을 향한 인구집중의 심화, 수도서울의 인구포화상태에 따른 외곽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분산, 수도권 인접 충청지역으로의 인구분산 물결 확산이라는 주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일자리가 인구의 집중과 분산에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동안 우리나라 고용기회 창출의 중추역할을 담당해온 제조업의 공간적 분포를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연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일자리 분포는 인구분포에서와 같이 수도권과 영남권이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서의 제조업고용기회가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제조업종사자 265만 명의 46.6%인 약 124만 명 정도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남권에는 전체의 34.8%인 92만 명 정도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1983년 이후 영남권의 비중은 1983년의 41.2%에서 2000년의 34.8%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1983년 이후 46%를 상회하는 비중을 유지하

<표 3-4> 제조업고용기회의 지역간 분포변화

구 분	제조업종사자수(천인)			제조업종사자연평균증가율(%)			제조업종사자분담비중(%)		
	1983	1990	2000	1983-90	1990-00	1983-00	1983	1990	2000
전 국	2,215	3,020	2,653	5.2	-1.2	1.2	100.0	100.0	100.0
수도권	1,022	1,443	1,235	5.9	-1.4	1.2	46.1	47.8	46.6
충청권	134	205	271	7.6	3.2	6.1	6.0	6.8	10.2
호남권	122	189	187	7.8	-0.1	3.1	5.5	6.3	7.1
영남권	913	1,143	923	3.6	-1.9	0.1	41.2	37.8	34.8
강원·제주	25	40	37	8.8	-0.8	2.9	1.1	1.3	1.4
지 방	1,194	1,576	1,418	4.6	-1.0	1.1	53.9	52.2	53.4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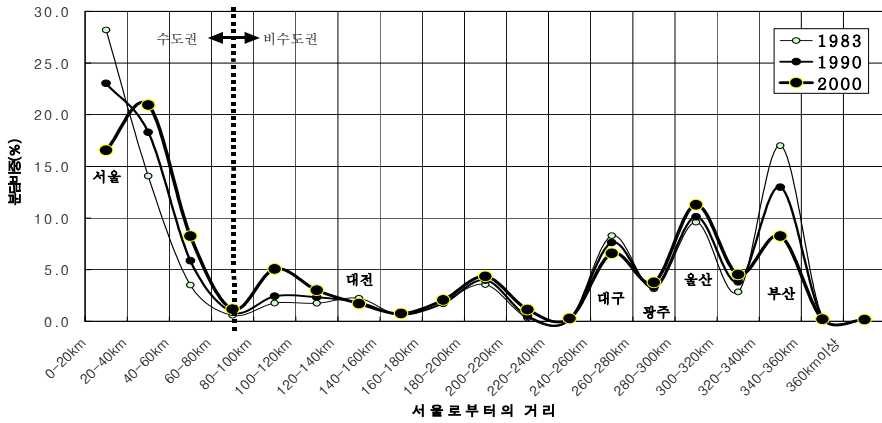
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는 전체 제조업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3년 6.0%에서 2000년에는 10.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호남권 역시 서해안개발의 영향으로 그 비중이 1983년과 2000년 사이에 5.5%에서 7.1%로 증가하였다.

제조업일자리 공간적 분포에서의 이러한 특징은 지역간 제조업고용기회 증가율 차이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1983년과 2000년의 17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제조업고용기회는 연평균 1.2%의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충청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을 5배 이상 상회하는 6.1%의 증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반면 영남권의 경우는 제조업일자리 증가율이 전국평균 증가속도의 1/10 수준인 0.1%에 불과하다. 특히 IMF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아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제조업고용기회가 연평균 1.2%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청지역의 제조업일자리는 같은 기간 동안에 연평균 3.2%라는 높은 속도로 증가하였다. 영남권의 경우에서는 같은 시기에 연평균 1.9%의 감소율을 보여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제조업의 수도권 입지향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인접의 충청권으로 제조업입지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영남권에서의 제조업기반 약화와 수도권 경제의 광역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수도권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조업일자리 공간적 분포의 이러한 특성을 수도 서울로부터의 거리대간 분포 변화를 통하여 좀더 엄밀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3-2>와 <표 3-5>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로부터의 거리대별 제조업고용기회 분포에 있어서 2000년 현재 의왕, 시흥, 수원, 안산 등 수도권 산업도시들이 속해 있는 서울로부터의 20~40km권 지역에 전체의 20.9%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에 이어 서울반경 20km권에 16.5%, 울산, 창원 등을 포함하는 서울반경 280~300km권에 11.3%가 분포되어 있다. 서울반경 60km권 이내의 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일자리의 45%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그림 3-2> 제조업고용기회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주와 자료: <표 3-5>에서와 같음.

<표 3-5> 제조업고용기회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서울중심과의 거리	제조업종사자수(천인)			제조업종사자 분담비중(%)			연평균증가율(%)	
	1983	1990	2000	1983	1990	2000	1983-90	1990-00
0-20km	624	696	439	28.2	23.0	16.5	1.6	-3.7
20-40km	311	552	555	14.1	18.3	20.9	11.1	0.0
40-60km	77	177	219	3.5	5.9	8.3	18.3	2.4
60-80km	13	27	31	0.6	0.9	1.2	15.7	1.6
80-100km	39	73	134	1.8	2.4	5.1	12.6	8.3
100-120km	39	70	80	1.7	2.3	3.0	11.7	1.3
120-140km	49	55	45	2.2	1.8	1.7	1.7	-1.8
140-160km	13	19	20	0.6	0.6	0.7	6.7	0.2
160-180km	43	53	55	1.9	1.7	2.1	3.1	0.4
180-200km	79	121	115	3.6	4.0	4.3	7.6	-0.5
200-220km	7	15	30	0.3	0.5	1.1	16.1	9.9
220-240km	3	5	7	0.1	0.2	0.3	9.8	4.4
240-260km	184	230	174	8.3	7.6	6.6	3.6	-2.4
260-280km	69	100	100	3.1	3.3	3.8	6.3	0.0
280-300km	212	305	299	9.6	10.1	11.3	6.2	-0.2
300-320km	63	115	120	2.8	3.8	4.5	11.7	0.4
320-340km	377	392	219	17.0	13.0	8.3	0.6	-4.4
340-360km	9	10	5	0.4	0.3	0.2	2.9	-4.8
360km이상	4	5	4	0.2	0.2	0.2	4.6	-1.2
합 계	2,215	3,020	2,653	100.0	100.0	100.0	5.2	-1.2

주 : 서울중심과의 거리는 각 시·군의 센터좌표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전체 제조업일자리에 대한 분담비중의 변화에 있어서도 서울반경 20~120km 권에서는 1983년 이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대구가 포함되어 있는 서울반경 240~260km권, 특히 부산을 포함하는 서울반경 320~340km권에서는 1983년 이후 전체 제조업일자리에 대한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즉, 서울반경 20km의 수도권 도심지역에서는 1983년과 2000년 사이에 전체 제조업고용기회에 대한 분담비중이 11.7%포인트 감소하였지만, 서울반경 20~40km권, 서울반경 40~60km권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에 그 비중이 각각 6.8%포인트, 4.8%포인트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아산, 천안, 음성, 진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서울반경 80~100km권에서는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전체 제조업일자리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부산을 포함하는 서울반경 320~340km권에서는 1983년 이후 전체 제조업고용기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7%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울산, 구미, 창원 등을 포함하는 일부 거리대에서 다소 제조업고용기회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시는 하나 전반적으로 지방의 제조업고용기반이 크게 약화되는 가운데 서울반경 120km권 이내의 수도권지역과 수도권 인접 충청지역으로 제조업고용기회가 고도로 집중되고 수도권 도심인 서울반경 20km권에서는 탈제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인구 및 제조업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분석결과로부터 서울반경 20km권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최고차(最高次) 도심지역이 우리나라 인구 및 제조업고용기회를 끌어들이는 자석의 핵(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전이남 지역의 인구 및 제조업고용기회가 자석의 핵을 향하여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울반경 20~60km권에 대한 집적정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성에 의해 수도권의 자성(磁性)은 더욱 강력해져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지역까지 수도권에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의 단핵구조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하였지만 좀처럼 수도권 집중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위의 분석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 특히 수도 서울이 이와 같이 강력한 흡인력을 갖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는 중추기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추기능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수도권집중에 대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다.

2. 중추기능 분포의 지역간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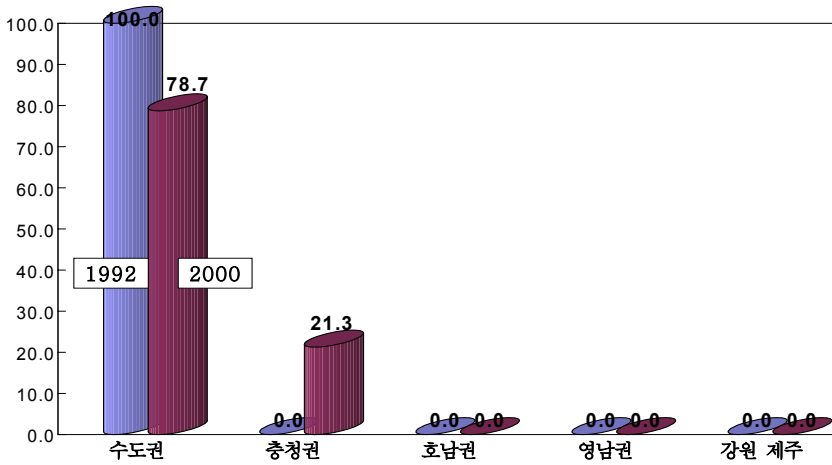
1) 정(政) : 국가공공기관 분포의 지역간 비교

① 중앙행정기관의 지역간 분포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중추기능을 중앙정부 기능(政), 대기업 본사기능(産), 명문대학 기능(學)으로 구분하고 기능별로 국가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명문대학을 선정하여 지역간 분포를 분석한다. 먼저 국가공공기관의 경우는 부(部), 처(處), 청(廳)단위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본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1992년 당시와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특성변화를 분석한다.

1992년의 경우 2원, 16부, 6처, 15청, 2국, 국무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 제1장관실, 정무 제2장관실의 총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분석에 포함하며, 2000년의 경우는 17부, 4처, 16청, 국무총리 산하 5위원회, 국무총리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기록보존소 등 총 47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그림 3-3> 중앙행정기관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2~2000



주 : 분석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수를 기준으로 한 분포비율(%)을 나타냄.
 자료: <표 3-6>.

먼저 1992년도의 중앙행정기관 지역간 분포를 보면, <그림 3-3>과 <표 3-6>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분석대상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입지하 여 중앙행정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 에 전체의 70%인 32개 기관, 경기도에 28%인 13개 기관, 인천에 1개 기관이 분포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입지 비중은 233.6%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편중현상이 심하여 서울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입지비중은 284.6%이고 경기도의 경 우는 인구비중보다 2배 이상 높은 중앙행정기관 입지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의 경우에는 일부 중앙행정기능의 정부대전청사로의 이전에 따라 분 석대상 중앙행정기관 중 전체 기관수의 79%, 근무인원수의 80%가 수도권에 입 지하고, 지방에는 기관수의 21%, 근무인원수의 20%가 분포함으로써 수도권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에 전체 분석대상 중앙행정기관의 50%, 경기도에 28%, 인천에 2% 정도가 분포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는 정부대 전청사가 입지한 충청권에 우리나라 전체의 21% 정도가 분포하고 있다. 이에 따

<표 3-6> 중앙행정기관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2~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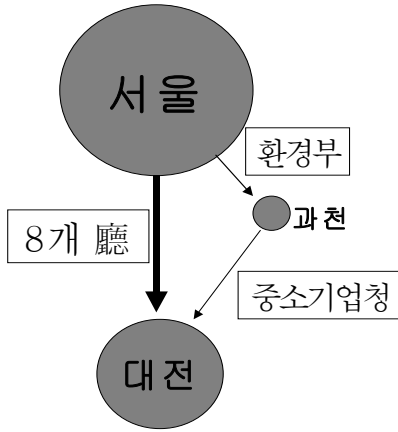
구 분	지역간 분포(개소, 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인구비중대비 분포비율(%)			
	기관수		근무인원		기관수		근무인원		기관수		근무인원	
	1992	2000	1992	2000	1992	2000	1992	2000	1992	2000	1992	2000
전 국	46	47	21.5	18.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46	37	21.5	14.9	100.0	78.7	100.0	79.5	233.6	170.1	233.6	171.8
충청권	0	10	0	3.9	0.0	21.3	0.0	20.5	0.0	209.7	0.0	202.0
호남권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영남권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강원·제주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지 방	0	10	0	3.9	0.0	21.3	0.0	20.5	0.0	39.6	0.0	38.2

주 : 국무총리 직속의 부, 처, 위원회와 부 소속의 청 및 일부기관 포함.
 자료: 박양호 외. 2000.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박상우 외. 1992. 『행정중추관리기능 분산에 관한 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라 인구비중에 대비한 중앙행정기관의 입지비중이 수도권 지역의 경우 170%로 1992년에 비해 그 집중정도가 다소 완화되었으며, 충청권의 경우 210%로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 전체적으로는 인구비중에 비해 중앙행정기관의 입지비중은 39.6%에 불과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중앙행정기관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6% 정도가 모여있는 수도권 지역에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79%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향하여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구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수도권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입지비중이 1992년의 100%에서 2000년의 78% 정도로 다소 낮아진 것은 1992년과 2000년 사이에 정부대전청사의 건설과 청(廳) 단위를 중심으로 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1997년말 정부대전청사가 완공되면서 서울에 소재하던 8개 청과 과천에 소재하던 중소기업청 등 9개 청과 정부기록보존소 등이 대전정부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서울입지비중이 1992년의 70%에서 2000년의 49%로 감소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입지에서 차지하는 지방의 비중은 21%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림 3-4>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경로 : 1992~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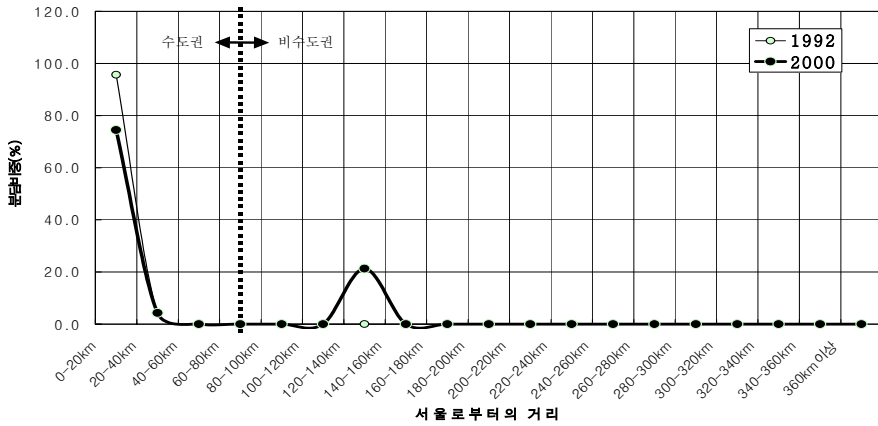


- 주 : 1.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은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철도청, 통계청, 문화재청, 정부기록보존소
- 2. 1994년의 정부조직개편에서 환경처가 환경부로 개편되어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였으며, 1996년에 공업진흥청이 폐지되면서 중소기업청이 신설됨.

정부대전청사로의 일부기능 이전으로 1992년과 2000년 동안에 중앙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도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그림 3-4>에서 보듯이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지역으로 이전되고 청(廳)단위의 정부기관만이 이전됨으로써 그 실질적인 정부중추기능의 지방분산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로부터의 거리대별로 중앙행정기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3-5>와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중심으로부터 20km권 지역에 중앙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74.5%인 35개 기관이 서울중심 반경 20km권 지역에 몰려있다. 이 지역에 정부중앙청사와 정부과천청사가 소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무인원 역시 전체의 76.1%를 이 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어 정부대전청사가 소재해 있는 서울중심 반경 120~140km권에 전체의 21.3%인 10개 기관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3-5> 중앙행정기관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자료: <표 3-7>에서 중앙행정기관수 기준임.

<표 3-7> 중앙행정기관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서울중심과의 거리	지역간 분포(개소, 인)				지역간 분포비율(%)			
	기관수		근무인원		기관수		근무인원	
	1992	2000	1992	2000	1992	2000	1992	2000
0-20km	44	35	21,010	14,302	95.7	74.5	97.6	76.1
20-40km	2	2	517	646	4.3	4.3	2.4	3.4
40-60km	0	0	0	0	0.0	0.0	0.0	0.0
60-80km	0	0	0	0	0.0	0.0	0.0	0.0
80-100km	0	0	0	0	0.0	0.0	0.0	0.0
100-120km	0	0	0	0	0.0	0.0	0.0	0.0
120-140km	0	10	0	3,853	0.0	21.3	0.0	20.5
140-160km	0	0	0	0	0.0	0.0	0.0	0.0
160-180km	0	0	0	0	0.0	0.0	0.0	0.0
180-200km	0	0	0	0	0.0	0.0	0.0	0.0
200-220km	0	0	0	0	0.0	0.0	0.0	0.0
220-240km	0	0	0	0	0.0	0.0	0.0	0.0
240-260km	0	0	0	0	0.0	0.0	0.0	0.0
260-280km	0	0	0	0	0.0	0.0	0.0	0.0
280-300km	0	0	0	0	0.0	0.0	0.0	0.0
300-320km	0	0	0	0	0.0	0.0	0.0	0.0
320-340km	0	0	0	0	0.0	0.0	0.0	0.0
340-360km	0	0	0	0	0.0	0.0	0.0	0.0
360km이상	0	0	0	0	0.0	0.0	0.0	0.0
합 계	46	47	21,527	18,801	100.0	100.0	100.0	100.0

자료: <표 3-6>에서와 같음.

이에 비해 1992년에는 분석대상 전체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44개인 95.7%가 서울반경 20km내에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반경 20~40km권에 나머지 두 개 기관이 입지하고 있는데, 수원의 농촌진흥청과 인천의 해양경찰청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반경 40km권 지역에 중앙행정기관의 100%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2년과 2000년 사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일부가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함으로써 서울반경 20km권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집중정도는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 지역이 우리나라 국가중추기능의 핵심지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② 공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

중추기능 중 중앙정부 기능과 관련하여 국가공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에 이어 공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정부 산하기관 중에서 정부가 투자한 기관이나 정부가 출자한 기관을 통칭하는 말이다. 통상 공기업이라 하면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출자회사만을 포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기관, 국고보조기관, 정부업무위탁기관 등도 분석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2002년의 공기업 본사 지역간 분포 분석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된 공기업 중 경영혁신대상기관²⁾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상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공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2) 2002년 현재 경영혁신 대상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13개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8개 정부출자기관, 각 부처 산하의 101개 출연기관(국무총리 산하 연합이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42개 포함), 보조금 규모가 20억 이상이거나 보조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인면서 보조금 비율이 기관 총수입의 50% 이상인 33개 보조기관, 정부위탁 수입이 5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30% 이상이거나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59개 위탁기관 등 총 214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기획예산처 내부자료).

<표 3-8> 공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

구 분	지역간 분포(개소, 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인구비중대비 분포비율(%)			
	본사수		근무인원		본사수		근무인원		본사수		근무인원	
	1992	2002	1992	2002	1992	2002	1992	2002	1992	2002	1992	2002
전 국	281	214	84.8	5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237	178	68.8	41.6	84.3	83.2	81.1	76.1	197.0	179.7	189.5	164.3
충청권	23	24	13.0	11.4	8.2	11.2	15.3	20.8	79.8	110.6	149.4	205.5
호남권	4	2	0.4	0.1	1.4	0.9	0.4	0.3	10.8	8.2	3.2	2.4
영남권	17	10	2.7	1.5	6.0	4.7	3.1	2.8	20.9	16.8	10.8	10.1
강원·제주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 방	44	36	16.0	13.1	15.7	16.8	18.9	23.9	27.4	31.3	33.0	44.6

자료: 기획예산처 내부자료(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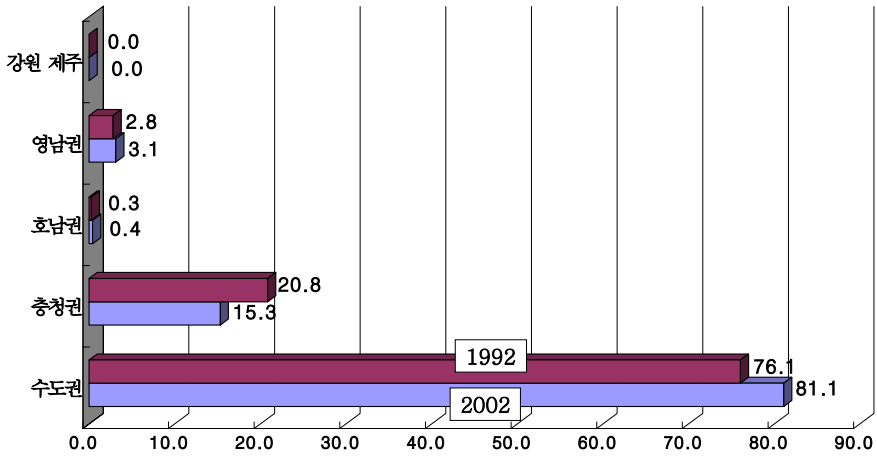
박상우 외, 1992, 『행정중추관리기능 분산에 관한 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표 3-8>과 <그림 3-6>을 통해 보면, 1992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에서의 정의에 따른 우리나라 공기업은 총 281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³⁾ 그 중 본사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공기업은 전체의 84.3%인 237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에는 15.7%인 44개 공기업 본사만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기업 본사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서도 전체 약 85,000명 중 81.1%인 69,000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교하여 공기업 본사의 수도권 입지비중이 기관수의 경우 197.0%, 근무인원의 경우 189.5%에 달하는 것으로서 공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수도권 내에서는 1992년 기준으로 서울에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본사의 78.6%인 221개 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도에는 전체의 5.7%인 16개 기관만이 입지하고 있어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간 편차가 큰 가운데 서울에 대한 입지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1992년도를 기준으로 한 공기업본사 분포분석에서는 정부투자·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국고보조기관, 일반법인 등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통계합 등으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소재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그림 3-6> 공기업 본사 근무인원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2~2002



자료: <표 3-8>.

지방의 경우에는 1992년 기준으로 전체의 8.2%인 23개 공기업 본사가 충청권에 입지해 있고, 전체의 6.0%인 17개 기관이 영남권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호남권에 있어서는 4개 기관만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1992년 기준으로 대전에 21개 공기업 본사가 입지하여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공기업 본사 입지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영남권에서는 부산에 7개 공기업 본사, 대구와 경남에 각각 4개의 공기업 본사가 입지해 있다.

2002년 현재는, 분석대상으로 삼은 전체 공기업의 83.2%인 178개 기관이 그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으며, 나머지 36개 기관은 본사를 지방에 두고 있어 공기업 본사의 지방입지비중은 16.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수도 서울에 전체 공기업 본사의 66.8%인 143개가 위치해 있으며, 경기지역에 전체의 14.5%인 31개 기관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지방에서는 지방입지 공기업 본사 36개 중 24개가 충청권에, 그리고 10개가 영남권에 소재하여 충청권이 지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에 21개 공기업 본사가 입지

하여 서울,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은 입지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 5개 기관, 충남에 3개 기관의 공기업 본사가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공기업 본사의 수도권 입지비중은 0.9% 정도 감소한 반면 지방의 경우는 그 만큼 증가하고 있어 공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수도권 내, 지방 내 지역간에서는 큰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입지비중이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78.6%에서 66.8%로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에 5.7%에서 14.5%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방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에 대전에서 본사입지비중이 7.5%에서 9.8%로, 그리고 충남지역에서 0.7%에서 1.4%로 본사입지비중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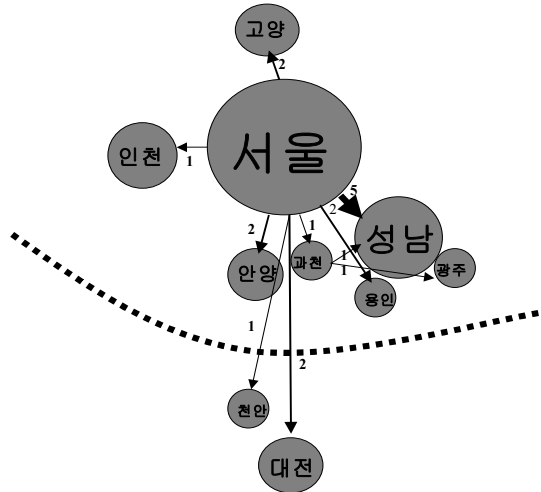
2002년도 경영혁신대상 214개 기관 중 1992년도의 주소지 추적이 가능한 12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공기업 본사 이전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약 18개 기관이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5개 기관이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3개 기관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였다.

이러한 공기업 본사의 이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3-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인 경우 서울에서 성남으로 5개 기관, 고양과 안양, 용인으로 각각 2개 기관, 그리고 인천과 과천으로 각각 1개 기관이 본사를 이전하였고 과천에서 성남과 용인으로 각각 1개 기관이 본사를 이전하였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는 대전으로 2개 기관, 천안으로 1개 기관이 본사를 이전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도권에서는 분당신도시의 건설과 함께 성남시로 가장 많은 공기업이 본사를 이전하였으며, 일산신도시와 평촌신도시가 위치하는 고양과 안양 역시 공기업의 주요한 입지선호지역이 되고 있다⁴⁾. 지방의 경우에는 정부대전

4) 서울에서 성남시로 본사를 이전한 기관은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이며, 서울에서 고양시로 본사를 이전한 기관은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고, 서울에서 안양시로 본사를 이전한 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석유공사이며, 서울에서 용

<그림 3-7> 공기업 본사의 주요 이전경로 : 1990~2002



주 :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대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대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천안)임.

청사와 대덕연구단지가 소재하는 대전지역, 그리고 수도권 남부지역과 연결한 천안지역이 주요 이전입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본사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수도권비중은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81.1%에서 76.1%로 감소하였으며, 지방의 비중은 18.9%에서 23.9%로 증가하였다. 수도권 내에서는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기업본사 이전에 따라 서울의 비중이 75.7%에서 54.5%로 크게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비중이 5.4%에서 19.1%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 한편 지방에서는 공기업 본사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충청권의 비중이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15.3%에서 20.8%로 증가하였는데 충청권에서는 특히, 대전의 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에 14.5%에서 19.9%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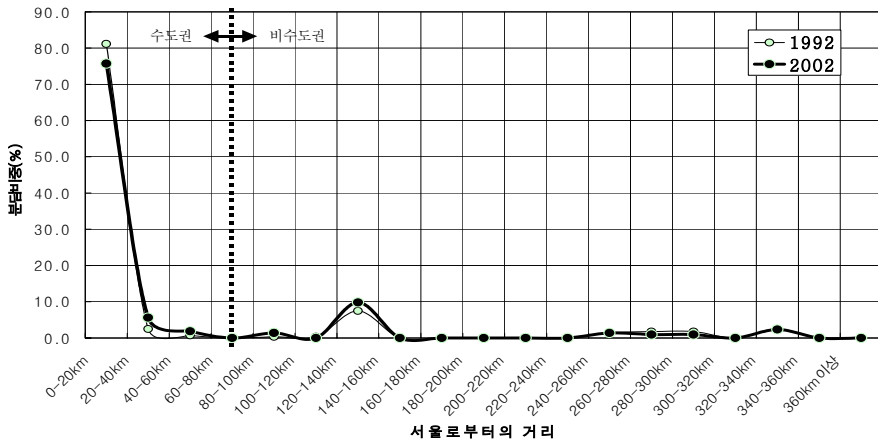
공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와 함께 서울로부터 거리대별 분포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3-8>과 <표 3-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기업본사가 수도

인시로 본사를 이전한 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산원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서울에서 과천으로 이전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하였다. 이외에 과천에 소재하던 한국노동교육원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각각 경기도 광주와 성남시로 이전하였다.

권, 특히 서울에 매우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다. 즉, 서울중심좌표로부터 20km권내의 지역에 우리나라 공기업본사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992년에는 전체 분석대상 공기업 본사 281개의 81.1%인 228개소가 서울반경 20km권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분석대상 공기업 본사 214개의 75.7%인 162개소가 서울반경 20km권내에 입지하고 있다. 이에 이어 대전을 포함하는 서울반경 120~140km권에 21개의 공기업 본사가 입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공기업 본사의 서울과 인접지역의 집중정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수도권 외곽지역과 대전지역에 대한 입지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서울중심 반경 20km권에서는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공기업 본사의 분포비중이 81.1%에서 75.7%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서울반경 20~40km권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공기업본사의 입지비중이 2.5%에서 5.6%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대전을 포함하는 서울반경 120~140km권 지역에서도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공기업 본사의 분포비중이 7.5%에서 9.8%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로부터 직선거리로 140km을 넘는 대전이남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림 3-8> 공기업 본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자료: <표 3-9>에서 공기업본사 수 기준임.

<표 3-9> 공기업 본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서울중심과의 거리	지역간 분포(개소, 인)				지역간 분포비율(%)			
	본사수		근무인원		본사수		근무인원	
	1992	2002	1992	2002	1992	2002	1992	2002
0-20km	228	162	65,944	37,556	81.1	75.7	77.8	68.6
20-40km	7	12	1,770	3,349	2.5	5.6	2.1	6.1
40-60km	2	4	1,062	718	0.7	1.9	1.3	1.3
60-80km	0	0	0	0	0.0	0.0	0.0	0.0
80-100km	1	3	201	506	0.4	1.4	0.2	0.9
100-120km	1	0	526	0	0.4	0.0	0.6	0.0
120-140km	21	21	12,268	10,899	7.5	9.8	14.5	19.9
140-160km	0	0	0	0	0.0	0.0	0.0	0.0
160-180km	0	0	0	0	0.0	0.0	0.0	0.0
180-200km	0	0	0	0	0.0	0.0	0.0	0.0
200-220km	0	0	0	0	0.0	0.0	0.0	0.0
220-240km	0	0	0	0	0.0	0.0	0.0	0.0
240-260km	4	3	422	145	1.4	1.4	0.5	0.3
260-280km	5	2	508	155	1.8	0.9	0.6	0.3
280-300km	5	2	1,169	353	1.8	0.9	1.4	0.6
300-320km	0	0	0	0	0.0	0.0	0.0	0.0
320-340km	7	5	907	1,036	2.5	2.3	1.1	1.9
340-360km	0	0	0	0	0.0	0.0	0.0	0.0
360km이상	0	0	0	0	0.0	0.0	0.0	0.0
합 계	281	214	84,777	54,717	100.0	100.0	100.0	100.0

주 : 서울중심과의 거리는 서울센터좌표와 각 시·군 센터좌표간의 직선거리 기준임.
 자료: <표 3-8>에서와 같음.

공기업 본사의 입지가 저조한 가운데 1992년 이후 그 입지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공기업 본사의 입지성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첫째, 본사기능의 수도권 집중성향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이전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도권 내에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경기지역으로 공기업 본사의 입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에 대해서는 정부대전청사가 입지한 대전과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이 본사입지로서 선호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서울로부터의 거리 대별 분포에서 보듯이 공기업 본사의 입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입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다.

2) 산(産) : 기업본사 분포의 지역간 비교

① 100대 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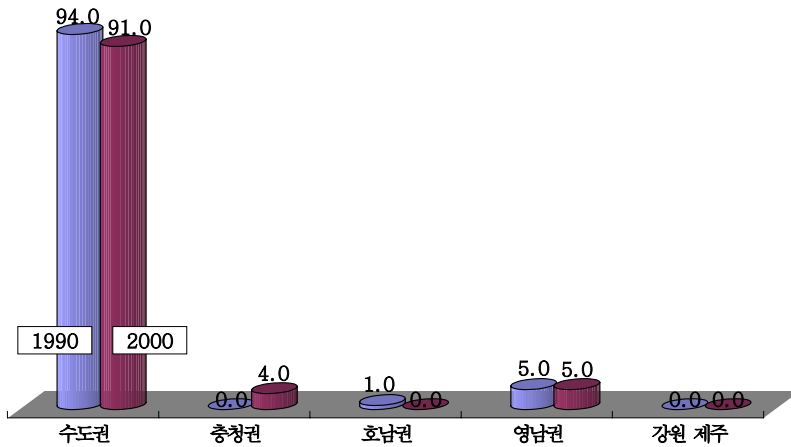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세 가지 중추기능 중 중앙정부 기능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세 가지 유형의 중추기능 중 대기업 본사기능과 관련하여 대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와 분포변화를 분석한다.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가장 직결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입지라고 할 수 있다. 즉, 세 가지 중추기능 중에서 대기업 본사기능의 입지가 지역 발전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기업규모를 100대, 500대, 3000대로 구분하고 각 규모별로 지역간 분포특성을 분석한다.

먼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100대 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3-9>와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수도권에 91개가 소재하고, 지방에는 9개만 입지하여 수도권에 그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에 77개 기업본사, 인천에 4개 기업본사, 경기지역에 10개 기업본사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서울집중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에서는 영남권에 5개 기업본사, 충청권에 4개 기업본사가 입지해 있다. 지방의 시·도간에서는 부산, 대전, 울산 그리고 경북에 각 1개 기업본사가 입지해 있으며, 충남에 3개, 경남에 2개 기업본사가 분포하고 있다. 호남권과 강원,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2000년 현재 100대 기업의 본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 본사가 지방에 소재하는 100대 기업(2000) >

(주)한진중공업(부산), 한국담배인삼공사(대전), 현대중공업(주)(울산), 현대정유(주)(서산), 현대석유화학(주)(서산), 삼성종합화학(주)(서산), 포항종합제철(주)(포항), 두산중공업(주)(창원), (주)노키아티엠씨(마산)

<그림 3-9> 1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0~2000



자료: <표 3-10>에서 기업본사 수 기준임.

199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100대 기업본사는 수도권에 94개가 입지하고 지방에는 5개만이 분포하여 2000년에 비하여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에 86개가 분포하고 인천에 4개, 경기지역에 5개 기업본사가 분포하여 2000년에 비하여 서울집중성향이 훨씬 강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에서는 1990년 당시에 영남권에 5개, 호남권에 1개 기업본사가 분포하고 충청권에는 100대 기업본사가 하나도 입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1990년과 2000년의 10년 동안에 100대 기업본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다소 완화된 가운데 영남권 등 지리적으로 서울과 거리가 먼 지방에서의 100대 기업본사의 입지는 크게 후퇴한 반면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에 대한 100대 기업본사의 입지는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990년과 2000년의 10년 동안에 수도권에서는 100대 기업본사가 3개 감소한 반면 지방에 소재하는 100대 기업본사는 6개에서 9개로 3개가 늘어났다. 그리고 지방에서 증가한 100대 기업본사는 모두 충청권에 입지해 있다.

<표 3-10> 1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0~2000

구 분	지역간 분포(개소, 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인구비중 대비 분포비율(%)			
	본사수		종업원수		본사수		종업원수		본사수		종업원수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전 국	100	100	840.2	71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4	91	768.2	651.3	94.0	91.0	91.4	90.7	219.6	196.6	213.6	196.0
충청권	0	4	0.0	9.8	0.0	4.0	0.0	1.4	0.0	39.4	0.0	13.4
호남권	1	0	3.5	0.0	1.0	0.0	0.4	0.0	7.6	0.0	3.2	0.0
영남권	5	5	68.5	56.9	5.0	5.0	8.1	7.9	17.3	17.9	28.2	28.4
강원·제주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 방	6	9	72.0	66.6	6.0	9.0	8.6	9.3	10.5	16.8	15.0	17.3

주 : 종업원수는 기업전체 기준임.

자료: 한국능률협회. 1990. 『한국의 3000대 기업』. 서울 : 한국능률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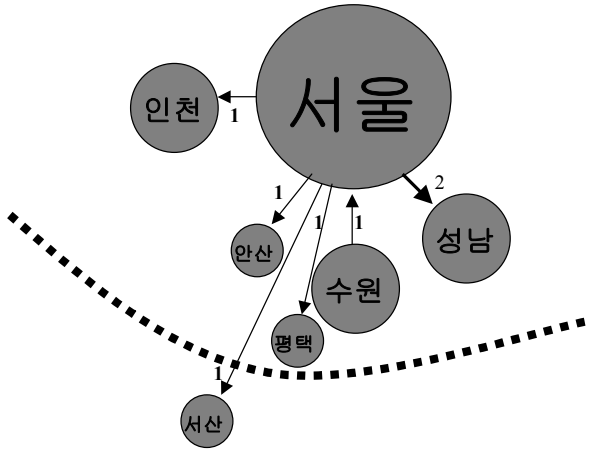
매일경제신문사. 2000. 『회사연감』.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그렇지만 같은 권역에서도 시·도간에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수도권을 보면,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에서 100대 기업본사가 9개가 감소하였으나 인천에서 1개소가 증가하고 경기지역에서는 5개 기업본사가 늘어나 10년 사이에 100대 기업본사가 두 배로 증가하였다. 지방에서도 경북, 경남 등 영남권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호남권에서 1개소 감소하고 1990년에 100대 기업본사가 소재하지 않았던 충청권에서 100대 기업본사수가 4개가 증가하고 있다(충청권에서는 특히 1990년에 100대 기업의 본사가 없었던 충남지역에서 3개 본사가 증가하였으며 대전 역시 1990년에는 100대 기업본사가 없었지만 2000년에는 1개소가 소재하게 되었다).

100대 기업본사의 분포변화에서 1990년과 2000년의 10년 동안에 수도 서울의 입지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경기지역에 대한 입지비중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지방에서는 서울과 거리가 먼 영·호남권에 대한 입지비중은 감소한 반면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지역에서는 입지가 크게 강화됨으로써 수도권 입지지향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5) 1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100대 기업을 새로이 선정 하였기 때문에 본사입지수의 감소가 반드시 100대 기업본사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500대 기업, 3000대 기업의 지역간 본사분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3-10> 100대 기업 중 시·도간 본사이전기업의 이전경로



자료: <표 3-11>.

이러한 100대 기업본사의 수도권 입지향성은 기업본사의 이전경로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1990년과 2000년 공히 100대 기업에 속하게 된 기업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사이에 기존의 기업본사를 시·도간에 이전한 기업을 조사해 본 결과가 <그림 3-10>과 <표 3-11>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7개 기업이 시·도간에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1> 100대 기업 중 시·도간 본사이전기업 현황

기업명	순위(2000년)	산업분류	당초소재지	이전지	설립연도
삼성전자	3	제조업	경기 수원시	서울시 중구	1969
KT	16	통신업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1981
현대정유	22	제조업	서울 종로구	충남 서산시	1964
삼보컴퓨터	41	제조업	서울 서대문구	경기 안산시	1980
인천정유	44	제조업	서울 중구	인천 서구	1969
쌍용자동차	91	제조업	서울 중구	경기 평택시	1954
대우통신	100	제조업	서울 중구	경기 성남시	1967

자료: <표 3-10>에서와 같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전기통신공사(KT)와 대우통신이 서울에서 분당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으로 기업본사를 이전하였으며, 삼보컴퓨터가 본사를 서울에서 경기 안산으로 이전하였고, 인천정유의 경우는 기업본사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하였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기업본사의 통합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본사가 수원에서 서울로 이전되어 간 것이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기존의 기업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는 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현대정유가 본사를 충남 서산으로 옮긴 것이다.

이러한 이전경로 분석결과로부터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본사의 입지에 있어서 주로 서울주변 경기지역이 선호되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지역이 이전입지로 선호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

산업구조가 첨단화·정보화·지식화되어 가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단순한 기업본사의 입지수 뿐만 아니라 입지하고 있는 기업본사의 업종 역시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100대 기업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간에 업종별 본사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100대 기업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제조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금융·보험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100대 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은 54%에서 38%를 크게 감소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16%에서 28%로, 운수·창고·통신업은 5%에서 9%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고 그 중심이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역간에서는 최근 10년 동안에 100대 기업 중 금융·보험업, 운수·창고·통신업 기업본사의 수도권 집중은 강화되는 반면 제조업 기업본사의 지방입지는 확대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수도권의 경우 제조업 기업본사 수는 20개가 감소한 반면 금융·보험업 12개 기업본사, 운수·창고·통신업 4개 기업본사, 전기·가스·수도사업 3개 기업본사가 늘어났는데, 이는 이들

<표 3-12> 1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업종분포의 변화 : 1990~2000

구 분		합 계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 타
1990	전 국	100	54	1	9	14	5	16	1
	수도권	94	49	1	8	14	5	16	1
	충청권	0	0	0	0	0	0	0	0
	호남권	1	0	0	1	0	0	0	0
	영남권	5	5	0	0	0	0	0	0
	강원·제주	0	0	0	0	0	0	0	0
	지 방	6	5	0	1	0	0	0	0
2000	전 국	100	38	4	8	12	9	28	1
	수도권	91	29	4	8	12	9	28	1
	충청권	4	4	0	0	0	0	0	0
	호남권	0	0	0	0	0	0	0	0
	영남권	5	5	0	0	0	0	0	0
	강원·제주	0	0	0	0	0	0	0	0
	지 방	9	9	0	0	0	0	0	0
기간 중 증감	전 국	0	-16	3	-1	-2	4	12	0
	수도권	-3	-20	3	0	-2	4	12	0
	충청권	4	4	0	0	0	0	0	0
	호남권	-1	0	0	-1	0	0	0	0
	영남권	0	0	0	0	0	0	0	0
	강원·제주	0	0	0	0	0	0	0	0
	지 방	3	4	0	-1	0	0	0	0

주 : 기업본사 수 기준임.

자료: <표 3-10>에서와 같음.

업종에서 증가한 100대 기업의 본사 모두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증가한 금융·보험업 12개 기업본사 모두, 운수·창고·통신업 4개 기업본사 중 3개가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이 주도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업종들의 서울집중은 크게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100대 기업본사가 3개 증가하였는데 그 업종별 내용을 보면 제조업 기업본사가 4개 증가하고 건설업 기업본사는 1개소 감소하였다. 즉, 지방에서는 수도권과는 달리 제조업 기업본사의 입지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지방에서 증가한 제조업 기업본사는 대전에서 1개소, 충남에서 3개소 등 4개소 모두가 충청권에서 증가하였는데 수도

권과의 거리를 고려하면 결국 지방의 기업본사 입지기반은 크게 쇠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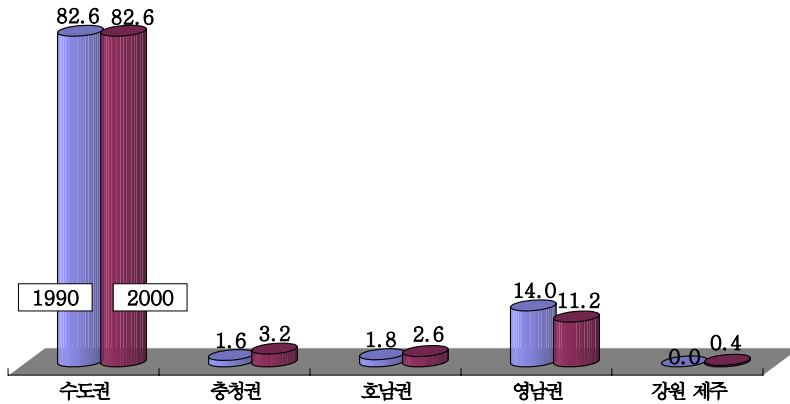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최근 10년 동안에 100대 기업의 본사분포에서 수도권 집중성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도권 인접지역인 충청지역으로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 제조업 본사이고, 첨단통신 및 고차기능의 금융·보험업은 오히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로의 집중이 더욱 심화·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5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

100대 기업본사를 기준으로 한 기업본사 중추기능은 첨단통신 및 금융·보험 등 고차기능을 중심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로의 집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방, 그 중에서도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지역으로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는 분석범위를 확대하여 500대 기업의 본사분포를 지역간에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위 500대 기업의 본사분포를 지역간에 비교해 보면, <그림 3-11>과 <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수도권에 전체의 82.6%인 413개 기업본사가 입지해 있으며, 지방에는 87개 기업본사만이 분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00대 기업에 비해 수도권 집중정도는 낮기는 하나 여전히 인구비중에 비해 1.8배 정도가 높은 고수준의 수도권 집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에 500대 기업의 본사가 56개소 입지하여 지방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에 360개 기업본사, 즉 전체의 72.0%가 입지하고, 인천에 9개 기업본사, 경기도에 44개 기업본사가 분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수도서울에 500대 기업의 본사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지방에서는 경남과 울산에 각각 14개 기업본사와 12개 기업본사가 입지해 있고, 경북과 대구에 각각 11개와 10개, 그리고 부산과 충남에 각각 9개씩의 기업본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남, 강원, 충북지역에는 500대 기업본사가 2개씩만 입지해 있다.

<그림 3-11> 5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0~2000



자료: <표 3-13>.

1990년도의 매출액 순위 상위 5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를 보면, 수도권에 전체의 82.6%인 413개 업체가 분포하고 지방에는 17.4%인 87개 업체가 분포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인구에 비하여 그 집중도가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에 전체의 14.0%인 70개 기업본사가 분포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에 전체의 73.4%인 367개 업체, 경기도와 인천에는 각각 25개 업체와 21개 업체의 본사만이 분포하여 서울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에서는 본사가 지방에 소재하는 500대 기업 87개 업체 중 70개 업체의 본사가 영남권에 소재하여 영남권의 분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에 각각 21개와 20개의 기업본사가 분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과 2000년 동안의 5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분포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시·도간에서는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과 인천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경기도의 비중의 크게 확대되었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충청권과 호남권의 분포비중이 증가한 대신 영남권의 비중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서울과 인천의 경우 500대 기업본사수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각각 7, 12개씩 줄어든 반면

<표 3-13> 5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0~2000

구 분	지역간 분포(개소, 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인구비중 대비 분포비율(%)			
	본사수		종업원수		본사수		종업원수		본사수		종업원수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전 국	500	500	1,537.8	1,193.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413	413	1,299.6	1,043.1	82.6	82.6	84.5	87.4	192.9	178.5	197.4	188.8
충청권	8	16	22.9	18.2	1.6	3.2	1.5	1.5	15.6	31.5	14.5	15.0
호남권	9	13	10.8	16.1	1.8	2.6	0.7	1.4	13.7	22.9	5.3	11.9
영남권	70	56	204.5	115.3	14.0	11.2	13.3	9.7	48.4	40.2	46.0	34.6
강원·제주	0	2	0.0	1.0	0.0	0.4	0.0	0.1	0.0	9.2	0.0	2.0
지 방	87	87	238.2	150.6	17.4	17.4	15.5	12.6	30.4	32.4	27.1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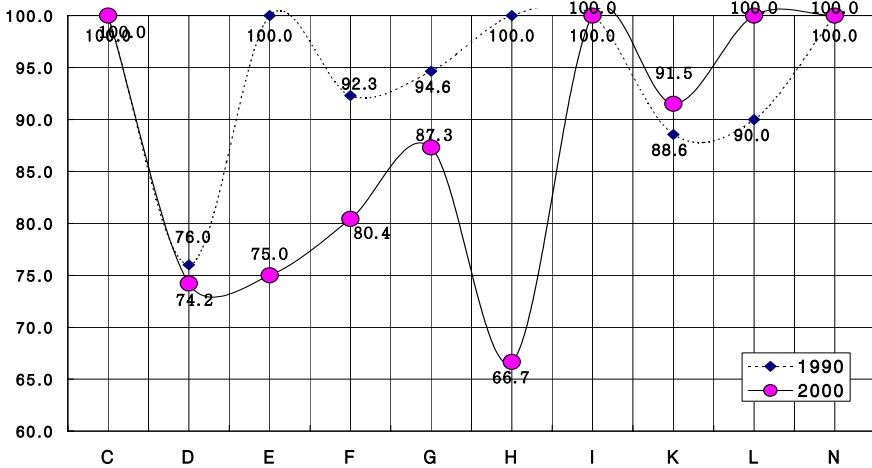
주와 자료: <표 3-10>에서와 같음.

경기도의 경우 19개 업체가 증가함으로써 경기도의 비중이 5.0%에서 8.8%로 늘어났다. 충청지역의 경우 충남과 대전에서 각각 7개, 1개 업체가 늘어나 충청권의 비중이 1.6%에서 3.2%로 2배 증가하였으며, 호남권의 경우 광주와 전북에서 각각 2개 업체씩 증가한 반면 영남권에서는 부산·경남지역에서 500대 기업의 본사수가 19개나 감소하여 영남권의 비중이 14.0%에서 11.2%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100대 기업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수도권에 대한 집중정도는 변화가 없다. 반면 시·도간 분포비중 변화에서는 100대 기업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경기지역과 인접 충청지역으로 본사입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도 서울의 입지비중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영남권에 대한 입지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500대 기업본사 수의 지역간 분포와 함께 500대 기업본사의 업종별로 지역간 분포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3-12>와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100대 기업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1990년과 2000년의 10년 사이에 제조업의 비중감소와 금융·보험업, 운수·창고·통신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의 비중확대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제조업종이 급속히 퇴조하는 가운데 금융·보험업과 운수·창고·통신업종이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구

<그림 3-12> 500대 기업본사의 업종별 수도권의 비중변화 : 1990~2000



주: A(농업 및 임업), B(어업), C(광업),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 창고 및 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N(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료: <표 3-10>에서와 같음.

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500대 기업에서 75개가 줄어들었고, 이에 비해 금융·보험업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에 36개나 증가하였으며 운수·창고·통신업도 11개가 증가하였다. 또한 전기·가스·수도사업의 경우도 9개가 증가하였다.

5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업종분포 변화에서는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수도권 집중심화와 제조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지방 비중 확대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500대 기업 중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증가한 금융·보험업체 36개 사 중 35개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고 운수·창고·통신업종의 경우 지방에 본사를 둔 500대 기업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전무하다. 이에 비해 500대 기업에서 감소한 제조업체 75개 사 중 61개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서 감소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영남권에서 23개 사가 줄어든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각각 6개 사, 2개 사씩 증가하고 있다.

<표 3-14> 5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업종분포 변화 : 1990~2000

구 분	A	B	C	D	E	F	G	H	I	K	L	N	합계	
1990	전 국	7	0	1	296	3	39	56	2	14	70	10	2	500
	수도권	6	0	1	225	3	36	53	2	14	62	9	2	413
	충청권	0	0	0	6	0	0	0	0	0	2	0	0	8
	호남권	0	0	0	5	0	1	0	0	0	2	1	0	9
	영남권	1	0	0	60	0	2	3	0	0	4	0	0	70
	강원·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 방	1	0	0	71	0	3	3	0	0	8	1	0	87
2000	전 국	0	1	1	221	12	46	63	3	25	106	14	8	500
	수도권	0	1	1	164	9	37	55	2	25	97	14	8	413
	충청권	0	0	0	12	0	3	0	0	0	1	0	0	16
	호남권	0	0	0	7	0	3	1	0	0	2	0	0	13
	영남권	0	0	0	37	3	2	7	1	0	6	0	0	56
	강원·제주	0	0	0	1	0	1	0	0	0	0	0	0	2
	지 방	0	0	0	57	3	9	8	1	0	9	0	0	87
기간중 변화	전 국	-7	1	0	-75	9	7	7	1	11	36	4	6	0
	수도권	-6	1	0	-61	6	1	2	0	11	35	5	6	0
	충청권	0	0	0	6	0	3	0	0	0	-1	0	0	8
	호남권	0	0	0	2	0	2	1	0	0	0	-1	0	4
	영남권	-1	0	0	-23	3	0	4	1	0	2	0	0	-14
	강원·제주	0	0	0	1	0	1	0	0	0	0	0	0	2
	지 방	-1	0	0	-14	3	6	5	1	0	1	-1	0	0

주 : <그림 3-12>에서와 같음.
 자료: <표 3-10>에서와 같음.

시·도간에서는 수도권에서 증가한 금융·보험업체 35개 사 중 34개 업체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운수·창고·통신업에서도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증가한 업체 11개 사 중 10개 사가 그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의 경우에서도 수도권에서 증가한 6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그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다. 500대 기업본사에서 제조업의 경우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75개 기업이 감소하였는데 서울, 인천에서 각각 53개, 11개 기업이 감소하였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3개 제조업체가 증가하였다. 지방에서는 영남권에서만 500대 기업의 본사 수가 감소하였는데 부산에서 16개 기업, 경남지역에서 7개 기업이 감소하였다. 지방에서는 특히, 충남에서 가장 많은 5개 제조업체가 증가하였다.

500대 기업본사의 업종별 분포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여전히 제조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급속하게 퇴조하는 가운데 금융·보험업, 운수·창고·통신업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간 업종분포 변화에서는 새로운 성장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금융·보험업과 운수·창고·통신업종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성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제조업종은 일부 경기지역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입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30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위 3000대 기업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하면 <표 3-15>와 <그림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대 기업과 500대 기업에서와는 사뭇 다른 지역간 분포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3000대 기업 중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여 수도권 입지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2000년 현재 매출액 기준 상위 3000대 기업의 본사는, 수도권에 전체의 71.9%인 2,158개 기업본사가 분포하고 지방에 842개 기업본사가 소재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수도 서울에 1,585개 기업의 본사가 입지하여 전체에 대한 비중이 52.8%에 이르며, 경기지역에는 458개 기업본사가 입지하여 그 비중이 16.2%로 나타나고 인천의 경우는 115개 기업의 본사가 입지해 있다. 즉, 수도권 내에서는 3000대 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집적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에서는 2000년 현재 3000대 기업 본사 중 533개 기업본사가 입지해 있는 영남권의 비중이 17.8%로 가장 높는데 부산과 경남지역에 각각 166개, 139개 기업본사가 소재해 있으며, 경북과 대구, 그리고 울산에는 각각 105개, 77개, 46개 기업본사가 분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호남권의 경우는 102개만이 분포하여 인구비중에 대한 기업본사 분포비중이 29.9%에 불과하다.

<표 3-15> 30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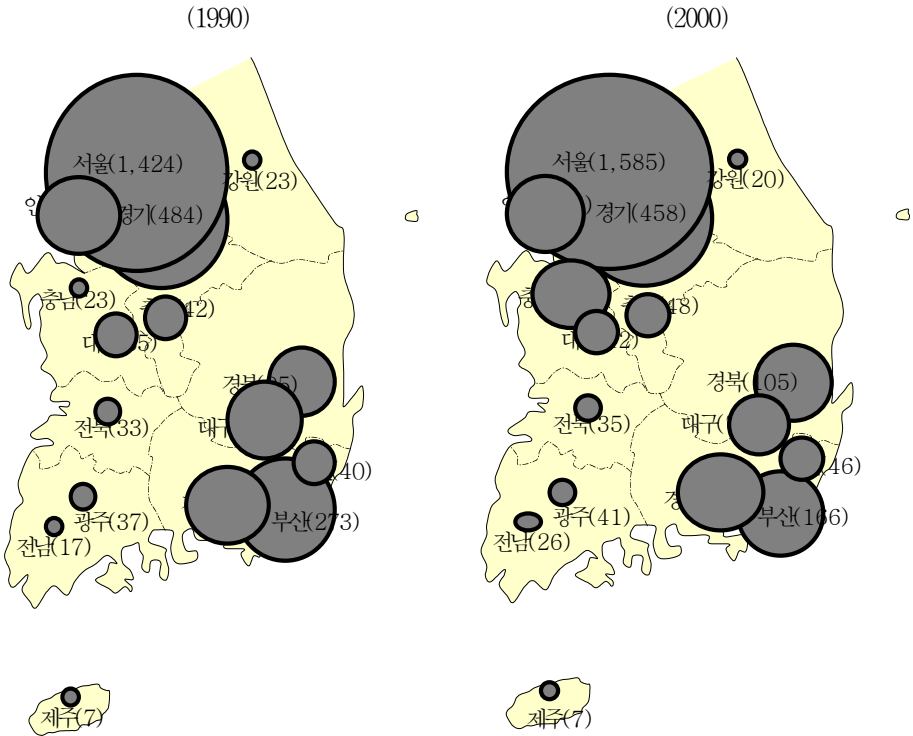
구 분	지역간 분포(개소, 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인구비중 대비 분포비율(%)			
	본사수		종업원수		본사수		종업원수		본사수		종업원수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전 국	3,000	3,000	2,350	1,85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2,062	2,158	1,826	1,512	68.9	71.9	77.7	81.5	160.9	155.4	181.5	176.2
충청권	120	180	60	58	4.0	6.0	2.5	3.1	39.1	59.1	24.8	30.8
호남권	87	102	30	37	2.9	3.4	1.3	2.0	22.1	29.9	9.7	17.8
영남권	694	533	422	239	23.2	17.8	18.0	12.9	80.1	63.7	62.1	46.2
강원·제주	30	27	12	8	1.0	0.9	0.5	0.5	20.8	20.8	10.2	10.4
지 방	931	842	524	343	31.1	28.1	22.3	18.5	54.4	52.3	39.0	34.4

주와 자료: <표 3-10>에서와 같음.

1990년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 상위 3000대 기업의 본사 중 68.9%인 2,062개 기업본사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가운데 지방에는 931개 기업본사가 입지해 있다. 이 역시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1990년에 42.8%임을 감안하면 수도권편중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에 전체의 47.6%, 경기도에 16.2%가 분포하고 인천에는 5.1%가 분포하여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지방에서는 영남권에 3000대 기업본사의 23.2%인 694개 기업본사가 분포하여 영남권에 대한 본사입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산에 273개, 경남에 160개, 대구에 126개 기업본사가 분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호남권에는 전체의 2.9%인 87개 기업본사만이 분포하고 있는데 1990년도의 호남권 인구비중이 13.2%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분포비중이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의 10년 동안에 3000대 기업본사의 분포변화를 보면, 수도권으로의 기업본사 집중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즉,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우리나라 3000대 기업의 본사의 수도권 입지비중이 68.9%에서 71.9%로 증가하였다. 지방에서는 영남권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에 23.2%에서 17.8%로 감소한 반면 충청권의 비중은 4.0%에서 6.0%로 증가하였으며 호남권 역시 그 폭이 미약하기는 하나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3000대 기업본사의 분포비중이 증가하고

<그림 3-13> 30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0~2000



자료: <표 3-10>에서와 같음.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서울의 비중은 확대된 반면 경기도의 비중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3000대 기업본사의 분포비중이 1990년의 47.6%에서 2000년의 52.8%로 증가한 반면 경기도의 경우는 16.2%에서 15.3%로 감소하였고, 인천 역시 5.1%에서 3.8%로 줄어들었다. 지방에서는 영남권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충청권과 호남권의 비중은 확대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영남권의 비중감소는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경제의 침체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충청권의 경우는 충남지역에서 70개 가까이 기업본사가 증가하였다. 즉, 부산과 대구의 경우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3000대 기업본사의 분포비중이 각각 9.1%에서 5.5%, 4.2%에서 2.6%로 크게 하락

하였으며, 충남의 경우는 0.8%에서 3.0%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의 우리나라 3000대 기업본사의 분포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100대 및 500대 기업의 본사분포에서와는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수도권으로의 기업본사 입지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내에서도 경기도와 인천의 비중은 줄어들고 서울의 비중이 확대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방에서는 영남권의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충남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한편 영남권 내에서도 경북의 3000대 기업본사 입지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며, 충청권 내에서는 대전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30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에 이어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우리나라 3000대 기업의 업종별 분포변화를 지역간에 살펴보면, <표 3-16>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제조업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도소매업과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그리고 금융·보험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매출액 기준 상위 3000대 기업 중 제조업체는 1990년의 2,030개에서 2000년에는 1,731개로 299개 업체가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도소매업체는 249개에서 397개로 148개 업체가 증가하였다. 또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업체는 50개에서 149개로, 금융·보험업체는 157개에서 195개로 각각 99개, 38개 기업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던 제조업은 급속히 퇴조하는 가운데 금융·보험업 등이 새로운 성장주도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간에서는 업종별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림 3-14>와 <표 3-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최근 10년 사이에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증가한 기업본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증가한 반면 지방에서는 건설업 기업본사, 금융·보험업 기업본사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제조업이 급속히 쇠퇴하는 가운데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그 기반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표 3-16> 3000대 기업본사의 지역간 업종분포 변화 : 1990~2000

구 분	A	B	C	D	E	F	G	H	I	K	L	N	합계	
1990	전 국	43	1	20	2,030	18	270	249	36	100	157	50	19	3,000
	수도권	35	1	13	1,379	12	159	180	27	71	124	44	17	2,062
	충청권	0	0	0	86	1	14	10	0	3	6	0	0	120
	호남권	0	0	0	47	1	20	12	0	1	5	1	0	87
	영남권	8	0	2	510	4	67	46	7	23	20	5	2	694
	강원·제주	0	0	5	8	0	10	1	2	2	2	0	0	30
	지 방	8	0	7	651	6	111	69	9	29	33	6	2	931
2000	전 국	4	10	12	1,731	27	289	397	30	118	195	149	38	3,000
	수도권	3	9	10	1,152	12	201	311	23	101	172	137	27	2,158
	충청권	0	0	0	134	4	18	14	0	2	5	2	1	180
	호남권	0	0	1	53	3	18	16	0	2	5	2	2	102
	영남권	1	1	0	385	8	47	53	3	13	11	4	7	533
	강원·제주	0	0	1	7	0	5	3	4	0	2	4	1	27
	지 방	1	1	2	579	15	88	86	7	17	23	12	11	842
기간중 변화	전 국	-39	9	-8	-299	9	19	148	-6	18	38	99	19	0
	수도권	-32	8	-3	-227	0	42	131	-4	30	48	93	10	96
	충청권	0	0	0	48	3	4	4	0	-1	-1	2	1	60
	호남권	0	0	1	6	2	-2	4	0	1	0	1	2	15
	영남권	-7	1	-2	-125	4	-20	7	-4	-10	-9	-1	5	-161
	강원·제주	0	0	-4	-1	0	-5	2	2	-2	0	4	1	-3
	지 방	-7	1	-5	-72	9	-23	17	-2	-12	-10	6	9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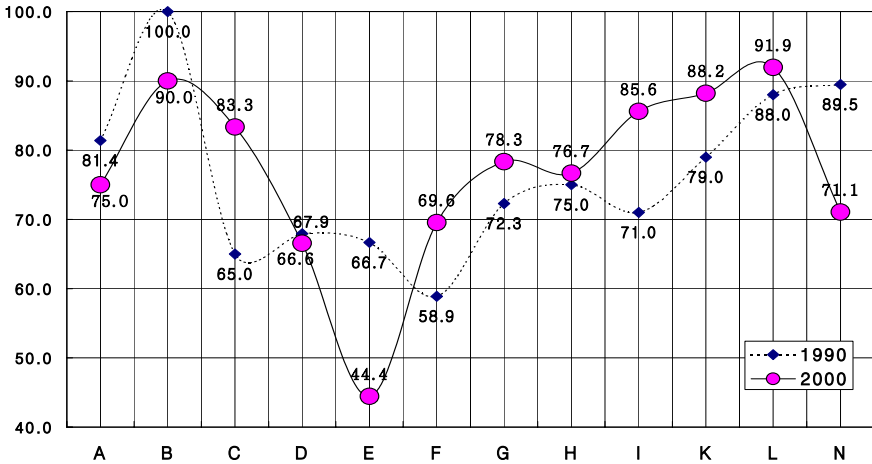
주 : 1. 1990년도의 합계에는 소재지 불명의 7개 업체 포함.

2. A(농업 및 임업), B(어업), C(광업),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 창고 및 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N(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료: <표 3-10>에서와 같음.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우리나라 3000대 기업에서 제조업종은 총 299개 사가 감소하였는데 그 중 227개 사가 수도권에서 본사를 둔 기업이고 125개 사가 영남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이에 비해 충청권에서는 오히려 48개 사가 증가하였으며 호남권에서도 6개 사가 늘어났다. 수도권 내에서는 1990년과 2000년의 10년 사이에 서울에서 89개 사, 경기지역에서 91개 사, 그리고 인천에서 47개 사가 감소하였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84개 사와 37개 사, 경남지역에서 24개 사가 감소하였으며, 충남지역에서는 54개 사가 증가하였고, 경북지역에서 14개 사, 충북과 전남지역에서 각각 7개 사와 5개 사가 증가하였다.

<그림 3-14> 3000대 기업본사의 업종별 수도권의 비중변화 : 1990~2000



주와 자료: <표 3-16>에서와 같음.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3000대 기업에서 도소매업종은 148개 기업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수도권이 88.5%인 131개 기업을 차지하고,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이 111개 기업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에서도 최근 10년 사이에 3000대 기업으로 각각 99개사와 38개사가 새로이 성장하였는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93개사가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며 그 중 83개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금융·보험업 역시 수도권에서는 48개사가 증가한 반면 지방에서는 10개사가 감소하였는데 수도권에서 증가한 업체의 대부분인 48개사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건설업종 역시 1990년과 2000년의 10년 사이에 19개사가 3000대 기업으로 성장하였는데 수도권에서는 42개사가 증가한 반면 지방에서는 23개사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증가한 42개 기업 중 15개사는 서울에, 24개사는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운수·창고·통신업종에서도 최근 10년 사이에 18개 기업이 새로이 3000대 기업으로 성장하였는데, 수도권에서는 30개 기업이 증가한 반면 지방에서는 12개 기업이 감소하였다. 수도권에서 증가한 기업 중 20개사는 서울에, 8개사는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3000대 기업 중에서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의 비중이, 제조업의 경우 1990년의 66.7%에서 2000년에는 44.4%로 급속히 줄어든 반면, 새로운 성장주도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에서는 수도권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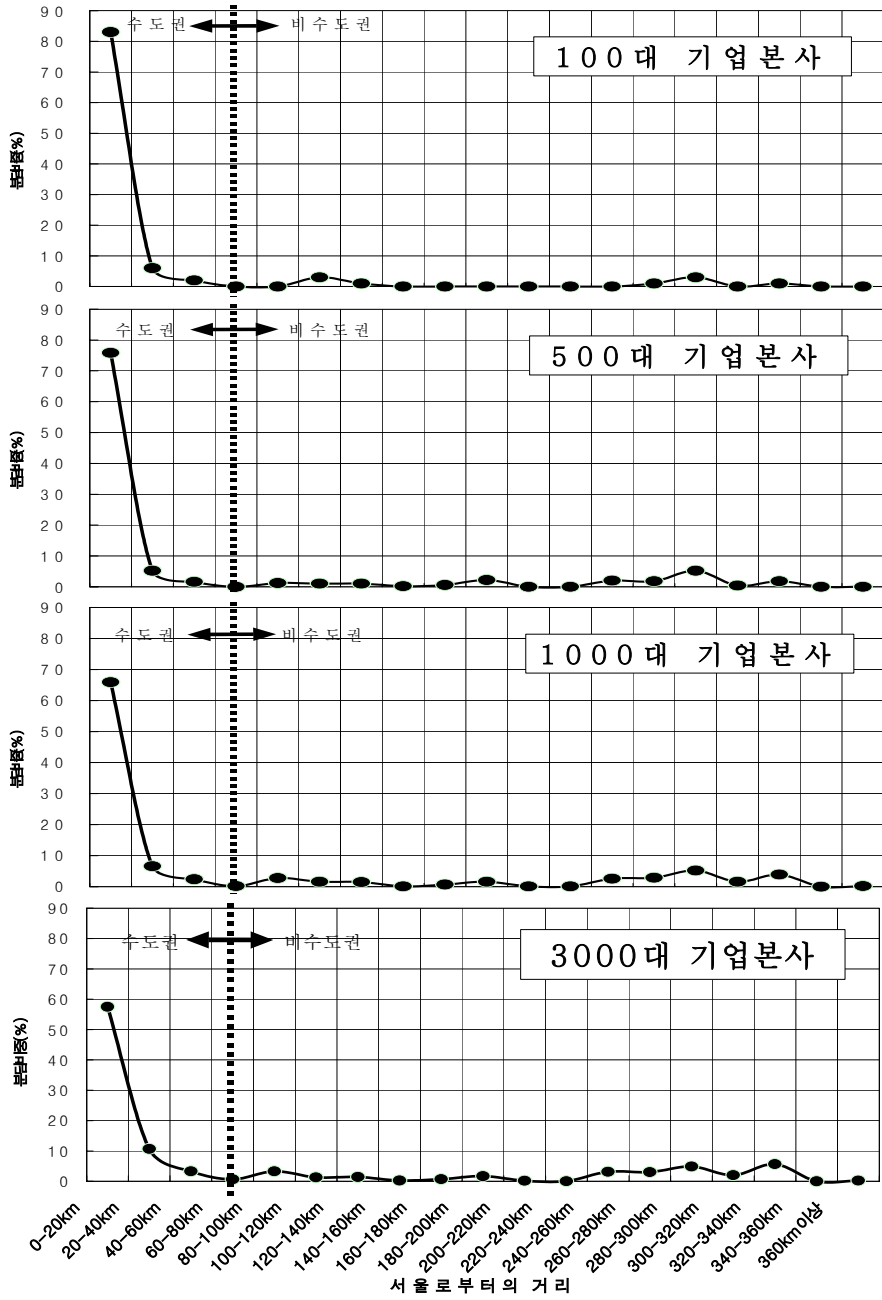
지방에서는 충청권, 특히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3000대 기업의 제조업 본사입지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건설업체 본사, 금융·보험업 기업본사, 운수·창고·통신업 기업본사 등이 크게 감소하여 지방금융과 지방건설의 몰락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첨단정보통신업 기반 역시 급속히 수도권 중심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00대 기업본사의 업종별 분포를 지역간에 비교·분석해 본 결과, 금융·보험업과 같은 고차기능, 운수·창고·통신업과 같은 첨단부문, 도소매업과 같은 물류부문, 건설업 등에 있어서 서울을 정점으로 하는 수도권으로의 본사기능 집중현상이 크게 강화되고 있어 지방경제의 수도권 종속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제조업의 본사기능만이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으로 그 입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한 생산기능만이 지방에 입지하는 경우 이 역시 수도권 경제의 광역화와 그에 따른 지방의 수도권 의존심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기업본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

최근 10년 사이에 기업의 본사분포에서 새로운 성장주도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운수·창고·통신업과 금융·보험업 등에서 서울을 정점으로 하는 수도권으로 기업본사기능이 집중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충청권으로의 제조업 본사 입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충청이남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업본사기능이 크게 쇠퇴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하에서는 서울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기업 본사가 어떠한 분포상

<그림 3-15> 기업본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본사 수) : 2000



<표 3-17> 기업본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 199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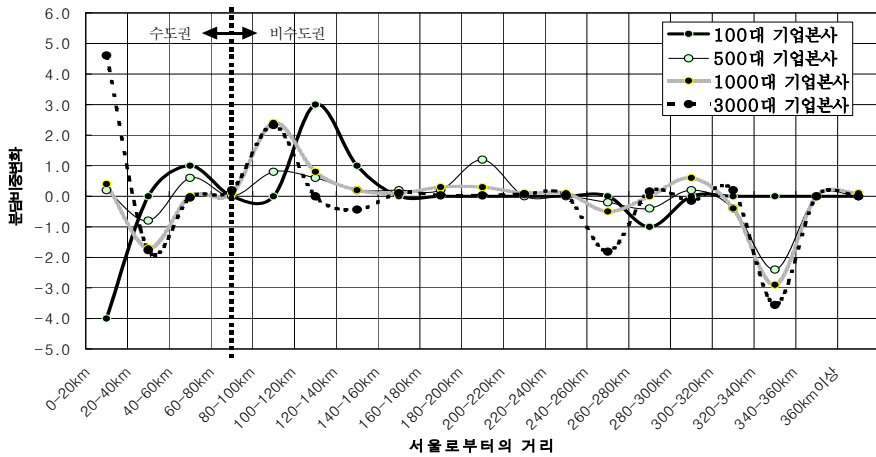
서울중심 과의 거리	지역간 분포(개소)								지역간 분포비율(%)							
	100대 기업		500대 기업		1000대 기업		3000대 기업		100대 기업		500대 기업		1000대 기업		3000대 기업	
	'90	'00	'90	'00	'90	'00	'90	'00	'90	'00	'90	'00	'90	'00	'90	'00
0-20km	87	83	378	379	655	659	1,584	1,726	87.0	83.0	75.6	75.8	65.5	65.9	52.9	57.5
20-40km	6	6	30	26	83	66	372	320	6.0	6.0	6.0	5.2	8.3	6.6	12.4	10.7
40-60km	1	2	5	8	24	24	100	99	1.0	2.0	1.0	1.6	2.4	2.4	3.3	3.3
60-80km	0	0	0	0	1	2	14	20	0.0	0.0	0.0	0.0	0.1	0.2	0.5	0.7
80-100km	0	0	2	6	4	28	29	99	0.0	0.0	0.4	1.2	0.4	2.8	1.0	3.3
100-120km	0	3	2	5	8	16	38	38	0.0	3.0	0.4	1.0	0.8	1.6	1.3	1.3
120-140km	0	1	4	5	13	15	56	43	0.0	1.0	0.8	1.0	1.3	1.5	1.9	1.4
140-160km	0	0	0	1	0	1	5	8	0.0	0.0	0.0	0.2	0.0	0.1	0.2	0.3
160-180km	0	0	2	3	4	7	20	21	0.0	0.0	0.4	0.6	0.4	0.7	0.7	0.7
180-200km	0	0	5	11	13	16	50	51	0.0	0.0	1.0	2.2	1.3	1.6	1.7	1.7
200-220km	0	0	0	0	0	1	4	6	0.0	0.0	0.0	0.0	0.0	0.1	0.1	0.2
220-240km	0	0	0	0	0	1	0	1	0.0	0.0	0.0	0.0	0.0	0.1	0.0	0.0
240-260km	0	0	11	10	31	26	148	94	0.0	0.0	2.2	2.0	3.1	2.6	4.9	3.1
260-280km	2	1	11	9	29	29	86	91	2.0	1.0	2.2	1.8	2.9	2.9	2.9	3.0
280-300km	3	3	25	26	46	52	150	146	3.0	3.0	5.0	5.2	4.6	5.2	5.0	4.9
300-320km	0	0	4	2	20	16	54	60	0.0	0.0	0.8	0.4	2.0	1.6	1.8	2.0
320-340km	1	1	21	9	68	39	276	170	1.0	1.0	4.2	1.8	6.8	3.9	9.2	5.7
340-360km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360km이상	0	0	0	0	1	2	7	7	0.0	0.0	0.0	0.0	0.1	0.2	0.2	0.2
합 계	100	100	500	500	1,000	1,000	3,000	3,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표 3-10>에서와 같음.

황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 결과는 <그림 3-15>와 <표 3-17>에 제시되어 있는데, 서울중심좌표를 기준으로 서울중심으로부터 반경 20km권의 지역이 우리나라 기업본사 기능의 중심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현재 서울중심 반경 20km권 지역에 우리나라 기업본사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데, 100대 기업본사의 경우 전체의 83.0%, 500대 기업본사의 경우 75.8%, 3000대 기업의 경우 이보다 약간 낮은 57.5%가 서울반경 20km권내에 입지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정도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서울 및 반경 20km권내로의 집중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6> 기업본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변화 : 1990~2000



자료: <표 3-17>.

1990년과 2000년 사이의 분포변화에 있어서는 서울집중성향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서울 및 반경 20km권내로의 집중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1990년과 2000년의 10년 사이에 서울 및 반경 20km권 내의 기업본사 분포비중은 100대 기업의 경우만 전체의 87.0%에서 83.0%로 감소한 반면 500대, 1000대, 3000대 기업본사의 경우는 각각 75.6%에서 75.8%, 65.5%에서 65.9%, 52.9%에서 57.5%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근 10년 사이의 분포비중 증가폭은 확대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림 3-16>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지역의 입지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반면 대구, 부산 등 기존 지방대도시 지역에서는 기업본사의 입지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아산, 천안, 서산 등을 포함하는 서울반경 80~120km권 지역에서의 기업본사 분포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산지역이 속해 있는 서울 반경 320~340km권에서는 기업본사의 입지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대폭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대구지역을 포함하는 서울반경 240~260km권에서도 3000대 기업본사를 중심으로 기업본사의 입지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서울중심 반경 20km권, 즉 서울을 핵(核)으로 하여 과천지역, 5대 수도권 신도시 중 세 곳이 입지한 안양, 고양, 성남 등을 포함하는 지역에 우리나라의 중추기능 중 기업본사기능이 고도로 응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학(學) : 명문대학 분포의 지역간 비교

본 연구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추기능 중 중앙정부 기능(政), 대기업 본사기능(産)의 지역간 분포에 관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 이들 중추기능 입지의 핵(核)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인접한 일부 충청지역으로 그 입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는 세 가지 중추기능 중 명문대학 기능(學)의 지역간 입지분포에 관하여 분석한다.

1996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20대 주요 명문대학은 <표 3-18>과 <표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전체의 65%인 13개교가 입지해 있고 지방에서는 영남권에 전체의 20%인 4개교, 강원지역에 전체의 10%인 2개교가 위

<표 3-18>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6~2001

구 분	1996		2001	
수도권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킨톨릭대, 서강대, 이주대,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 홍익대, 이화여대, 인하대	13개교 (65.0%)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킨톨릭대, 인하대, 중앙대, 숭실대, 이주대	13개교 (65.0%)
충청권	한국과학기술원	1개교 (5.0%)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대	2개교 (10.0%)
호남권	-	-	-	-
영남권	포항공대,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4개교 (20.0%)	포항공대, 경북대, 부산대, 인제대	4개교 (20.0%)
강원·제주	한림대, 강원대	2개교 (10.0%)	한림대	1개교 (5.0%)

주 : 20대 주요 명문대학은 중앙일보사에서 행한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함.
 자료: 중앙일보사, 『'97전국대학평가백서』, 서울: 중앙일보사; “중앙일보 2001 대학평가” (중앙일보 2001. 9. 24일자).

6) 우리나라의 20대 주요 명문대학은 중앙일보사에서 매년 행하고 있는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 3-19> 20대 주요 명문대학 학교수·학생·교수의 지역간 분포변화

구 분	지역간 분포(개소, 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1996	2001	1993	2001	1993	2001	1996	2001	1993	2001	1993	2001
전 국	20	20	312.7	400.7	12.0	1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13	13	234.8	305.6	8.7	8.9	65.0	65.0	75.1	76.3	72.0	73.5
충청권	1	2	5.7	8.8	0.3	0.5	5.0	10.0	1.8	2.2	2.8	4.2
호남권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영남권	4	4	53.5	78.9	2.1	2.1	20.0	20.0	17.1	19.7	17.7	17.1
강원·제주	2	1	18.7	7.4	0.9	6.3	10.0	5.0	6.0	1.9	7.5	5.2
지 방	7	7	77.9	95.1	3.3	3.2	35.0	35.0	24.9	23.7	28.0	26.5

자료: 각 시·도, 각 연도, 각 시·도 통계연보.

치하고 있으며, 충청권에 1개교가 입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에 11개교가 입지함으로써 20대 명문대학을 기준으로 할 경우 명문대학 중추기능 역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의 경우에서도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한 20대 주요 명문대학은 수도권 65%, 지방 35%라는 지역간 입지구조가 견지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영남권에 전체의 20%가 분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서 1개교가 새로이 추가되고 강원지역에서 1개교가 감소하여 충청권에 대한 입지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한 20대 명문대학의 학생 수와 교수 수의 분포에 있어서는 최근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강화되고 있다. 즉, 1993년과 2001년 사이에 학생수의 경우 수도권 비중이 75.1%에서 76.3%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수 수 역시 수도권의 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에 72.0%에서 73.5%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영남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1993년과 2001년 사이에 학생 수의 비중은 17.1%에서 19.7%로 증가하고 교수 수에서는 그 비중이 17.7%에서 17.1%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1993년과 2001년 사이에 대학생의 분포비중은 전체의 1.8%에서 2.2%로 증가하고, 교수의 분포비중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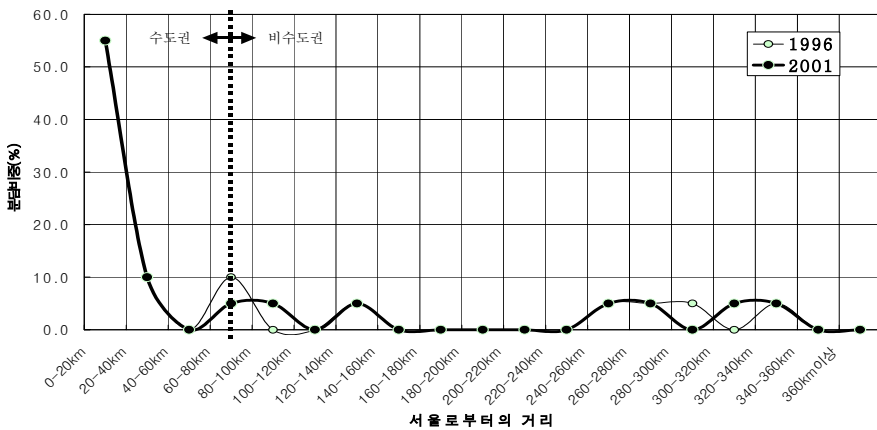
체의 2.8%에서 4.2%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 반면 호남권에는 1996년과 2001년을 기준으로 한 중앙일보사의 20대 명문대학에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학생, 교수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지역간 분포와 함께 서울로부터의 거리대별 대학분포는 어떠한 모습을 띄고 있는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도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그림 3-17>과 <표 3-2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2001년 현재 서울중심 반경 20km 내에 11개 대학, 즉 전체의 55%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서도 20대 명문대학 학생의 69.3%가 이 지역에 분포하여 그 비중은 대학 수보다 더욱 높다. 또한 20대 명문대학의 교수에 있어서도 2001년 현재 전체의 64.9%가 서울반경 20km권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6년과 2001년 사이의 분포비중 변화에 있어서는,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20대 명문대학 중 13개 대학이 분포하는 서울반경 40km권에서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서울반경 60~80km권과 280~300km권에서는 비중이 감소하고, 서울반경 80~100km권과 300~320km권에서는 비중이 증가하고

<그림 3-17> 20대 명문대학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



자료: <표 3-20>에서 학교수 기준임.

<표 3-20> 20대 명문대학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분포비중 변화

서울중심 과의 거리	지역간 분포(개소, 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1996	2001	1993	2001	1993	2001	1996	2001	1993	2001	1993	2001
0-20km	11	11	210.3	277.7	8.0	7.9	55.0	55.0	67.2	69.3	66.4	64.9
20-40km	2	2	24.5	27.9	0.7	1.0	10.0	10.0	7.8	7.0	5.6	8.6
40-60km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60-80km	2	1	18.7	7.4	1.0	0.6	10.0	5.0	6.0	1.9	7.5	5.2
80-100km	0	1	0	2.2	0	0.1	0.0	5.0	0.0	0.5	0.0	1.2
100-120km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120-140km	1	1	5.7	6.7	0.3	0.4	5.0	5.0	1.8	1.7	2.8	3.0
140-160km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160-180km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180-200km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200-220km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220-240km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240-260km	1	1	21.0	32.6	0.8	0.8	5.0	5.0	6.7	8.1	6.3	6.6
260-280km	1	1	2.0	2.8	0.2	0.2	5.0	5.0	0.6	0.7	1.7	1.7
280-300km	1	0	10.1	0	0.4	0	5.0	0.0	3.2	0.0	3.4	0.0
300-320km	0	1	0	12.9	0	0.3	0.0	5.0	0.0	3.2	0.0	2.2
320-340km	1	1	20.4	30.6	0.8	0.8	5.0	5.0	6.5	7.6	6.3	6.6
340-360km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360km이상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합 계	20	20	312.7	400.7	12.0	1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와 자료: <표 3-18>과 <표 3-19>에서와 같음.

있다. 즉, 서울반경 80~100km권에서는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2001년에 새로이 20대 명문대학으로 부상함으로써 이 지역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서울반경 300~320km권에서는 김해의 인제대학교가 2001년에 새로이 20대 명문대학에 진입함으로써 비중이 늘어났다.

중추기능 중 명문대학 기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30대 주요 명문대학(7)으로 분석을 확대해 보자. 이 경우에는 <표 3-21>과 <그림 3-1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도권에 전체의 56.7%인 17개 대학, 지방에는 13개 대학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 14개 대학, 경기도에 2개, 인천에 1개 대학이 분

7) 우리나라의 30대 주요 명문대학은 1996과 2001년 사이에 중앙일보사에서 매년 행한 대학평가에서 한 번이라도 상위 20개 대학에 포함된 대학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3-21> 우리나라의 30대 주요 명문대학

구 분	대 학 교 명
수도권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카톨릭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인하대학교(인천), 아주대학교(경기 수원), 대진대학교(경기 포천) (17개교)
지 방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북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인제대학교 (13개교)

주 : 30대 주요 명문대학은 중앙일보사에서 행한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1996년과 2001년 사이에 상위 20개 대학에 랭크된 대학을 포함.
 자료: 중앙일보사. 『'97전국대학평가백서』. 서울 : 중앙일보사; “중앙일보 2001 대학평가” (중앙일보 2001. 9. 24일자).

포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충청권에 3개, 호남권에 2개, 영남권에 6개, 그리고 강원지역에 2개 대학이 분포한다.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30대 주요 명문대학의 경우에서도 수도권에의 대학입지비중이 57%로 나타나 대학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는 영남권에 6개 대학이 분포하여 영남권에 대한 대학기능 집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30대 주요 명문대학의 교수 및 학생의 지역간 분포에서는 <표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현재 교수의 경우 전체의 56.9%, 학생의 경우는 전체의 60.8%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에 30대 명문대 전체 교수의 49.8%, 30대 명문대학 전체 학생의 54.7%가 분포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는 30대 명문대학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영남권에 가장 많은 교수와 학생이 분포하고 있다. 지방의 시·도간에서는 강원지역과 대전에 가장 많은 수의 교수가 분포하고, 30대 명문대학의 학생은 경북지역과 대전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과 2001년 사이에 이러한 30대 명문대학 교수와 학생의 수도권 집중 정도는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1993년과 2001년 사이에 30대 명문대학 교수의 수도권 분포비중은 59.7%에서 56.9%로 감소하였으며, 30대 명문

<표 3-22> 30대 주요 명문대학 교원·학생의 지역간 분포변화 : 1993~2001

구 분	지역간 분포(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대학분포 (개소, %)	
	교원수		학생수		교원수		학생수		학교수	비율
	1993	2001	1993	2001	1993	2001	1993	2001		
전 국	16.0	17.4	428.9	608.6	100.0	100.0	100.0	100.0	30	100.0
수도권	9.6	9.9	268.5	370.2	59.7	56.9	62.6	60.8	17	56.7
충청권	1.1	1.3	24.4	37.9	6.7	7.2	5.7	6.2	3	10.0
호남권	1.4	1.6	37.5	43.3	9.0	9.1	8.8	7.1	2	6.7
영남권	3.1	3.4	79.7	133.5	19.1	19.7	18.6	21.9	6	20.0
강원·제주	0.9	1.2	18.7	23.7	5.7	7.1	4.4	3.9	2	6.7
지 방	6.5	7.5	160.3	238.4	40.3	43.1	37.4	39.2	13	43.3

자료: 각 시·도, 각 연도, 각 시·도 통계연보.

대학 학생 역시 수도권 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에 62.6%에서 60.8%로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경기도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호남권을 제외하면 30대 명문대학의 교수와 학생의 분포비중이 1993년과 2001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강원지역과 충남지역에서 교수의 분포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그 분포비중의 증가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한 30대 명문대학에 의거하여 대학기능의 지역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집중정도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수도권에 대한 입지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의 비중감소와 경기지역의 비중증가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다. 지방에서는 영남권과 충청권의 교수 및 학생의 비중증가가 두드러지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대한 대학정원규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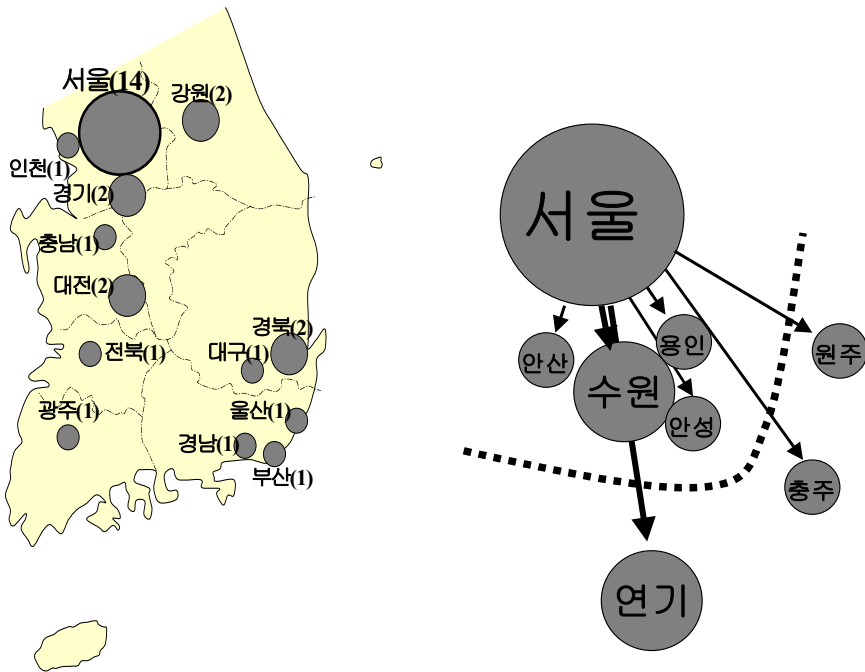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30대 주요 명문대학들 중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 서울이외 지역에 분교를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 2001년 기준으로 총 9개의 분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분교의 입지는 <그

8) 30대 명문대학 중 서울소재 대학의 분교에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충북 충주), 경희대학교 수원캠

림 3-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기지역에 5개교, 지방에 4개교가 분포하고 있다. 주로 수도권 남부지역과 수도권 인접지역인 원주, 충주, 조치원(연기군)에 서울 소재 대학의 분교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추기능 중 명문대학 기능의 지역간 분포를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한 20대 및 30대 주요 명문대학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는데, 명문대학의 수도권 입지성향이 견고한 가운데 서울소재 명문대학의 분교 역시 서울주변 경기지역과 수도권 인접 충청지역 등에 집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명문대학 기능의 지방분산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8> 30대 주요 명문대학의 지역간 분포와 서울소재 대학의 분교입지



주와 자료: <표 3-21>과 <표 3-22>에서와 같음.

퍼스(경기 용인), 고려대학교 조치원캠퍼스(충남 연기),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경기 수원),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경기 수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강원 원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경기 안성),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경기 안산),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충남 연기) 등이 있다.

4) 중추기능 입지분포의 지역간 종합비교 : 정(政)·산(産)·학(學)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중추기능, 즉 중앙정부 기능(政), 기업본사 기능(産), 명문대학 기능(學)의 중추기능별로 지역간에 입지분포와 분포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표 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우리나라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 즉, 2000년 현재 기관 수를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본사, 100대 기업 본사, 주요 명문대학을 포함하는 전체 중추기능의 80% 정도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1990년과 2000년의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도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데, 이는 충청권으로의 입지확산에 따른 결과이다. 즉, 100대 기업본사만을 포함하는 전체 중추기능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는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85.8%에서 79.5%로 감소하는 반면 충청권에 대한 입지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에 3.3%에서 11.6%로 크게 증가한다. 그런 반면에 충청권을 제외하면 지방에 대한 중추기능의 입지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에 대한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입지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지역에의 입지비중 증가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기업본사 기능에서 100대 기업본사만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전체 중추기능의 입지분포에서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서울의 비중은 72.3%에서 61.9%로 크게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비중은 11.0%에서 14.3%로 증가한다. 지방에서는 충청권의 경우 정부대전청사가 입지해 있는 대전의 입지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에 3.1%에서 9.3%로 크게 증가하고 충남의 비중 역시 0.2%에서 2.4%로 8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입지분포에서 수도권이 여전히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 사이에 수도권 내의 경기지역, 그리고 이에 인접한 충청권으로 그 입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영·호남지역에 대한 입지비중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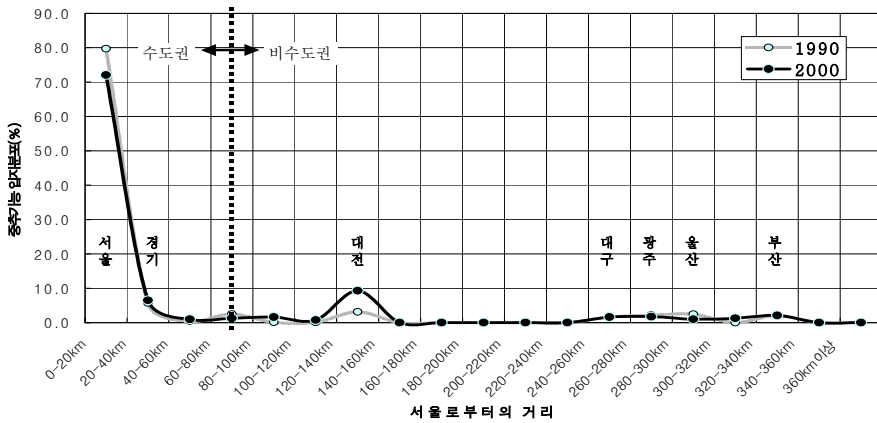
<표 3-23> 중추기능 입지분포의 지역간 종합비교 : 정(政)·산(産)·학(學)

구 분		기관수 기준		인원수 기준	
		1990	2000	1990	2000
국가공공기관 + 100대 기업본사 + 20대 명문대학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85.8	79.5	86.5	80.3
	충청권	3.3	11.6	4.4	11.5
	호남권	0.6	0.2	0.2	0.1
	영남권	7.8	7.4	7.2	7.3
	강원·제주	2.5	1.3	1.7	0.9
	지 방	14.2	20.5	13.5	19.7
국가공공기관 + 500대 기업본사 + 20대 명문대학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83.0	77.4	84.8	79.5
	충청권	3.7	11.4	4.8	11.5
	호남권	0.8	0.9	0.3	0.4
	영남권	10.0	9.0	8.5	7.7
	강원·제주	2.5	1.4	1.7	0.9
	지 방	17.0	22.6	15.2	20.5
국가공공기관 + 3000대 기업본사 + 20대 명문대학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79.6	74.7	83.1	78.0
	충청권	4.3	12.1	5.0	11.9
	호남권	1.1	1.1	0.4	0.6
	영남권	12.3	10.6	9.6	8.5
	강원·제주	2.8	1.5	1.8	1.0
	지 방	20.4	25.3	16.9	22.0

- 주 : 1. 중추기능별 분포비중을 평균한 값 기준임.
 2. 1990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본사는 '92년, 20대 명문대학은 '93년(학교 수는 '96년) 기준이며, 2000년의 경우 공기업본사는 2002년, 20대 명문대학은 2001년 기준임.
 3. 인원수 기준에서 기업본사의 경우 기업 전체 종업원 기준이며, 명문대학의 경우 학생과 교원 분포를 평균한 값 기준임.

서울중심좌표로부터의 거리대간에 우리나라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입지분포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앞의 중추기능 유형별 입지분포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중심 20km권 지역이 우리나라 국토공간상에서 중추기능 입지의 핵(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9>와 <표 3-24>를 통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과 과천, 그리고 수도권 5대 신도시 중 일산, 분당, 평촌이 속해 있는 서울반경 20km권 지역에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72%(100대 기업본사 수를 기준으로 한 정·산·학 중추기능)가 분포되어 있다.

<그림 3-19> 중추기능 입지분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종합비교 : 정(政)·산(産)·학(學)



주 : <표 3-24>에서 100대 기업본사 수 기준의 중추기능 입지분포를 나타냄.

<표 3-24> 중추기능 입지분포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종합비교 : 정(政)·산(産)·학(學)

서울중심과의 거리	중추기능 입지 분포(%)					
	100대 기업본사 수 기준		500대 기업본사 수 기준		3000대 기업본사 수 기준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0-20km	79.7	72.0	76.8	70.2	71.2	65.7
20-40km	5.7	6.5	5.7	6.3	7.3	7.6
40-60km	0.4	1.0	0.4	0.9	1.0	1.3
60-80km	2.5	1.3	2.5	1.3	2.6	1.4
80-100km	0.1	1.6	0.2	1.9	0.3	2.4
100-120km	0.1	0.8	0.2	0.3	0.4	0.3
120-140km	3.1	9.3	3.3	9.3	3.6	9.4
140-160km	0.0	0.0	0.0	0.1	0.0	0.1
160-180km	0.0	0.0	0.1	0.2	0.2	0.2
180-200km	0.0	0.0	0.3	0.6	0.4	0.4
200-220km	0.0	0.0	0.0	0.0	0.0	0.1
220-240km	0.0	0.0	0.0	0.0	0.0	0.0
240-260km	1.6	1.6	2.2	2.1	2.8	2.4
260-280km	2.2	1.7	2.2	1.9	2.4	2.2
280-300km	2.4	1.0	2.9	1.5	2.9	1.5
300-320km	0.0	1.3	0.2	1.4	0.5	1.8
320-340km	2.1	2.1	2.9	2.3	4.2	3.3
340-360km	0.0	0.0	0.0	0.0	0.0	0.0
360km 이상	0.0	0.0	0.0	0.0	0.1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주는 <표 3-23>에서와 같으며, 중추기능 입지분포는 기관수 기준임.

1990년과 2000년 사이에서는 서울반경 20km권 지역에 대한 중추기능 집중도는 완화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서울반경 20~140km권에서는 입지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며 서울반경 140km권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부대전청사가 입지해 있는 서울반경 120~140km권에서의 입지비중 증가 폭이 크며, 수도권과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아산, 천안과 원주, 충주 등이 포함되는 서울반경 80~100km권에서도 비교적 입지비중의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수도권의 도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수도 서울이 우리나라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입지분포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에 서울에 가까운 경기지역, 수도권과 연결한 충청지역 등으로 중추기능의 입지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중추기능 입지분포간의 상호 연관성

지금까지 중추기능의 지역간 분포에 관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본사, 민간기업 본사, 주요 명문대학 등 중추기능이 수도권 지역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분석결과로부터 정부대전청사가 입지해 있고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지역으로 중추기능의 입지가 전개되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인구분포와 중추기능간, 그리고 중추기능별 입지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 받을 수가 있다.

이에 인구와 중추기능, 중추기능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3-2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분석결과에서는 인구분포와 중추기능 분포간, 중추기능 분포 상호간에 고도의 상호응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인구분포와 중추기능 분포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 상호간에 밀접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분포와 중추기능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시·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나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계수값이 0.79 이상으로 나타나

<표 3-25> 인구 및 중추기능 분포의 상호간 상관관계

구	분	인구분포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본사	대기업 본사	20대 명문대학
시·도 기준	인구분포	1.000				
	중앙행정기관	0.889**	1.000			
	공기업 본사	0.833**	0.932**	1.000		
	대기업 본사	0.851**	0.910**	0.987**	1.000	
	20대 명문대학	0.794**	0.871**	0.970**	0.978**	1.000
거리 기준	인구분포	1.000				
	중앙행정기관	0.886**	1.000			
	공기업 본사	0.912**	0.988**	1.000		
	대기업 본사	0.937**	0.971**	0.990**	1.000	
	20대 명문대학	0.937**	0.955**	0.974**	0.998**	1.000

- 주 : 1. 중추기능의 경우 기관수의 지역분포비율을 기준으로 함.
 2. 대기업본사는 100대 기업, 500대 기업, 1000대 기업, 3000대 기업 본사의 평균분포비율을 기준으로 함.
 3. **는 0.01 수준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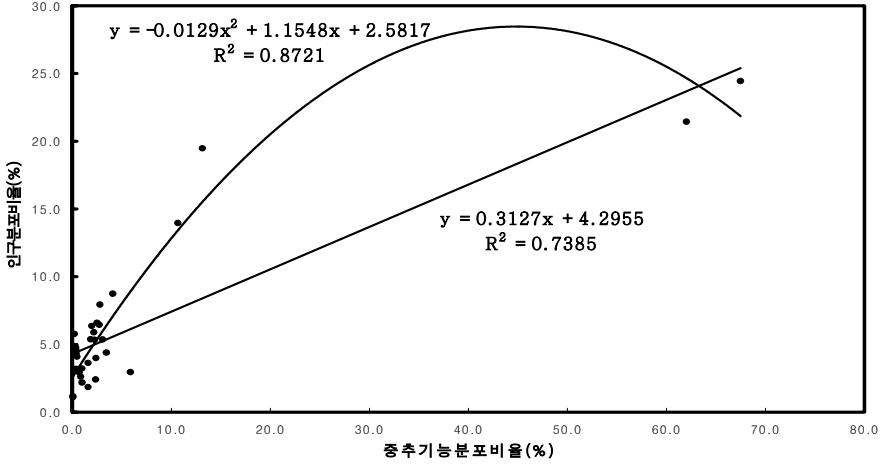
고 있다. 또한 중추기능 상호간에서도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추기능 상호간에서도 그 입지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간 인구 분포비율과 중추기능 분포비율간의 회귀분석결과를 통해서도 중추기능 분포와 인구 분포간에는 밀접한 연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림 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변수간에는 뚜렷한 증가함수(增加函數)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인구가 집중된다'라는 명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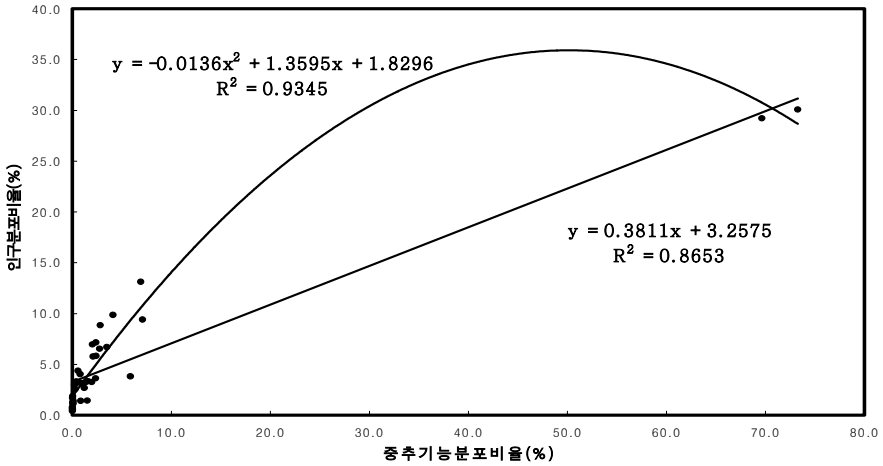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추기능 입지와 관련한 인과메커니즘을 발견 내지는 추론할 수 있겠다. 첫째, 중추기능간에 그 지역별 분포가 높은 정(+)의 상관성을 가짐으로써 중추기능 입지에서 중추기능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한다. 둘째, 중추기능의 지역간 분포가 인구의 지역간 분포에 높은 영향을 줌으로써 중추기능이 인구의 집중과 분산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인구, 각 중추기능 상호간에는 상호 연쇄적인 상승작용을 통하여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림 3-20> 인구분포와 중추기능 분포간의 연계성

(사·도 기준)



(거리 기준)



- 주 : 1. 중추기능 분포비율은 각 중추기능별 기관수의 분포비율을 지역별로 평균한 것임.
 2. 대기업본사의 지역분포비율은 100대 기업, 500대 기업, 1000대 기업, 3000대 기업 본사의 평균분포비율을 기준으로 함.
 3. 회귀선은 1990년과 2000년 자료를 pooling하여 추정함.

3. 중추기능의 국토공간적 중심(重心) 변화의 비교분석

1) 공간적 중심(重心)의 분석방법

지금까지 인구 및 산업과 중추기능이 지역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집중과 분산을 좀 더 동학적인 차원에서 인구 및 산업과 중추기능의 무게중심[重心]이 국토공간상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심(重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각 시·군의 센터좌표에 인구, 제조업, 중추기능 분포 등을 가중치로 부여하고 이를 평균한 우리나라 전체 국토공간상에서의 가중된 센터좌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x축, y축에 대해 우리나라 각 시·군의 센터좌표를 산출한다. 다음으로 각 시·군의 센터좌표를 해당 시·군의 인구, 제조업, 중추기능 분포 등으로 가중한 가중된 센터좌표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국토 전체적으로 가중평균(weighted mean)함으로써 각 변수별로 국간공간상에서의 무게중심인 중심(重心)을 도출한다.

< 공간적 중심(重心)의 분석방법 >

- 중추기능의 중심(重心) : $(\bar{x}_{wc}, \bar{y}_{wc})$
- x축 중심(重心)좌표 : $\bar{x}_{wc} = \frac{\sum f_i x_i}{\sum f_i}$
- y축 중심(重心)좌표 : $\bar{y}_{wc} = \frac{\sum f_i y_i}{\sum f_i}$

여기서

- $\bar{x}_{wc}, \bar{y}_{wc}$: 가중평균으로 구한 x, y축의 중심(重心)좌표(Weighted Center)
- x_i, y_i : 각 시·군 i 의 국토공간 상의 x, y축 센터(中心)좌표(Geographical Center)
- f_i : 각 시·군 i 의 인구 또는 중추기능 분포 등 (frequency or weighting fa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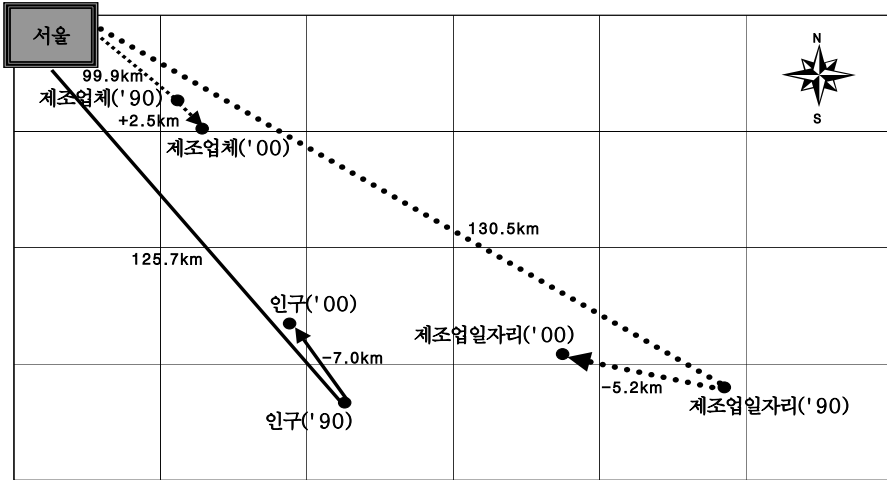
2) 인구·산업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먼저 인구수를 가중치로 하여 우리나라 국토공간상에서의 인구의 공간적 중심(重心)의 변화를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상에서 인구의 중심(重心)은 2000년 현재 청주·보은·옥천의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센터좌표를 기준으로 한 서울중심과의 직선거리로 118.7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다. 1990년의 국토공간상 인구중심(重心) 역시 청주·보은·옥천 부근에 위치하였는데 서울과는 직선거리로 약 125.7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그림 3-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서울방향으로 7km 정도 이동한 셈이다. 즉,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이 더욱 강화되면서 국토공간상의 인구중심(重心)이 수도권을 향하여 자석에 끌리듯 이동한 것이다.

다음으로 제조업의 중심(重心)변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공간적 중심(重心)변화를 보도록 한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한 제조업의 국토공간상 중심은 2000년 현재 충북의 보은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직선거리로 서울로부터 약 125.3km 떨어진 지점이다. 1990년에는 서울로부터 약 130.5km가 떨어진 청주·보은부근에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한 제조업 중심(重心)이 위치하였다. 따라서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서울방향으로 약 5.2km 정도 이동한 것이다. 업체 수를 기준으로 한 제조업 중심(重心)은 청원·청주부근에 위치하며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서울로부터 약 2.5km 정도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대체로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인구와 산업의 국토공간상 중심(重心)이 서울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구와 제조업 일자리의 중심이 서울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인구와 제조업 일자리를 끌어들이는 자석(磁石)의 핵(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분석에서 인구분포와 중추기능 분포간에는 밀접한 상호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보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인구와 제조업일자리의 중심이 서울방향으로 이끌려 가는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1> 인구·산업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 서울로부터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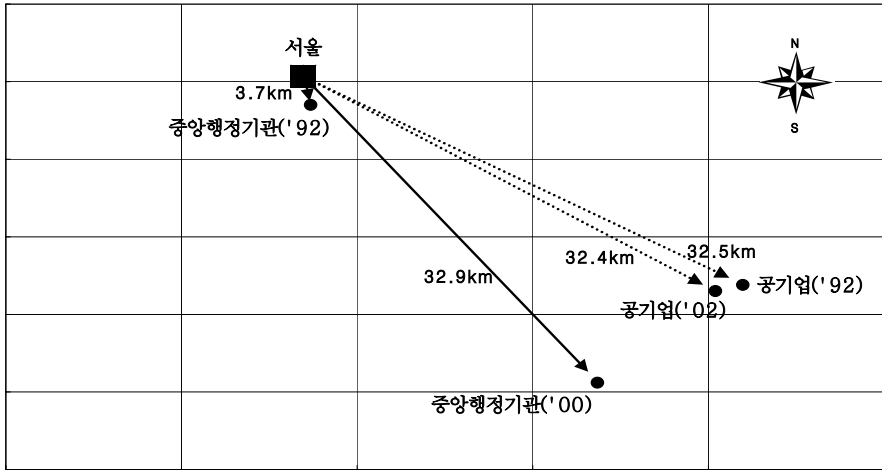


자료: <표 3-26>.

3) 정(政) : 국가공공기관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본 연구에서는 중추기능을 중앙정부 기능(政), 대기업 본사기능(産), 명문대학 기능(學)으로 구분하고 기능별로 국가공공기관, 대기업본사, 명문대학을 선정하여 지역간 분포를 분석하였다.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본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국가공공기관 중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국토공간상 중심(重心) 변화를 보면, <그림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 수를 기준으로 한 중앙행정기관의 중심(重心)은 1992년에는 서울과 과천 사이에 서울센터지점으로부터 3.7km되는 곳, 즉 서울도심 속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중심(重心)이 수원·오산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울중심으로부터 32.9km 떨어진 곳이다. 따라서 1992년과 2000년 사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중심(重心)은 서울중심으로부터 29.2km가 멀어졌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대전청사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효과이다.

<그림 3-22> 국가공공기관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 서울로부터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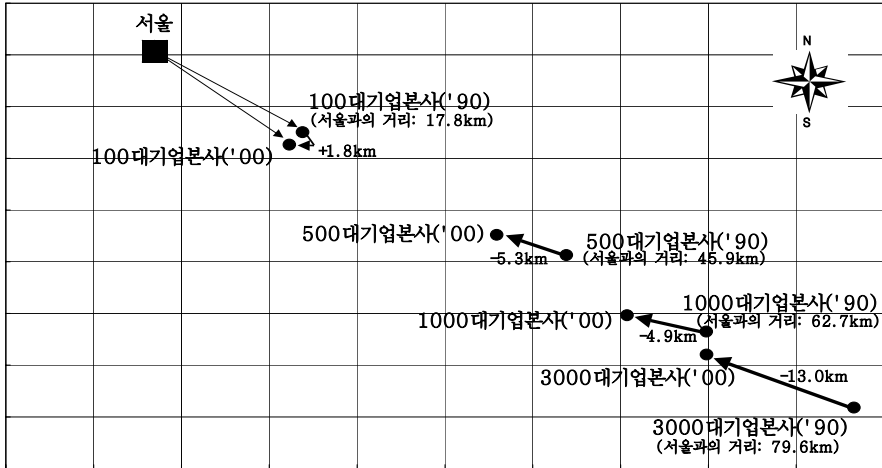
자료: <표 3-26>에서 중앙행정기관 수와 공기업 본사 수 기준임.

다음으로 공기업 본사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를 보면, 본사 수를 기준으로 한 공기업의 공간적 중심(重心)은 2002년 현재 성남·용인·오산 부근에 위치하며 서울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32.4km이다. 1992년 역시 공기업의 공간적 중심(重心)은 성남·용인·오산 부근에 위치하며 서울중심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32.5km이다. 따라서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공기업 본사의 중심(重心)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에서 이전한 공기업 본사의 대부분이 서울 주변의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심위치에는 변화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4) 산(産) : 기업본사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중추기능 중 대기업 본사기능의 공간적 중심(重心)과 그 변화를 보면, 대체로 두 가지의 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나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 중심(重心)은 서울에 가깝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10년 사이의 중심(重心) 변화에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서울방향으로의 이동 폭이 크다고 하는 점이다.

<그림 3-23> 대기업 본사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 서울로부터의 거리



자료: <표 3-26>에서 기업본사 수 기준임.

기업본사 수를 기준으로 한 기업본사기능의 공간적 중심(重心)을 보면, <그림 3-23>에서 보듯이 2000년 현재 100대 기업의 경우는 서울중심좌표로부터 19.6km의 직선거리인 과천·성남 사이에 위치하며, 500대 기업의 경우는 서울중심좌표로부터 직선거리 40.5km인 용인부근에 위치하고, 1000대 기업의 경우는 서울중심으로 부터 57.7km가 떨어진 안성부근 지점에 그 중심(重心)이 위치한다. 그리고 3000대 기업본사의 중심(重心)은 서울중심으로 부터 66.6km의 직선거리인 안성부근 지점에 위치한다. 즉,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 중심이 서울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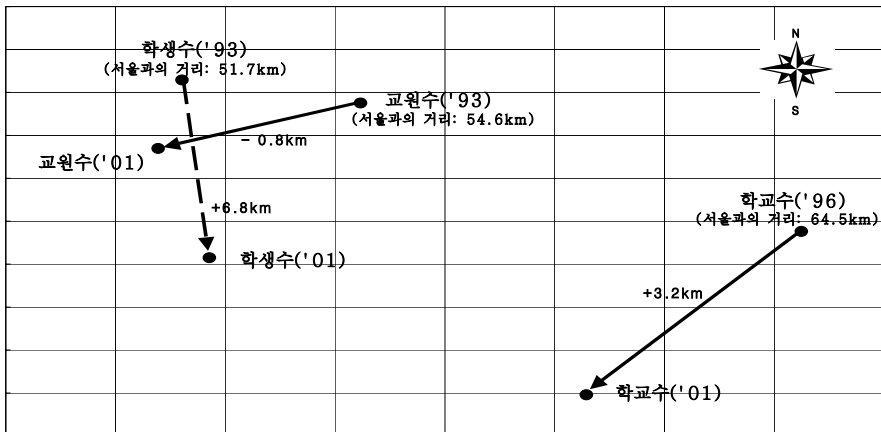
1990년과 2000년 사이의 기업본사의 공간적 중심(重心)의 변화를 살펴보면, 100대 기업의 경우는 서울로부터 약 1.8km가 멀어지는 반면 500대 기업의 경우는 약 5.3km 정도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00대 기업본사의 경우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제조기업 본사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는 3개가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3개가 증가함으로써 100대 기업본사의 중심이 서울에서 다소 멀어졌으며, 500대 기업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에서 본사 수의 분포에는 변화가 없으나 지방에서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에서는 500대 기업본사가 증가한 반면

영남권에서는 크게 감소함으로써 500대 기업본사의 중심이 서울에 가까워진 것이다. 3000대 기업본사의 경우에는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수도권에서는 도 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기업본사가 96개 증가한 반면 지방에서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총 89개가 감소함으로써 3000대 기업본사의 중심위치가 서울방향으로 13.0km 정도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국토공간상에서 진천부근에서 안성부근으로 이동한 것이다.

5) 학(學) : 주요 명문대학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중추기능 중 명문대학 기능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20대 명문대학의 공간적 중심(重心)을 살펴보면, <그림 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한 20대 명문대학의 중심(重心)은 2001년 현재 서울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로 67.7km 지점인 이천·진천 부근에 위치한다. 그리고 1996년에는 서울로부터 직선거리로 64.5km인 이천·음성 부근에 위치하였는데 1996년과 2001년 사이에 서울중심으로부터 약 3.2km 정도 떨어진 것이다.

<그림 3-24> 주요 명문대학의 공간적 중심(重心) 변화 : 서울로부터의 거리



자료: <표 3-26>.

<표 3-26> 인구·산업·중추기능의 국토공간상 중심(重心)의 변화

구 분		중심좌표		중심이동 거리(m)	서울과의 거리(m)	서울과의 거리변화 (m)
		X축	Y축			
인 구	1990	251,298	336,668	7,062	125,697	- 6,962
	2000	249,414	343,475		118,735	
제조업	종업원('90)	264,266	337,977	6,224	130,542	- 5,219
	종업원('00)	258,742	340,847		125,323	
	업체수('90)	245,589	362,666	2,568	99,873	2,537
	업체수('00)	246,430	360,240		102,410	
중앙행정기관	기관수('92)	198,676	446,985	29,293	3,746	29,218
	기관수('99)	206,389	418,727		32,964	
	근무인원('92)	199,153	446,949	28,046	3,838	28,036
	근무인원('99)	206,190	419,800		31,874	
공기업 본사	본사수('92)	211,709	421,044	1,393	32,500	- 91
	본사수('02)	210,392	420,588		32,410	
	본점인원('92)	209,452	420,822	8,159	31,857	8,110
	본점인원('02)	211,305	412,876		39,967	
20대 주요 대학	학교수('96)	243,495	404,523	8,555	64,513	3,201
	학교수('01)	239,578	396,918		67,713	
	학생수('93)	232,212	411,582	8,295	51,679	6,813
	학생수('01)	232,710	403,302		58,492	
	교원수('93)	235,463	410,505	4,250	54,645	- 780
	교원수('01)	231,776	408,391		53,865	
100대기업	본사수('90)	206,898	435,041	2,510	17,806	1,834
	본사수('00)	206,144	432,647		19,640	
	종업원('90)	213,075	429,598	2,237	25,684	1,854
	종업원('00)	215,178	428,835		27,538	
500대기업	본사수('90)	221,918	411,294	5,565	45,876	- 5,355
	본사수('00)	217,947	415,192		40,521	
	종업원('90)	221,669	415,181	8,742	42,445	- 8,727
	종업원('00)	216,515	422,242		33,718	
1000대기업	본사수('90)	229,881	396,494	5,509	62,671	- 4,947
	본사수('00)	225,366	399,649		57,724	
	종업원('90)	225,693	408,722	10,369	50,053	- 10,316
	종업원('00)	219,293	416,880		39,738	
3000대기업	본사수('90)	238,286	381,790	13,257	79,607	- 13,049
	본사수('00)	229,891	392,051		66,558	
	종업원('90)	229,976	400,893	12,530	58,957	- 12,450
	종업원('00)	222,250	410,758		46,507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20대 명문대학의 국토공간상 중심(重心)은 2001년 현재 서울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8.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천·안성 부근에 위치하고 1993년에는 서울중심으로부터 약 51.7km 떨어진 용인·이천 부근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1993년과 2001년 사이에 서울로부터 6.8km 정도 멀어지고 있다.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20대 주요 명문대학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체로 중추기능 중 대학기능의 국토공간상 중심(重心)은 서울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의 일환인 대학정원 증원 및 대학신설 억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즉, 정부규제에 의해 서울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약화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중추기능별로 국토공간상에서의 중심(重心)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최근 10년 사이에 중앙정부 기능과 관련하여 국가공공기관(政) 중 중앙행정기관의 중심은 서울중심에서 다소 멀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수도권에 위치하고, 공기업 본사의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다. 둘째, 민간기업 본사(産)의 경우는 기업규모별로 서로 다른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 중심은 서울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반면 최근 10년 동안의 중심이동에서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서울로의 이동 폭이 크다. 그리고 명문대학(學)의 경우 그 중심이 서울에서 다소 멀어지고 있다.

중추기능별로 중심(重心)의 변화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그 중심이 수도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본사기능의 중심은 오히려 서울방향으로 급속하게 끌려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와 산업의 중심(重心)이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향하여 북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실정이다.

4. 중추기능 영향력의 지역간 비교분석

1) 중추기능 영향력의 분석방법

앞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중추기능은 수도권에 고도로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지역에 중앙행정기관 중 청(廳)단위 기관, 제조업 본사 등 일부 하위 중추기능을 중심으로 그 입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에 따라 중추기능의 국토공간상 중심(重心)은 좀처럼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구 및 산업의 중심(重心)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향해 끌어당겨지고 있음을 보았다. 즉, 수도권, 그 중에서도 수도 서울에 고차 중추기능이 고도로 응축되어 있어 자석(磁石)의 핵(核)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인구와 각종 기능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수도권의 끌어당기는 힘은 어느 정도일까? 수도권의 중력(重力)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자. 지역 간에 자력권(磁力圈)의 크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국토공간상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추기능 집적도의 지역간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간 자력권(磁力圈), 즉 영향력 또는 지배력의 정도를 물리학에서의 중력법칙을 이용한 지역중력지수(Regional Gravitation Index; RGI)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지역중력지수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도출된다. 제1단계에서는 기존의 중력모형⁹⁾을 이용하여 두 지역간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추정한다. 제2단계로는 레일리(William J. Reilly)모형¹⁰⁾을 이용하여 지역세력권의 분기점을 산정한다. 제3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산정된 지역간 상호작용의 크기를 제2단계에서 결정된 세력분기점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이를 전체 지역간 상호작용의 합계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지역중력지수(RGI)라 정의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 지역중력지수(RGI)는 한 지역(i)이 타 지역(j)과의 상호교류 작용에서 어느 정도의 지배적인 영향력, 즉 지배력을 갖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9) 중력모형과 관련한 자세한 이론적 내용과 논의는 홍기용, 1985. 『지역경제론』, 서울 : 박영사, pp. 29~30, pp. 271~281을 참고하기 바란다.

10) 레일리(William J. Reilly)의 모형에 관해서는 Truman A. Hartshorn, 1992. *Interpreting the City: An Urban Geography*. John Wiley & Sons (안재학 옮김, 1997. 『도시학개론』, 서울 : 도서출판 새날), pp. 120~128을 참고하기 바란다.

< 지역중력지수(RGI)의 분석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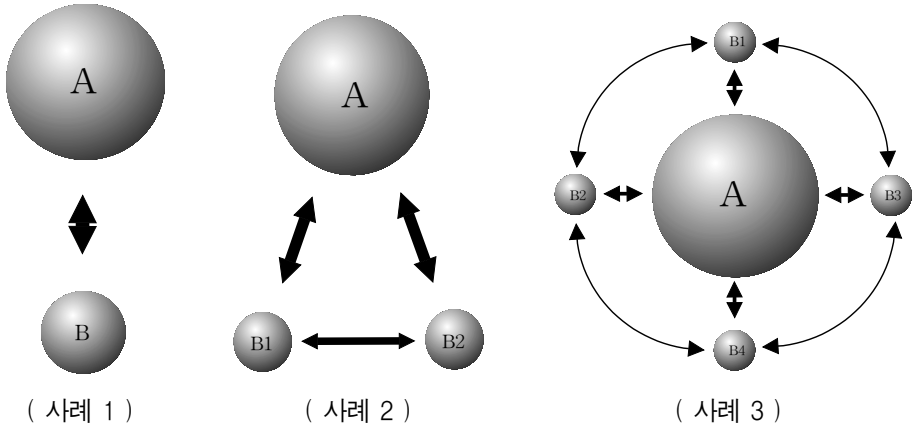
- 지역중력지수(Regional Gravitation Index)의 분석모형

$$RGI_i = \left[\frac{\sum_j \left(\frac{G_{ij}}{G_{ij} + \sqrt{\frac{BP_i m_i}{d_{ij}}}} \right)}{\sum_{i,j} G_{ij}} \right] \times 100 \quad (\text{지역 } i \text{의 지역중력지수})$$

- $G_{ij} = K \left[\frac{m_i m_j}{d_{ij}^2} \right]$ (지역 i와 지역 j의 상호작용의 크기)
- $BP_i = \frac{d_{ij}}{1 + \sqrt{\frac{m_j}{m_i}}}$ (지역 i와 지역 j에서 지역 i의 세력권의 분기점)

이러한 방법으로 도출된 지역중력지수(RGI)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어느 한 지역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상호 작용하는 상대 지역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상대지역의 질량이 적을수록 주도권을 쥔 중심지역의 지역중력지수는 확대된다. 즉, 질량이 적은 상대지역 수가 많아질수록 지역간 상호교류작용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심지역의 영향력은 확대되어 지역간 상호교류작용에 대한 지배력은 증가하게 되고, 상대지역의 중심지역 종속성은 심화된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그림 3-25>와 <표 3-27>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중심지역 A의 질량이 80으로 상대지역보다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지역 B가 하나인 경우, 둘인 경우, 그리고 넷인 경우 중심지역 A의 지역중력지수(RGI)는 점점 증가한다. 즉, 중심지역 A의 질량은 80으로 고정시켜 놓고, 상대지역이 하나이고 질량이 20인 경우 중심지역 A의 지역중력지수는 66.7이며, 상대지역이 두 곳이고 각각의 질량이 10인 경우 중심지역 A의 지역중력지수는 69.6으로 증가하며, 상대지역이 네 곳이고 각각의 질량이 5인 경우 중심지역 A의 지역중력지수는 73.2로 증가한다. 이것은 지역간 상호교류작용에서 전체의 73.2%를 중심지역 A가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25> 지역수와 지역중력지수의 관계(I)



<표 3-27> 지역수와 지역중력지수의 관계(I)

사 례	지 역	질 량	지역중력지수(RGI)	중력(상호작용)
사례 1	A	80	66.7	16.0
	B	20	33.3	
사례 2	A	80	69.6	17.0
	B1, B2	10, 10	15.2, 15.2	
사례 3	A	80	73.2	17.5
	B1, B2, B3, B4	5, 5, 5, 5	6.7, 6.7, 6.7, 6.7	

주 : 지역간 거리는 10으로 둬.

둘째, 지역간 질량의 상대적 크기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상대지역의 수가 많아지면 중심지역의 지역중력지수가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중심지역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줄어들게 된다. 즉, 지역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균형성을 이룬 상태에서 교류하는 지역수가 많아지게 되면 상호교류작용에 대한 영향력 역시 어느 정도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표 3-28>에 제시되어 있는데, 각각의 질량이 50으로 동일한 두 지역이 교류를 하는 경우에서 A지역의 지역중력지수(RGI)는 50이다. 그러나 질량이 50인 중심지역 A와 각각의 질량이 25인 두 상대지역이 상호 교류하는 경우에는 중심지역 A의 지역중

<표 3-28> 지역수와 지역중력지수의 관계(II)

사 례	지 역	질 량	지역중력지수(RGI)	중력(상호작용)
경우 1	A	50	50.0	25.0
	B	50	50.0	
경우 2	A	50	46.8	31.3
	B1, B2	25, 25	26.6, 26.6	
경우 3	A	50	52.0	36.3
	B1, ..., B10	5, ..., 5	4.8, ..., 4.8	

주 : 지역간 거리는 10으로 뒀.

력지수는 50에서 46.8로 감소한다. 그러다가 질량이 50인 중심지역 A와 각각의 질량이 5인 10개 상대지역이 상호 교류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중심지역의 지역중력지수는 52.0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지역간 상호교류작용에서 전체의 52.0%를 중심지역이 지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비록 가상적인 사례이기는 우리나라는 과연 위의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며, 지역간 균형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 인구 및 산업 지역중력지수의 비교분석

① 인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지역의 규모나 세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경우 지역인구는 모든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그 대표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인구를 통하여 지역간에 규모나 세력의 크기가 서로 다른 원인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지역의 규모나 세력의 크기를 개략적으로 가늠해 보는 데서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중력지수를 지역간에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3-29> 인구 및 제조업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구 분	인구 지역중력지수		제조업 지역중력지수	
	1990	2000	1990	20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83.1	87.1	84.6	83.3
충청권	3.4	2.8	1.4	3.3
호남권	3.4	2.0	0.6	0.8
영남권	9.5	7.7	13.3	12.5
강원·제주	0.6	0.4	0.1	0.1
지 방	16.9	12.9	15.4	16.7

주 : 제조업 지역중력지수는 제조업종사자수 기준임.

<표 3-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수를 질량으로 한 지역중력지수(RGI)에서 2000년 현재 수도권의 지역중력지수는 87.1이고 지방은 12.9로 나타나 지역간 교류작용에서 전체의 87.1를 수도권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46.3%가 거주하는 수도권은 지역간 교류에서 그 영향력이 전체의 87.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 42.8, 경기지역 32.0, 인천 12.3의 지역중력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지방에서는 영남권이 7.7, 충청권이 2.8, 호남권이 2.0, 강원·제주지역이 0.4의 지역중력지수를 나타내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영남권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의 시·도간에서는 부산의 지역중력지수가 2.6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경남 1.8, 대구 1.6의 순이다.

1990년과 2000년 동안에 수도권의 인구 지역중력지수는 증가한 반면 지방의 경우는 모든 권역에서 인구 지역중력지수(RGI)가 감소하여 수도권의 지배력이 최근 10년 사이에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수도권의 지역중력지수는 83.1에서 87.1로 증가하였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의 인구 지역중력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에 48.4에서 42.8로 감소한 반면 인천의 경우는 11.1에서 12.3으로 약간 증가하고, 특히 경기지역의 인구 지역중력지수는 23.6에서 32.0으로 8.4나 증가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 지역중력지수가 증

가한 것은 경기지역에서의 증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서울인구의 경기도 전입증가와 함께 경기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지방에서는 전 지역의 인구 지역중력지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영남권의 감소폭이 높게 나타난다. 지방의 시·도간에서는 특히 전남·북 지역의 인구 지역중력지수 감소폭이 크며, 울산, 대전·충북지역의 인구 지역중력지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② 제조업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앞의 대기업 본사의 업종별 분포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최근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주력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리 또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역간의 상호교류에서 지역간 영향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제조업 종업원 수를 질량으로 한 제조업 지역중력지수를 지역간에 비교해 보면, <표 3-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지역중력지수는 83.3이고 지방의 경우는 16.7로 나타난다. 즉, 제조업을 통한 지역간 상호교류에서 전체의 83.3%를 수도권이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제조업 지역중력지수는 17.1, 인천의 경우는 19.2, 그리고 경기지역의 경우는 47.0으로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교류에서 약 절반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에서는 영남권의 제조업 지역중력지수가 12.5로 가장 높은 가운데 호남권의 경우는 0.8에 불과하다. 지방의 시·도간에서는 경남지역의 제조업 지역중력지수가 4.4로 가장 높고 이어 부산이 3.2, 울산 1.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와 제주지역을 제외하면 광주와 전남의 제조업 지역중력지수가 각각 0.2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수도권의 제조업 지역중력지수는 1.3이 감소하여 미세하나마 제조업의 지역간 교류에서 수도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는 있으나 지방에서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의 제조업 지역중력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오히려 충청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최근 10년 사이에 서울의 제조업 지역중력지수가 25.9에서 17.1로 8.8이나 감소한 반면 경기지역의 경우 39.3에서 47.0으로 7.7이나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는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충청권에서 1.9, 호남권에서 0.2가 증가한 반면 영남권에서는 0.8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제조업 지역중력지수는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5.3에서 3.2로 2.1이나 감소하였으며, 충북과 충남에서는 각각 0.6에서 1.4, 0.5에서 1.6으로 2배,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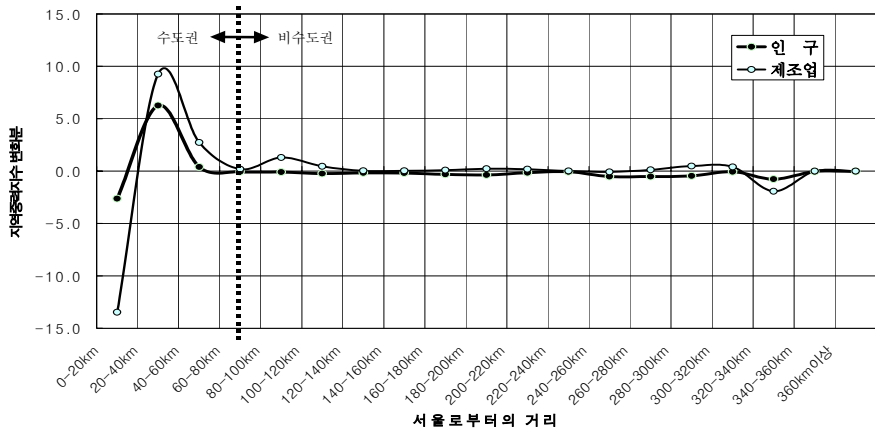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포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과 수도권 인접지역인 충청지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대구, 부산 등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③ 인구·제조업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인구·제조업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에서의 이러한 특징은 서울로부터의 거리대간 지역중력지수 비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즉, <표 3-30>을 통하여 살펴보면, 2000년 현재 서울중심좌표로부터 반경 20km권 지역의 인구와 제조업 지역중력지수는 각각 61.5와 32.6, 그리고 지역을 서울반경 40km까지 확대하면 인구와 제조업 지역중력지수는 각각 85.2와 76.4로 늘어나고 이외의 기타 지역에서는 인구와 제조업 지역중력지수가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구 및 제조업을 통한 지역간 상호교류에서 서울중심으로부터 반경 40km권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반면 1990년과 2000년 사이의 지역중력지수 변화에서는 다소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림 3-26>과 <표 3-30>에서 보듯이 서울중심으로부터 20km권 지역의 영향력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서울중심으로부터 20~40km권 지역의 영향력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서울시내지역이나 마찬

<그림 3-26> 인구·제조업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1990~2000



주 : 제조업 지역중력지수는 제조업종사자수 기준이며, 서울로부터의 거리는 각 시·군의 센터좌표 기준임.
 자료: <표 3-30>.

<표 3-30> 인구 및 제조업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서울중심과의 거 리	인구 지역중력지수		제조업 지역중력지수		지역중력지수 변화분('90-'00)	
	1990	2000	1990	2000	인 구	제조업
0-20km	64.2	61.5	46.1	32.6	-2.6	-13.5
20-40km	17.4	23.7	34.5	43.8	6.3	9.3
40-60km	1.4	1.8	3.8	6.5	0.4	2.7
60-80km	0.4	0.3	0.2	0.4	-0.1	0.2
80-100km	0.9	0.8	0.5	1.8	-0.1	1.3
100-120km	1.1	0.9	0.6	1.1	-0.2	0.5
120-140km	1.2	1.0	0.3	0.4	-0.2	0.0
140-160km	0.4	0.2	0.1	0.1	-0.2	0.0
160-180km	0.8	0.5	0.2	0.3	-0.3	0.1
180-200km	1.2	0.8	0.6	0.8	-0.4	0.2
200-220km	0.3	0.2	0.0	0.2	-0.2	0.2
220-240km	0.1	0.1	0.0	0.0	-0.1	0.0
240-260km	2.5	2.0	2.1	2.0	-0.5	-0.1
260-280km	1.6	1.1	0.4	0.5	-0.5	0.1
280-300km	2.2	1.7	3.5	4.0	-0.5	0.5
300-320km	0.9	0.8	1.7	2.1	-0.1	0.4
320-340km	3.5	2.7	5.4	3.4	-0.8	-1.9
340-360km	0.1	0.0	0.0	0.0	0.0	0.0
360km이상	0.1	0.1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0.0	0.0

주 : 제조업 지역중력지수는 제조업종업원 수 기준임.

가지인 서울중심으로부터의 20km권 지역에서는 인구 및 제조업 지역중력지수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각각 2.6과 13.5가 감소한 반면 서울반경 20~40km권에서는 인구와 제조업 지역중력지수가 각각 6.3과 9.3씩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반경 40~60km권에서도 비록 지역중력지수 값 자체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인구와 제조업 지역중력지수가 각각 0.4와 2.7씩 증가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60km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역중력지수가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어 지역간 상호교류작용에 대한 영향력이 미약한 가운데 1990년과 2000년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약화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지역이 많다. 특히, 부산을 포함하는 320~340km권에서 인구 및 제조업 지역중력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폭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반경 60km 이상의 지역에서는 인구 지역중력지수가 전 지역에서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감소하고, 제조업 지역중력지수는 대구, 부산지역을 포함하는 서울반경 240~260km, 320~340km권에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국토전체의 도심지역인 서울반경 20km권에서는 인구와 제조업, 특히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그 인접지역인 서울반경 20~60km권에 대한 인구 및 제조업 입지가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인데, 제조업의 경우는 충청권까지 포함하는 지역으로 그 입지기반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이 지역, 특히 서울반경 20~40km권 지역은 서울도심으로부터의 압출현상과 대전이남 지역에서의 유입현상이 서로 접점을 이루는 지역으로서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지역간 교류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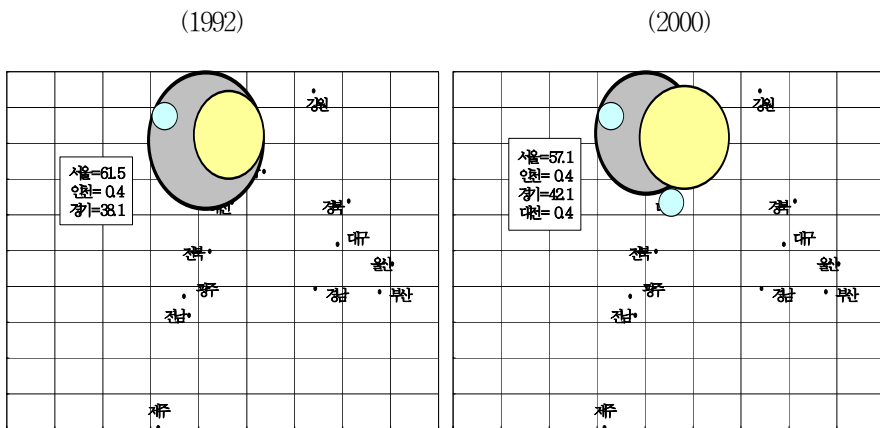
3) 정(政) : 국가공공기관부문 지역중력지수의 비교분석

① 중앙행정기관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우리나라 인구분포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완화된 대신 서울주변 경기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입지 역시 서울의 탈제조업화로 제조업의 도심공동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충청지역에 대한 제조업입지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에 따라 인구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지역간 교류에서 수도 서울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주변 경기지역에서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와 같이 서울을 정점으로 하여 끊임없이 인구가 몰려들고 각종 지역간 교류활동에서 수도권 지배력[磁力]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대전이남 지역의 세력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어 우리나라 지역구조의 수도권중속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인구 및 산업의 지역간 분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이하에서는 중추기능 간 상호교류작용에서 지역간에 그 영향력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본다.

중앙정부 기능, 대기업본사 기능, 명문대학 기능 중에서 먼저 중앙정부 기능을 기준으로 한 지역중력지수(RGI)를 지역간에 비교한다. <그림 3-27>과 <표 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 기능 중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992년에는 그 대부분이 수도권에 입지함으로써 수도권의 지배 하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역간

<그림 3-27> 중앙행정기관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 1992~2000



주 : 중앙행정기관수 기준임.

<표 3-31> 중앙행정기관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 1992~2000

구 분	기관수 기준		근무인원 기준	
	1992	2000	1992	20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100.0	99.6	100.0	99.6
충청권	0.0	0.4	0.0	0.4
호남권	0.0	0.0	0.0	0.0
영남권	0.0	0.0	0.0	0.0
강원·제주	0.0	0.0	0.0	0.0
지 방	0.0	0.4	0.0	0.4

상호작용이 이뤄지게 되었다. 정부의 일부기능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2000년에는 대전이 일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즉, 중앙행정기관 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서 1992년과 2000년 사이에 수도권의 지역중력지수는 100에서 99.6으로 약간 낮아지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의 중앙행정기관 지역중력지수가 같은 기간 동안에 61.5에서 57.1로 낮아진 반면 정부과천청사가 입지한 경기 지역의 중앙행정기관 지역중력지수는 38.1에서 42.1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정부대전청사가 입지한 대전의 중앙행정기관 지역중력지수가 1992년과 2000년 사이에 0.0에서 0.4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분포비율의 증가에 비해서는 지역중력지수의 증가가 미미한 수준인데, 정부대전청사로의 일부 중앙정부 기능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중추기능 지배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② 공기업 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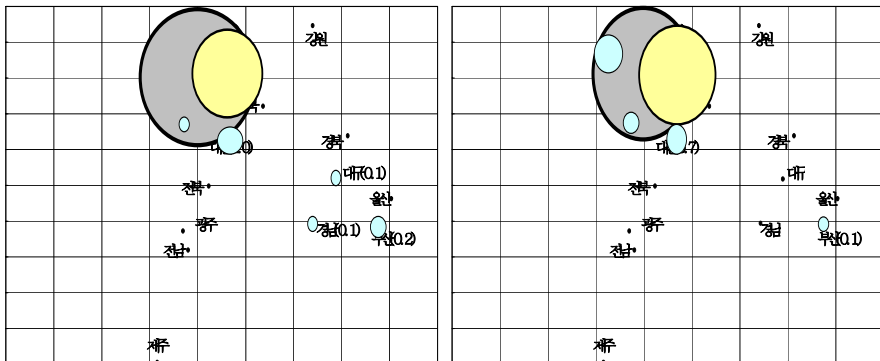
국가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에 이어 공기업(정부출연기관·국고보조기관·정부업무위탁기관 포함) 본사를 질량으로 하는 지역중력지수를 지역간에 비교해보면, <표 3-32>와 <그림 3-28>에서 보듯이 공기업 본사 수를 질량으로 한 지역중

력지수에서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수도권은 강화된 반면 지방은 감소하고 있다. 즉, 수도권의 경우 본사 수 기준, 본점근무인원 기준 모두에서 같은 기간동안에 공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가 각각 98.4에서 99.0, 96.8에서 98.6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공기업 본사 수를 기준으로 한 서울의 지역중력지수는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85.5에서 75.3으로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경우는 12.9에서 22.3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는 공기업 본사기능의 지역간 교류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는 가운데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2> 공기업 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 1992~2002

구 분	본사수 기준		본사 근무인원 기준	
	1992	2002	1992	2002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8.4	99.0	96.8	98.6
충청권	1.1	0.9	3.0	1.4
호남권	0.0	0.0	0.0	0.0
영남권	0.4	0.1	0.2	0.0
강원·제주	0.0	0.0	0.0	0.0
지 방	1.6	1.0	3.2	1.4

<그림 3-28> 공기업 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 1992~2002
(1992) (2002)



주 : 공기업 본사 수에 의한 지역중력지수 기준임.

우리나라 공기업 본사기능의 지역간 교류작용에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수도권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에서와는 달리 최근 수도권의 영향력 세기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③ 국가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공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위에서 본 중앙행정기능과 공기업 본사기능을 포함하는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간 상호교류에서의 영향력을 지역간에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표 3-33>과 <그림 3-2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영향력은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도권이 전체 국가공공기관 중추기능의 지역간 상호교류에서 전체의 99% 이상을 지배하고 있어 고도의 수도권 종속적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공공기관 중추기능에서 수도권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가운데 지역간에서는 수도권에서의 서울영향력의 감소, 지방에서의 충청권의 영향력 증가라는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수도권에서 기관 수를 기준으로 한 서울의 국가공공기관 지역중력지수는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73.5에서 66.2로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25.5에서 32.2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서도

<표 3-33> 국가공공기관 종합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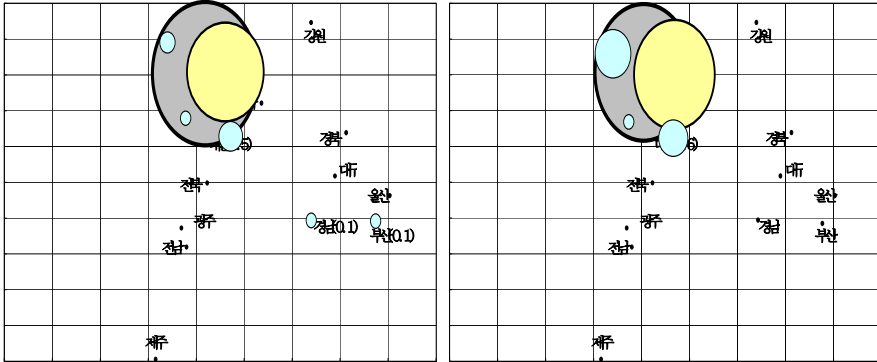
구 분	기관수 기준		근무인원 기준	
	1992	2002	1992	2002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9.2	99.3	98.4	99.1
충청권	0.6	0.7	1.5	0.9
호남권	0.0	0.0	0.0	0.0
영남권	0.2	0.1	0.1	0.0
강원·제주	0.0	0.0	0.0	0.0
지 방	0.8	0.7	1.6	0.9

주 :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역중력지수와 공기업에 의한 지역중력지수의 평균을 나타냄.

<그림 3-29> 국가공공기관 종합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 1992~2002

(1992)

(2002)



주 : 중앙행정기관 및 공기업본사 수에 의한 지역중력지수를 기준으로 함.

같은 기간 동안에 0.2에서 0.9로 지역중력지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국가공공기관 중추기능의 지역간 교류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미약한 가운데 기관 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중력지수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서 약간 증가하고 영남권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즉, 지방의 경우 국가공공기관 중추기능의 지역간 교류에서 정부대전청사가 입지해 있는 충청지역의 영향력은 증가하는 반면 영남권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공기관 중추기능에서 지방의 수도권 종속성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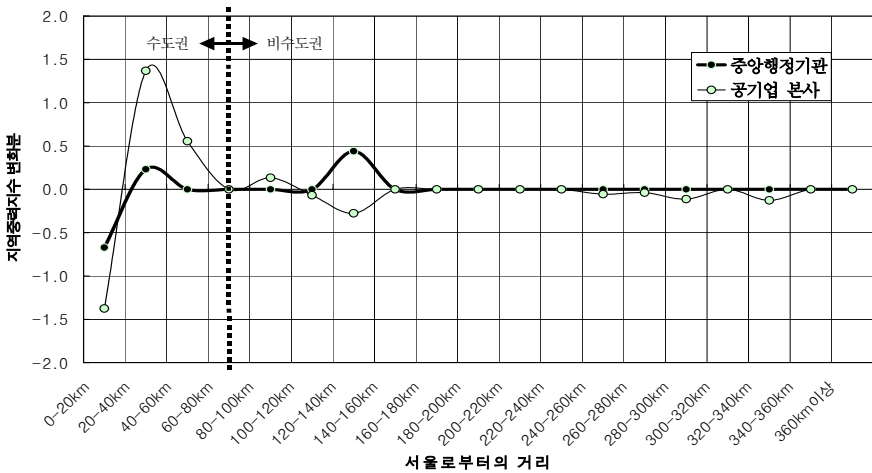
④ 국가공공기관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국가공공기관 중추기능의 지역간 교류에 대한 영향력의 지역간 비교에 이어 서울중심좌표로부터의 거리대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서울로부터의 거리대간 국가공공기관 지역중력지수는 <그림 3-30>과 <표 3-3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데, 수도권에서도 서울중심 반경 20km내 지역의 지역중력지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수도권 5개 신도시와 과천 등을 경계로 하는 내

부지역이 국가공공기관 중추기능의 지역간 교류에서 그 핵(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 서울중심 반경 20km권에서 중앙행정기관 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중력지수는 98.5, 공기업 본사 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중력지수는 92.5로 나타나고 최근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는 등 국가공공기관 중추기능에 대한 이 지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2년 이후에 있어서는 서울중심 반경 20km내 지역의 국가공공기관 지역중력지수는 감소하는 반면 서울반경 20~40km권에서 공공기관 지역중력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공공기관 중추기능의 지역간 교류에서 이 지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즉, 서울중심 반경 20km권에서 1992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역중력지수는 0.7이 감소하고 공기업 본사 지역중력지수는 1.4가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서울반경 20~40km권 지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역중력지수는 1992년과 2000년 사이에 0.2, 공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는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1.4가 증가하였다.

<그림 3-30> 국가공공기관 종합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 1992~2002



- 주 : 1. 중앙행정기관 기관 수, 공기업 본사 수에 의한 지역중력지수 기준임.
- 2. 서울로부터의 거리는 각 시·군의 센터좌표 기준임.

<표 3-34> 국가공공기관 종합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서울중심과의 거리	지역중력지수				지역중력지수 변화분	
	중앙행정기관 기준		공기업 본사 기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본사
	1992	2000	1992	2002		
0-20km	99.1	98.5	93.9	92.5	-0.7	-1.4
20-40km	0.9	1.1	4.3	5.7	0.2	1.4
40-60km	0.0	0.0	0.2	0.8	0.0	0.6
60-80km	0.0	0.0	0.0	0.0	0.0	0.0
80-100km	0.0	0.0	0.1	0.2	0.0	0.1
100-120km	0.0	0.0	0.1	0.0	0.0	-0.1
120-140km	0.0	0.4	1.0	0.7	0.4	-0.3
140-160km	0.0	0.0	0.0	0.0	0.0	0.0
160-180km	0.0	0.0	0.0	0.0	0.0	0.0
180-200km	0.0	0.0	0.0	0.0	0.0	0.0
200-220km	0.0	0.0	0.0	0.0	0.0	0.0
220-240km	0.0	0.0	0.0	0.0	0.0	0.0
240-260km	0.0	0.0	0.1	0.0	0.0	-0.1
260-280km	0.0	0.0	0.1	0.0	0.0	0.0
280-300km	0.0	0.0	0.1	0.0	0.0	-0.1
300-320km	0.0	0.0	0.0	0.0	0.0	0.0
320-340km	0.0	0.0	0.2	0.1	0.0	-0.1
340-360km	0.0	0.0	0.0	0.0	0.0	0.0
360km이상	0.0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0.0	0.0

주 : 지역중력지수는 중앙행정기관 수 및 공기업본사 수 기준임.

전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역중력지수의 경우 1992년과 2000년 사이에 정부대전청사가 위치해 있는 서울반경 120~140km권에서 0.4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공기업 본사 지역중력지수의 경우는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서울반경 20~100km권 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있으나 서울반경 100km 이상의 지역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서울반경 140km 이상 지역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본사가 거의 입지하지 않음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역중력은 공백상태이며 미세하나마 존재하였던 공기업 본사 지역중력마저 소멸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서울중심 20km권 지역이 우리나라 국가공공기관 증추기능의

지역간 상호교류작용에서 코어로서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반경 60km권으로 외연적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대전청사가 입지해 있는 거리대로 향하여 공기업 본사 기능의 자력권(磁力圈)이 당겨져 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4) 산(産) : 기업본사부문 지역중력지수의 비교분석

① 100대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세 가지 중추기능 중 중앙정부 기능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본사의 지역중력지수를 지역간에 비교하였다. 세 가지 중추기능 중에서 대기업 본사기능의 입지가 지역발전에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중추기능 중 대기업 본사기능과 관련하여 지역간에 세력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한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기업규모를 100대, 500대, 3000대로 구분하고 각 규모별로 지역중력지수(RGI)를 지역간에 비교·분석한다.

먼저 100대 기업의 본사 수를 질량으로 하는 지역중력지수를 통하여 지역간 상호교류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다. <표 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과 2000년을 통틀어 수도권 100대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가 99를 넘고 있다. 즉, 우리나라 100대 기업본사 중추기능의 지역간 상호교류는 고도의 수도권 일극 종속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구조가 고착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의 지역중력지수가 2000년 현재 77.0을 나타내는데 이는 1990년에 비하여 12.1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는 1990년에 비해 5.5가 증가하여 2000년 현재 17.3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가운데 1990년 이후 서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경기지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은 100대 기업본사 기능의 지역간 교류에서 거의

<표 3-35> 100대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구 분	본사수 기준		종업원수 기준	
	1990	2000	1990	20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9.5	99.3	99.2	99.6
충청권	0.0	0.4	0.0	0.1
호남권	0.0	0.0	0.0	0.0
영남권	0.5	0.3	0.8	0.3
강원·제주	0.0	0.0	0.0	0.0
지 방	0.5	0.7	0.8	0.4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1990년 이후 충청권의 지역중력지수는 증가하는 데 비하여 영남권의 지역중력지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수도권에 100대 기업본사의 90% 이상이 집적되어 있고, 최근 10년 사이에 경기도와 충청지역으로의 대기업 본사입지가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② 500대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다음으로 500대 기업의 본사 수를 질량으로 하는 지역중력지수를 통해 지역간 상호교류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다. 그 결과는 <표 3-3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데, 수도권의 지역중력지수(RGI)는 본사 수 기준에서 2000년 현재 98.3으로 500대 기업 본사기능의 지역간 교류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쥐고 있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수도권의 지역중력지수는 96.9에서 98.3으로 확대되어 수도권의 지배력은 100대 기업에서와는 달리 더욱 강화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500대 기업본사 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중력지수에서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서울의 경우 81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고 경기도의 경우는 8.6에서 15.0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500대 기업본사기능의 지역간

<표 3-36> 500대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구 분	본사수 기준		종업원수 기준	
	1990	2000	1990	20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6.9	98.3	97.4	99.3
충청권	0.2	0.4	0.2	0.1
호남권	0.1	0.1	0.0	0.0
영남권	2.9	1.2	2.4	0.6
강원·제주	0.0	0.0	0.0	0.0
지 방	3.1	1.7	2.6	0.7

교류에서 서울이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에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충청권의 지역중력지수는 증가하는 데 비하여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의 지역중력지수는 감소하고 있다. 500대 기업본사 분포에서 경기도와 인접 충청지역으로의 기업본사 입지가 확대됨으로써 이들 지역의 영향력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며 여전히 수도 서울이 우리나라 500대 기업본사 기능의 지역간 힘의 분포에서 전체의 8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③ 3000대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분석범위를 확대하여 3000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간 지역중력지수를 비교해보면, <표 3-37>에서 볼 수 있듯이 본사 수 기준의 지역중력지수에서 2000년 현재 수도권의 경우 95.3으로 100대 기업, 500대 기업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3000대 기업본사 기능의 지역간 상호교류에서 수도권의 독점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7> 3000대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구 분	본사수 기준		종업원수 기준	
	1990	2000	1990	20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4.6	95.3	96.0	98.0
충청권	0.5	1.2	0.3	0.3
호남권	0.1	0.2	0.0	0.1
영남권	4.7	3.3	3.6	1.6
강원·제주	0.0	0.0	0.0	0.0
지 방	5.4	4.7	4.0	2.0

이러한 수도권의 영향력 증가는,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지역중력지수가 각각 10.6에서 6.5, 24.2에서 22.8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지역중력지수가 59.7에서 66.0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는 500대 기업본사 기능의 지역간 교류에서 거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 10년 사이에 충청권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영남권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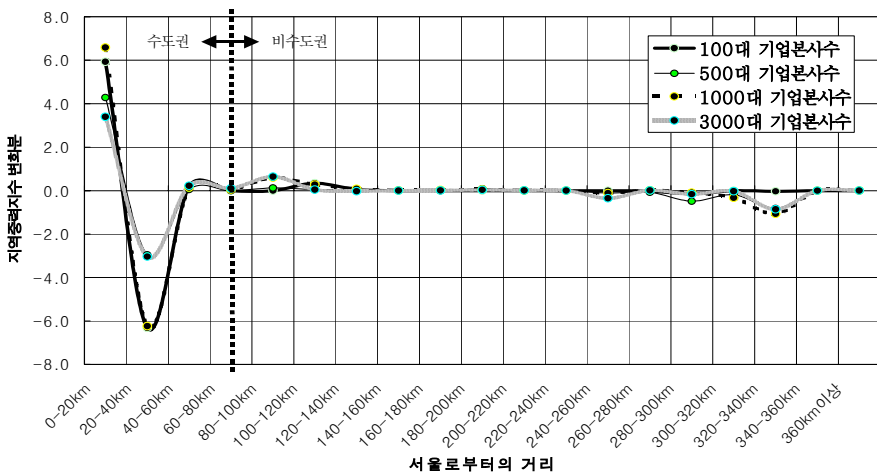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앞의 기업본사 분포에서 보았듯이 비록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대규모 기업들의 본사는 경기 및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입지가 확산되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산업인 정보통신업 기업본사가 서울에 집중되고, 금융·보험업과 건설업 또한 지방에서는 급속히 몰락한 반면 서울에서는 크게 성장함으로써 3000대 기업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기업본사기능에서 서울의 독점력은 더욱 강화되고 지방의 서울 종속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업종별 성장성을 고려하면 향후 서울 종속적인 구조는 더욱 강화될 우려마저 안고 있다고 하겠다.

④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기업본사를 기준으로 한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 지역간 기업본사기능 상호작용에서 일극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았는데, 서울중심좌표로부터의 거리대간에서도 서울중심 반경 20km권 지역이 우리나라 기업본사 중추기능에서 코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1>과 <표 3-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기업본사기능의 지역간 상호교류에서 100대 기업과 500대 기업의 경우 서울반경 20km권 지역이 각각 전체의 92.1%, 90.5%를 차지하며, 1000대 기업과 3000대 기업의 경우에서도 서울반경 20km권이 각각 전체의 85.4%와 75.7%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본사기능의 지역간 교류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중심으로부터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본사기능의 지역간 교류에 대해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의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 변화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데 서울반경 20km권의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반면 적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반경

<그림 3-31>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자료: <표 3-38>.

<표 3-38>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서울중심과 의 거리	지역중력지수								지역중력지수 변화분			
	100대 기업		500대 기업		1000대 기업		3000대 기업		100대	500대	1000대	3000대
	'90	'00	'90	'00	'90	'00	'90	'00	기업	기업	기업	기업
0-20km	86.1	92.1	86.2	90.5	78.8	85.4	72.3	75.7	5.9	4.3	6.6	3.4
20-40km	13.1	6.7	10.2	7.3	15.7	9.4	20.7	17.7	-6.3	-3.0	-6.2	-3.0
40-60km	0.3	0.5	0.4	0.5	1.0	1.1	1.6	1.8	0.2	0.0	0.1	0.2
60-80km	0.0	0.0	0.0	0.0	0.0	0.1	0.0	0.1	0.0	0.0	0.0	0.1
80-100km	0.0	0.0	0.0	0.2	0.0	0.6	0.1	0.7	0.0	0.1	0.6	0.6
100-120km	0.0	0.3	0.0	0.1	0.1	0.4	0.2	0.2	0.3	0.1	0.3	0.0
120-140km	0.0	0.0	0.1	0.1	0.1	0.2	0.2	0.2	0.0	0.0	0.1	0.0
140-160km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60-180km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80-200km	0.0	0.0	0.1	0.2	0.1	0.1	0.1	0.1	0.0	0.1	0.1	0.0
200-220km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20-240km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40-260km	0.0	0.0	0.3	0.2	0.5	0.3	0.8	0.5	0.0	-0.1	-0.1	-0.4
260-280km	0.1	0.0	0.1	0.1	0.2	0.2	0.2	0.2	0.0	-0.1	0.0	0.0
280-300km	0.4	0.2	1.2	0.7	1.0	0.9	1.0	0.8	-0.1	-0.5	-0.1	-0.2
300-320km	0.0	0.0	0.2	0.0	0.6	0.3	0.5	0.5	0.0	-0.2	-0.3	0.0
320-340km	0.1	0.1	1.0	0.2	1.9	0.8	2.1	1.3	0.0	-0.8	-1.1	-0.9
340-360km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60km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0.0

주 : 기업본사 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중력지수 기준임.

20~40km권의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즉, 서울반경 20km권 지역의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100대 기업의 경우 5.9, 500대 기업의 경우 4.3, 3000대 기업의 경우 3.4이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서울반경 20~40km권 지역에서는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가 같은 기간 동안에 100대 기업의 경우 6.3이나 감소하였으며, 500대 기업과 3000대 기업의 경우에서도 3.0씩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의 수준이 미약하기는 하나 서울 중심 반경 40~120km권에서는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등 지방대도시들이 포진해 있는 서울반경 240~340km권에서는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중심 반경 20km권 지

역이 기업본사 중추기능의 지역간 교류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본사간 교류에서 이러한 독점적 지배력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본사 중추기능에서 서울반경 20km권의 자력(磁力)은 더욱 강력해지는 가운데 앞의 중추기능 중심(重心)분석에서 보았듯이 기업본사의 중심(重心)이 이 지역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중추기능 중 지역발전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지의 지방분산을 유도하는 데서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는 기업본사기능이 이처럼 고도로 서울중심에 집적되고 있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지난한 과제가 되고 있다.

5) 학(學) : 대학부문 지역중력지수의 비교분석

중추기능 중 명문대학 기능(學)의 지역간 상호교류에서 각 지역간에 그 영향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지역중력지수(RGI)를 통하여 살펴본다. <표 3-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한 2001년 현재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중력지수에서 수도권은 85.4, 지방은 14.6으로 나타나 20대 주요 명문대학간 상호작용에서 수도권의 지배력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이 65.3, 인천 10.8, 경기도가 9.3의 지역중력지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에서는 영남권의 대학 지역중력지수가 9.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호남권의 경우에서는 2001년도에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한 20대 명문대학에 속하는 대학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방의 시·도간에서는 특히, 경남지역과 부산의 지역중력지수가 각각 4.0과 3.9로 높게 나타나고 이에 이어 충남이 2.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최근 5년 사이에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에 의거한 20대 명문대학의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한 지역중력지수가 수도권은 감소하고 지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 4.0, 인천 0.4, 경기지역에서 0.3씩 지역중력지수가 감소하여 수도권의 지역중력지수 감소가 서울의 지역중력지수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지방에서는 충청권에서 지역중력지수가 2.5, 영남권에서

<표 3-39> 20대 주요 명문대학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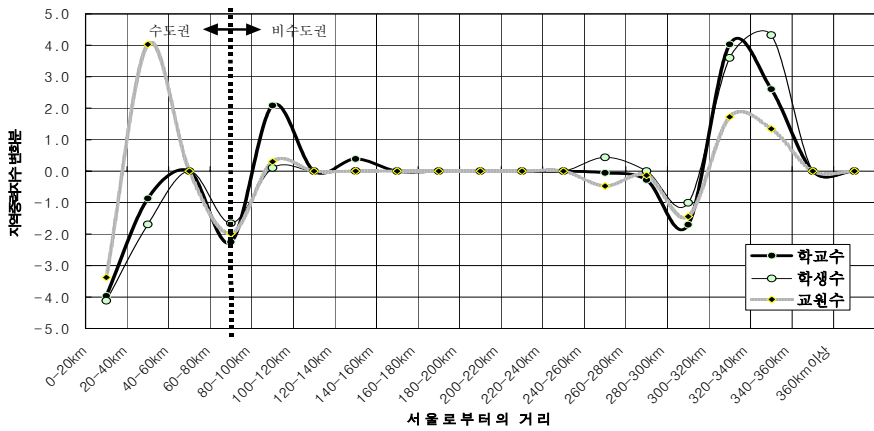
구 분	학교수 기준		학생수 기준		교원수 기준	
	1996	2001	1993	2001	1993	2001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0.3	85.4	93.9	88.0	90.5	91.1
충청권	0.8	3.3	0.2	0.3	0.5	0.8
호남권	0.0	0.0	0.0	0.0	0.0	0.0
영남권	5.2	9.8	3.8	11.2	5.4	6.4
강원·제주	3.7	1.5	2.1	0.4	3.6	1.6
지 방	9.7	14.6	6.1	12.0	9.5	8.9

4.6이 증가하고 강원·제주지역에서 2.2가 감소하고 있다. 지방의 시·도간에서는 20대 명문대학의 지역중력지수가 경남에서 4.0, 부산에서 2.6, 충남과 대전에서 각각 2.1, 0.4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에 의거한 20대 주요 명문대학을 기준으로 한 대학중추기능의 경우, 수도권의 지역중력지수가 전국을 압도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충청권과 영남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에서의 영향력 감소는 대학정원 증원과 학교신설에 대한 규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역간 비교에 이어 서울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명문대학의 지역중력지수 분포를 중앙일보사에 의한 20대 주요 명문대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3-32>와 <표 3-4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1년 현재 서울중심 20km권의 학교수 기준 지역중력지수가 65.3으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여 서울중심 20km권 지역이 명문대학간 상호교류에서 코어임을 재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서울반경 20~40km권의 명문대학 지역중력지수는 20.1로 나타나 2001년 현재 서울반경 40km내 지역이 우리나라 대학중추기능의 지역간 교류에서 전체의 8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김해, 부산을 포함하는 서울반경 300~340km권의 대학 지역중력지수가 7.9로 2001년 현재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2> 20대 명문대학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부터 거리대간 비교



자료: <표 3-40>에서 학교수 기준임.

<표 3-40> 20대 주요 명문대학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서울중심과의 거리	지역중력지수						지역중력지수 변화분		
	학교수 기준		학생수 기준		교원수 기준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1996	2001	1993	2001	1993	2001			
0-20km	69.3	65.3	75.2	71.0	75.6	72.2	-4.0	-4.1	-3.4
20-40km	21.0	20.1	18.7	17.0	14.9	19.0	-0.9	-1.7	4.0
40-60km	0.0	0.0	0.0	0.0	0.0	0.0	0.0	0.0	0.0
60-80km	3.7	1.5	2.1	0.4	3.6	1.6	-2.3	-1.7	-2.0
80-100km	0.0	2.1	0.0	0.1	0.0	0.3	2.1	0.1	0.3
100-120km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0-140km	0.8	1.2	0.2	0.2	0.5	0.5	0.4	0.0	0.0
140-160km	0.0	0.0	0.0	0.0	0.0	0.0	0.0	0.0	0.0
160-180km	0.0	0.0	0.0	0.0	0.0	0.0	0.0	0.0	0.0
180-200km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0-220km	0.0	0.0	0.0	0.0	0.0	0.0	0.0	0.0	0.0
220-240km	0.0	0.0	0.0	0.0	0.0	0.0	0.0	0.0	0.0
240-260km	1.1	1.1	1.3	1.7	1.7	1.2	-0.1	0.4	-0.5
260-280km	1.1	0.8	0.1	0.1	0.3	0.2	-0.3	0.0	-0.1
280-300km	1.7	0.0	1.0	0.0	1.4	0.0	-1.7	-1.0	-1.4
300-320km	0.0	4.0	0.0	3.6	0.0	1.7	4.0	3.6	1.7
320-340km	1.3	3.9	1.5	5.8	2.0	3.3	2.6	4.3	1.3
340-360km	0.0	0.0	0.0	0.0	0.0	0.0	0.0	0.0	0.0
360km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주: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에 의한 20대 주요 명문대학을 기준으로 함.

1996년과 2001년 사이에는 서울반경 40km권에서는 대학 지역중력지수는 감소하는 반면 서울반경 80~140km권과 300~340km권에서는 증가하고 있어 지방에서 대학중추기능의 지역중력지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다. 즉, 서울반경 40km권에서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한 대학 지역중력지수가 같은 기간 동안에 4.9가 감소한 반면 서울반경 80~140km권과 300~340km권에서는 각각 2.5, 6.6씩 증가하고 있다.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에 의한 20대 주요 명문대학을 기준으로 한 대학중추기능의 경우 서울중심지역의 지역중력지수가 전국을 압도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충청권과 영남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학의 수도권 입지규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 중추기능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종합비교 : 정(政)·산(産)·학(學)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중추기능, 즉 중앙정부 기능, 기업본사 기능, 명문대학 기능의 중추기능별로 지역간에 지역중력지수를 통하여 영향력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제 이러한 중추기능별 지역중력지수를 종합적으로 지역간에 비교·분석함으로써 중추기능 전체적 차원에서 수도권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종합한 결과가 <표 3-41>에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중추기능의 지역간 상호교류 작용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수도권의 절대적 독점력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

수도권의 중추기능 종합 지역중력지수는 기관 수 기준에서 2000년 현재 전반적으로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990년 이후 다소 줄어들기는 하나 그 절대수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2000년 현재 기업본사기능 중 100대 기업본사만 포함하는 경우의 수도권 중추기능 종합 지역중력지수는 95.8이고, 500대 기업본사만을 포함하는 경우는 95.2, 3000대 기업본사를 포함하는 경우는

94.6으로 나타나며,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이다. 수도권 내에서는 100대 기업본사만을 포함한 중추기능 종합 지역중력지수에서 2000년 현재 서울의 경우 73.6, 경기지역의 경우는 18.0, 인천의 경우 4.2로 나타나며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그 크기에서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서울이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지역간 상호교류작용에서 전체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강력한 독점력을 견고하게 유지함으로써 중추기능에서 서울 단핵(單核) 종속적인 지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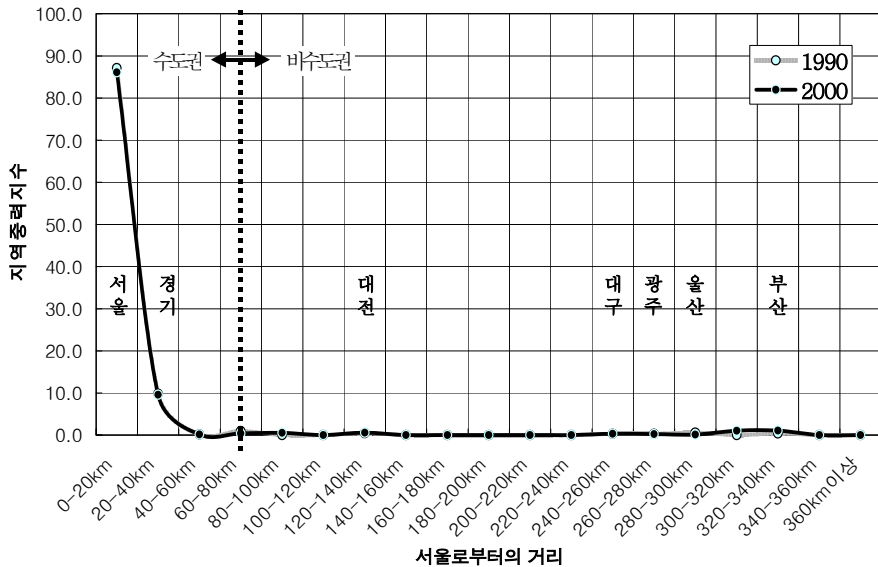
<표 3-41> 중추기능 종합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 정(政)·산(産)·학(學)

구 분		기관수 기준		인원수 기준	
		1990	2000	1990	2000
국가공공기관 + 100대 기업본사 + 20대 명문대학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7.0	95.8	97.1	96.4
	충청권	0.5	1.1	0.8	0.9
	호남권	0.0	0.0	0.0	0.0
	영남권	1.5	2.7	1.4	2.4
	강원·제주	0.9	0.4	0.7	0.3
	지 방	3.0	4.2	2.9	3.6
국가공공기관 + 500대 기업본사 + 20대 명문대학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6.4	95.2	96.6	96.0
	충청권	0.5	1.2	0.9	0.9
	호남권	0.0	0.0	0.0	0.0
	영남권	2.1	3.3	1.8	2.8
	강원·제주	0.9	0.4	0.7	0.3
	지 방	3.6	4.8	3.4	4.0
국가공공기관 + 3000대 기업본사 + 20대 명문대학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5.8	94.6	96.3	95.6
	충청권	0.6	1.2	0.9	1.0
	호남권	0.0	0.0	0.0	0.0
	영남권	2.6	3.7	2.1	3.1
	강원·제주	0.9	0.4	0.7	0.3
	지 방	4.2	5.4	3.7	4.4

- 주 : 1. 중추기능별 지역중력지수를 평균한 값 기준임.
 2. 1990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본사는 '92년, 20대 명문대학은 '93년(학교 수는 '96년) 기준이며, 2000년의 경우 공기업 본사는 2002년, 20대 명문대학은 2001년 기준임.
 3. 인원수 기준에서 기업본사의 경우 기업 전체 종업원 기준이며, 명문대학의 경우 학생 수와 교원 수 기준의 지역중력지수를 평균한 값 기준임.

서울중심좌표로부터의 거리대간에 중추기능 종합 지역중력지수를 비교해보면, 역시 서울중심 20km권 지역이 우리나라 국토공간상에서 중추기능 중력이 고도로 응축되어 있는 코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3-33>과 <표 3-4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기업본사기능에서는 100대 기업본사만을 포함하는 중추기능 종합 지역중력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0년 현재 서울반경 20km권 지역의 지역중력지수는 86.1을 나타내고, 서울반경 40km권으로 확대할 경우 95.7이 된다. 즉,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지역간 상호교류작용에서 서울반경 20km권 지역이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하는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에서도 서울중심 20km권의 지역중력지수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이 지역이 우리나라 국토공간상에서 블랙홀과 같은 고도의 흡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3> 중추기능 종합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 정(政)·산(産)·학(學)



주 : <표 3-42>에서 100대 기업본사 수 기준의 중추기능 종합 지역중력지수 기준임.

<표 3-42> 중추기능 종합 지역중력지수의 서울로부터 거리대간 비교 : 정(政)·산(産)·학(學)

서울중심과의 거 리	지역중력지수					
	100대 기업본사 수 기준		500대 기업본사 수 기준		3000대 기업본사 수 기준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0-20km	87.1	86.1	87.1	86.1	83.6	82.7
20-40km	9.8	9.6	9.1	8.9	11.7	11.5
40-60km	0.1	0.1	0.2	0.2	0.5	0.5
60-80km	0.9	0.4	0.9	0.4	0.9	0.4
80-100km	0.0	0.5	0.0	0.5	0.0	0.6
100-120km	0.0	0.0	0.0	0.0	0.1	0.1
120-140km	0.5	0.6	0.5	0.6	0.5	0.6
140-160km	0.0	0.0	0.0	0.0	0.0	0.0
160-180km	0.0	0.0	0.0	0.0	0.0	0.0
180-200km	0.0	0.0	0.0	0.0	0.0	0.0
200-220km	0.0	0.0	0.0	0.0	0.0	0.0
220-240km	0.0	0.0	0.0	0.0	0.0	0.0
240-260km	0.3	0.3	0.4	0.4	0.5	0.5
260-280km	0.3	0.2	0.3	0.2	0.3	0.3
280-300km	0.5	0.1	0.8	0.3	0.7	0.3
300-320km	0.0	1.0	0.0	1.1	0.1	1.1
320-340km	0.4	1.0	0.6	1.3	0.9	1.6
340-360km	0.0	0.0	0.0	0.0	0.0	0.0
360km이상	0.0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중추기능 지역중력지수간의 상호 연관성

지금까지 인구 및 제조업, 그리고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유형별 지역중력지수와 중추기능 종합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그리고 서울중심좌표로부터의 거리대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수도권,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중심 20km권 지역이 우리나라 국토공간상에서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지역간 상호교류작용에서 고도의 서울 종속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을 보았다. 이것은 중추기능간에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융합 반응을 통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고밀도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블랙홀과 같은 흡인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43> 인구 및 중추기능 지역중력지수의 상호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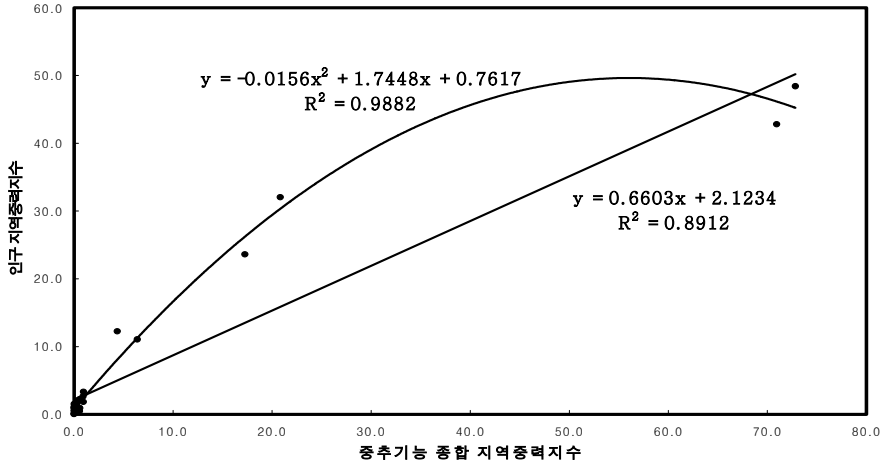
구 분		인 구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본사	대기업 본사	20대 명문대학
시·도 기준	인 구	1.000				
	중앙행정기관	0.974**	1.000			
	공기업 본사	0.924**	0.921**	1.000		
	대기업 본사	0.903**	0.867**	0.980**	1.000	
	20대 명문대학	0.932**	0.917**	0.993**	0.989**	1.000
거리 기준	인 구	1.000				
	중앙행정기관	0.952**	1.000			
	공기업 본사	0.964**	0.999**	1.000		
	대기업 본사	0.982**	0.989**	0.994**	1.000	
	20대 명문대학	0.995**	0.957**	0.968**	0.985**	1.000

- 주 : 1. 중추기능의 경우 기관수 기준의 지역중력지수를 기준으로 함.
 2. 대기업본사는 100대 기업, 500대 기업, 1000대 기업, 3000대 기업 본사의 평균지역중력지수를 기준으로 함.
 3. **는 0.01 수준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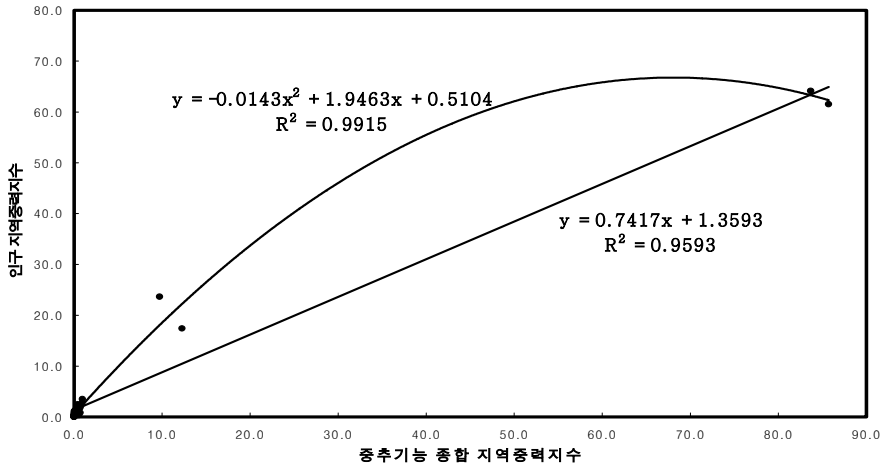
<표 3-43>에는 인구 지역중력지수, 중추기능별 지역중력지수 상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변수간에서 상관계수가 0.9를 상회하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중추기능 상호간의 상승작용을 통하여 서울중심 20km권이 고밀도의 블랙홀로서 막강한 흡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실증적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다. 또한 중추기능 지역중력지수와 인구 지역중력지수간 회귀분석결과가 <그림 3-34>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중추기능 지역중력지수와 인구 지역중력지수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흡인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본사, 민간기업 본사, 주요 명문대학 등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밀집된 가운데 상호간 연쇄작용과 상승작용을 통하여 수도권이 고도의 응축된 에너지를 보유함으로써 인구, 산업 등을 끌어들이는 유아등(誘蛾燈)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서울반경 20km지역에는 핵심 중추기능만이 집적됨으로써 고밀도의 블랙홀이 형성되어 자체적으로 그 세력권을 더욱 심화·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34> 인구 및 중추기능 종합 지역중력지수간의 연계성
(사도 기준)



(거리 기준)



주 : 중추기능 종합 지역중력지수는 기관수 기준임.

그렇다면 중추기능이 이와 같이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로 집적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장(章)에서는 중추기능의 입지결정요인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대기업 본사를 중심으로 한 행태분석을 통하여 입지결정요인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추기능 분포와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분석결과를 종합하면서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CHAPTER 4

중추기능의 입지결정요인과 인과메커니즘 분석

1. 중추기능 입지결정 요인의 분석전제와 주요 대상

본 장(章)에서는 앞의 중추기능의 지역간 분포실태와 그에 이은 중추기능간 상호교류작용에 대한 영향력의 지역간 비교분석을 이어 받아 중추기능의 분포와 영향력이 지역간에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원인을 중추기능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앞 장(章)에서의 중추기능의 지역간 분포와 영향력의 지역간 비교분석 결과, 그리고 중추기능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서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중추기능 수도권 집종의 인과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중추기능 지방분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추기능을 중앙정부 기능, 기업본사 기능, 명문대학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기능과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정부산하기관 포함) 본사를, 기업본사 기능과 관련해서는 100대 기업, 500대 기업, 3000대 기업의 본사를, 명문대학 기능과 관련해서는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한 20대 주요 명문대학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세 유형의 중추기능 중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본사의 경우는 그 입지가 정부

의 정책에 의해 좌우될 수 있지만 기업본사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기업활동에서 기본이 되는 수익성 원리에 의해 그 입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반면 대학의 입지는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상당부분이 좌우될 수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는 대학 자체의 경영원리에 의거하여 그 입지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상 정부차원의 정책을 통하여 그 입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국·공립대학은 입지결정요인의 조사·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정부정책은 그 입지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효과만을 가지게 되는 민간기업의 본사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대학기능의 경우는 그 특성상 지방소재 대학의 육성을 통하여 지방의 대학 중추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권 소재 명문대학의 지방이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기업본사기능의 입지결정 요인

1)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유리한 요인

기업본사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은 설문조사방식에 의존하였다. 즉, 총 65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2002년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우편을 통한 설문지 발송과 회송, 팩스를 통한 설문지 발송과 회송, 전화모니터링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 기업체는 본사를 이전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본사를 이전한 경험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설문내용으로 조사하였는데 총 122개 업체가 응답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기업본사의 현재 입지와 관련한 유리한 요인과 불리한 요인, 둘째, 기업본사의 이전과 관련한 이전사유, 이전경로, 지방이전 애로요인, 셋째, 향후 기업본사의 지방분산과 관련한 분산촉진요인, 이전 선호지역과 선호사유, 이전가능 기능 등이 그것이다.

< 설문조사 개요 >

- 설문조사 대상 : 표본수 650개
 - 일반기업체 500개 사
(본사이전 경험이 없는 기업 중 매출액 상위 500개 기업)
 - 본사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체 150개 사
(본사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상위 150개 기업)

- 설문조사 응답결과 : 응답자수 122개(응답률 18.8%)
 - 일반기업체 중 91개 사
 - 본사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체 중 31개 사
 - ※ 설문조사 결과, 회사연감 자료에서와는 달리 일반기업체 중에서도 본사를 이전한 기업이 존재하여 응답업체 중 실제로 본사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체는 60개 사로 집계됨

○ 설문응답업체의 분포

구 분	수도권	지 방	계
본사 이전 경험 없는 기업	38	24	62
본사 이전 경험 있는 기업	41	19	60
계	79	43	122

- 설문조사 시기 및 방법
 - 제1차 조사
 - 조사시기 : 2002. 7. 25~8. 25
 - 조사방법 : 우편을 통한 설문지발송과 회송 및 전화모니터링 병행
 - 제2차 조사
 - 조사시기 : 2002. 8. 27~9. 7
 - 조사방법 : 팩스를 통한 설문지발송과 회송 및 전화모니터링 병행

설문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표 4-1>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본사들이 현재의 입지에 대하여 구입·판매 등 영업활동, 지점·공장 등 회사전체의 관리, 교통·생활환경, 관련업종의 집중 등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본사의 입지에서 영업활동, 회사전체 관리와 교통 및 생활환경, 관련업종의 집중 등이 주요한 입지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표 4-1>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유리한 요인

설문문항	응답구분	복수응답(%)			1순위 응답(%)		
		수도권	지 방	전 체	수도권	지 방	전 체
① 구입·판매 등 영업활동		17.7	20.0	18.5	27.8	35.7	30.6
② 자금조달 등 금융거래		12.0	5.0	9.7	13.9	0.0	9.1
③ 우수한 인재의 확보		7.0	3.8	5.9	6.3	7.1	6.6
④ 정부·행정기관 등과의 접촉		8.2	2.5	6.3	3.8	0.0	2.5
⑤ 국제적 업무활동		3.8	0.0	2.5	6.3	0.0	4.1
⑥ 기술정보의 입수		0.6	1.3	0.8	1.3	0.0	0.8
⑦ 관련단체·업계와의 정보교환·수집		12.7	2.5	9.2	11.4	2.4	8.3
⑧ 지점·공장 등 회사전체의 관리		8.9	26.3	14.7	7.6	40.5	19.0
⑨ 교통·생활환경		15.2	13.8	14.7	16.5	9.5	14.0
⑩ 관련업종의 집중		10.1	16.3	12.2	3.8	2.4	3.3
⑪ 대학·연구시설의 집적		0.0	1.3	0.4	0.0	0.0	0.0
⑫ 기업이미지		3.8	7.5	5.0	1.3	2.4	1.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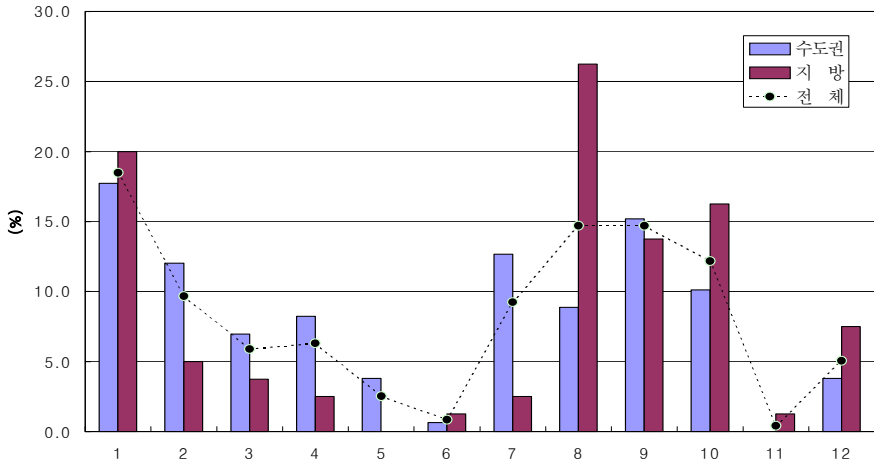
주 : 1. 전체 응답업체(복수응답 기준) 238개 사 중 수도권 소재 기업은 158개 사, 지방 소재 기업은 80개 사임.

2. 1순위 응답업체는 총 121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기업 79개 사, 지방 소재 기업 42개 사임.

이러한 기업본사 현재입지에서의 유리한 요인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의 경우 구입·판매 등 영업활동, 교통·생활환경, 관련단체·업계와의 정보교환 및 수집 등에 있어서 현재의 본사입지가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교통·생활환경이 현재 기업본사 입지의 유리한 점이라고 평가한 경우는 대부분 서울시내의 중구 등 강북지역에서 강남구 등 강남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들이므로 나타난다. 지방에 기업본사를 둔 기업의 경우는 지점·공장 등 회사전체의 관리, 구입·판매 등 영업활동, 그리고 관련업종의 집중의 순서로 현재의 본사입지가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유리한 요인에서 수도권과 지방간에 그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요인을 보면,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단체·업계와의 정보교환·수집, 자금조달 등 금융거래, 정부·행정기관 등과의 접촉, 우수한 인재의 확보 면에서 수도권의 경우 지방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지방의

<그림 4-1>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유리한 요인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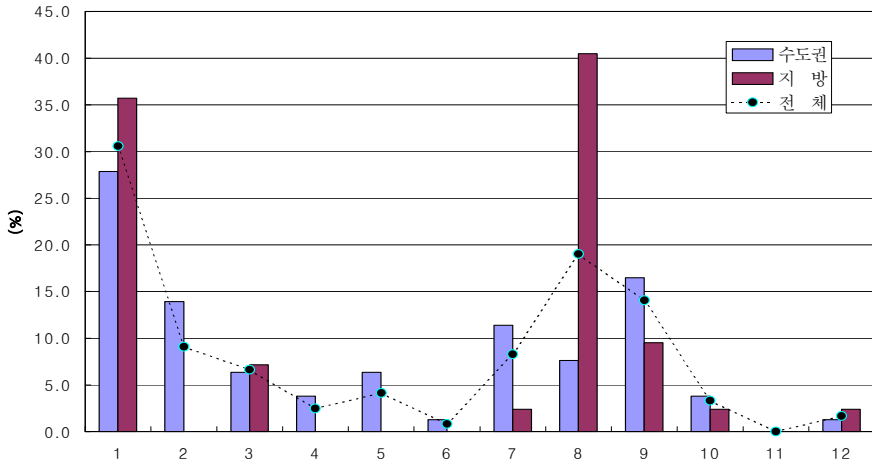
주 : 횡축은 앞의 표에서 설문문항을 나타냄.
 자료: <표 4-1>.

경우는 지점·공장 등 회사전체의 관리, 관련업종의 집중 등에 대해 수도권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유리한 요인에서 1순위로 선정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림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는 구입·판매 등 영업활동, 지점·공장 등 회사전체의 관리, 교통·생활환경 등에서 현재의 본사입지가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간에서는 항목별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구입·판매 등 영업활동, 교통·생활환경에 이어 자금조달 등 금융거래와 관련단체·업계와의 정보교환·수집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지방의 경우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점·공장 등 회사전체의 관리와 구입·판매 등 영업활동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에서도 특히, 자금조달 등 금융거래, 정부·행정기관 등과의 접촉, 국제적 업무활동, 관련단체·업계와의 정보교환·수집 등과 같은 입지요인에 대해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린 반면, 지방의 경우에는 지점·공장 등 회사전체의 관리와 구입·판매 등 영

<그림 4-2>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유리한 요인 : 1순위 응답



주 : 횡축은 앞의 표에서 설문문항을 나타냄.
 자료: <표 4-1>.

업활동 등과 같은 입지요인에 대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수도권에 각종 정보와 정부기능, 금융기능 등이 고도로 집적되어 있음으로써 기업본사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관련업종의 집중으로 인한 구매·판매 등 영업활동이 용이하거나 공장 등이 입지하여 회사전체의 관리가 손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기업본사가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빠른 속도로 지식화·정보화하고 있는 현대의 산업흐름 속에서 본사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추기능이 고도로 집적되어 있는 수도권에 각종 정보와 자금은 더욱 집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업본사 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불리한 요인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유리한 요인과 함께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불리한 점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본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설문문항은 기업본사의 입지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불리한 요인에 관한 설문에서도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유리한 요인에 관한 설문에서와 같은 설문문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체 본사의 현재입지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특별히 불리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교통·생활환경,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통여건, 생활환경,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 등에서 기업들이 현재의 본사입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현재의 기업본사 입지와 관련한 애로사항에서 수도권 소재 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간에 명확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응답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42.6%가 특별히 불리한 점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지방의 경우 설문

<표 4-2>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불리한 요인

설문문항	응답구분	복수응답(%)			1순위 응답(%)		
		수도권	지 방	전 체	수도권	지 방	전 체
① 구입·판매 등 영업활동		6.2	10.8	8.4	6.5	21.6	13.3
② 자금조달 등 금융거래		6.2	5.4	5.8	4.3	5.4	4.8
③ 우수한 인재의 확보		4.9	21.6	12.9	6.5	32.4	18.1
④ 정부·행정기관 등과의 접촉		2.5	12.2	7.1	4.3	16.2	9.6
⑤ 국제적 업무활동		7.4	14.9	11.0	6.5	8.1	7.2
⑥ 기술정보의 입수		2.5	1.4	1.9	2.2	0.0	1.2
⑦ 관련단체·업계와의 정보교환·수집		7.4	13.5	10.3	4.3	8.1	6.0
⑧ 지점·공장 등 회사전체의 관리		19.8	2.7	11.6	32.6	0.0	18.1
⑨ 교통·생활환경		25.9	9.5	18.1	17.4	2.7	10.8
⑩ 관련업종의 부재		11.1	2.7	7.1	8.7	2.7	6.0
⑪ 대학·연구시설의 미비		4.9	5.4	5.2	4.3	2.7	3.6
⑫ 기업이미지		1.2	0.0	0.6	2.2	0.0	1.2
특별히 불리한 점이 없음 ¹⁾		42.6	0.0	27.9	41.8	0.0	28.4
합 계 ²⁾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응답비율은 응답자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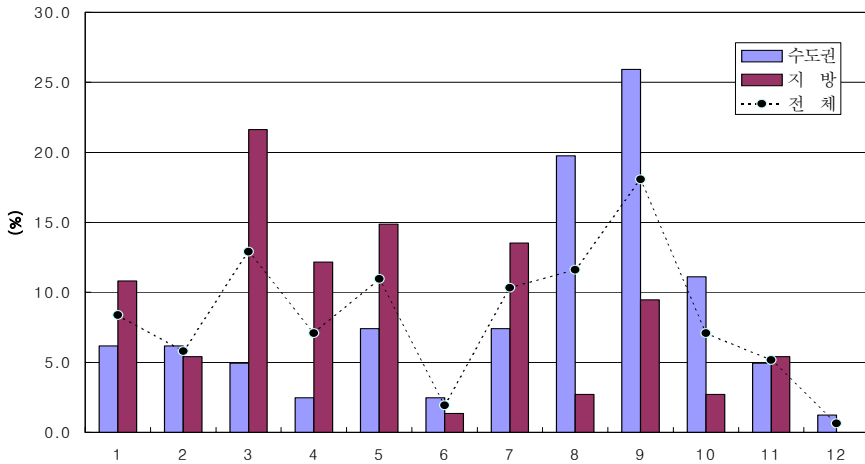
2. 문항 ①에서 ⑫까지의 합계, 즉 불리한 요인 있다고 응답한 기업을 기준으로 함.

응답한 기업의 대부분이 현재 본사입지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본사의 현재 입지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교통·생활환경이 기업본사의 현재 입지에서 가장 불리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이어 지점·공장 등 회사전체의 관리, 관련업종의 집적 부재 등이 불리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는 달리 우수한 인재 확보상의 어려움이 현재의 본사입지와 관련하여 가장 불리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이어 국제적 업무활동, 관련단체·업계와의 정보교환·수집, 정부·행정기관 등과의 접촉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본사의 현재 입지와 관련한 설문문항간 응답비율에서 기업본사가 입지해 있는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과 지방간에 가장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요인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지점·공장 등 회사전체의 관리로 나타나고 있다. 즉, 수도권의 경우 지점·공장 등 회사전체

<그림 4-3>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불리한 요인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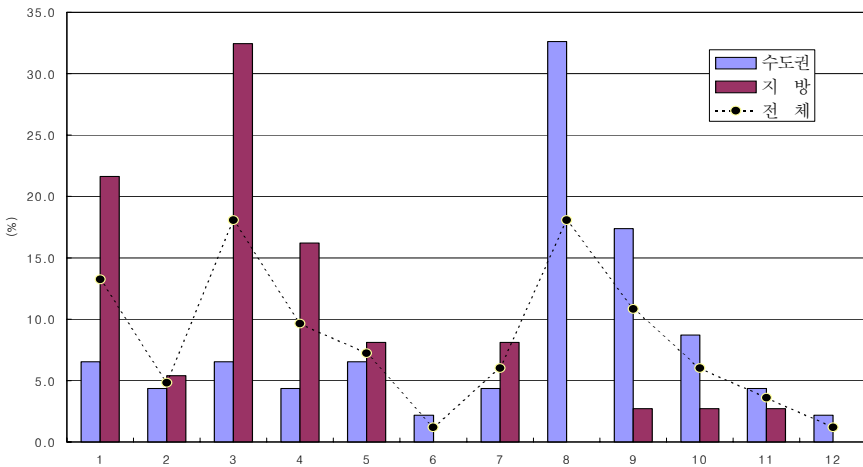


주: 횡축은 앞의 표에서 설문문항을 나타냄.
자료: <표 4-2>

의 관리측면, 교통·생활환경, 관련업종의 집적 부재 등에 있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지방의 경우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 정부·행정기관 등과의 접촉, 국제적 업무활동, 그리고 관련단체·업체와의 정보교환·수집 등에 있어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 본사의 현재 입지와 관련하여 불리한 요인 중 1순위로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도, 수도권의 경우 특별히 불리한 점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42%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간에 뚜렷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 본사의 현재 입지와 관련하여 불리한 점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가 <그림 4-4>에 제시되어 있는데, 수도권에 본사가 소재하는 기업의 경우 지점·공장 등 회사전체의 관리, 교통·생활환경 등에 있어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지방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4>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유리한 요인 : 1순위 응답



주 : 횡축은 앞의 표에서 설문문항을 나타냄.
 자료: <표 4-2>.

이에 비해 지방에 본사가 소재하는 기업의 경우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 구입·판매 등 영업활동, 정부·행정기관 등과의 접촉 등에 있어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지방소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거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사 현재 입지의 유리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수도권에 본사가 소재하는 기업의 경우 인구 및 각종 기능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여건 및 생활환경의 악화, 지방에 본사가 소재하는 기업의 경우는 우수교육기능의 부족으로 인한 인재확보의 어려움, 정부·행정기관의 중앙 집중으로 인한 업무상의 어려움 등이 기업의 본사입지와 관련하여 기업경영에서 주요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업본사 지방소재 기업의 서울지사의 기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기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금융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본사를 지방에 두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수도권에 대부분의 경우 지사나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¹⁾. 이와 관련하여 본사를 지방에 두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설치된 지사나 지점 또는 사무소의 기능을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서울지사나 지점 또는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기업본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표 4-3>에 제시되어 있는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본사가 지방에 입지해 있는 기업체 상당수의 경우에서 서울지사나 지점 또는 사무소가 영업기획·관리,

11) 설문조사 집계 결과, 기업본사를 이전한 경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본사를 지방에 두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지사나 지점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위치는 대부분이 서울이고, 극히 일부의 경우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에 지사나 지점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과정에서 일부기업들은 법인등기상으로는 지방본사가 본사로 되어 있을 뿐 실제 본사기능은 서울지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지를 서울지사로 보내겠다는 연락을 해오기도 하였다.

<표 4-3> 본사 지방소재 기업의 서울지사[지점·사무소]의 기능

설문문항	응답구분	비이전업체(%)	이전업체(%)	전 체(%)
① 총괄기획·경영		14.3	8.6	11.9
② 재무·회계·총무		16.3	20.0	17.9
③ 영업기획·관리		30.6	40.0	34.5
④ 국제업무		26.5	20.0	23.8
⑤ 총괄업무관리(생산·구매·유통관리)		2.0	2.9	2.4
⑥ 광고·선전·조사		6.1	5.7	6.0
⑦ 정보처리·시스템개발		0.0	0.0	0.0
⑧ 기술·연구개발		2.0	2.9	2.4
⑨ 교육·연수		2.0	0.0	1.2
합 계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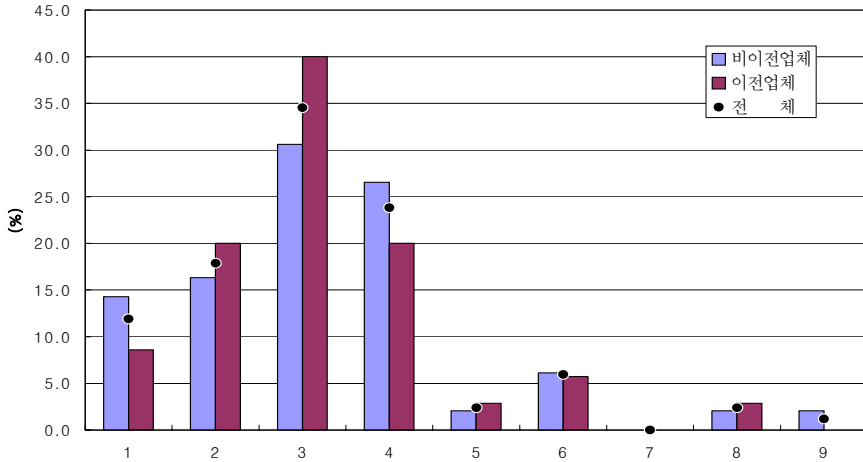
주 : 총 84개 응답업체(지방 소재 기업, 복수응답 기준) 중 최근 10년 사이에 기업본사 이전경험이 없는 업체(비이전업체)는 49개 사, 기업본사 이전경험이 있는 업체(이전업체)는 35개 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국제업무, 재무·회계·총무 등과 같은 기업경영상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10년 사이에 본사를 이전한 경험의 유무에 따라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지사나 지점 또는 사무소의 기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응답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기업본사를 이전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업기획·관리기능, 재무·회계·총무기능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최근 10년 사이에 본사이전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이전경험이 있는 기업에 비하여 국제업무기능, 총괄기획·경영기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결과로부터 기업체 본사가 지방에 입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서울지사나 지점 또는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러한 서울지사나 지점 또는 사무소가 기업본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중추기능 중 기업본사 기능은 겉으로 드러난 경우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4-5> 본사 지방소재 기업의 서울지사[지점·사무소]의 기능



주 : 횡축은 앞의 표에서 설문문항을 나타냄.
 자료: <표 4-3>.

3. 기업본사의 입지이전 결정요인

1) 기업본사의 이전사유

기업본사 현재 입지의 유리한 요인과 불리한 요인에 관한 설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본사의 입지결정요인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기업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주 요인은 무엇인지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하는 사유로서는 사무실 공간의 확장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본사기능의 집약화, 영업활동의 강화,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기업본사를 어디로 이전하였느냐에 따라 이전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전유형에 따라 이전사유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수도권 내에서 기업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공간의 확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에 이어 본사기능의

<표 4-4> 기업본사의 이전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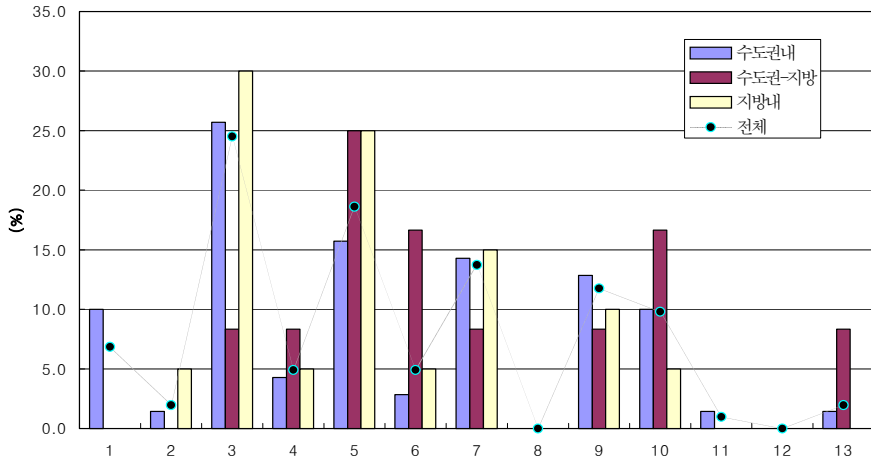
설문항목	응답구분	복수응답(%)				1순위 응답(%)			
		수도권내	수도권 →지방	지방내	전 체	수도권 내	수도권 →지방	지방내	전 체
① 높은 땅값과 사무실 임대료		10.0	0.0	0.0	6.9	11.4	0.0	0.0	7.7
② 교통혼잡 등 도시환경		1.4	0.0	5.0	2.0	0.0	0.0	0.0	0.0
③ 사무실 공간확장		25.7	8.3	30.0	24.5	45.7	14.3	60.0	44.2
④ 사무실 공간 축소		4.3	8.3	5.0	4.9	2.9	14.3	0.0	3.8
⑤ 본사기능의 집약화		15.7	25.0	25.0	18.6	14.3	28.6	10.0	15.4
⑥ 주력공장으로의 이전		2.9	16.7	5.0	4.9	5.7	14.3	0.0	5.8
⑦ 영업활동의 강화		14.3	8.3	15.0	13.7	11.4	14.3	10.0	11.5
⑧ 인건비·교통비·복리후생비 등의 증가		0.0	0.0	0.0	0.0	0.0	0.0	0.0	0.0
⑨ 기업의 이미지 제고		12.9	8.3	10.0	11.8	5.7	0.0	20.0	7.7
⑩ 관련 업종의 집중		10.0	16.7	5.0	9.8	2.9	14.3	0.0	3.8
⑪ 종업원의 주거·문화환경 개선		1.4	0.0	0.0	1.0	0.0	0.0	0.0	0.0
⑫ 대학·연구시설의 집적		0.0	0.0	0.0	0.0	0.0	0.0	0.0	0.0
⑬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유치열의		1.4	8.3	0.0	2.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본사를 이전한 경험이 있는 응답기업체를 기준으로 함.

집약화, 영업활동의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기능의 집약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주력공장으로의 이전, 관련업종의 집중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지방 내에서의 본사이전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에서의 본사이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무실 공간의 확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뒤이어 본사기능의 집약화, 영업활동의 강화 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기업본사 이전유형에서 수도권에서 수도권 내로 이전하는 경우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기업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서 설문항목간에 응답비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비율에서 두 유형간 편차가 큰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내에서의 본사이전의 경우 높은 땅값과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공간 확장, 영업활동의 강화,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준다. 그런 반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기업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력공장으로의 이전, 관련업종의 집중, 지자체의 적극

<그림 4-6> 기업본사의 이전사유 : 복수응답



주 : 횡축은 앞의 표에서 설문문항을 나타냄.
 자료: <표 4-4>.

적인 지원과 유치열의 등에서 상대적으로 그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수도권 내에서의 기업본사 이전의 경우에는 높은 땅값과 사무실임대료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치열의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전과 관련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은 기업본사가 고도로 집적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기업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인데,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기업체 본사의 지방이전은 주력공장이 입지해 있거나 관련업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본사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유치열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업본사의 이전경로와 이전기능

기업본사의 이전사유와 함께 기업이 본사를 이전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전선(移轉先)을 조사해 본 결과,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기업의 69.1%가 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가 전체 응답기업의 56.4%를 차지한다. 이는 앞의 중추기능 지역간 분포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기업본사를 이전한 경우는 대부분 수도권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이며, 지방 내에서의 기업본사 이전은 주로 동일시·도 내에서의 이전인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서울시 내에서의 이전은 주로 강북지역에서 강남지역으로 기업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기업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성남(분당), 고양(일산), 과천 등 신도시지역이 선호되고 있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지방으로 기업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지역이 선호되고 있으며, 지방 내 시·도간 이전에서는 대전과 창원지역이 기업본사 입지지역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5> 기업본사의 이전경로

구 분		업체수	비율(%)
수도권내 이전	소 계	38	69.1
	서울 → 서울	31	56.4
	서울 → 경기	5	9.1
	경기 → 경기	1	1.8
	경기 → 서울	1	1.8
수도권 → 지방	소 계	7	12.7
	서울 → 지방	6	10.9
	경기 → 지방	1	1.8
지방내 이전	소 계	10	18.2
	동일 시·도내 이전	8	14.5
	타 시·도간 이전	2	3.6
지방 → 수도권		0	0.0
합 계		55	100.0

주 : 기업본사 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60개 사 중 유효 응답업체 55개 사 기준임.

<표 4-6> 기업본사 이전시의 이전형태

(단위 : %)

구 분	수도권내 이전	수도권 → 지방	지방내 이전	전 체
본사 전체 이전	89.5	28.6	90.0	81.8
일부 기능 이전	10.5	71.4	10.0	18.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이러한 지역간 기업본사 이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체의 경우 본사이전 시에 주로 본사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표 4-6>에서 보듯이 본사를 이전한 경험이 있는 기업에서 본사기능 전체를 이전한 경우가 82% 정도, 본사기능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가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본사를 어디로 이전하였느냐, 즉 본사의 지역간 이전유형에 따라서는 본사기능 이전경향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이나 지방 내에서의 이전인 경우 약 90% 정도가 본사기능 전체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기능을 이전한 경우에는 71% 이상이 본사기능의 일부만을 이전하였고 본사 전체를 이전한 경우는 28.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그 대부분이 서울에 지사나 지점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고 이러한 서울지사[지점·사무소]가 실질적인 본사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앞에서의 조사결과와 기업본사 이전형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연관지어 볼 때, 기업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여전히 상당부분의 본사기능은 서울에 잔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사기능의 완전한 지방이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본사이전에서 본사기능 전체가 아닌 본사기능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에서 주로 어떠한 기능을 이전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대체로 교육·연수, 정보처리·시스템개발, 총괄기획·경영, 생산·구매·유통의 총괄적 관리 등과 같은 기능이 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지역간 본사이전 유형에 따라서 이전기능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수도권 내 이전에서는 영업기획 및 관리, 생산·구매·유통의 총괄적 관리 등

<표 4-7> 본사기능 일부이전시의 이전기능

(단위 : %)

설문문항	응답구분			
	수도권내 이전	수도권 → 지방	지방내 이전	전 체
① 총괄기획·경영	12.5	15.0	33.3	16.1
② 재무·회계·총무	12.5	10.0	0.0	9.7
③ 영업기획·관리	25.0	0.0	33.3	9.7
④ 국제업무	0.0	5.0	0.0	3.2
⑤ 총괄업무관리(생산·구매·유통관리)	25.0	10.0	0.0	12.9
⑥ 광고·선전·조사	12.5	10.0	0.0	9.7
⑦ 정보처리·시스템개발	12.5	20.0	0.0	16.1
⑧ 기술·연구개발	0.0	10.0	0.0	6.5
⑨ 교육·연수	0.0	20.0	33.3	16.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의 기능이전이 대중을 차지하며, 지방 내에서의 본사기능 일부이전의 경우 총괄 기획·경영, 영업기획·관리, 교육·연수 등의 일부 본사기능 이전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기능의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교육·연수, 정보처리·시스템개발 등과 같이 본사의 핵심기능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기능의 이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로부터 수도권 내에서의 본사기능 이전과 지방 내에서의 본사기능 이전과 같은 동일지역 내 이전에서는 일부 본사기능상의 수평적 분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본사기능 이전 시에는 본사기능 중 부차적인 기능만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3) 기업본사의 지방이전 애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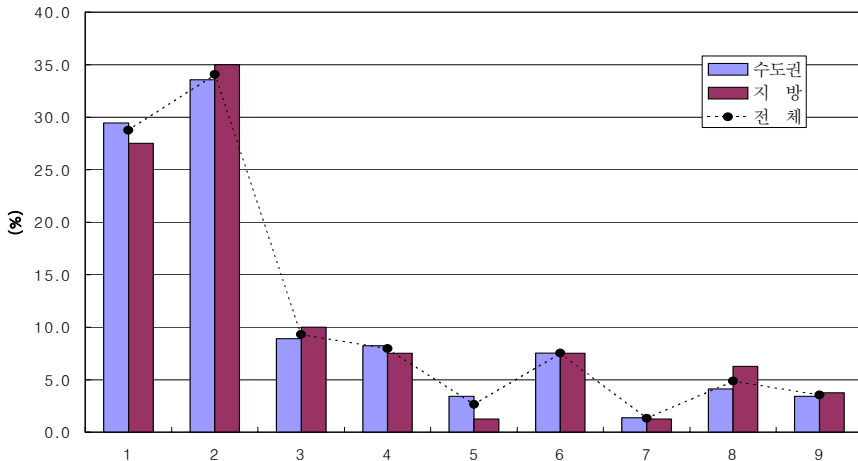
이와 같이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설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교육·연수, 정보처리·시스템개발 등과 같은 부차적인 본사기능만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본사를 두더라도 서울지사[지점·

<표 4-8>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애로요인

설문문항	응답구분	복수응답(%)			1순위 응답(%)		
		수도권	지 방	전 체	수도권	지 방	전 체
① 국가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		29.5	27.5	28.8	49.3	50.0	49.6
② 각종 정보의 수도권 집중		33.6	35.0	34.1	28.8	35.0	31.0
③ 각종 권한의 중앙집중		8.9	10.0	9.3	4.1	5.0	4.4
④ 양호한 교육기관의 부족		8.2	7.5	8.0	4.1	0.0	2.7
⑤ 주거환경의 불량		3.4	1.3	2.7	2.7	0.0	1.8
⑥ 도로 철도 등 인프라 부족		7.5	7.5	7.5	6.8	5.0	6.2
⑦ 농지전용 등 토지이용규제		1.4	1.3	1.3	0.0	2.5	0.9
⑧ 높은 물류·통신비용		4.1	6.3	4.9	2.7	2.5	2.7
⑨ 문화·여가공간의 부족		3.4	3.8	3.5	1.4	0.0	0.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무소]가 실질적인 본사기능을 수행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애로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설문조사결과에 의할 경우 <표 4-8>와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체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각종 정보의 수도권 집중과 국가행정기관의 수도

<그림 4-7>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애로요인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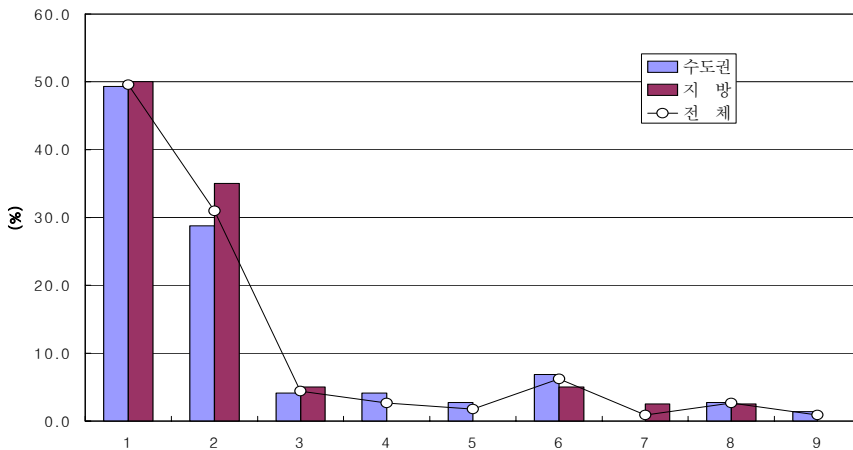


주 : 횡축은 앞의 표에서 설문문항을 나타냄.
 자료: <표 4-8>.

권 집중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복수응답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응답자의 34.1%가 각종 정보의 수도권 집중을 본사 지방이전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으며, 이에 이어 국가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이 전체 응답자의 28.8%를 차지함으로써 이 두 요인이 전체의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든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이든 그 응답비율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 국가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과 각종 정보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 요인이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애로요인 중 1순위 응답비율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응답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비해서는 약간 다른 결과가 관측된다. 즉, <그림 4-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기업의 약 50% 정도가 국가 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이 기업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가장 큰 애로요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이어 전체 응답기업의 31% 정도가 각종 정보의 수도권 집중을 기업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림 4-8>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애로요인 : 1순위 응답



주 : 횡축은 앞의 표에서 설문문항을 나타냄.
 자료: <표 4-8>.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가행정기관, 즉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종 공공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그 주변에 집중됨으로써 각종 정보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에 민간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을 위해서는 국가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에서의 지방이전이 선행되어야만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라 하겠다.

4) 기업본사의 지방이전 지원조치

정부는 현재 기업본사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각종 법적, 제도적 지원수단을 시행하고 있거나 강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對)정부 창구로서 건설교통부 내에 지방이전지원센터¹²⁾를 설치해 놓고 있다. 이러한 지방이전지원센터를 통하여 기업체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해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조치를 중심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과세이연 등 국세를 통한 대폭적인 지원이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거나 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표 4-9>와 <그림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수응답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업본사가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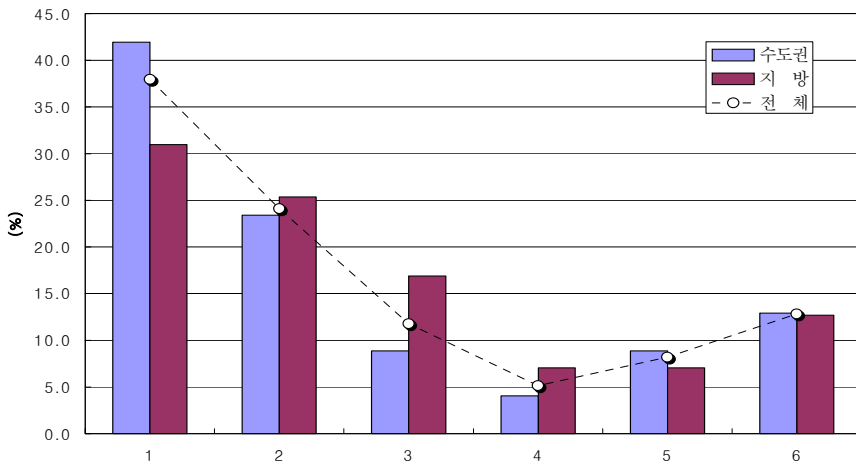
12) 정부는 현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교통부에 『지방이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이전기업에게 인·허가절차 안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원센터는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건교부 지역정책과장을 부단장으로 하여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4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센터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허가절차의 안내와 인·허가에 대한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협조 요청, 한국토지공사를 통한 종전대지 매입의 적극 유도, 미분양 산업단지 등 입지대상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산업은행·산업기반기금 등의 자금융자 알선, 세계감면, SOC설치 등 각종 지원사항의 안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안내책자의 작성·비치 및 배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본사나 공장을 2002년말까지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원조건 완화, 지원시한 연장, 지자체로의 지원수단 이양 등을 통하여 지원시기를 연장하였거나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정부정책, 지원수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내 지방이전지원센터(http://www.moct.go.kr/DH/mct_hpg/mctpg_gp/jibang/jibang.htm)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4-9> 기업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수단의 효과

설문문항	응답구분	복수응답(%)			1순위 응답(%)		
		수도권	지 방	전 체	수도권	지 방	전 체
①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의 감면과 과세이연		41.9	31.0	37.9	73.0	52.8	65.7
② 재산세·종합토지세 취득세·등록세 등의 감면과 면제		23.4	25.4	24.1	9.5	22.2	14.1
③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장기저리 지원		8.9	16.9	11.8	3.2	11.1	6.1
④ 한국토지공사에 의한 이전부지의 매입		4.0	7.0	5.1	1.6	2.8	2.0
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배후도시개발권의 부여		8.9	7.0	8.2	3.2	0.0	2.0
⑥ 국가·지자체에 의한 진입도로 등 SOC시설 지원		12.9	12.7	12.8	9.5	11.1	1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권에 소재하든 지방에 소재하든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의 감면과 과세이연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응답결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조치로서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과세이연을,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의 경우 응답업체의 73%가 1순위로 꼽았고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 역시 52.8%가 1순위로 지목하고 있다.

<그림 4-9> 기업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수단의 효과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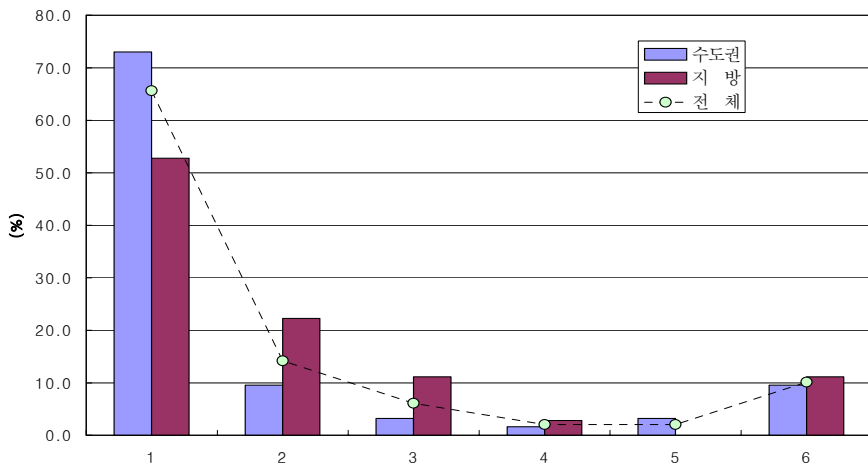


주: 횡축은 앞의 표에서 설문문항을 나타냄.
자료: <표 4-9>.

이에 이어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의 감면과 면제를 통한 지원이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국세 및 지방세를 통한 지원이 1순위 응답에서는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며 복수응답에서도 전체의 62% 정도를 차지함으로써 조세적 지원을 통하여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지자체에 의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지원,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장기저리 지원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본사가 어디에 입지해 있느냐에 따라 항목간에 응답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림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의 감면과 면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장기저리 지원 등에 있어서는 수도권 소재기업보다는 지방 소재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여 지방소재기업의 경우 지방세 및 금융측면에서의 지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수도권에 본사가 소재하는 기업의 경우 특히,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의 감면과 과세이연에서 응답비율이 높게 나

<그림 4-10> 기업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수단의 효과 : 1순위 응답



주 : 횡축은 앞의 표에서 설문문항을 나타냄.
자료: <표 4-9>.

타나고 있으며,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배후도시개발권의 부여에 대해서도 본사가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특히,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 국세차원에서의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배후도시개발권의 부여 등과 같은 유인이 주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상의 지원, 공공부문에 의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도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뒤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동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원조치들은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원정도를 강화할 경우 효과가 어느 정도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세·금융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수단과 함께 국가차원에서의 좀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향후 기업본사의 지방분산 동향

1) 기업본사의 지방분산 촉진요인

향후 기업본사의 지방분산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수단의 고도화, 고속전철 등 교통수단의 발달, 정부의 권한과 역할 축소라는 시대적 흐름을 중심으로 기업본사의 지방이전 촉진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0>과 <그림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응답업체의 64% 정도가 정보통신수단의 고도화를 제1순위로 선택하고 있다. 이에 이어 고속전철 등 교통수단의 발달에 대한 1순위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정부의 권한과 역할 축소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비율이 12% 정도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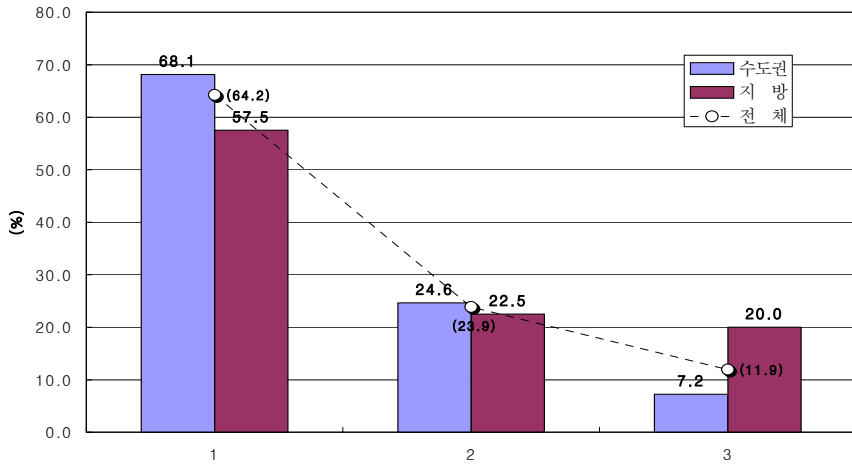
기업본사의 지방이전 촉진요인에 대한 1, 2순위 복수응답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1순위 응답에서와 같은 추세를 보이지만, 지역에 따라 서로 다

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수도권에 본사가 입지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보통신수단의 고도화가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의 경우에는 고속전철 등 교통수단의 발달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결과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권한과 역할 축소에 대해서도 수도권의 경우 그 응답비율이 19% 정도에 불과하나 지방의 경우 30.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서 중앙정부와 관련한 업무상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표 4-10> 향후 기업본사의 지방이전 촉진요인

설문문항	응답구분	복수응답(%)			1순위 응답(%)		
		수도권	지 방	전 체	수도권	지 방	전 체
① 정보통신수단의 고도화		42.3	33.3	39.1	68.1	57.5	64.2
② 고속전철 등 교통수단의 발달		38.7	35.9	37.7	24.6	22.5	23.9
③ 정부의 권한과 역할 축소		19.0	30.8	23.3	7.2	20.0	11.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4-11> 향후 기업본사의 지방이전 촉진요인 : 1순위 응답



주: 횡축은 앞의 표에서 설문문항을 나타냄.
자료: <표 4-10>.

이러한 조사결과로부터 정보통신수단의 고도화로 인하여 수도권 일극 지향적인 기업본사 입지가 많이 완화되는 가운데 고속전철 등이 개통되고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 등 공공부문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면, 기업체 본사의 지방분산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즉, 정보통신수단의 고도화는 정보취득을 위한 지리적, 물리적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비록 현재와 같이 각종 정보의 수도권 집중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하더라도 지방입지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속전철 개통 등 교통수단의 고속화는 기업입지와 관련하여 물류·수송시간의 대폭적인 감소를 가져와 기획, 경영, 생산, 연구 등 기업의 기능별 분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반면 지금과 같이 경제에서 정부 등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투명성과 공개성을 갖지 못한다면, 대면접촉을 통한 정보취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이는 국가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입지 주변에 민간의 중추기능이 밀집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수단의 고도화가 기업입지의 지방분산에 순기능을 가지지만 온라인 상으로의 정보취득이 불안전하고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의 고속화는 생산 등과 같은 부차적 기능의 공간적 분화를 통하여 생산기능 등과 같은 기업의 일부기능만 지방입지가 확대되는 제한적인 효과밖에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본사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즉 국가행정기관의 지방분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통신수단의 고도화와 교통수단의 고속화는 국가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에 중요한 하부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본사 이전의 선호지역

설문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체 본사의 입지지역으로서 가장 선호되는 지역은 수도권이며, 다음으로 충청권과 영남권인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기업본사의 현재 분포를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수도권 집중구조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표 4-11>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응답업체의 58% 정도, 충청권의 경우는 18%, 영남권의 경우 15% 정도가 본사 입지지역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본사의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현재 입지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충청권에 대한 입지선호가 높으며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는 영남권이 본사입지지역으로 선호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호남권보다 오히려 강원지역을 본사입지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리적 근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재기업의 경우 충청권과 호남권에 대한 선호도가 서로 비슷하며 강원지역에 대한 선호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사이전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입지선호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이전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과 인접 충청권에 대한 본사입지로서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본사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의 본사입지 선호도는 수도권에 63%, 충청권 18.5%, 호남권 11.1%, 영남권 7.4%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수도권 근접지역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본사이전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본사입지의 선호도는 수도권에 54.5%, 영남권 21.2%, 충청권 18.2%, 강원지역 6.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1> 향후 기업본사 입지의 선호지역

(단위 : %)

구 분	수도권소재업체	지방소재업체	비이전업체	이전업체	전 체
수도권	64.4	40.0	54.5	63.0	58.3
충청권	20.0	13.3	18.2	18.5	18.3
호남권	2.2	13.3	0.0	11.1	5.0
영남권	8.9	33.3	21.2	7.4	15.0
강원권	4.4	0.0	6.1	0.0	3.3
지 방	35.6	60.0	45.5	37.0	41.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이 같이 실제로 본사를 이전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본사입지로서 수도권과 그 인접지역을 더욱 선호한다는 것은 향후 기업본사의 수도권 집중성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주요 입지선호지역간 선호요인 비교

향후 기업본사 입지의 선호지역과 함께 입지선호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수도권과 지방간에 그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수도권에 인접한 일부 충청지역에 대한 입지선호요인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경우는 입지선호요인으로서 거대한 시장, 국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집중으로 인한 각종 정보와 자금의 집중, 국제교류기반의 충실, 고급인재의 집적, 교통 및 생활여건의 양호함 등이 지목되고 있다. 반면에 지방의 경우는 대체로 주력공장과의 업무연계가 입지선호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다. 지방에서도 충청지역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일부 정부기능의 입지, 교통·지리상 국토의 중심, 장래의 발전 가능성 등이 입지선호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수도권에서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경우, 첫째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중심으로서 인구집중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크고, 둘째 인구집중, 주요 사업현장, 기업 등의 집중으로 고객 영업활동 및 관련업계간 정보 등의 교류가 용이하며, 셋째 국가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의 집중으로 인해 각종 정보와 자금이 집중되어 있고, 넷째 인천국제공항과의 근접, 각종 국제교류시설의 집적 등으로 국제교류 및 관련업무의 처리가 용이하다는 것이 주요 입지선호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의 경우에는 국제공항의 입지로 인해 해외진출, 국제물류거점으로서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류가 용이하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여 관련업종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 입지선호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는, 수도권서울과의 연접으로 인해 서울이 갖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잘 확충되어 있으며, 고급 인재의 확보가 용이하고, 관련업계의 집중으로 정보 및 기술교류가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의 인접, 우리나라 국제비즈니스센터인 서울과의 인접으로 국제교류활동이 용이하고, 종업원들의 주거여건이 양호하며, 물류거점으로서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입지선호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로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지역이 기업본사 입지지역으로 선호되고 있다.

② 지 방

지방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주력공장과의 업무연계 등을 위하여 주력공장 소재지로의 본사이전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제2의 대도시인 부산의 경우는 국제적 항구도시라는 점이 해운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업종의 본사입지 선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에는 일부 정부기능의 대전입지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으로서 교통결절지역이라는 점이 입지선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의 집중, 교통편리, 물류중심지, 쾌적한 주거환경 등이 주요 입지선호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 교통이 편리하고 장래의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비교적 산업집적도가 높다는 이유로 천안이 지방 중에서는 기업본사의 입지지역으로 선호되고 있다. 또한 신흥 자동차공업도시라는 점에서 서산시가, 국토의 중앙지역으로 물류중심권이라는 점에서 청주가 기업본사의 입지지역으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본사 기능

이러한 입지선호지역, 입지선호요인과 함께 향후 기업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가능한 기능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1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데, 제1순위로 응답한 이전가능 본사기능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본사 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체나 그렇지 않은 기업체 공히 본사기능 전체의 지방이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즉, 본사의 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에서는 응답업체의 44% 정도가 본사 전체의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본사이전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는 그 비율이 29%에 불과하다. 그리고 본사 전체가 아닌 본사의 일부기능만을 지방으로 이전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에서도 본사 이전경험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확인한데, 본사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개발 기능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본사이전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기술·연구개발기능과 생산·구매·유통 등의 총괄적 관리기능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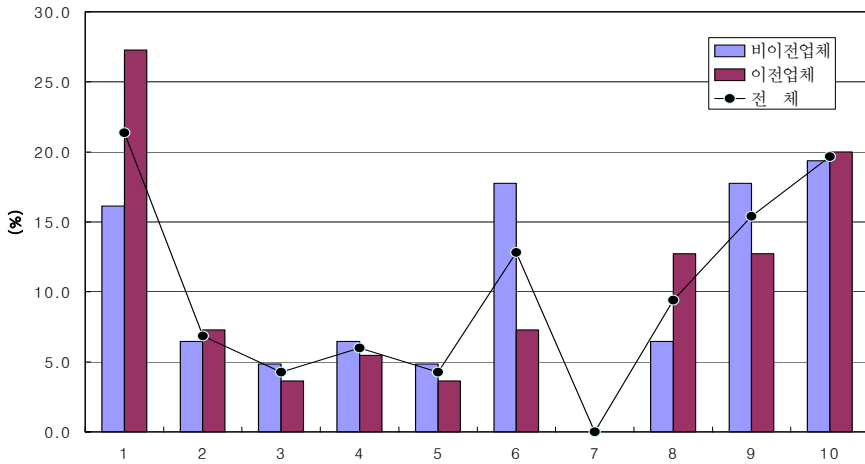
<표 4-12> 향후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본사 기능

설문문항	응답구분	복수응답(%)			1순위 응답(%)		
		비이전업체	이전업체	전 체	비이전업체	이전업체	전 체
① 본사 전체		16.1	27.3	21.4	29.0	43.8	36.5
② 총괄기획·경영		6.5	7.3	6.8	9.7	3.1	6.3
③ 재무·회계·총무		4.8	3.6	4.3	3.2	3.1	3.2
④ 영업기획·관리		6.5	5.5	6.0	6.5	6.3	6.3
⑤ 국제업무		4.8	3.6	4.3	3.2	6.3	4.8
⑥ 총괄업무관리(생산·구매·유통관리)		17.7	7.3	12.8	19.4	6.3	12.7
⑦ 광고·선전·조사		0.0	0.0	0.0	0.0	0.0	0.0
⑧ 정보처리·시스템개발		6.5	12.7	9.4	9.7	15.6	12.7
⑨ 기술·연구개발		17.7	12.7	15.4	19.4	9.4	14.3
⑩ 교육·연수		19.4	20.0	19.7	0.0	6.3	3.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수도권 소재 설문응답업체 기준이며,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거나 무응답인 경우는 제외함.

2. 총 77개 수도권 소재 응답업체 중 약 21%에 해당하는 16개 업체는 기업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거나 무응답.

<그림 4-12> 향후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본사 기능 : 복수응답



주 : 횡축은 앞의 표에서 설문문항을 나타냄.
 자료: <표 4-12>.

복수응답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서도 전체적으로는 본사기능 전체의 지방이전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본사이전 경험의 유무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기능에 차이가 나고 있다. 즉, <그림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본사기능 전체의 이전이 21.4%, 교육·연수기능의 이전이 19.7%, 기술·연구개발기능의 이전 15.4%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본사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는 본사기능 전체의 이전, 교육·연수기능의 이전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본사이전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능의 이전, 기술·연구개발, 생산·구매·유통에 대한 총괄업무관리기능의 이전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사기능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교육·연수기능과 기술·연구개발기능의 지방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장(章)에서 설명되듯이 기업 본사기능 중 정보처리·시스템개발, 교육·연수 기능 등이 동경도(東

京都) 구부(區部)외의 지역으로 분산입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금융업의 데이터처리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처리·시스템개발부문, 연구소 등 연구개발부문 등의 동경권 외로의 입지 분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업본사를 지방으로 옮긴다하더라도 기업본사기능 전체를 옮기는 경우는 21.4%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본사의 중추기능은 서울에 남겨둔 채 교육·연수 등 일부 부차적인 기능만을 지방으로 옮길 의사를 가지고 있어 기업본사의 수도권 고착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사이전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거나 무응답을 포함할 경우 기업본사기능 전체를 옮기는 경우는 16.9%에 불과하다.

5. 대학기능의 입지결정요인

중추기능 중 대학기능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해서는 아산신도시로의 서울소재 대학의 유치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 충남 천안시 백석·불당동, 아산시 탕정·음봉·배방면 일원의 총 876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아산신도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1단계 : 107만평 사업기간 '03~'08, 2단계 : 330만평 사업기간 '04~'15, 3단계 : 439만평 사업기간 '08~'20)로 나누어 개발될 예정인데 서울소재 사립대학의 유치가 개발계획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아산신도시로 대학기능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인 곳은 순천향대학교(서울소재 의과대학), 홍익대학교, 단국대학교, 연세대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¹³⁾며, 순천향대학교는 2002년 8월 9일자로 부지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¹³⁾.

13) 서울소재 주요 대학의 지방이전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산신도시개발팀(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합동) 실무진과 연구협의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대학기능 이전 의사를 표시한 서울소재 주요대학 관계자와 전화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별 이전기능을 보면, 순천향대학교의 경우 서울소재 의과대학 관련 연구 시설(약 7만평), 홍익대학교의 경우 서울소재 애니메이션관련 학부 및 세트장(약 18만평), 단국대학교의 경우 서울소재 동양학연구소 및 특수대학원(약 18만평), 연세대학교의 경우 서울소재 이공계열 및 관련연구시설(약 30만평)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대학들이 대학본부기능은 서울에 남겨둔 채 이공계를 중심으로 한 일부기능만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전사유는 대부분 서울도심에 소재하는 캠퍼스가 너무 비좁고 확장을 위한 부지확보 자체가 어렵거나 부지가격이 너무 비싸 용지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본부기능과의 업무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과의 통근·통학이 가능한 곳이 입지로 선호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내부의견 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중추기능의 실질적인 지방이전을 위해서는 상당한 난관을 극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부 지방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수도권에 젊은 층의 인구가 몰려있어 수도권이 최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방이전은 현실적인 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방소재 대학과의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6. 중추기능 입지분포·지배력·입지결정요인 분석결과의 종합

지금까지 중추기능 중 기업본사 기능을 중심으로 입지결정요인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국가행정기관, 즉 중앙정부 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 각종 정보와 자금이 수도권에 집적되는 결과를 낳고 이에 따라 기업본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중추기능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함께 앞 장(章)에서의 중추기능 분포의 지역간 비교·분석, 그에 따른 중추기능 영향력의 지역간 비교·분석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우리는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중추기능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의 도출에 앞서 위에서의 중추기능 입지결정요인 분석결과와 제3장에서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과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중추기능 입지분포 및 중심(重心)변화 분석결과의 종합

먼저 중추기능의 입지분포와 변화의 지역간 비교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최근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중추기능 입지의 지역간 분포에 다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간 입지분포 변화는 중추기능간에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본사를 기준으로 한 국가공공기관(政)의 수도권 입지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공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수도권 입지비중은 최근 10년 정도 사이에 100%에서 79%로 감소하는데 이는 정부대전청사로의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기인하는 것이다. 공기업 본사의 수도권 입지비중은 최근 10년 사이에 0.9% 정도 감소하는 것에 그쳐 현재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본사(産)의 수도권 집중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양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본사의 수도권 입지 지향성이 매우 높다는 것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즉, 100대 기업본사의 수도권 집중도는 최근 10년 사이에 94%에서 91%로 3%가 감소하지만 500대 기업본사의 수도권 집중도는 최근 10년 사이에 82.6%를 유지하여 변화가 없으며 3000대 기업본사의 수도권 집중도는 같은 기간 동안에 68.9%에서 71.9%로 3%가 증가한다.

대학기능(學)에 있어서는 주요 명문대학의 서울집중현상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어 대학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성이 매우 견고한 실정이다. 즉,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서울집중도는 1996년과 2001년 사이에 55%, 수도권의 경우는 65%로 수도권 입지규제에도 불

구하고 그 집중도에는 변화가 없다.

1990년대 이후의 이 같은 중추기능 입지분포의 변화는 중추기능 입지행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큰데, 중추기능별로 약간 다르지만 중추기능 입지의 수도권 지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국가공공기관(政)의 경우 특히 공기업 본사의 수도권 지향성이 높은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적 차원에서 일부기능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되었지만 대부분 청(廳)단위 기관이고 부처단위 기관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공기업 본사를 이전한 사례 18개 중 83%인 15개 본사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하였으며 지방(충청권)으로는 3개 본사만 이전한 데 불과하다. 그리고 경기도로 이전한 공기업 본사 15개 중 9개 본사가 분당, 평촌, 일산신도시로 이전하여 신도시에 대한 입지선호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대기업 본사(産)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입지분포변화가 서로 다르지만 수도권 집중성은 매우 높다. 즉, 최근 10년 사이에 본사를 이전한 7개 100대 기업본사 중 6개가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이고 1개 업체만이 본사를 지방(충청권)으로 이전하고 있다. 업종간에서는 통신, 금융, 보험업 등은 수도권 특히, 서울로의 입지향성이 매우 높고 제조업은 본사의 지방입지가 확대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증가한 100대 기업본사 중 금융·보험업 12개 기업본사 전체, 운수·창고·통신업 4개 기업본사 중 3개가 서울에 입지하며, 제조업체는 16개가 줄었지만 지방에서만 4개 기업본사가 늘어나고 있다. 500대 기업 중에서는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증가한 금융·보험업체 36개 사 중 35개사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방의 충청권에서 6개 제조업 본사가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에 3000대 기업본사 중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수도권 입지비중은 71.0%에서 85.6%로 증가하고 금융·보험업의 경우 79.0%에서 88.2%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 본사의 입지비중은 66.7%에서 44.4%로 크게 줄어들고 있어 3000대 기업본사의 수도권 입지강화는 통신, 금융·보험업 등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기능(學)의 경우 그 입지행태의 구조에 별다른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명문대학 입지의 수도권 집중성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에 별다른 변화없이 수도권 집중성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반경 20km권 이내의 지역에 중추기능이 밀집되어 있어 이 지역이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분포에서 핵심지역이 되고 있다. 즉, 과천과 수도권 신도시의 대부분이 포함되는 이 지역에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75%, 공기업 본사의 76%, 100대 기업본사의 83%, 20대 명문대학의 55%가 입지해 있다.

이러한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은 중추기능의 국토공간상 중심(重心) 변화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즉,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인구를 기준으로 한 국토공간상의 중심(重心)은 서울로부터 126km 지점에서 119km 지점으로 서울에 7km 정도 가까워지고 있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 국토공간상의 중심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방향으로 5.2km 정도 당겨지고 있다.

국가공공기관(政)의 국토중심점은 중추기능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앙행정기관은 서울로부터 떨어진 반면 공기업 본사의 국토중심점은 서울방향으로 약간 끌어당겨지고 있다. 대기업 본사(産)의 국토중심점 변화는 기업규모별로 약간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서울방향으로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100대 기업본사의 국토중심점은 서울에서 약간 멀어졌지만 여전히 수도권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500대, 1000대 기업본사의 국토중심점은 서울로 약 5km 정도 당겨졌고, 3000대 기업본사의 경우는 13km 정도 서울방향으로 이동하였다.

2) 중추기능 영향력 분석결과의 종합

최근 10년 사이에 이 같이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성과 지향성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중추기능에서의 수도권 흡인력이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력모형을 응용하여 지역간 상호작용에서의 수도권의 영향력 또

는 지배력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지역간 상호작용에서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공공기관(政)에 의한 지역간 상호작용에서 수도권 영향력은 전체의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그 흡인력이 막강한 실정이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대전청사로의 일부기능 이전에도 불구하고 1992년과 2000년 사이에 수도권 영향력의 감소는 0.4%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공기업 본사의 경우에는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수도권의 영향력은 전체의 98.4%에서 99.0%로 증대되고 있다.

대기업 본사(産)에 의한 지역간 상호작용에서 수도권의 영향력은 기업규모에 따라 약간 다른 특성을 보이기는 하나 매우 강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100대 기업본사의 경우 수도권의 영향력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전체의 99.5%에서 99.3%로 99% 이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변화가 미미하고, 500대 기업본사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영향력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전체의 96.9%에서 98.3%로 크게 증가하며, 3000대 기업본사의 경우 수도권의 영향력이 같은 기간 동안에 전체의 94.6%에서 95.3%로 증가하여 수도권의 흡인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명문대학(學)을 기준으로 한 지역간 상호작용에서 수도권의 영향력은 그 기준에 따라 다소 다르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사의 대학평가에 의한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1996년과 2001년 사이에 전체의 90.3%에서 85.4%로 약간 감소하나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교수 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1993년과 2001년 사이에 전체의 90.5%에서 91.1%로 증가한다. 그리고 30대 주요 명문대학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전체의 93.9%에서 88.0%로 감소하는데 이는 수도권에 대한 학생정원 규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지역간 상호교류작용에서 수도권의 영향력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여 수도권이 우리나라 중추기능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수도권 종속성이 매우 심함을 알 수 있는데,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로

부터 반경 20km권내에 중추기능 지역중력의 85% 이상이 응축되어 이 지역이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핵이 되고 있다. 즉, 이 지역이 수도권으로 인구, 산업 및 각종 기능을 끌어당기는 자석(磁石)의 핵(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중추기능 입지결정요인 분석결과와 종합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이 수도권, 특히 서울중심 반경 40km권 지역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지역간 상호교류작용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중심 반경 20km권 지역이 전 국토를 지배하고 인구, 산업 및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블랙홀 또는 유아등(誘蛾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중추기능의 입지가 어떠한 요인과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근본원인을 밝힐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기업본사(産)의 입지결정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지방분산 차원에서 중추기능 중 중앙정부 기능(政)은 정부정책을 통하여 그 입지를 좌우할 수가 있고 명문대학 기능(學)은 지방소재 대학의 육성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추기능 중 지역발전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큰 민간기업의 본사입지에서 기업체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각종 정보 및 자금과 정부 등 국가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관련단체·업계와의 정보교환·수집, 자금조달 등 금융거래, 정부·행정기관 등과의 접촉, 우수한 인재의 확보면에서 수도권의 입지여건이 지방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기업본사의 지방분산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거대한 시장, 국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집중으로 인한 각종 정보와 자금의 집중, 국제교류기반의 충실, 고급인재의 집적, 교통 및 생활여건의 양호함 등이 입지선호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지방의 경우는

주력공장과의 업무연계가 입지선호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다.

기업본사를 지방에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서도 서울지사[지점·사무소]가 실질적인 본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향후 기업본사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서도 본사의 핵심기능보다는 교육·연수기능, 기술·연구개발 기능 등 일부 부차적인 기능만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에 대한 기업본사의 입지선호에서도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수도권이 갖는 입지상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충청지역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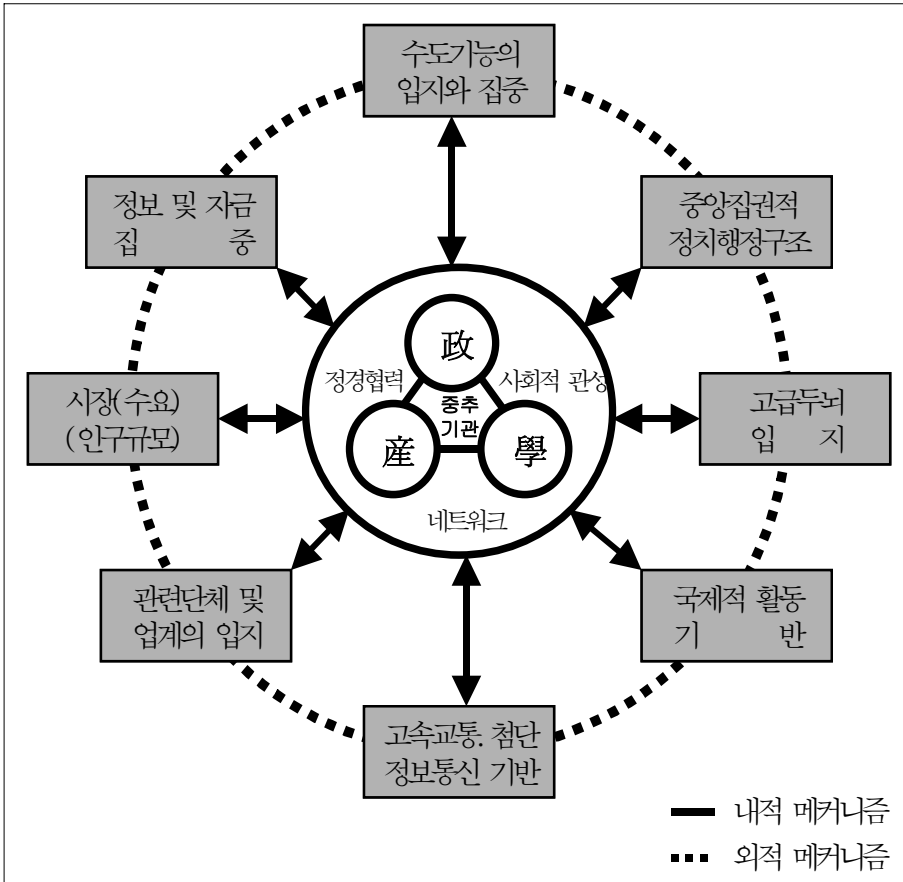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하여 국가행정기관, 즉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종 공공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그 주변에 집적됨으로써 각종 정보와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에 수익성 원리에 따라 그 입지가 결정되는 민간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즉,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수도권 집중이 기업본사 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고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7.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집적 메커니즘과 정책적 시사점

1)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집적 메커니즘

지금까지 살펴본 중추기능의 지역간 입지분포 및 변화와 그 특성, 중추기능의 국토공간상 중심 이동의 특성, 중추기능간 상호교류작용에 대한 지역간 영향력의 크기 및 크기변화의 특성, 그리고 기업본사를 중심으로 한 중추기능 입지결정과 입지이전의 특성을 종합하면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 메커니즘을 도출할 수가 있다.

<그림 4-13>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는, 지금까지의 실태분석과 기업본사의 입지 및 이동요인 분석결과에 의거할 경우, 두 가지의 동태적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두 가지의 동태적 메커니즘은 정(政)·산(産)·학(學) 자체의 내적 메커니즘과 이 내적 메커니즘을 결정하는 주요 동인들이 결합한 외적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내적 메커니즘(inside dynamic mechanism)은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 상호간의 자체 공생(共生)메커니즘이며, 외적 메커니즘(outside dynamic mechanism)은 수도권기능의 입지와 집중, 중앙집권적 정치행정구조, 정보 및 자금의 집중, 시

장수요(인구규모)의 크기, 고급두뇌의 입지, 관련단체 및 업계의 입지, 고속교통·첨단정보통신 기반, 국제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등의 동인들이 상호 결합된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내적 메커니즘과 외적 메커니즘은 고도로 연계되어 ▲정경협력, ▲사회적 관성, ▲네트워크 등의 요인으로 얽혀 있는 가운데 전체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집권적 정치행정구조 하에서 수도기능이 수도 서울에 집중적으로 입지함으로써 관련단체 및 업계의 본사가 수도권에 모여들고, 이와 함께 각종 정보 및 자금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고속교통·첨단정보통신 기반, 국제공항 등 국제적 활동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치됨으로써 국내외 고급두뇌들이 수도권에 집적되며, 대규모 인구유입에 의거하여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동인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중추기능 수도권 집중의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 상호간에서도 정보, 자금, 권력 등을 매개로 한 고도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자체 공생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2) 정책적 시사점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성과 지향성을 원천으로 하여 서울을 핵(核)으로 하는 수도권이 중추기능에서 강력한 자력(磁力)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토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점이다. 인구 및 각종 기능의 지방분산을 위해 그 동안 다양한 정책을 구사해왔지만 공기업 본사, 대기업 본사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수도권 지향성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토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대전청사로의 일부 정부기능 이전,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입지선호 강

화 등으로부터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을 위해서는 정부기능을 핵으로 하는 패키지 단위로 기능을 분산하고 그 물리적 받침점시로서는 신도시 내지는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

셋째, 중추기능의 지방이전 방안은 정(政)·산(産)·학(學) 중 선도기능을 어느 분야에서 갖느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메커니즘에 기초한 중추기능 지방이전 전략이 중요하다.

넷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안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에서와 같은 단순한 업무기능의 지방이전이나 일과성 이전이 아니라 국토구조를 재편하고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이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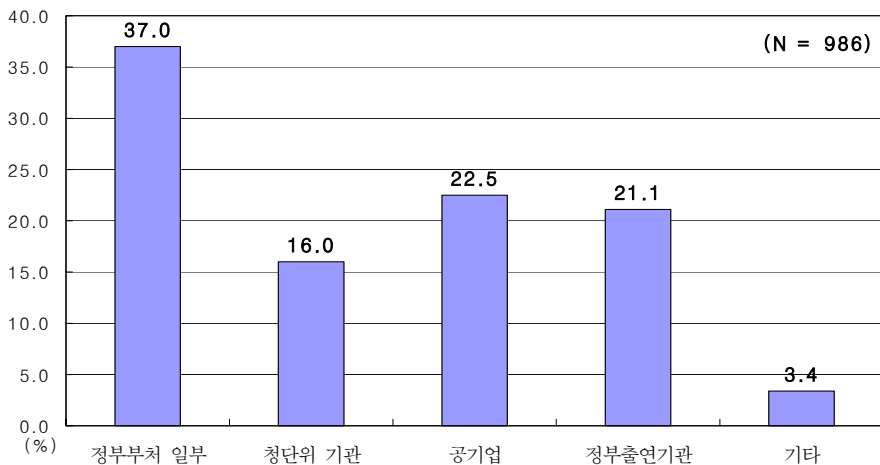
3) 향후의 정책방향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하여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거하면,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서 국가공공기관의 업무특성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역별 분산방식이 가장 적절하며,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시에 정부부처 일부가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특히, 국가중추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분산한 대표적인 정책사례인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¹⁴⁾.

14) 9개 청(廳)단위 기관과 정부기록보존소 등의 국가공공기관이 1998년에 정부대전청사로의 입주를 완료함에 따라, 정부대전청사로의 국가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의도한 대로 추진되었으며 이전 후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1년 7월 2일~7월 6일의 5일간에 걸쳐 정부대전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청사 이전에 따른 애로사항,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 및 처리방법 등 기관간 업무협조와 관련된 사항,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생활관련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설문지는 각 기관별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총 690매를 배부하여 603매를 회수하였다(회수율 87.4%). 회수된 설문지 중 데이터클리닝을 통하여 9매를 제외하고 594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

조사결과 중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공무원의 72.5%가 향후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육성을 위해서는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이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시에 국가공공기관의 업무특징 및 지역특화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분산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전체 57.6%, 정부대전청사의 경우에서와 같이 동일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전체의 3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그림 4-14>에서 보듯이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에서 지방이전에 포함하여야 할 기관은, 정부부처의 일부가 응답비율 37.0%로 가장 많고, 이에 이어 정부투자·출자의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청(廳)단위 기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4> 국가공공기관 지방분산 시의 포함 기관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결과)



주 : 복수응답 기준이며, 공기업의 경우는 정부투자·출자기관 기준임.
 자료: 박양호 외. 200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평가와 개선방안』. 경기: 국토연구원. p.264

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박양호 외. 200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평가와 개선방안』. 경기: 국토연구원. pp.255-270.

5 CHAPTER

중추기능 분산의 외국사례

1.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전

앞 장(章)에서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적되는 핵심요인이 중앙정부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는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기능의 이전을 통하여 다른 중추기능의 연쇄이전을 선도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추기능 분산에 관한 외국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추기능 지방분산에 관한 정책방안 설정에서 참고로 삼고자 한다.

중추기능 중 중앙정부 기능(政)의 지방분산에 관한 외국사례는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 기능을 일괄적으로 지방의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부부처의 행정수도 입지유형이다. 즉, 이것은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그 곳으로 중앙정부기능을 일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정부부처의 지역분산유형이다. 이것은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의 여러 도시에 분리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일종의 분도(分都)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정부

부처 이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유형인데 이것은 중앙정부기능의 핵심인 정부부처는 그대로 기존 수도에 남겨둔 채 관련되는 공공기관을 지방의 특성에 따라 각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경우이다.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외국사례를 살펴본다.

1) 정부부처의 행정수도 입지유형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중 정부부처의 행정수도 입지유형과 관련해서는 그 사례가 수없이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경우로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현재 수도기능 이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브라질은 1999년 기준으로 인구가 약 1억 7,18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면적이 851.2만 km^2 에 이르는 연방공화제 국가이다. 이러한 브라질에서 신수도 브라질리아를 건설하고 수도기능을 이전한 것은, 국토 내륙지역의 진흥을 통하여 국토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쿠비체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 하에 신수도 건설이 추진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국토내륙지역의 발전이 크게 촉진되기에 이르렀으며 2000년 현재 브라질리아 연방구(聯邦區)의 인구는 200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주요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946년에 수도의 이전을 헌법에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의 브라질리아를 신수도 건설대상지로 선정하고, 1956년도에는 새로운 수도 건설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0년에 신수도건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970년경에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주요 중앙정부부처의 이전을 거의 완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브라질의 수도가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브라질리아로 그

이전을 완료하게 되었다.

브라질리아로의 수도기능 이전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핵심부처를 선도적으로 이전하고 관련부처는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철도청 등과 같은 일부기관은 리오데자네이로에 잔류시키고 있다. 건설 초기에는 인공적이고 인간미 없는 도시, 세기의 실패작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브라질리아가 도시로서 성숙해 감에 따라, 특히 생활환경 등의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②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

오스트레일리아는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2000년 현재 인구규모가 1,926만 명 정도에 이르고 면적이 768.7만 km²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오스트레일리아는 1901년에 연방제 국가로 출범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었다. 이러한 연방제 국가의 성립과 함께 국가로서의 일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상징적인 사업으로 새로운 수도 건설이 추진되었다.

주요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새로이 탄생한 연방제국가의 수도를 시드니로 할 것인가 아니면 멜버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쟁이 분분하였다. 특히,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의 두 축을 형성하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던 뉴 사우스 웨일즈 주(州)와 빅토리아 주(州)는 각 주의 수도였던 시드니와 멜버른으로 연방수도를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국민여론조사를 거친 후, 1908년에 수도 소재지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시드니와 멜버른의 거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캔버라에 새로이 수도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는 특정지역의 일방적인 비대화와 힘의 집중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였다. 1913년에 수도건설에 관한 고시를 통하여 신수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1927년에는 그 당시 임시수도 멜버른에 있었던 연방의회가 캔버라로 이전되고 총독, 수상관저 등이 이전함으로써 캔버라가 호주의 명실상부한 수도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60년과 1980년대

에 걸쳐 정부부처의 이전이 완료되었다.

호주의 경우 수도개발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수도개발위원회를 1957년에 설치하여 주요 수도기능이 이전된 후에도 수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 기능은 도시계획, 개발, 건설 등을 담당하며 행정관료, 도시계획가, 건축가, 엔지니어 등 약 3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캔버라에서는 행정부, 의회, 최고재판소 등 연방정부에 종사하는 고용인구가 전체 고용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공관, 국립도서관, 국립미술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ANU) 등 외교, 문화, 교육기능과 공업기능, 그리고 주거기능이 전원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자리잡고 있다. '만나는 장소'라는 어원을 가진 캔버라는 인구 30만 명 정도의 조용한 행정도시이자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③ 일본의 수도기능 이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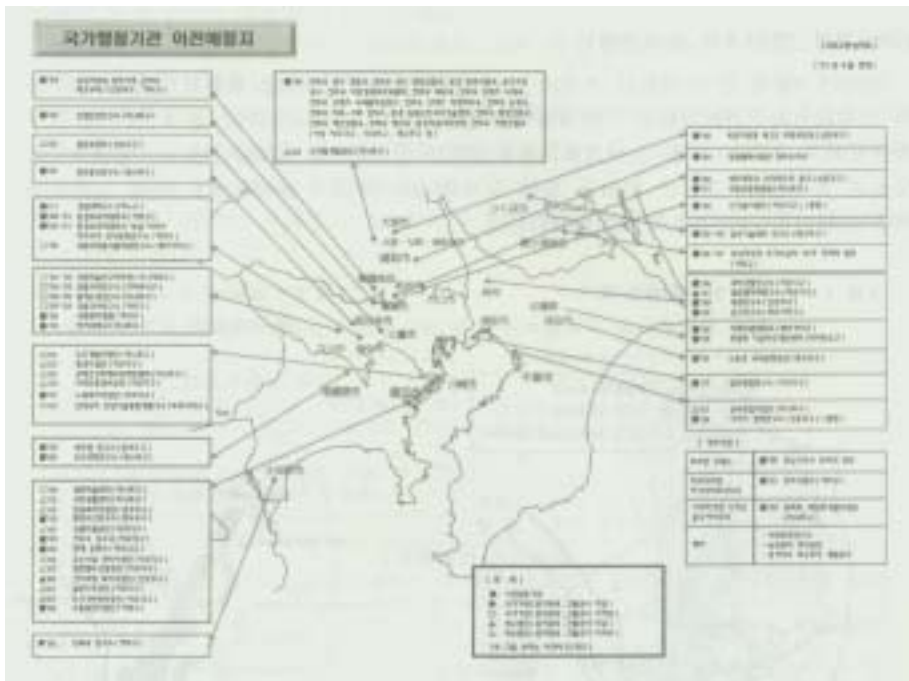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현재 수도기능 이전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수도권 정비 차원에서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국가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국회 등 수도기능 이전에 관한 것이다.

먼저 국가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면, 국가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동경도(都) 구(區)지역에 있어서의 인구, 행정, 경제, 문화 기능의 과도한 집중현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1988년에 제정된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과 이 법에 근거하여 1988년 7월에 각의(閣議)에서 결정된 국가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관한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1989년 8월에는 이전 대상지 등을 포함하여 76개 성청(省廳) 산하기관 및 자위대 11개 부대 등이 이전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1995년 6월에 국가기관 등 이전촉진연락회의에서 이전방침이 합의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1999년 6월에는 이전촉진연락회의 간사회가 개최되었으

며 1995년에 결정된 이전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도까지 이전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특수법인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전대상지 등에 설치된 이전추진연락조정회의를 통하여 이전대상지역의 지방공공단체, 특수법인, 기타 관계기관간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현황을 보면, 2001년 3월까지 사이타마(埼玉)현 오오미야(大宮)·요노(興野)·우라와(浦和)지구(사이타마 신도심)로 총무성 산하의 관동관구행정평가국, 관동우정감찰국, 관동우정국, 동경저금사무센터, 법무성 산하의 동경교정관구, 관동지방경생보호위원회, 재무성 산하의 관동재무국, 관동신월국세국, 관동신월국세불복심판소, 후생노동성 산하의 관동신월후생국, 농림수산성 산하의 관동농정국, 동경비사료검사소, 동경농림수산물기술센터, 경제산업성 산하의 관동경

<그림 5-1> 일본 국가행정기관 등의 이전대상지별 이전(예정)기관



자료: 日本 国土交通省編(류사균 역). 2001. 『2001年版 首都圏 白書』.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p. 135

제산업국, 국토교통성 산하의 관동지방정비국, 경찰청 산하의 관동관구경찰국, 방위청 산하의 방위시설청동경방위시설국 등 총 9 성청 산하의 17개 기관이 이전하는 등 43개 기관, 11개 부대가 이전을 완료하였다. 이전대상지별 이전완료 및 이전예정 기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림 5-1>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국회 등 수도기능 이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우선 일본의 수도기능 이전이란 중의원, 참의원, 정부의 중추기능, 최고재판소 등 국가 3권 중추기능을 동경 도심으로부터 대략 60km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 구체적인 이전대상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체로 국회 및 내각과의 연계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검토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역할과 기능,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민간자율성의 활성화 등과 같은 종합적인 견지에서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과 연계하여 국회 등 수도기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수도기능 이전은 비록 국가 3권 중추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황실, 경제·문화 등 현재의 수도 동경이 갖는 모든 기능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동경의 기능 일부를 이전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천도(遷都)와 차이가 있다.

일본의 수도기능 이전에 관한 지금까지의 주요 검토경위를 살펴보면, 1950년대 중반부터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동경과밀문제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꾸준히 천도(遷都), 분도(分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도권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75년 2월에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 문제 간담회가 발족되면서부터이며, 이어 전국총합개발계획에서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실제로 일본에서 국회 등 수도기능 이전을 위해 법·제도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1992년 12월에 『국회등의이전에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국회 등 이전조사회가 설치되어 현지조사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조사보고서가 1995년 12월 총리와 국회에 보고되면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이어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회 등 이전심의회가 설치되고 이전후보지의 선정, 조사대상지역에 대

<표 5-1> 일본 수도기능 이전에 관한 주요 검토경위

시 기	주 요 내 용
1955년대 이후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천도·분도 등 논의
1975. 2	국회의원 등에 의해 신수도문제간담회(현 신수도추진간담회) 발족
1975. 11	제3차 전국총합개발계획에서 중요과제로 자리잡음
1987. 6	제4차 전국총합개발계획에서 중요과제로 자리잡음
1990. 1	국토청장관 주재의 수도기능이전문제에 관한 간담회 발족
1990. 11	중·참의원에서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해 결의 (동경 일극집중의 배제,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행정기능의 확립)
1990. 12	총리 주재의 수도기능이전문제를 생각하는 전문가회의 발족
1991. 8	중·참의원에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특별위원회 설치
1992. 12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 (국회 등의 이전의 구체화를 위한 국가의 검토의무, 국가가 검토하는 데서의 지침, 국회 등 이전조사회의 설치)
1993. 4	국회 등 이전조사회 발족 (현재까지 심의회 7회, 기본부회 24회, 신도시부회 10회, 공청회 4회 등 개최)
1995. 12	국회 등 이전조사회 보고서 완성 (이전의 의의·효과, 이전대상지의 선정기준 등)
1996. 6	국회 등 이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전후보지의 선정 등, 국회 등 이전심의회 설치)
1996. 12	국회 등 이전심의회 발족 (현재까지 심의회 31회, 조사부회 21회, 공청회 9회 등 개최)
1998. 3	제5차 전국총합개발계획(『21세기의 국토 그랜드디자인』) 중요과제로 자리잡음
1999. 12	국회 등 이전심의회 보고서 완성 (이전후보지의 선정 등)

자료: 일본의 국회 등 이전심의회. 2000. 12. 『국회 등 이전심의회답신참고자료』, 일본 동경 : 국토교통성(http://www.mlit.go.jp/kokudokeikaku/daishu/qa/otazune8_f.html)에서 발췌·정리함.

한 현지답사, 공청회 등을 통한 답신보고서가 1999년 12월 총리에게 제출되고 국회에 보고되어 현재 이전후보지 선정과 이전대상 기관의 선정을 위한 검토작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향후 추진절차에 있어서는, 『국회등의이전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하여, 국민 합의형성의 상황, 제반 사회경제정세 등을 배려하면서 수도기능의 동경도(東京都) 존치와 이전 시의 이해득실,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는 동경도와의 비교평가 과정을 거친 후, 국회 등 수도기능을 이전하기로 결정된 경우에

는 동(同) 법률 제23조에 의거하여 국회가 이전지(移轉地)를 법률로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과정을 거쳐 신수도(新首都)가 건설되는 경우에서도 건설 착수까지 사업주체의 결정, 마스터플랜의 작성, 환경평가, 해당지자체·관계기관 등과의 조정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국회가 이전하여 신수도에서 국회가 열리는 제1단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건설착수로부터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 신수도는 면적 약 1,800ha에 인구규모 약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신수도 건설사업의 거의 전 단계가 마무리되는 성숙 단계에서는 신수도는 최대 인구 약 56만 명 정도, 면적 약 8,500ha 정도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본의 국회 등 수도기능 이전에 따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여러 전문가들이나 기관으로부터 추정, 시산(試算)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국회 등 이전심의회회의 「국회 등 이전심의회 답신자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소개한다.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국회 등 수도기능 이전에 따른 비용을 시산한 것은, 1990년 발족한 국토청장관 주재의 「수도기능이전문제에 관한 간담회」에서 발표한 「수도기능이전문제에 관한 간담회」 최종보고서에서였다. 여기서는 이전비용이 최대 14조 엔으로 시산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전체사업비 중 민간투자와 공공부담의 범위를 표시하지 않고, 이전사업은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제1단계 사업비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행정개혁이 이뤄져 행정기관의 이전규모가 축소된 경우의 이전비용이나 신간선(新幹線), 고속도로, 공항 등의 정비비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 등 이전심의회에서 1997년 10월에 이러한 관점들을 고려하고 전제 자료 등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후보지를 상정하지 않은 모델적인 이전비용을 재시산하였다. 그 결과는 <표 5-2>에 제시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이 모두 신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총 12.3조 엔이 소요될 것으로 시산하고 있다.

1999년 12월 「국회 등 이전심의회」의 「국회 등 이전심의회 답신」 최종보고서에서 이전후보지가 선정됨에 따라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토치키(栃木)·후쿠시마

<표 5-2> 일본의 수도기능이전 비용 : 모델적 시산의 결과

구 분	인구(만명)	면적(ha)	비 용(조엔)		
			합 계	공공부담	민간 투자·부담
제1단계	10	1,800	4.0	2.3	1.7
1/2 케이스	30	4,800	7.5	3.0	4.5
최대케이스	56	8,500	12.3	4.4	7.9
移轉懇 시산	60	9,000	14.0	-	-

주: 제1단계는 국회중심으로 이전, 1/2 케이스는 행정기관이 1/2 이전, 최대케이스는 행정기관이 모두 이전하는 경우임.

자료: 일본의 국회 등 이전심의회. 2000. 12. 『국회 등 이전심의회답신참고자료』. 일본 동경: 국토교통성(http://www.mlit.go.jp/kokudokeikaku/daishu/qa/otazune8_f.html)에서 발췌·정리함.

(福島)지역, 기후(岐阜)·아이치(愛知)지역 및 참고로 이전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미에(三重)·키오(畿央)지역에 대하여 모델적 시산을 바탕으로 하여 국회 등 이전심의회에서 이전비용을 재시산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장기적인 경우 불확실 요인이 너무 많아 시산의 의미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제1단계에 대해서만 소요비용을 시산하고 있다. 그리고 제1단계에서의 신도시 인구를 추정함에 있어서 입법, 사법기능은 전원, 행정기능은 내각·본성청(本省廳) 중 국회심의회에 관한 필요 최소한의 인원수를 상정하고 있다. 일본 신수도의 제1단계 인구추정치의 자세한 내용은 <표 5-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그리고 <표 5-4>에는 제1단계에

<표 5-3> 일본 신수도의 인구추정(모델적 시산)

항 목		상정치(모델적 시산의 제1단계, 명)	비 고
移轉 중 사 자	소 계	29,000	-
	首都機能	22,000	• 입법부, 행정부는 전원 • 행정부는 중앙직원의 1/3 등
	準首都機能	4,000	• 정당본부, 지방공공단체연락사무소, 대사관 등 • 앙케이트조사 등으로부터 정리
	民間隨伴機能	3,000	• 기업앙케이트조사로부터 정리
서비스기능 종사자		11,000	• 전체인구의 11%로 상정
移轉중사자·서비스기능 종사자의 비취업가족		61,000	• 취업률, 가구당 인원수 등으로부터 상정
합 계		100,000	-

자료: 일본의 국회 등 이전심의회. 2000. 12. 『국회 등 이전심의회답신참고자료』. 일본 동경: 국토교통성(http://www.mlit.go.jp/kokudokeikaku/daishu/qa/otazune8_f.html)에서 발췌·정리함.

<표 5-4> 일본 수도기능 이전의 비용항목과 비용산정 방법 : 재자산

비용항목		재자산의 산정방법
(1) 용지취득비 (용지비, 보상비)		○ 이천후보지 주변의 공공사업에서의 용지취득실적으로부터 단가를 설정하고 취득상정면적(1800ha)을 곱하여 산출
교통기반 정비비	소계((2)+(3))	○ 종합평가에서의 국회도시 상정위치와 주변지역 교통기반 정비상황을 감안하고 신규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기반의 정비량을 상정하며 유사사례의 단가 등을 이용하여 산출 ○ 상기 비용을 모델적 시산의 비용항목 분류에 따라 • 주로 전국과의 연계에 이용되는 철도, 도로 및 공항 → 광역교통인프라 정비비 • 주요 기존도시, 공항 등과의 연계용 교통기반 → 개발지구의 간선교통시설 정비비로 계상함
	(2) 광역교통인프라 정비비	
	(3) 특별기반정비비 (개발지구외 간선교통시설)	
(4) 용지조성비 등 [업무지구·주택지구] (용지조성비, 개발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등)		○ 기존의 대규모 개발사례와 지형 등을 고려하여 정비단가의 개장가능성을 검토하였지만 구체적 개발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산출이 곤란하여 모델적 시산과 동액의 비용을 계상
시설정비비(지상물)		국회, 수상관저, 중앙성청 등, 주택, 공익시설, 공급처리시설, 정보통신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기반정비비 (3) 이외)		개발지구내 공공교통기관, 교통터미널시설, 공동구, 쓰레기관로수송시스템, 삼림공원, 하천개수 등

주 : 비용항목은 편의상 계상된 『교통기반정비비』 항목 이외는 모델적 시산과 같음. 또한 새로운 교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신도시 이미지에 관한 교통체계를 참고로 함.
자료: <표 5-3>에서와 같음.

<표 5-5> 일본의 수도기능 이전비용 : 재자산 결과

(단위 : 억엔)

구 분		(모델시산)	栃木·福島	岐阜·愛知	三重·畿央
(1)용지취득비		2,000	1,000	3,000	2,500
교통기반 정비비	(2)+(3)	5,000	8,000	5,000	6,500
	(2)광역	3,000	4,000	2,500	3,500
	(3)특별	2,000	4,000	3,000	3,000
(4)용지조성비 등 [업무지구] [주택지구]			3,000 2,000		
시설정비비(지상물)			25,000		
특별기반정비비((3) 이외)			3,000		
총 계	합계	40,000	42,000	41,000	42,000
	공공	23,000	27,000	25,000	26,000
	민간	17,000	15,000	16,000	16,000

주 : 1. 비용항목은 편의상 계상된 『교통기반정비비』 항목 이외는 모델적 시산과 같음.
2. 공공부담, 민간부담(민간투자 및 민간부담)은 기본적으로 모델적 시산에서의 비율로 안분함.
3. 용지조성비에서 개발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자산은 행하지 않았지만, 栃木·福島지역은 전반적으로 경사가 적고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용지조성비가 적게 소요될 수 있음.

자료: <표 5-3>에서와 같음.

<그림 5-2> 일본 신수도 이전후보지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www.mlit.go.jp/kokudokeikaku/daishu/qa/otazune8_f.html).

소요될 비용의 추정에 있어서의 비용항목과 비용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추정된 제1단계를 기준으로 한 일본 수도기능 이전비용의 시산결과가 <표 5-5>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 등을 중심으로 이전하게 되는 제1 단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신수도 후보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4조 엔에서 4조 2,000억 엔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중 공공부담은 2조 3,000억 엔에서 2조 7,0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에서는 현재 수도기능 이전후보지를 중심으로 수도기능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각계 각층에서 수도기능 이전에 대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수도기능 이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데서의 주요 논지는, 수도기능 이전을 통하여 정치·행정과 경제의 중추를 분리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으며, 동경권의 방재성(防災性)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일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기능 이전이 필요하고, 신도시개발이 전국적인 모델이 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도기능 이전지는 21세기의 일본을 상징하는 신도시로서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으며,

수도기능 이전은 국정전반의 개혁을 촉진하고, 지방의 자립기반을 제고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동경 일극집중은 앞으로도 큰 과제이고, 수도기능 이전에 따른 동경의 과밀해소효과는 적지 않으며, 동경을 정점으로 하는 서열의식이 타파되고 국토의 재편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수도기능 이전은 일본이 투자여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실현하여야 할 긴급한 과제이고, 이것이 동경의 활력저하를 초래하지는 않고 오히려 동경의 재생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도기능 이전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라는 측에서는, 수도기능 이전의 이유와 명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발상은 시대착오적이고, 수도기능 이전보다 지방분권·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하여야 하며, 동경 일극집중은 향후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수도기능 이전에 따른 동경의 과밀해소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세계도시 동경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전(移轉)보다는 기능을 이원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도기능 이전보다도 동경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성숙사회를 맞이하여 한정된 재원은 효율적인 국토개발에 투자하여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수도기능 이전은 수도기능 이전지에만 혜택이 갈 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정부부처의 지역분산유형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외국사례는 중 정부부처의 행정수도 입지유형에 이어 두 번째 유형으로서 정부부처의 지역분산유형을 살펴본다. 정부부처의 지역분산유형은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의 여러 도시에 분리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일종의 분도(分都)에 해당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과 말레이시아의 수도기능 분산을 살펴본다.

① 독 일

독일은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구(舊)서독의 수도인 본으로부터 베를린으로의 수도기능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 현재 인구 약 8,226만 명이 거주하는 독일은 연방공화제 국가로서 연방정부는 5대 헌법기관, 즉 연방대통령,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 연방법원 가운데 하나이며 국무총리와 14명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14개 정부부처는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경제·기술부, 식료·농림부, 노동·사회부, 국방부, 가족·노인·부인·청소년부, 보건부, 건설·국토·교통부,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교육·연구부, 대외협력·개발부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 당시에는 수도기능의 거의 대부분이 수도 본에 입지해 있고 일부 청단위 기관이 일부지방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개편되기 이전의 연방부처를 기준으로 수도 본에는 입법기관과 16개 행정기관(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사회복지부, 건설부, 노동부, 교통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우편·통신부, 환경보전부, 보건부, 농림부, 경제개발협력부 등) 모두가 입지해 있었고, 지방에는 청단위 기관을 중심으로 베를린에 연방환경청, 비스마덴에 연방통계청, 뉴른베르그에 연방노동청 등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칼스루헤에 연방헌법재판소가 입지해 있었다.

독일의 수도기능 분산의 주요 추진경위를 보면, 1990년 독일통일조약이 체결되면서 베를린이 통일독일의 수도로 명시되었고, 이어 1991년에는 각의결정을 통하여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기능과 본에 잔류시키는 기능을 선정하였다.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방 정부부처 중 연방 정보홍보처와 총리실을 포함하여 10개

<표 5-6> 독일의 수도기능 분산

베를린(10개)	본(6개)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기술부, 노동·사회부, 가족·노인·부인·청소년부, 건설·국토·교통부, 정보홍보처, 총리실	국방부, 식료·농림부, 보건부,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교육·연구부, 대외협력·개발부
※ 연방정부의 이전구상에 따르면 총리실과 정보홍보처를 포함한 10개 연방부처는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본에는 그 연락사무소를 두도록 하며, 본에는 6개의 연방부처가 잔류하고 베를린에는 그 연락사무소를 두도록 함	

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정부부처는 본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베를린으로 본청(제1청사)을 이전하는 부처의 경우 본에는 연락사무소(제2청사)를 두고, 본에 본청(제1청사)이 잔류하는 부처의 경우 베를린에 연락사무소(제2청사)를 두도록 하였다. 1994년에는 이러한 수도기능 분산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수도기능 이전의 기본법인 「베를린·본법(法)」을 제정하였다. 1999년에는 새로운 연방의회사당 건물이 완공되면서 수도기능의 베를린 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였고 제1회 연방의회가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독일에서 베를린으로의 정부기능 일부이전에는 약 200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독일의 수도기능 이전은 일종의 혼합모형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먼저 연방 정부부처 단위에서 본청을 베를린으로 이전할 부처와 본에 잔류시킬 부처를 결정하고, 그런 다음 각 부처 단위에서 내부 부서를 각각 그 성격에 따라 제1청사인 본청과 제2청사인 연락사무소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 그 제1청사와 제2청사간 부서 분산배치와 부서간 업무분담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 연방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제1청사(본)과 제2청사(베를린)의 역할분담
(연방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로부터의 회신(2002. 4. 24))

- 본에 있는 제1청사에는 일반 행정관련 부서가 배치되어 있음(예를 들면, 부처의 예산담당, 인사, 기타 내부행정관리 등). 그 외에 WA(수질, 쓰레기, 토양), IG(보건, 공해방지, 시설보호 및 교통, 화학물질안전), N(자연보호), RS(원자력시설의 안전, 방사선 보호, 핵처리 관련) 등 4개 부서의 상당인원이 본에 근무하고 있음
- 베를린에 있는 제2청사는 주로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의 수뇌부와 관련된 핵심 기능이 배치되어 있음(예를 들면 홍보부서와 내각 및 의회협의 관련 부서). 그리고 환경법 관련 부서와 환경정책 관련 주요부서(환경정책의 경제적 문제 관련 등)가 배치되어 있음. 또한 국제협력부서도 베를린 청사에 배치되어 있음
- 베를린 제2청사에는 전체 일자리(742개)의 25%가 배치되어 있고 본 제1청사에는 75%가 배치되어 있음
-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장관은 주로 베를린에 머물고 있고, 보통 14일(2주)만

에 본에 들러 1-2일정도 업무를 봄. 그러나 이것은 항상 이러한 것은 아님(가변적)

- 베를린과 본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인트라넷)로 연결되어 처리되고 있음. 그리고 비디오회의도 개최되고 있음. 또한 본과 베를린간에 서버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서 관련 공무원이 상호 방문하고 있음

□ 연방 국방부 제1청사(본)과 제2청사(베를린)의 역할분담
(연방 국방부로부터의 회신(2002. 5. 7))

- 본에 있는 제1청사에는 군사전력국, 총무국, 군사행정국, 육·해·공군국 등이 배치되어 있음
- 베를린에 있는 제2청사에는 홍보부서와 내각 및 의회협의 관련 부서, 국방정책국, 무기국 등이 배치되어 있음
- 본의 제1청사에는 전체 일자리(3,300여 개)의 90%(약 3,000개)가 배치되어 있고 베를린 제2청사에는 10%가 배치되어 있음
- 국방부장관은 주로 베를린에 머물고 있음
- 베를린과 본의 업무협력은 인터넷(국방부 인트라넷), 이메일, 비디오회의, 적절한 인력배치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음

□ 연방 건설·국토·교통부 제1청사(베를린)과 제2청사(본)의 역할분담
(연방건설교통부로부터의 회신(2002. 5. 10))

- 베를린에 있는 제1청사에는 장관실, 총무국, 홍보부서와 내각 및 의회협의 관련 부서, 주택 및 건설국 등이 배치되어 있음
- 본에 있는 제2청사에는 도로철도국, 수운국, 항공국 등이 배치되어 있음
- 베를린의 제1청사에는 전체 일자리(1,650여 개)의 약 33%(약 550개)가 배치되어 있고 본의 제2청사에 67%가 배치되어 있음
- 장관은 주로 베를린에 머물고 있음
- 베를린과 본의 업무협력은 인터넷, 비디오회의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음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45년 간의 분단기간 중 서독의 수도가 본으로 이전하고 각종 산업시설이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관계로 수도권 과밀화가 문제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특별한 과밀화 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었다. 특히, 통독이후 1998년 베를린으로 환도(還都)하면서 본의 도시기능

약화를 우려하여 일부 정부부처를 본에 잔류시킨 관계로 베를린의 인구가 통일 전과 비교하여 급격한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즉, 베를린의 통일직후 인구규모는 330만 정도였는데 현재는 350만 정도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에 잔류한 부처는 베를린에 제2청사(연락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장·차관들이 수시로 베를린에 와서 각료회의에 참석하거나 의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본-베를린간 통근용 셔틀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및 정보기관의 장 등은 전용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두 도시간을 이동한다. 구(舊)서독의 수도 본에 소재하는 부처의 장·차관 중 대부분은 일주일에 2~3일 정도를 베를린 제2청사(연락사무소)에서 집무를 하고 있으며 긴급사항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논의하고 있다.

베를린은 아직 주거·교육환경이 미비하여 베를린에 소재하는 부처의 공무원 중 상당수가 아직도 본에 가족들을 두고 통근하거나 주말가족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본의 도시기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이치텔레콤, 도이치포스트 등 대형회사들이 본사를 본으로 옮겨 본의 주택난이 오히려 통일전보다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독일은 통일 전부터 경제·사법·행정 기능이 여러 도시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고 이에 따른 불편함을 극복해 온 관계로 수도기능 분산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저하가 특별히 문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장기적으로 베를린의 수도기능 확충을 위해 본에 잔류한 부처의 베를린으로의 완전이전 문제가 거론되고는 있으나 지방도시간에 이해가 서로 얽혀 공식현안으로는 대두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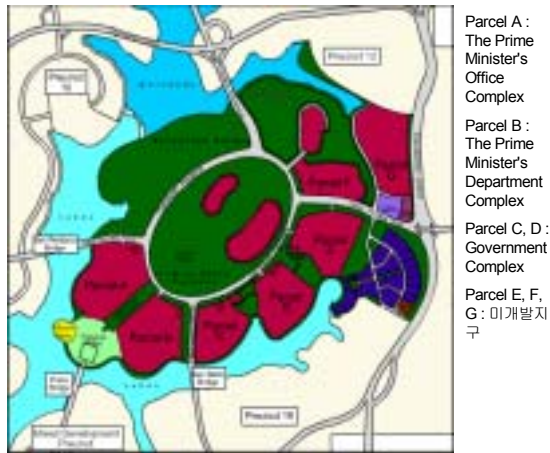
②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말레이시아는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인구가 2000년 현재 약 2,220만 명에 이르고 국토면적이 33만 km²에 달하는 국가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수도기능 이전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교통난이 심각한 가운데 연방행정기관이 쿠알라룸푸르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어 행정상의 비효율이 큰 문제로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함과 아울러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도(MSC)¹⁵⁾계획의 일환으로 IT정부 실현을 위하여 쿠알라룸푸르 교외에 새로운 행정도시인 푸트라자야를 건설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수도기능 중 이전대상은 국방부 등 일부부처를 제외한 연방부처의 대부분과 연방재판소이며, 연방의회 등은 그대로 쿠알라룸푸르에 잔류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행정도시인 푸트라자야로 연방정부 기능의 대다수가 이전한 후에도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쿠알라룸푸르 그대로이다.

<그림 5-3> 말레이시아의 신행정도시 : 푸트라자야의 정부시설지구



The Government Precinct (Precinct 1) is a dedicated area for the bulk of the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offices, including that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Complex (Parcel A).

자료: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홈페이지(<http://www.pjholds.com.my/service/gomen.htm>)

15) MSC(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도)계획은 IT, 멀티미디어 기술을 핵으로 하여 말레이시아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사이버자야(정보기술도시), 푸트라자야(신행정도시), KLCC(쿠알라룸푸르 시티 센터), 테크놀로지 파크 말레이시아, UPM(대학)을 거점으로 하여 중점적으로 신규개발을 행함과 아울러 이들 신개발도시들을 연결하는 대용량 고속통신네트워크를 정비하여 최상의 IT인프라를 제공하고, 새로운 법, 제도를 확립하며, 세계 각 국으로부터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자국 산업과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MSC계획은 1996년 8월부터 착수하였다.

주요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993년에 5개 소의 후보지 중 현재의 푸트라자야를 이전지로 결정하고 총리실 등의 연방정부기능을 옮기기로 결정하였으며, 1995년에는 푸트라자야 개발계획과 연방정부의 이전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이어 1995년에 푸트라자야 건설에 착수하여 2000년 기준으로 정부부처 청사건물의 60%, 주택 약 2만 호가 완성되었는데, 2010년경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정부부처 이전상황을 보면, 1999년에 총리집무실과 총리부의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 마하티르 총리는 푸트라자야에서 집무를 보고 있다. 2000년에는 운수부, 과학·기술·환경부, 외무부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까지 이전대상 정부부처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3)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유형

중앙행정기관의 지방분산에 관한 외국사례의 세 가지 유형 중 세 번째는 정부부처 이외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유형인데 이것은 중앙정부기능의 핵심인 정부부처는 그대로 기존 수도에 남겨둔 채 관련되는 국가공공기관을 지방의 특성에 따라 각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경우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수도기능의 지방분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을 중심으로 하여 공공기관 지방분산 사례를 살펴본다.

① 영 국

영국에서는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나는 1960년대 이후 수도인 런던의 과밀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시책이고, 다른 하나는 1979년 이후 행정개혁에 수반한 지방분산 시책이다.

먼저 1960년 이후 런던의 과밀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시책을 살펴

보면, 1962년의 프레밍 보고로 런던의 과밀해소를 위한 지방분산 시책이 시작되었다. 이전 대상기관은 이전에 따른 행정 효율성의 저하가 비교적 적고 독립적 단위로 통합된 기관이었다. 이 보고에서는 런던 대도시권 밖으로 약 14,000명, 런던 교외로 약 5,500명을 이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전의 기본 원칙을 보면, 신설 부속기관은 가능한 한 런던 대도시권 밖으로 이전하고, 이전대상지역도 가능한 한 재정보조지역인 동남 잉글랜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따라서 개발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1963년부터 1972년까지 약 2만여 명이 이전하였다.

이에 이어 1973년의 하트만 보고에 의해 런던의 과밀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분산시책이 추진되었는데, 이전 대상기관으로 독립성이 강한 기관 이외에 정책 입안기관을 추가하여 검토한 후 런던에 근무하는 약 86,000명의 대상인원 중에서 약 31,000명에 대하여 이전을 권고하였다. 이전의 기본 원칙으로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1979년 이후 행정개혁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을 살펴보면, 대처정권은 집권 후 재정적자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행정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전계획도 추진하였다. 1988년 2월 영국정부는 이브스경이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는데, 당초에는 내국세청을 중심으로 행정개혁을 시행하고, 이와 함께 이전시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대장성이 행정개혁 추진을 담당하고, 사회보장부가 행정개혁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전 대상인원의 목표는 약 23,000명이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1962년의 프레밍보고, 1973년의 하트만 보고, 그리고 대처정권 하에서의 이브스경의 권고 등 3차에 걸쳐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1988년까지 총 40,900명이 런던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7> 영국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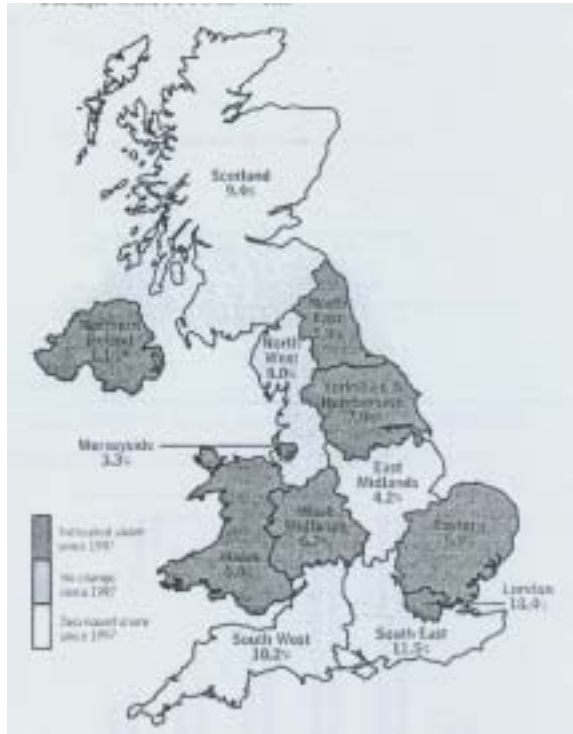
도 시 명	인구 (만명)	런던으로부터 거리(km)	이전기관	이전직원 (명)
브랙 폴	14	330	보험사회보장부 일부	11,000
글래스고우	72	550	국민저축부 일부 국방부 일부	7,000 5,500
카 디 프	28	210	국방부 일부 회사등기소 일부	5,000 1,000
티즈사이드	14	350	관제서비스청	3,000
맨체스터	45	260	내국세수입부 일부	2,100
사우스랜드	16	60	관세세무국 일부	1,200
브리스틀	38	170	환경부 일부	1,000
에딘버그 등 기타	76	-	식량청, 인쇄국, 행정관리청 등 의 일부	4,100
계	153	-	-	40,900

자료: 박양호 외. 2000.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p.111.
박헌주·김광익. 1997. 『수도권정책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이러한 영국의 국가공공기관 지방분산시책의 효과는 지역별 공무원 분포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2001년 현재 영국의 지역별 공무원 분포를 보면, <그림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 전체 인원 중 1/5 이하가 런던에 근무하고 있으며, 2/3 이상이 런던 및 수도권(영국 동남부지역) 이외의 지역에 근무하고 있다. 런던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1997년과 2001년 사이에 전체의 18.2%에서 18.4%로 변화하여 큰 변동은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1997년 이후 런던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 공무원 수는 4,290여 명 이상이 감소하였고, 대신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는 전체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에서 5.9%로 증가하여 정부기관 소재지가 광역화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스코틀랜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전체에 대한 비중이 9.6%에서 9.4%로 감소한 반면 서부지방인 웨일즈 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5.6%에서 6.0%로 증가하여 업무중심이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면서 정부기관 소재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1년 4월 현재 북아일랜드에는 약 28,810명의 공무원이 근무중인데 1997년 이후 0.1% 정도 증가한 것이어서 큰 변동은 없는 상태이다.

<그림 5-4> 영국의 지역간 공무원 분포 : 2001



자료: 영국대사관("Civil Service Statistics 2001" published by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영국은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하여 수도권 분산정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정부부처가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공무원들이 지방근무를 꺼려하여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분산효과를 크게 거두지는 못하였다. 즉,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인구의 분산효과보다는 현지주민들의 취업기회 증대 및 부대시설 증축 등으로 인한 지역균형개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정부는 일방적 분산정책보다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에 숙소 및 학교 등 복지시설의 증축 등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소속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지방이전 시

에 생활비 절감효과, 쾌적한 근무여건 등의 인센티브와 교육·문화·교통상의 불리한 요인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이전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② 프랑스

프랑스는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하여 수도권 파리에 인구 및 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 때문에 파리외 파리에 이의의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문제로 제기되고, 이에 따라 1950년부터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여 산업 및 인구의 지방분산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에 몰려 있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지방도시에 분산 배치하기 위하여 두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지방에 입지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재정적 지원을 부여하는 반면 파리권에 대한 입지 규제를 엄격히 실시하였다. 즉, 파리대학의 기능, 예술기능, 본사 업무기능의 지방분산 시책과 함께 수도권 내의 공장과 사무실 입지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특별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파리 수도권내에 5개의 신도시를 건설하여 파리의 기능을 이전 배치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후반부터 파리권의 인구분담률이 19% 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낙후지역의 산업구조도 서서히 재편되어 지역간 소득격차도 완화된에 따라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1990년대에 들어 프랑스 정부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유럽 공동체(EC)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지방 분산시책으로 인하여 산업과 기업체, 대학 등이 어느 정도 지방으로 분산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이 파리권에 몰려 있어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지방분산이 국가적 과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91년 5월 크레송 총리가 공공기관의 강력한 지방분산 시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즉, 1991년 5월 16일 내각 조직 개편에서

『국토개발청(DATAR)』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였다. 이어 1991년 9월 25일에는 국토개발장관회의(CIAT)에서 국토개발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1991년 10월 3일 국토개발장관회의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서 지역 분산 시책을 강력하게 실천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새로운 공공기관은 모두 파리권 밖에 입지시키며, 2000년까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30,000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을 이전시키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어 1991년 11월 7일의 국토개발장관회의에서는 18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3년까지 1,300명을, 2000년까지는 30,000명 정도를 지방에 분산 배치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립기관인 계획위원회(CGP)와 국토계획집행기관인 국토개발청(DATAR) 등 7개 기관을 파리로부터 파리 수도권인 일드프랑스지역으로 이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프랑스 최고의 행정엘리트 교육기관인 국립행정학교(ENA)의 본부를 파리에서 480km 떨어진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1992년 1월 29일에는 파리권에 있는 7,000여 명의 공무원을 지방도시 또는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수도의 혼잡을 완화하고 지방을 발전시키며, 유럽공동체(EC) 통합에 따른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응집시킴으로써 새로운 유럽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 내용은 1991년 10월 3일에 수립한 “2000년까지 파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근무자 3만 명을 지방에 분산시킨다”는 계획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7,000여 명의 공무원이 지방분산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인원은 이전 대상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5개 부처인 재정원, 농수산부, 교육부, 국방부, 과학기술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00명을 이전할 예정인 국방부는 공군 관련기관인 공군보급창, 육상운송소, 공군지원소, 영상탐사소 등을 끄레이로, 해군 관련기관인 해군운영센터, 중앙군인정보소 등을 뚜롱으로, 장교교육소를 뚜루로, 선박관리소를 발드레이어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핵보호소(100명)는 르부쉐에로, 전략기술학교는 라트레슨으로, 건강진료소와 해

양하부구조소는 브레로, 핵무장학교는 세르부르그로, 필수물품국은 낭시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재경원의 경우, 공공구매조합(400명)은 물롱세나로, 세무법률사무소(110명)는 샤페르로로, 경제협력중앙소는 사르셀로, 전매청(400명)을 앙구렘무로, 국립산업진단연구소를 릴르로, 경제정보연구소를 아라로, 상업조직연구소를 불론느로 이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처는 2,600명의 연구원을 40여 개의 신규 연구단지로 이전할 예정인데, 국립농업기계화연구소(300명)는 끄레몽페랑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정보통신부의 경우 국립통신교육센터(400명)는 벨포르로, 우편연금국(250명)은 올리앙으로, 국가재정국(345명)은 리모지로, 재정정보 및 교육국은 보르도로 이전할 예정이다. 농림부의 경우 국립산림증진소는 데시즈로, 국립경관학교는 블루아로, 국립산림사무소(240명)는 부르지로, 농업개발청(300명)은 리모지로, 국립수의학학교는 리용대도시로, 국립산림연구소(180명)는 보르도로, 국립원예학교는 베르게락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표 5-8>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분산(예정)

지역(주)	이전도시	이전기관	이전직원 (명)
수도권	생드니, 르부셰, 사르셀 등 6개 도시	핵보호소, 경제협력중앙소, 계획일반위원회, 국토계획집행처 등 13개 기관	1,808
동부지역	스트라스부르, 낭시, 메즈 등 9개 도시	국립과학연구소, 국립행정학교, 국립통신교육센터 등 19개 기관	1,188
중부지역	끄레몽페랑, 올리앙, 리용, 그레노블 등 17개 도시	국립농업기계화연구소, 국립산림사무소, 농업개발청 등 35개 기관	2,479
남부지역	마르세이유, 니스, 뚜루우즈, 몽뻬리에 등 13개 도시	국립미술품재생소, 항법기술소, 국립실업방지협회 등 32개 기관	2,747
서부지역	보르도, 른느, 낭뜨 등 19개 도시	국립산림연구소, 해양기술연구소, 전매청, 세무법률사무소 등 40개 기관	2,677
북부지역	깡, 릴르, 끄레이 등 14개 도시	산림통계및전략연구소, 재향군인연금국, 개발연구소 등 31개 기관	2,446
계	78개 도시	-	13,345

자료: 박양호 외. 2000.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 경기: 국토연구원. p.112.
박현주·김광익. 1997. 『수도권정책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경기: 국토연구원.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전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 발령에 따른 보상금으로 3만 프랑, 배우자 및 가족 이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17,500 프랑에서 20,000 프랑 등 모두 5만에서 8만5천 프랑을 지급한다. 그밖에 주택수당이나 주택보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될 경우 78여 개의 도시로 총 13,345명의 공공기관 근무직원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스웨덴

스웨덴은 수도인 스톡홀름 및 스톡홀름권으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추진하였다.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중추적인 수도기능 및 중앙정부와 관련이 깊은 기능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의 집행기능이나 연구기능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스웨덴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1969년 정부에 지방분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기관 중 수도로부터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중앙정부와 국회는 수도에 남기고 행정효율성에 지장이 없는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1971년에 정부기관에 대한 이전 가능성을 조사하여 행정효율성의 저하가 크지 않는 36개 기관(직원 수 7,350명)을 이전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이어 1973년에 2차적으로 16개 기관(직원 수 4,000명)을 선정하였다. 이로써 총 이전규모는 스톡홀름에 근무하는 정부기관 직원 42,000명 중 1/4 수준인 약 11,000명이나 되었다.

이전대상지역은 스웨덴의 3대 도시권인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를 제외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인구가 10만 이상인 17개 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공공기관 지방분산 정책에 따라 1988년 기준으로 <표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7,300명의 공공기관 직원이 지방의 16개 도시로 분산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5-9> 스웨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태

도 시 명	인구 (만명)	수도로부터 거리(km)	이전기관	이전직원(명)
보르랭게	5	190	도로청, 교통안정청	800
보 라 스	10	350	공업시험원, 기업육성재단	500
에스킬스투나	9	200	방위요새국	500
이에브로	9	150	국립지리원, 건축연구소	1,000
칼스타트	8	250	민간방위청, 방위기재국	500
선 즈 발	9	340	기상청, 사회보험청일부	800
에르부로	12	160	통계청일부	800
읍 살 라	15	60	식품청, 사회청의약국	500
팔룬, 연쇄핑 등 8개 도시	76	-	삼림공사, 농업청, 임업청 등	1,900
계(16개)	153	-	-	7,300

자료: 박양호 외. 2000.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p.113.
박헌주·김광익. 1997. 『수도권정책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2. 기업본사기능의 입지동향

중앙행정기관의 지방분산에 관한 외국사례에 이어 중추기능 중 기업본사 기능(産)의 입지동향에 관한 외국사례를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3000대 기업본사를 중심으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과 그에 따른 각종 정보와 자금의 수도권 집중이 기업본사의 수도권 집중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1) 일 본

① 기업본사기능의 입지결정요인과 동경(東京)권 집중요인

먼저 일본기업들의 본사기능 입지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본사부문의 입지결정요인에서 입지비용, 사무실의 면적, 중심본사와의 접근성, 즉 사무실

임대료와 면적, 중심본사로부터의 시간거리가 사무실 입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어 업무지원서비스의 이용편리성이 증시되어 사무실 서비스업의 집적정도가 기업본사기능 입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기업의 이익이나 사업활동의 편리성, 종업원의 생활환경 등이 중요 입지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업의 본사기능과 관련하여 교육·연수기능의 입지에서는 지역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정보처리·시스템개발기능의 입지에서는 정보통신네트워크의 정비상태가 가장 중요한 입지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연구개발기능에서는 대학·연구시설의 집적, 종업원의 생활환경, 인재의 확보 등이 중요 입지결정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본사의 동경 입지에 따른 장점으로서는 정보수집과 이용의 편리성, 최고경영층의 활동, 국제업무활동에서의 용이성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요인은 기업활동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된 본사기능의 동경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반면, 기업본사의 동경입지에 따른 불리점으로는 높은 사무실 임대료, 종업원 통근시간의 장대화, 사무실 공간확보의 어려움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즉, 동경 도심부와 주변지역간의 임대료 격차 확대, 기업규모 확대, 경영다각화, 사무자동화(OA)기기의 도입확대 등과 같은 추세변화에 따른 사무실 공간수요의 확대에 의해 정보센터의 교외입지, 본사 사무실의 통합이전 등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기업의 본사기능이 동경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 본사기능 중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과 관련한 기능에 있어서는 정보수집이 가장 중시되는 가운데 행정기관 등과의 접촉 용이성, 업계단체·동종타사와의 접촉 등 경제정보의 집적이 동경집중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향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동경에 본사를 두지 않은 기업도 정보수집기능을 갖는 사무소를 동경에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와 함께 경영자원의 조달에 있어서도 인재의 확보, 금융거래의 편리성 등이 기업본사 동경 집중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사기능 중 본부운영기능과 관련해서는 재무, 광고선전, 국제업무 등은 정부·행정기관, 업계단체, 동종(同種)타사와의 접촉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동경집중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무처리센터 등은 높은 지가(地價), 정보망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도심부 외곽에 설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개발기능도 일부 분리 독립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특성상 정보수집과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그 경향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사기능 중 내부조정 및 통제와 관련한 기능에 있어서는, 기능 자체는 동경권 입지와 큰 관련성이 없으며 조정·통제대상의 소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동경권이 일본 최대의 시장인 만큼 본사기능 이외의 기능도 집적에 따른 이점을 찾아 집중되는 가운데, 기업이미지와 종업원, 특히 본사종업원에 대해서는 문화적 환경이 양호하다는 것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어 동경권에 대한 본사집중의 유인은 강하고 앞으로도 집적 기조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경권에서의 높은 사무실 임대료로 인한 사무실 공간의 확보난, 통근시간의 장대화 등에 따른 임금상승과 통근비 등 비용상승과 같은 과도집적에 따른 집적 불이익의 증대로 본사기능의 일부를 동경 주변부나 다른 대도시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비용편익상 유리해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혁신이나 고객욕구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연구부문이나 지역영업거점을 분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본사기능의 지방분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② 기업본사기능의 분산동향과 장래의 가능성

일본에서는 기업본사 일부부문의 분산을 통하여 본사부문이 슬림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표 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경도(東京都) 도심지

역(區)에 본사를 둔 기업 중 연구소는 약 20%, 기술·연구개발본부, 정보처리·시스템개발부문은 약 10%, 교육·연수부문, 총괄업무관리부문은 약 6% 정도가 동경도심 이외지역으로 분리,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5-10> 기업본사로부터 분리된 본사기능의 입지와 장래의 입지의향

(상단 : 기업수, 하단 : 전체에 대한 비율)

구 분	해당기업 수	현재의 입지					동경도 구(區)부외로의 분산입지 가능성
		도심 3구	부도심 3구	이외의 동경도 구(區)부	동경도 구(區)부 외 지역	동경권외 지역	
기획·경영부문	21 (4.0)	8	2	4	4 (0.8)	2 (0.4)	6.6
재무·경리·총무	44 (8.3)	18	3	6	8 (1.5)	6 (1.1)	7.4
광고·선전·조사	24 (4.5)	13	1	5	2 (0.4)	2 (0.4)	6.8
교육·연수	58 (11.0)	9	4	12	25 (4.7)	6 (1.1)	22.3
영업기획·관리	48 (9.1)	27	3	12	2 (0.4)	2 (0.4)	6.6
국제사업본부	20 (3.8)	13	-	6	- (-)	- (-)	5.3
총괄업무관리 (생산, 구매, 유통관리)	64 (12.1)	11	4	15	20 (3.8)	11 (2.1)	11.7
정보처리·시스템개발	117 (22.1)	37	13	21	29 (5.5)	11 (2.1)	23.1
기술·연구개발본부	98 (18.5)	24	3	14	35 (6.6)	17 (3.2)	16.6
연구소	141 (26.7)	4	2	28	72 (13.6)	33 (6.2)	15.1
본사전체							11.7
무응답 (이전가능부문 없음)							45.6

주 : 1. 설문조사 결과 기준임.

2. 도심 3구 : 千代田, 中央, 港區. 부도심 3구 : 新宿, 澁谷, 豊島.

3. 무응답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합계가 해당기업 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4. 동경도 구(區)부외로의 분산입지가능성은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자료: 日本經濟調查協會, 1984. 『本社機能の集中と分散の相互關係に關する調査報告書』.
日本 東京 : 日本經濟調查協會 에서 발췌·정리함.

특히, 정보처리·시스템개발부문의 경우 1984년과 1987년 동안의 동경권 내에서의 신규입지와 이전입지 중 동경도심이 약 70%, 동경권 내 교외지역이 약 30%를 차지함으로써 동경권 내의 교외지역에 분산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금융업의 데이터처리부문이 동경권 내의 교외지역 나아가 동경권외의 주변지역으로 분산됨으로써 이를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연구소 등 연구개발부문의 경우, 1985년과 1987년 동안의 신규입지 동향에서는 관동 입해·내륙지역이 연구소용지 취득건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동경권 및 그 주변권역으로의 집중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입지이전에서는 대도시권의 중심부에서 교외지역으로의 이전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사 전체의 분산과 관련해서는, 본사입지의 동경지향성이 대단히 강하여 본사전체가 동경도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예는 드물지만, 최근 상장(上場)기업 중에서도 동경도심으로부터 교외지역으로 본사 전체를 옮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¹⁶⁾. 그리고 이들의 이전사유로서는, 종전에는 불황, 실적부진에 따른 구조조정과 합리화의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분산된 본사기능의 집약화, 자사 중핵 공장으로의 본사이전, 기업내부의 연계강화 등의 경우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일본에서는 새로운 기업본사 기능 분산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즉, 교외지역에 위성사무실(satellite office)을 설치하여 근처의 주거지로부터 통근토록 함으로써 종업원의 주택난, 통근조건의 악화에 대처함과 아울러 도심의 사무실공간 부족 등의 해소도 도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리조트사무실(resort office)을 신설하는 사례가 새로운 사무실 입지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본사 입지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기업본사의 입지결정에서 정보수집이 가장 중시되는 가운데 정부·행정기관 등과의 접촉 용이성, 업계단체·

16) 일본에서 1984년 6월과 1987년 8월 사이에 동경도(東京都) 구(區)지역에서 구(區)지역 밖으로 기업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11개 사(社)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オフィス分散研究會, 1989. 『脱東京戰略: オフィスの地方立地』, 日本 東京: ぎょうせい, pp.66-67.

동종타사와의 접촉 등이 강조되고, 다양한 금융정보의 집적, 전문적 지식이나 기법을 보유한 인재 집적, 국내외 금융시장과의 유기적 결합의 필요성 증대, 경영자원의 조달에 있어서 인재의 확보와 금융거래의 편리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최대의 시장인 수도권으로 집적에 따른 이점을 찾아 각종 기능의 집중이 강화되고, 기업이미지와 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됨으로써 기업본사의 동경권으로의 집중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정보통신네트워크 형성의 진전, 사무실임대료 상승, 사무실 공간 확보난 가중, 통근시간의 장대화, 임금상승과 통근비 상승 등 동경권 과도집적에 따른 불이익의 증대로 기업본사의 지방분산도 일부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기업본사 입지결정에서, 앞 장(章)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기업본사 입지결정요인과 비슷한 부문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미 국

① 기업본사기능의 입지동향

미국의 경우 미국의 제조업매출액 상위 500개 회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업본사의 도시별 입지동향에서 미국 최대의 기업본사 집적지인 뉴욕대도시권에 입지하는 본사 수는 <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8년과 1985년의 27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즉, 1958년에는 500대 대기업 중 151개 사(社)의 본사가 뉴욕대도시권에 집중되어 그 비중이 30.2%에 달하였지만, 1975년과 1985년에는 본사 수가 각각 115개와 87개로 줄어들면서 그 비중 역시 각각 23.0%와 17.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뉴욕, 특히 맨해튼으로부터 기업본사가 전출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높은 사무실 임대료, 부동산세, 점유세 등 높은 조세부담, 전력요금 등과 같은 높은 경상경비, 높은 노동비용 등 과도집적에 따른 불이익 요인들인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 그리고 뉴욕에 본사를 두더라도 특별한 장점이 없다는 기업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수집활동, 금융상의 각종 서비스, 고객에 대한 영업활동, 마케팅, 컨설턴트 등 전문서비스 기능의 집적이 뉴욕에 본사를 두는 경우의 이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 기업본사기능이 분산 가능한 이유로서는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능,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발달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부의 권한과 역할 축소, 정보서비스업, 컨설턴트 등의 발달, 사무실 유지비용의 저렴, 양호한 공공서비스, 직접대면의 중요성 감소 등이 기업본사의 분산을 촉진하는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의 시장규모, 특정지역에의 동종(同種) 업종의 집중, 지사로의 권한분산 등이 본사기능의 지방분산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1> 미국 500대 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변화 추이

(단위 : 개소)

지 역	1958	1975	1985
뉴욕 CMSA	151	115	87
시카고 CMSA	50	44	39
로스앤젤레스 PMSA	17	21	14
필라델피아 PMSA	17	13	8
디트로이트 PMSA	16	13	13
샌프란시스코 PMSA	13	9	8
워싱턴D.C. PMSA	0	2	5
보스톤 PMSA	7	12	15
피츠버그 PMSA	23	15	16
샌트루이스 PMSA	14	12	10
클리블랜드 PMSA	15	17	12
휴스턴 PMSA	1	11	10
미니애폴리스·센트폴 PMSA	7	12	15
달라스 PMSA	6	6	13
애틀란타 PMSA	0	5	7
신시내티 PMSA	4	3	4
캔사스시티 PMSA	3	1	3
덴버 PMSA	0	2	2
전체 CMSA와 PMSA	337	302	265

자료: 오피스分散研究會. 1989. 『脱東京戰略: 오피스의地方立地』. 日本 東京: ぎょうせい. p.75에서 발췌·정리.

② 기업본사기능의 지역간 업종분포와 이전경로

미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업본사의 입지가 기존의 동북부지역 중심에서 남·서부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종별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포에서는 그 입지패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즉, <표 5-12>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과 소매업 등의 기업본사의 지역간 분산입지는 뚜렷한 반면에 금융·보험의 경우에는 동북부지역으로의 집중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표 5-12> 미국 기업본사의 지역간 업종분포 변화 : 1969~1989

Type of Corporation		Region				n
		Northeast %	Midwest %	South %	West %	
Industrial	1969	45	37	8	10	500
	1979	42	33	13	12	500
	1989	34	34	21	11	500
Banking	1969	40	28	10	22	50
	1979	36	28	16	20	50
	1989	44	22	22	12	50
Insurance	1969	44	32	20	4	50
	1979	46	30	16	8	50
	1989	52	28	6	14	50
Retail	1969	46	36	8	10	50
	1979	32	36	18	14	50
	1989	26	24	28	22	50
Transportation	1969	24	32	20	24	50
	1979	10	38	30	22	50
	1989	14	32	36	18	50
Utilities	1969	36	28	28	8	50
	1979	30	26	34	10	50
	1989	30	22	34	14	50
Total, all types	1969	43	35	11	11	750
	1979	38	33	16	13	750
	1989	34	31	22	13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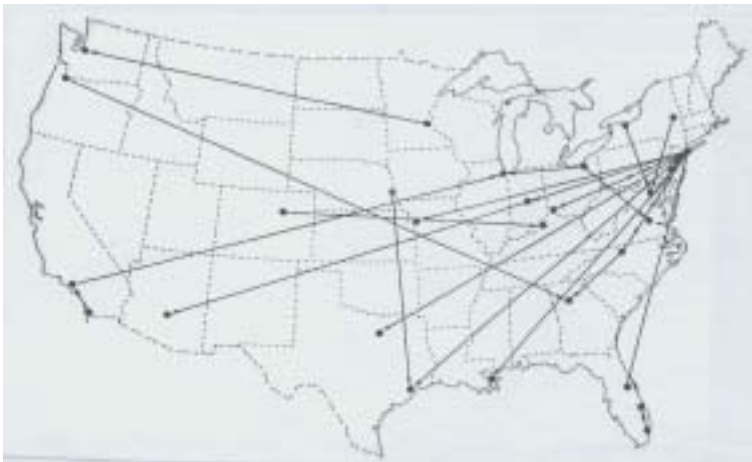
자료: Sally K. Ward. 1994. "Trends in the Locations of Corporate Headquarters, 1969-1989". *Urban Affairs Quarterly* v.29 n.3. p.471.

제조업 본사의 경우, 1969년과 1989년의 20년 동안에 동북부지역의 입지비중이 45%에서 34%로 크게 줄어든 반면 남부지역의 입지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에 8%에서 21%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매업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본사의 입지에서 차지하는 동북부지역의 비중이 46%에서 26%로 급감한 반면 남부지역의 경우 그 비중이 8%에서 28%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서부지역의 경우에서 본사 입지비중이 10%에서 22%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금융업과 보험업의 경우, 1969년과 1989년 사이에 기업본사의 입지에서 동북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0%에서 44%, 44%에서 52%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의 경우 보험업종 기업본사의 입지비중이 같은 기간에 20%에서 6%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대기업 본사의 지역간 이전패턴을 살펴보면, 1980년과 1987년 사이에 포천지(誌)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기업본사의 지역이전이 상당한 정도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같은 기간 동안에 뉴욕에서 78개의 대기업 본사가 감소하였는데 그 중 11개 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 주요 이전경로는 <그림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

<그림 5-5> 미국 기업본사의 지역간 이전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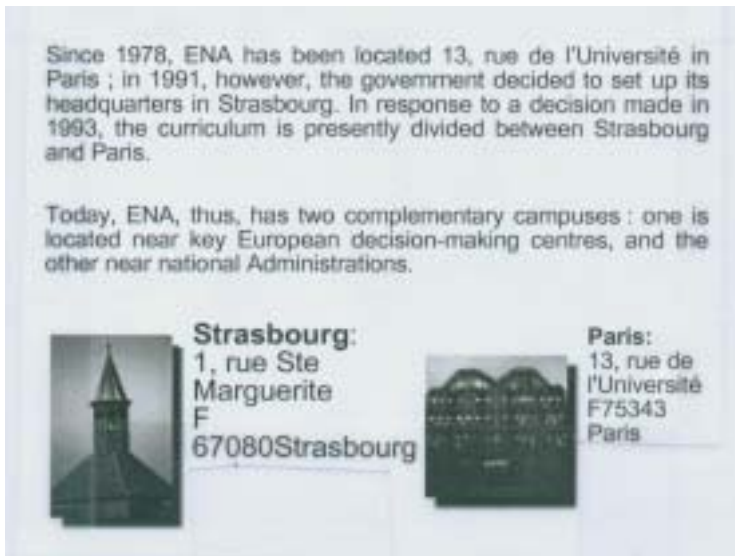
자료: Holloway, Steven R. and James O. Wheeler. 1991. "Corporate Headquarters Relocation and Changes in Metropolitan Corporate Dominance, 1980-1987". *Economic Geography* v.67 n.1. p.62.

서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그린스보로(Greensboro)의 경우에서도 1980년과 1987년 사이에 500대 기업본사 중 7개가 감소하였는데 그 중 2개가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클리블랜드의 경우도 11개 대기업 본사가 감소하였는데 그 중 2개가 타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신시내티의 경우에는 감소한 3개 대기업 본사 중 2개 대기업 본사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대학의 지방이전 : 프랑스의 국립행정학교(ENA)

중추기능 중 명문대학 기능(學)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의 지방분산이 대표적인 외국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프랑스 정부는 1991년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의 일환으로 고급행정두뇌 양성기관인 국립행정학교(ENA)의 본부를 파리에서, 파리로부터 480km 동북부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5-6>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의 지방분산 사례



자료: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 홈페이지(<http://www.ena.fr>).

이에 따라 1993년에 커리큘럼이 스트라스부르와 파리로 나뉘어 지고, 현재 국립행정학교(ENA)의 캠퍼스는 2개의 상호보완적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는 EU본부가 위치한 스트라스부르에, 다른 하나는 국가행정중심지인 파리로 양분되어 있다.

CHAPTER 6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 전략과 방안

1.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관련 정책의 내용과 평가

1) 중추기능 지방분산관련 정책의 현황

우리는 앞에서 실태분석결과를 종합하면서 국가공공기관 등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인구 및 산업과 각종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근본원인이 되기 때문에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이 국토균형발전에서 가장 근본적인 과제임을 보았다. 그리고 외국사례를 통하여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수도권기능의 이전 등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시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이라는 것을 보았다. 본 장(章)에서는 앞에서의 이러한 연구분석결과를 이어받아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중추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 전략과 방안을 다룬다. 이에 앞서 먼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온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관련 정책의 내용을, 본 연구에서의 중추기능 유형에 따라 국가공공기관(政), 기업(産), 대학(學) 중추기능별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나뉠대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① 정(政) :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중추기능의 수도권 입지규제를 통하여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공포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동(同) 법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공기관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연면적이 1,000m² 이상인 공공청사의 수도권 입지를 강력히 억제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규제대상이 3,000m² 이상이었으나 입지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규모를 하향 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전면금지하고 증축은 기능제고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설기관의 민간건물 임차를 금지하고 민간건물을 임차 중인 기관의 임차연장도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시범사례로서 식약청·국립보건원 등의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성과를 토대로 동일·연관기능의 집단이전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확대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 국회에서 그 제정을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인구의 지방분산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국가 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이러한 지방이전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관할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의견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관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섯째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을 동결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과 관련한 정부정책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정부대전청사로의 일부 정부기능 이전사업이다. 이의 주요 추진경위와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정부대전청사로의 국가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1989년 1월 『수도권실무기획단』이 발족한 후 동년 2월 대통령 지방순방시 제2행정수도의 육성을 약속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안은 대통령의 지방순방 직후인 1989년 4월 27일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지역균형발전시책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이어 1990년 9월 국무회의에서 청(廳)단위 중앙행정기관의 대전이전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정부에서는 청사이전에 따른 재원조달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을 1991년 12월에 제정하였다. 청사부지는 대전시와 협의를 통하여 둔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입지하도록 하고, 1991년 12월 부지매입계약을 완료하였다. 정부 대전청사는 1993년 9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5년 동안의 건설기간을 거쳐 1997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1998년에 9개 청단위 기관과 정부기록보존소 등 10개 기관이 대전의 둔산단지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청(廳)단위의 이전기관은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철도청, 통계청, 문화재청이다.

② 산(産) :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

그 동안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본사나 공장을 2002년 말까지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각종 지원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에

서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금융기관, 대학에 대한 세제·금융·배후도시개발 등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999년 8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발표하고 2000년 1월부터 3년간에 걸쳐 시행중에 있다. 그 주요 내용을 기업의 지방이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해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은 50%를 감면하고 기존 공장 등의 매각시 특별부가세는 과세이연하거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도 5년간 100%, 그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둘째,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정부출자금 1천억 원을 포함한 총 1조 원 규모의 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이전기업의 공장, 사옥 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관의 특별 신용보증 실시, 연간 매출액의 1/4에서 1/3로 신용보증한도 확대, 산업기반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넷째, 이전하는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인 대단위 기업군(群)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생활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발부지의 확보를 위해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배후도시 주변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건설에 대해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합동으로 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금융·세제지원 안내, 기존부지 매각 및 입지선정 상담 등 지방이전을 일관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즉, 정부는 현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교통부에 『지방이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이전기업에게 인·허가절차 안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원센터는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건교부 지역정책과장을 부단장으로 하여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4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센터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허가절차의 안내와 인·허가에 대한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협조 요청, 한국토지공사를 통한 종전대지 매입의 적극 유도, 미분양 산업단지 등 입지대상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산업은행·산업기반기금 등의

자금융자 알선, 세계감면, 사회간접자본(SOC)설치 등 각종 지원사항의 안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안내책자의 작성·비치 및 배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학(學) : 대학의 지방이전 정책

대학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하여 수도권 대학 정원 동결과 수도권내 대학 신설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수도권 소재 국·공·사립대학은 「지방대학 육성대책」과 연계하여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있는데 정원감축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감축정원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정원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거나 억제하고 있는데, 다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의 대학원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신설은 예외로 하고 있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전문대학 및 입학정원 50인 이내 및 100명 이내인 첨단전문분야의 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예외로 하고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신설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대학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수도권대학의 지방분교 설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1972년 대도시 인구분산시책 중 그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가, 1977년 수립된 「수도권연구재배치계획 1977-1986」 중 교육부문계획에 맞추어 대학의 지방 분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78년부터 현재까지 14개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분교를 설치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등 12개 대학의 분교가 1978년과 198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그 후 1985년에는 상명대 천안캠퍼스, 1989년에는 홍익대 조치원캠퍼스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대학의 지방이전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지방이전은 좀처럼 이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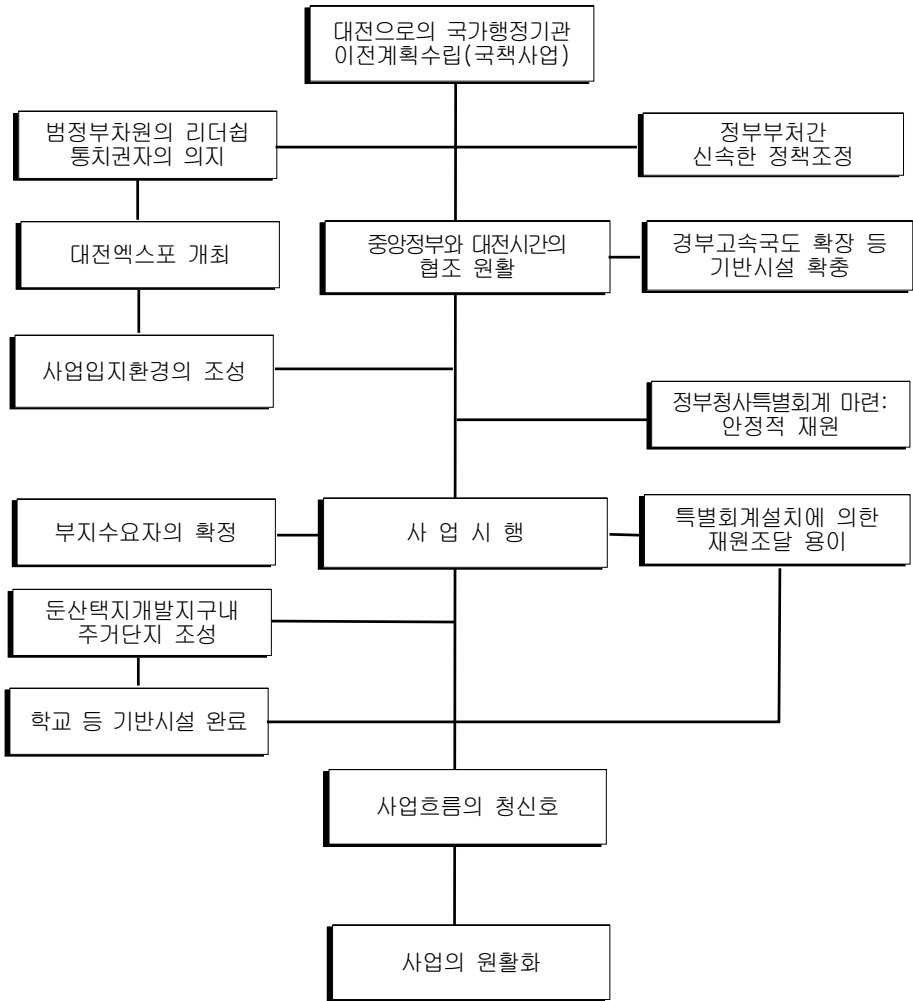
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1999년 8월 재정경제부의 지방이전대책에서 대학의 지방 이전에 따른 애로요인을 집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외의 기존부지를 한국토지공사 또는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토록 함으로써 신규부지 확보 등 이전소요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기자재 확충 등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지방이전 대학을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2) 중추기능 지방분산관련 정책의 평가

① 국가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중추기능 지방분산 관련 정책을 평가해 보면, 먼저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 입지의 규제에 치중함으로써 기존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일부 공기업의 경우는 수도권내로 분산됨으로써 수도권내로의 근거리 이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대전청사로 9개 청(廳)이 성공적으로 이전하여 정부의 의지와 이전대상지역에서의 수용여건 준비 등이 지방분산정책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즉, <그림 6-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대전청사로의 국가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과 범부처 차원에서 최고 의사결정자의 강력한 의지 하에 추진되었으며, 사전에 대전 엑스포 개최, 공공에 의한 둔산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주거시설 등을 확충하고, 정부의 특별회계를 통하여 이전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였으며,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간에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뤄짐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림 6-1> 정부대전청사로의 국가행정기관 이전사업의 원활요인 메커니즘



자료: 박양호 외. 200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평가와 개선방안』. p. 210.

②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평가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1999년 8월 재경부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통합지원인센티브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별다른 효과가 없

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때문에 기업의 지방이전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도 작용하였다.

기업의 지방이전에 관한 한 시장경제의 힘이 작용하여 정부의 지원제도를 통한 일종의 ‘밀어내기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이 판명되고 있다.

③ 대학 지방이전 정책의 평가

수도권내에서의 대학 신설규제는 지방에서의 대학설립을 촉발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최근 아산신도시의 개발에 따라 순천향대학의 의과대학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의 일부 단과대학을 아산신도시로 이전하려는 분위기 존재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도권 대학정원을 총량규제로 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학생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학생유치의 어려움이 지방에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방이전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별한 지원이 있을 경우 단과대학 등 부분이전은 가능하겠지만, 이 역시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은 오히려 인근에 있는 기존 지방대학의 학생모집에 타격을 주게 되므로 기존 지방대학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실제로 아산신도시로의 수도권 소재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천안, 아산 등지에 소재하는 대학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방분교의 경우 학교설치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분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공동화 현상 발생으로 수도권 인구의 분산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3) 중추기능 지방분산관련 정책평가의 종합과 시사점

① 정책평가의 종합

중추기능의 지방이전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관련 정책은 수도권 입지규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의지와 이전대상지역에서의 수용여건이 지방이전에서 성공의 관건이 된다고 하는 점이다. 셋째, 기업의 지방이전은 지원장치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어려운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민간부문의 지방 밀어내기 방식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대학의 지방이전은 다른 기능과의 연계나 복합적인 이전보다는 개개대학의 개별적인 공간수요에 의존하며 대학의 지방이전이 기존 지방대학의 육성시책과 직접적인 상충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② 시사점

이러한 정책평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다. 첫째, 중추기능의 실질적인 지방이전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지방이전시책이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민간부문보다 용이하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서 정부의 의지와 이전대상지역에서의 수용여건이 상호 결합될 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셋째, 민간기업의 경우 밀어내기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사회적 물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할 경우 국가공공기관의 분산이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촉발시키는 물꼬역할이 가능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넷째, 대학의 경우 대학별 부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개발과 연계하되 지방자체에 소재하는 대학을 육성시키는 방안 역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2.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여건과 전망

1) 전반적인 여건의 전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추기능의 수도권 지배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지배력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지방분산 여건이 발아(發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방분산 여건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향후 동향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여건을 개략적으로 전망해 보기 위해서는,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에 근거한 내적 메커니즘과 외적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변화에 관한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중추기능의 집적 메커니즘에 근거한 요소별 변화 전망

① 내적 메커니즘의 요소별 전망

중추기능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의 내적 메커니즘은 사회적 관성, 정경협력, 네트워크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데, 먼저 사회적 관성의 향후 동향을 전망해보면 지방육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중추기능 수도권 집적의 사회적 관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화, 첨단·지식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수도권의 응집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 또한 고속철도의 운행과 첨단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사회적 관성이 희석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정경협력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부(government)와 비즈니스(business)간의 관계가 과거보다는 덜 밀접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네트워크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정(政)·산(産)·학(學) 상호간의 네트워크에 있어 산(産)과 학(學)의 네트워크는 더욱 돈독해지고 정(政)과 산(産), 정(政)과 학(學)의 네트워크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역의 산업 군집화(clustering)에 따라 산·학·관 네트워크가 국지적으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외적 메커니즘의 요소별 전망

중추기능 수도권 집적의 외적 메커니즘은 여섯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요소별로 향후 변화동향을 전망해보면, 먼저 수도권기능의 입지 및 집중에 있어서는 세계화 속에서 지역과 도시의 독자성이 강화되어 수도권기능의 중요성은 감소될 전망이다. 중앙집권적 정치행정구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방분권적 정치행정구조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급두뇌 입지와 관련해서는 지방 대학생의 능력은 수도권 대학생의 능력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바 고급두뇌의 입지가 지방에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 활동 기반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국제적 기반이 계속 강력할 것이나 이는 고속교통·첨단정보통신 기반에 크게 의존하는데, 고속교통·첨단통신 기반의 경우 2004년 4월에 서울-대전-대구간 고속철도 개통, 2008년에 서울-부산 전구간의 완전개통에 따라 중추기능이 자연스럽게 공간적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고속철도의 개통은 분산효과와 집중효과의 양면성을 띄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분산효과가 큰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집중효과가 더 커서 수도 동경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고속철도의 개통은 지방육성의 효과에 따라 프랑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일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단체 및 업계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기능의 중요성 약화, 지방분권화, 고속교통·첨단정보통신 기반의 발달에 따라 지방분산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시장(수요) 요소에서는 수도권의 시장지배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고속교통·첨단정보통신망의 발달, 지방경제 변화에 따른 구매력 변화에 의해 그 효과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 및 자금 집중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지배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지방경제력의 변화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한 향후 지방분산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을 종합해 볼 때,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의 지속

화와 지방분산 가능성이 병존하고 있으나 분산가능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이 전개되면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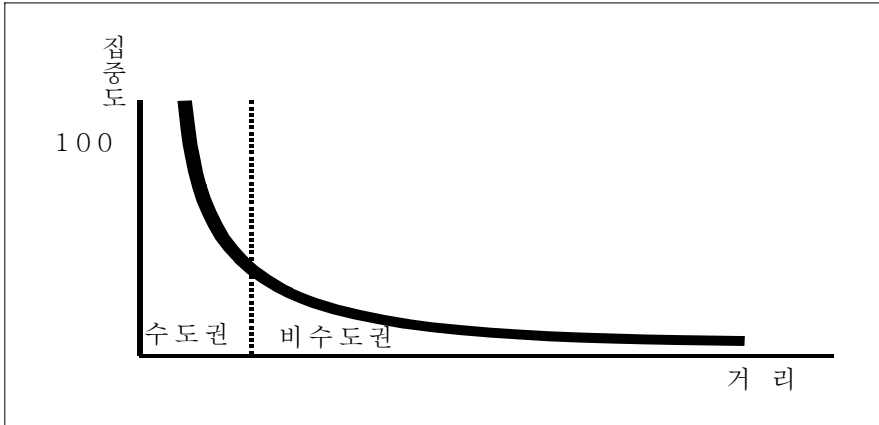
이러한 지방분산 여건에 편승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슈퍼모노형의 단일 수도(Super-Mono Capital)에서 전문화된 다핵수도(Specialized Multi-Capitals)로 국토공간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즉, 수도권 집중의 블랙홀 역할을 담당하는 정(政)·산(産)·학(學) 중추기관이 수도권에 초거대의 지배력을 갖는 국토공간인 슈퍼 모노(Super Mono)형의 단일수도체제에서 탈피하고,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을 선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되 지방거점도시가 특정부문에 전문화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일종의 「전문화된 다핵수도체제」(Specialized Multi-Capitals) 국토공간으로의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그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된다.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에서는, 앞의 실태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외국사례, 중추기능 지방분산 관련 기존시책의 평가결과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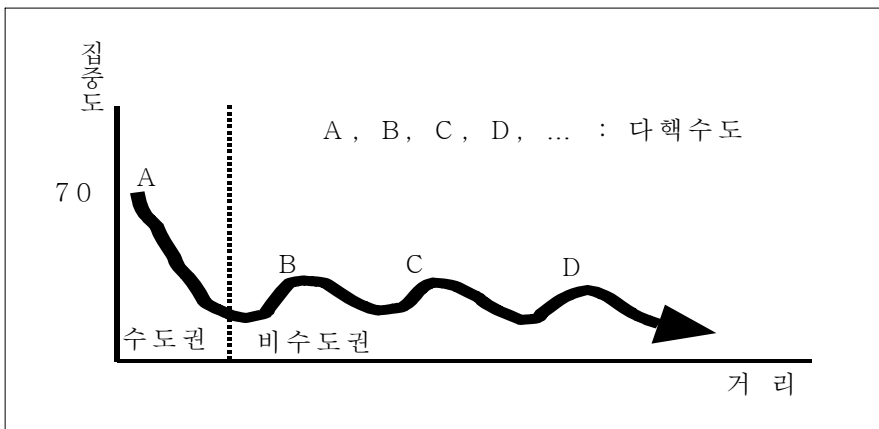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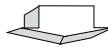
첫째,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을 수도기능의 분산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둘째, 중추기관을 수도권내가 아닌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을 지향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으로 분산하되 지방경제발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넷째,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 중 지방분산이 용이한 기능부터 이전하여야 한다. 산(産)의 대기업 본사, 학(學)의 주요 대학의 지방분산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최근의 지방분산시책에서 드러났

다. 따라서 정(政)의 중추기능인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오히려 용이하다. 다섯째,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을 순차적 또는 병렬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림 6-2>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향



현재 : 슈퍼모노형의 단일 수도
(Super-Mono Ca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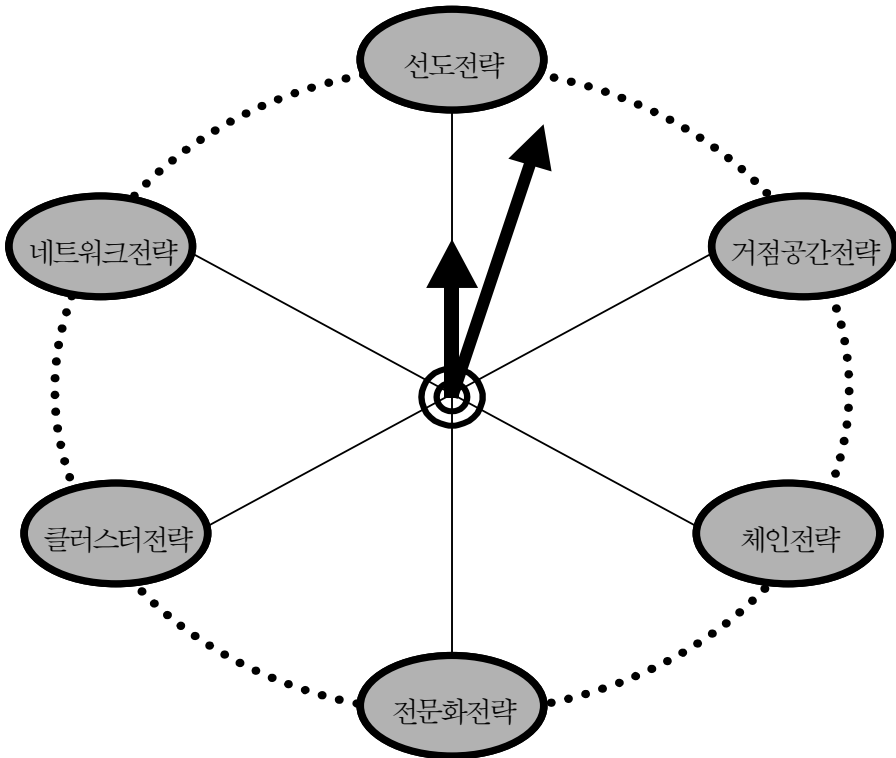


향후 : 전문화된 다핵수도
(Specialized Multi-Capitals)

2) 중추기능 공간적 재편의 전략모델

위의 기본방향에 따라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한 전략모델을 설정할 수가 있다.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모델은 <그림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가지의 전략요소로 구성된다. 선도전략(propulsion), 거점공간전략(growth pole), 체인전략(chain), 전문화전략(specialization), 클러스터전략(cluster), 네트워크전략(network)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의 전략요소를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모델이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 모델이다. 이는 마치 시계와 같이 방향성을 가지며 순차성을 지닌다. 이를 「시계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3>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 모형 : 시계모델



3) 중추기능 공간적 재편전략별 내용

본 연구에서 『시계모델』이라 명명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 모델을 구성하는 6가지 전략요소 각각에 대하여 시계방향으로 그 순서에 따라 전략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선도전략

선도전략은 정(政)·산(産)·학(學) 중추기관 중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육성을 선도하는 기능을 갖는 중추기관을 선별하여 지방으로 우선 이전하는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술하듯이 정부부문(政)의 국가공공기관(정부부처, 공기업·정부산하기관)을 선도기능을 보유하는 중추기관으로 선정한다. 정부대전청사로의 청(廳) 단위 국가행정기관 이전에서와 같이, 국가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전략이다.

② 거점공간전략

거점공간전략은, 선도전략에 의거 지방으로 이전되는 중추기관을 지방에서 수용하는 공간을 만들되, 지방의 거점도시에 이전되어 오는 중추기관의 수용공간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③ 체인전략

체인전략은 공간적 이주(移住, migration)에서 연쇄이주(chain migration)¹⁷⁾ 형태와 유사하다. 이는 선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을 뒤따르거나 병행하여 선도 중추기관이 입지한, 또는 입지할 거점공간으로 연쇄 이전하는 전략이다. 가령 청주 인근의 오송보건의료단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국가공공기관과 관련 민간기업이 병행하여 이전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17) 연쇄이주(chain migration)라 함은, 일정지역으로 먼저 이주한 사람이 친구, 친인척 또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주를 권유하여 연쇄적으로 이주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연쇄이주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예: 구로산업단지로의 근로자 이주 등).

④ 전문화전략

전문화전략이란, 선도적으로 이전하는 중추기관과 뒤따라 이전되어 오는 타 기관이 거점공간에서 특정기능으로 전문화하는 전략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오송단지가 보건의료기능으로 전문화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

⑤ 클러스터전략

클러스터(cluster)전략이란, 전문화전략에서 더 나아가 관련산업과 조직체가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군집화(群集化)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즉, 특정 산업·기술 등으로 전문화하되 관련 제조업체, 관련 서비스업, 관련 지원단체·조합, 관련 연구소, 관련 대학 등이 군집하여 서로 경쟁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가는 전략이다.

⑥ 네트워크전략

네트워크전략은 클러스터된 지역이 다른 지역과 연계되어 지역간 상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즉, 고속철도망, 고속통신망, 업무협의 활동 등을 통하여 수도권과 타지역간 그리고 외국과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하여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상호 이동하고 교류하는 전략이다.

4.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별 방안

이하에서는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 모형, 즉 『시계모델』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전략요소들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실천방안을 살펴본다.

1) 선도전략 방안

선도기관의 선택

정(政)·산(産)·학(學) 중추기관 중 정(政)과 관련한 중추기능을 선도기관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기능 관련 국가공공기관을 선도기능을 갖는 중추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산(産)의 중추기능인 대기업 본사의 경우는 1999년 8월 재정경제부 정책의 효과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정책을 통한 이전효과가 실효성이 없어 선도기관으로는 부적절함이 판명되었다. 대학의 경우는 대학의 부지수요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政)·산(産) 부문을 선도하는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지방이전 대상 선도기관의 범위선정과 대안: 국가공공기관의 범위 대안

그러면 지방으로 선도하여 이전해야 할 선도기관인 국가공공기관 중 어떤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두 가지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지방이전 대상 선도기관의 범위에 있어서 제1안으로, 일부 부처를 제외한 청(廳)급 기관,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등을 포함하는 안(案)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일부 또는 일체의 정부부처를 포함하고 청(廳)급 기관,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등을 포함하는 제2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1안의 경우는, 정부대전청사로 9개 청(廳)이 이전하였으나 단순 이사에 불과하여 지방분산의 물꼬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안(案)은 지방분산의 물꼬를 트기에는 역부족이며 조직 내 구성원의 합의를 얻기가 어렵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제2안의 경우는 국가적인 의지가 필수적이며, 실현될 경우 지방분산의 물꼬역할이 가능하며 파급효과가 크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가 선도기관의 핵심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제2안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제2안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일부 정부부처 이전의 경우와 일체의 정부부처 이전간에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선도기관 이전의 공간적 방식

선도기관 이전의 공간적 방식은 단일지역 내에 집단화하는 경우(제1안), 복수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경우(제2안), 집단화와 분산배치를 혼용하는 경우(제3안)

를 고려할 수 있다. 제1안의 경우 집단 배치되는 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기관간의 업무협조여건이 양호하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 해당지역에만 그 효과가 그치고 전체적인 지방육성효과는 미약하다는 약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2안의 경우는 분산 배치되는 지역들의 활성화가 기대되나 기관간의 업무협조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제3안의 경우는 그 이전규모 여하에 따라 제1안과 제2안의 장점을 수용할 수가 있다.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할 때 현실적으로 이전되는 부처의 숫자에 의해 각 안(案)의 장단점은 크게 좌우될 것이다. 소수의 정부부처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경우 제2안이 적절하나, 다수의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대규모인 경우 제3안이 적절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일체의 정부부처를 이전할 경우에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 선도기관 선정의 기준과 지원

선도기관의 선정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가령, 수도권에 구태여 있을 필요가 없는 기관, 지방에 관련기능이 오히려 집중되어 있는 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촉진효과가 큰 기관, 연계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아 연쇄적인 이전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복지제공, 청사건축비 지원, 이전비용 지원 등과 같은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가령, 이전직원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주택수당, 주택분양권 등 주택관련 보조, 자녀교육비 부분지원, 공과금 감면지원, 특별용자 등의 지원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국가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안정된 재원이 필요하다. 청단위 국가공공기관의 정부대전청사로의 이전 시에도 특별회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에는 「공공청사이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기존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거점공간전략 방안

□ 선도기관 수용 도시·지역의 선정

선도기관의 수용도시 또는 수용지역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 이슈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수용도시 또는 지역으로서 앞서 제시한 중추기능 집적 메커니즘 요소가 상대적으로 발달된 지방거점도시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선도기관 수용도시의 지정은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방식과 지방거점도시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일정 기준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지정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 지방거점도시의 지구지정 및 인센티브

국가공공기관을 수용하는 지방거점도시에서 어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시된다. 이 경우 제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거점도시 내의 일부지역을 제도적으로 『이전거점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거점지구는 신시가지(new town in town) 형태로 조성하되 10~50만 평 내외의 규모로 하고 도시여건에 따라 도심지 내 또는 외곽지역에 조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전거점지구』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세·금융 지원, 도시개발권 부여, 개발부담금 면제 또는 환급,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대학의 이전을 유도하는 『대학타운』 조성

국가공공기관 이전지(移轉地)에 대학 층의 선호를 고려하여 대학이전의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수도권 소재 대학의 공과대학, 학부과정 등을 수용하기 위한 제2캠퍼스 건설을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타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학타운 조성 시에도 국공유지의 활용 및 대학입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3) 체인전략 방안

□ 선도기관 이전 후 관련기관·업체를 ‘불러오기’ 방식으로 유치

지방이전의 선도적 주체로서 중앙 정부부처를 포함한 국가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관련 민·관 기관을 연쇄적으로 지방으로 불러와야 한다. 그래야만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육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적 발전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부대전청사(둔산단지)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공공기관 이전이 단순 근무지 이사방식을 지양하고, 국가공공기관이 지방거점도시로 이전한 후 관련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관련 기업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적극 유치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도권에서 밀어내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도기관 이전을 통한 ‘불러오기 방식’이 필요하다.

□ ‘불러오기 방식’에서의 인센티브 부여

국가공공기관이 선도하여 이전한 후 관련 민간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의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실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1999년 8월의 재정경제부 대책에서 통합지원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즉, 본사 및 공장매각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세 10년간 100% 면제, 산업은행의 지방이전기업지원자금 5조원 규모 조성, 종업원 500명 이상인 기업체의 도시개발권 부여(이전기업이 지방거점도시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이전을 희망할 경우 우선입주권 부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 등의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 본사의 부분적인 이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연쇄적인 이전에 대해서도 임직원에게 대한 조세·금융 지원, 분양권, 주택보조비 등과 같은 주택관련 인센티브, 공과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요망된다. 대학의 경우는 지방거점도시로 국가공공기관을 따라 연쇄 이전하는 경우가 희소할 것인 바, 앞에서 언급한 별도의 『대학타운』을

조성하여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일부 대학의 연쇄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4) 전문화전략 방안

중추기능을 갖는 국가공공기관 등 민·관 중추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시에는 특정기능을 특정 지역·도시로 몰아주어 공간적 전문화를 도모하는 구도가 요구된다. 마이클 포터가 주장하듯이 지역과 도시 경쟁력의 근원이 '전문화'이기 때문이다(M. Porter, 1990). 중추기관을 지방거점도시로의 이전을 유도할 경우에 해당 도시·지역의 특화기능 또는 이전거점지구의 특화기능을 고려하여 특정기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首都)로 육성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때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의 「산업별 수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청주 인근의 오송의 보건의료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오송의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의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을 따라 수십 개의 의료보건 관련 민간업체가 이전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보건의료 생명공학 수도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바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에도 행·재정·금융적 지원이 요구된다. 즉, 특화기능 업체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가령 특화기능 업체에 대해서는 조세, 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관련부처의 특정기능 육성과 관련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클러스터전략 방안

중추기관을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분산하여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도모할 경우에, 지역전문화 전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클러스터, 즉 지역군

집화 전략방안이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전략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일정지역 내에서 고도의 협력·지원·경쟁 관계를 맞도록 하고, 또한 관련 기관을 유치 또는 육성해야 한다.

첫째로, 지방거점도시 내 이전거점지구를 중심으로 특정기능 관련 산·학·연·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특정기능 관련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관련단체, 조합, 인근대학 등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관련기관의 유치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초일류의 지방대학 육성 전략과 고도로 연계되어야 한다.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 전략 산업·기술과 연계된 지역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을 초일류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의 전략산업클러스터를 지역의 대학이 주도하여 육성하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산업집적 관련 중앙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에 제정된 산업집적법에 의거한 지역개발촉진금 지원, 과학기술부의 기술혁신 관련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하여 범정부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중추기관의 지방이전 시에 지역클러스터의 형성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세 지원, 중소기업진흥자금 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네트워크전략 방안

□ 기관간 업무협조 원활을 위한 교통·정보네트워크 기반시설 확충

중추기능이 입지하는 지방거점도시간 고속철도의 운행 및 고속철도역과 이전 거점지구와의 교통망 확보(전철, 도로 등)로 지역간 신속한 이동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속철도 등 초고속 교통기관으로 지역을 연결하는 수도이전 방식인 일본의 확대(擴都) 개념을 도입,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부록 참조). 또한 독일

의 경우에서 본과 베를린간에 셔틀항공을 이용하듯이 지방거점도시에 입지한 공항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일부 관례화된 회의의 경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 회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서와 같이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부처는 서울에 개별 연락사무소 또는 통합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간 네트워크를 통해 공간적 분산 속에서 중추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무회의와 국회상임위의 지방개최를 통한 수도권·지방간 권력네트워크 강화
정기적으로 국무회의를 관련부처가 이전한 지방거점도시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관련부처가 입지한 지방거점도시에서 관련 국회상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거점도시가 수도권의 변방이 아니라 권력의 핵심으로 변모하면서 중요 정보의 발신지 기능을 갖는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 다른 지역과 외국과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강화
중추기능 소재 지방거점도시와 외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박람회, 국제전시회,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5.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국책프로젝트화 및 전담기구의 설치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먼저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프로젝트를 국책프로젝트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책프로젝트 입안 및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 설치하여야 한다. 『수도권 중추기관 지방이전 기획단』과 같은 전담기구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여 『수도권 중추기관 지방분산 10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수도권 중추기관 지방이전 지침』을 작성하는 등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때 외국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한 한국형 모델을 기획,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법적인 장치 마련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을 실천하자면 법률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추기능 이전을 위한 별도의 법(수도권중추기능지방이전에관한법률)을 마련하거나 국회에서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또는 새로운 지역균형발전법 속에 중요규정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 중추기능 이전 재원의 마련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을 포함하여 지방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 『국토균형발전기금』 또는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원의 규모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수도권과밀부담금,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에 의하여 5~6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부가가치세 중 숙박·음식 관련 세원의 일부, 공장이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법인세 일부를 세원으로 하여 지방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의한 신규 고정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생산적 분권화’ 기반의 조성

중추기관의 지방분산을 통해 분권·분산국가를 지향하자면, 특히 지방분권의 기초가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에 계획고권, 행정고권, 재정고권을 부여하여 지방분권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지방분권이 다른 지자체와, 그리고 중앙정부와 고도의 협력 속에서 추진

될 때, 분권의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속에 지역간, 중앙정부간 협력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이 필요하다. 이 같이 지자체의 자율적 고권(高權)과 지자체와 다른 지자체간,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의 분권화를 ‘생산적 분권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은 ‘생산적 분권화’가 기초적 인프라로 깔릴 때 더욱 실천적일 수 있을 것이다.

□ 단계적 접근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의 고동을 올리고 이제 한국의 새로운 지방화 시대, 즉 분권·분산국가로 이행함을 국가적 의지로 천명해야 한다. 이를 상징적으로 실천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부처 3개 내외를 고속철도의 1단계 개통시기(2003년 12월~4월)를 기준으로, 1~2년 내로 지방이전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시작단계 또는 시범단계가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시범적인 정부부처의 이전 시에 관련 공기업, 관련 정부산하기관, 관련 민간기업의 동시이전 또는 단계적 후속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중추기관 지방분산 10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전략적’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준비해야 한다. ‘전략적’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산업별 수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정부·지자체간의 역할 분담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여 중앙정부는 국가공공기관의 이전대상 선정, 법적 기반 마련, 10개년 계획에 의거한 대책프로젝

트화, 전담기구 설치, 인센티브 부여, 평가 등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이전거점지구 조성 지원, 이전기관 및 임직원에게 대한 지자체 자원의 지원, 파트너십 구성 등을 담당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프랑스에서 도입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계획협약(plan contract)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이 중앙과 지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7 CHAPTER

요약 및 결론

① 본 연구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한 방안의 수립과 제시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토불균형 문제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는 국가공공기관(政), 기업본사(産), 명문대학(學) 부문에서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 실태와 입지동향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근거하여 정(政)·산(産)·학(學)부문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도출하며,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과 행·재정적, 법적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중추기능별로 제시함과 아울러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② 먼저 본 연구에서는 중추기능을 통제력을 갖는 기능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조직(본부), 경제력, 신망 세 가지가 통제력의 근원을 형성하고, 실천적 의미에서 그 각각에는 국가공공기관과 민간의 대기업 본사, 명문대학이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중추기능은 중앙정부적 기능(政), 대기업의 본사기능(産), 명문대학 기능(學)으로 구분된다. 중추기능 입지와 관련한 이론적 검토에서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수도권기능론, 서비스기능의 중심지이론과 도시계층성,

사무활동 및 본사기능의 입지이론, 네트워크 도시체계론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네트워크 현상과 중심지 계층조직화 현상의 공존이 대부분의 결과로서 제시되고 있음을 밝힌다. 이론적 검토결과 중추기능의 집중적 입지는 수도권능 일극화와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자기팽창효과를 통하여 인구 및 산업과 각종 기능이 특정 지역에 집적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중추기능의 분산적 입지는 수도권능의 다극화와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각 지역들이 기능 전문화·다양화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③ 중추기능 입지의 지역간 비교분석 결과에서는, 최근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중추기능 입지의 지역간 분포는 중추기능간에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46.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제조업 고용기회의 46.6%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추기능에 있어서는, 국가공공기관(政)의 경우 정부부처의 100%, 공기업 본사(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등을 포함)의 83.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 본사(産)의 경우는, 2000년 현재 100대 기업본사의 91%, 500대 기업본사의 82.6%, 3000대 기업본사의 71.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學)의 경우 2000년 현재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65%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다. 최근 10년 사이의 입지동향에 있어서는, 국가공공기관(政)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수도권 입지비중은 정부대전청사로의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기인하여 최근 10년 정도 사이에 100%에서 79%로 감소한다. 반면 공기업 본사의 수도권 입지비중은 최근 10년 사이에 0.9% 정도 감소하였으나 현재 83%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 본사(産)의 수도권 집중도에서는 100대 기업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에 94%에서 91%로 감소하지만 500대 기업본사의 경우는 82.6%로 변화가 없으며 3000대 기업본사의 수도권 집중도는 같은 기간 동안에 68.9%에서 71.9%로 3%가 증가한다. 대학기능(學)에 있어서는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수도권 집중도는 65%로 수도권 입지규제에도 불구하고 그 집중도에는 변화가 없다.

④ 1990년대 이후의 입지이전에 있어서도 중추기능별로 약간 다르지만 중추기능 입지의 수도권 지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공공기관(政)의 경우, 특히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본사의 수도권 지향성이 높은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적 차원에서 일부기능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되었지만 대부분 청(廳)단위 기관이고 부처단위 기관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공기업(정부산하기관 포함) 본사를 이전한 사례 18개 중 83%인 15개 본사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하였으며 지방(충청권)으로는 3개 본사만 이전한 데 불과하다. 그리고 경기도로 이전한 공기업 본사 15개 중 9개 본사가 분당, 평촌, 일산신도시로 이전하여 신도시에 대한 입지선호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⑤ 기업본사 기능에 있어서는 통신, 금융, 보험업 등은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로의 입지지향성이 매우 높고 제조업은 본사의 지방입지가 확대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증가한 100대 기업본사 중 금융·보험업 12개 기업본사 전체, 운수·창고·통신업 4개 기업본사 중 3개가 서울에 입지하며, 제조업체는 16개가 줄었지만 지방에서만 4개 기업본사가 늘어나고 있다. 500대 기업 중에서는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증가한 금융·보험업체 36개 사 중 35개 사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방의 충청권에서 6개 제조기업 본사가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에 3000대 기업본사 중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수도권 입지비중은 71.0%에서 85.6%로 증가하고 금융·보험업의 경우 79.0%에서 88.2%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 본사의 입지비중은 66.7%에서 44.4%로 크게 줄어들고 있어, 3000대 기업본사의 수도권 입지강화는 통신, 금융·보험업 등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⑥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에 별다른 변화 없이 수도권 집중성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반경 40km권 이내의 지역에 중추기능이 밀집되어 있

어 이 지역이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분포에서 핵심지역이 되고 있다. 즉, 과천과 수도권 신도시의 대부분이 포함되는 이 지역에 현재 중앙 정부부처의 100%,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본사의 81% 이상, 100대 기업본사의 90% 정도, 20대 명문대학의 65%가 입지해 있다.

⑦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은 중추기능의 국토공간상 중심(重心) 변화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즉,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인구를 기준으로 한 국토공간상의 중심(重心)은 서울로부터 126km 지점에서 119km 지점으로 서울에 7km 정도 가까워지고 있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 국토공간상의 중심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방향으로 5.2km(130.5km→125.3km) 정도 당겨지고 있다. 중추기능 중 국가공공기관(政)의 국토중심점은 서울반경 40km 이내에 계속 머물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본사의 경우는 서울방향으로 약간 끌어당겨지고 있다. 대기업 본사(産)의 경우, 100대 기업본사의 국토중심점은 미세한 변화를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서울반경 20km의 최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500대 기업본사의 경우 5.3km (45.9km→40.5km), 1000대 기업본사의 경우는 약 4.9km(62.7km→57.7km), 3000대 기업본사의 경우는 13km 정도(79.6km→66.6km) 서울방향으로 당겨졌다.

⑧ 최근 10년 사이에 이 같이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성과 지향성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중추기능에서의 수도권의 흡인력이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력모형을 응용한 지역중력지수(regional gravitation index: RGI)를 이용하여 지역간 상호작용에서의 수도권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지역간 상호작용에서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공공기관(政)에 의한 지역간 상호작용에서 수도권의 영향력은 전체의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그 흡인력이 막강한 실정이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대전청사로의 일부기능 이전에도 불구하고 1992년과 1999년 사이에 수도권 영향력의 감소는 0.4%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본사의 경우에는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수도권 지역의 영향력은 전체의 98.4%에서 99.0%로 증대되고 있다. 대기업 본사(産)에 의한 지역간 상호작용에서 수도권 지역의 영향력은 기업규모에 따라 약간 다른 특성을 보이기는 하나 매우 강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100대 기업본사의 경우 수도권의 영향력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전체의 99.5%에서 99.3%로 99% 이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변화가 미미하고, 500대 기업본사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영향력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전체의 96.9%에서 98.3%로 크게 증가하며, 3000대 기업본사의 경우 수도권의 영향력이 같은 기간 동안에 전체의 94.6%에서 95.3%로 증가하여 수도권의 지배력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20대 주요 명문대학(學)을 기준으로 한 지역간 상호작용에서 수도권의 영향력은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1996년과 2001년 사이에 전체의 90.3%에서 85.4%로 약간 감소하나 교수 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1993년과 2001년 사이에 전체의 90.5%에서 91.1%로 증가한다.

㉑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지역간 상호교류작용에서 수도권의 영향력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여 수도권이 우리나라 중추기능을 지배하고 있으며 지방의 수도권 종속성이 매우 심함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로부터 반경 40km권내에 중추기능 지역중력의 95% 이상이 응축되어 이 지역이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핵이 되고 있다. 즉, 서울반경 40km권 지역 수도권으로 인구, 산업 및 각종 기능을 끌어당기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㉒ 중추기능의 입지결정요인에서는, 중추기능 중 지역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큰 민간기업의 본사입지에서 기업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각종 정보·자금과 정부 등 국가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관련단체·업계와의 정보교환·수집, 자금조달 등 금융거래, 정부·행정기관 등과의 접촉, 우수한 인재의 확보면에서 수도권의 입지여건이 지방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요인이 기업본사의 지방분산에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외의 경우 거대한 시장, 국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집중으로 인한 각종 정보와 자금의 집중, 국제교류기반의 충실, 고급인재의 집적, 교통 및 생활여건의 양호함 등이 입지선호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지방의 경우는 주력공장과의 업무연계가 입지선호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다.

㉑ 기업본사를 지방에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서도 서울지사[지점·사무소]가 실질적인 본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향후 기업본사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서도 본사의 핵심기능보다는 교육·연수기능, 기술·연구개발기능 등 일부 부차적인 기능만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기업본사의 입지선호지역에서도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수도권이 갖는 입지상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충청지역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㉒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하여 국가행정기관, 즉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종 공공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그 주변에 집적됨으로써 각종 정보와 자금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에 수익성 원리에 따라 그 입지가 결정되는 민간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즉,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수도권 집중이 기업본사 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㉓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는, 실태분석과 기업본사의 입지 및 이동요인 분석 결과에 의거할 경우, 두 가지의 동태적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내적 메커니즘(inside dynamic mechanism)인데 이는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 상호간의 자체 공생(共生)메커니즘이며, 다른 하나는 외적 메커니즘(outside dynamic mechanism)으로서 수도권기능의 입지와 집중, 중앙집권적 정치행정구조, 정보 및 자금의 집중, 시장수요(인구규모)의 크기,

고급두뇌의 입지, 관련단체 및 업계의 입지, 고속교통·첨단정보통신 기반, 국제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등의 동인들이 상호 결합된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내적 메커니즘과 외적 메커니즘은 고도로 연계되어 정경협력, 사회적 관성, 네트워크 등의 요인으로 얽혀 있는 가운데 전체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14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성과 지향성을 원천으로 하여 서울을 핵(核)으로 하는 수도권이 중추기능에서 강력한 자력(磁力)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토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대전청사로의 일부 정부기능 이전,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입지선호 강화 등으로부터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을 위해서는 정부기능을 핵으로 하는 패키지 단위로 기능을 분산하고 그 물리적 받침점시로서는 신도시 내지는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중추기능의 지방이전 방안은 정(政)·산(産)·학(學) 중 선도기능을 어느 분야에서 찾느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에 기초한 전략이 중요하다. 넷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안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15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해온 중추기능 지방분산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수도권 규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의지와 수용여건이 지방이전 성공의 관건이 되고, 기업의 지방이전은 지원장치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민간부문의 지방 밀어내기 방식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지방이전은 개별대학의 공간수요에 의존하고 대학의 지방이전이 기존 지방대학의 육성시책과 직접적인 상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로부터 수도권 규제 일변

도에서 탈피하고 국가공공기관의 분산이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을 촉발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방이전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받을 수 있다.

⑩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적 메커니즘의 내적 메커니즘과 외적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요소에 의거하여 중추기능의 향후 지방분산 가능성을 전망해 보면, 중추기능 수도권 집종의 지속화와 지방분산 가능성이 병존하고 있으나 분산가능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이 전개되면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수도권 집종의 블랙홀 역할을 담당하는 정(政)·산(産)·학(學) 중추기관이 수도권에 초일극의 지배력을 갖는 슈퍼 모노(Super Mono)형의 국토체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을 선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되 지역별로 특정부문에 전문화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일종의 「전문화된 다핵수도체제」(Specialized Multi-Capitals)로 국토공간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⑪ 전문화된 다핵수도체제로 국토공간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5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을 수도권기능의 분산차원에서 접근하고, 중추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을 지향하며, 분산하되 지방경제발전의 특화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산하고, 중추기능 중 지방분산이 용이한 기능부터 이전하며,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을 순차적 또는 병렬적으로 지방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⑫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의 6가지 전략요소로 구성되며 6가지 전략요소를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시계모델」이다. 6가지 전략요소는, 정(政)·산(産)·학(學) 중추기관 중 선도기능을 갖는 국가공공기관(중앙부처 포함)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①선도전략, 선도전략에 의거 지방으로 이전되는 중추기관을 지방에서 수용

하는 공간을 만들되 지방의 거점도시에 조성하는 ②거점공간전략, 공간적 이주(migration)에서 연쇄이주(chain migration)와 유사하게 선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을 뒤따르거나 병행하여 중추기관이 선도 중추기관이 입지한 거점공간으로 연쇄 이전하는 ③체인전략, 선도 이전하는 중추기관과 뒤따라 이전되어 오는 타 중추기관이 거점공간에서 특정기능으로 전문화하는 ④전문화전략, 전문화하되 관련 제조업체·서비스업, 관련 지원단체·조합, 관련 연구소와 대학 등이 군집하여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⑤클러스터(cluster) 전략, 클러스터된 지역이 수도권과 타지역간 그리고 외국과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하여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상호 이동하고 교류하는 ⑥네트워크전략이다.

19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위한 전략과 전략별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프로젝트를 국책프로젝트화하여 『수도권 중추기관 지방분산 10개년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중추기능 이전을 위한 별도의 법으로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추기능 지방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셋째,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을 포함하여 지방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가칭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지자체에 계획고권, 행정고권, 재정고권을 부여하여 ‘생산적 분권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단기적으로는 정부부처 일부를 우선적으로 이전하여 분권·분산국가로의 이행을 천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여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육성을 과감하게 시도하여야 한다. 여섯째,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이 중앙과 지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20 결론적으로, 그 동안 인구 및 산업과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다각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도권에 블랙홀 기능을 갖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수도권에 지니는

강력한 힘의 원천은 권력을 지니는 중추기관의 수도권 집중이다. 특히,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국가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필수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앙 정부부처를 포함한 국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부기능의 지방분산이 선도적으로 이뤄지고 이를 통하여 기업본사 등의 연쇄적 지방이전이 촉발되어 인구 및 산업과 각종기능이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정책 내지는 프로젝트를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도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래야만 비로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선도하여 정(政)·산(産)·학(學)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을 촉진함으로써 전문화된 다핵수도체제로 국토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형성 하에 장·단기 실천방안을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차근차근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본 연구에 내재한 다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먼저 중추기능 각각에 대한 정밀한 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중추기능 각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그 입지에서의 중추기능 유형간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가 요망된다. 이와 함께 중추기능과 지역발전간의 인과메커니즘을 구명(究明)하는 더 한층 심화된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자료가 구축되어야 하고 방법론이 세련화·계량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중추기능 입지의 상호 인과성, 중추기능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동태적 분석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후속 연구는, 현재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선택된 신행정수도 건설 프로젝트의 기초정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의 경험에 대한 자료를 더욱 광범위하게 수집·축적하여 분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방안이 심층적으로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부문에 대한 향후 연구와 논의과정에서 하나의 디딤돌과 고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동희. 2001. “지역경제정책의 지역간 협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제17권 제1호(2000. 6) : 1~18.
- 강원택. 1998. “영국 행정개혁과 국가 통치 기능의 변화 : 국가의 공동화 혹은 중앙집중화 ?”. 『한국행정학보』 v.32 n.4 (1998. 겨울) : 53-66.
- 국토연구원. 2002. 『세계의 도시』. 서울 : 도서출판 한울
- 권영섭. 1992. “國土空間構造와 企業本社集中의 關係에 관한 研究”. 『國土研究』 n.18 (92. 12) : 143-164.
- _____. 1992. “서울所在大學 地方分校가 地域發展에 미치는 效果에 관한 研究”. 『지역연구』 v.8 n.1 (92. 06) : 51-66
- _____. 1992. 『서울소재대학 지방분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김광식. 1995. “高速電鐵 建設에 따른 首都圈 空間構造의 變化過程 分析과 展望”. 『국토계획』 v.30 n.4 (95. 08) : 155-173.
- 김덕현. 1992. 『한국의 경제발전과 공간구조 변화』. 박사학위논문.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병준. 2001. “우리나라에서의 분권화 개혁의 현황과 과제 : 분권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대구사회연구소 주최. 『지방분권 정책대안 학술심포지엄』. 대구사회연구소.
- 김일중. 1994. 『경제력집중 억제책의 형성논리와 효과』. 서울 : 한국경제연구소.

- 김재철. 1999. “製造業 集中과 分散의 空間的 變化와 周邊地域의 工業化 要因”. 『국토계획』 v.34 n.5 (99. 10) : 137-150.
- 김창석·남 진. 1996. "首都圈地域 企業本社의 立地移轉 經路와 特性에 關한 研究". 『국토계획』 v.31 n.1 (96. 02) : 43-72.
- 김태동. 2001. “21세기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국토균형발전”.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주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 21세기 국가발전전략과 국토균형발전』. 대한상공회의소.
- 김형국. 1996.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서울 : 박영사.
- 김형기. 2001.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구사회연구소 주최. 『지방분권 정책대안 학술심포지엄』. 대구사회연구소.
- 남 진. 1995. 『企業本社의 立地變化와 空間的 分布特性에 關한 研究 : 首都圈을 事例地域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1. 『지역 화합과 교류의 추진방안』.
_____. 1999.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분산 정책』.
- 박상우 외. 1992. 『行政中樞管理機能 分散에 關한 研究 : 公共機關의 實態分析을 中心으로』.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 박양호 외. 200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평가와 개선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 ____ 외. 2001. 『지방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 ____ 외. 2000.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 안양 : 국토연구원.
- ____. 2000. “화해·협력 신시대의 지역통합방안”. 국토연구원 주최. 『화해·협력 신시대의 지역통합방안 세미나』. 국토연구원.
- 박양호·김창현. 2000.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통합국토축 추진전략』. 경기 : 국토연구원.
- 박영환·조영국·안영진. “대학과 지역발전 : 연구동향과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제36권 제4호 (2001. 12) : 418-433.
- 박헌수 외. 2001.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외부효과 추정분석에 관한 연구』. 수원 : 경기개발연구원.

- 박헌주·김광익. 1997. 『首都圏政策의 懸案課題와 改善方案 : 首都圏 公共聽舍의 地方移轉方案』. 안양 : 국토개발연구원.
- 성경룡. 2002. “분권·분산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과제”. 새천년민주당 주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정책토론회』. 새천년민주당.
- _____. 2001.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 평가와 과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민주주의 포럼 주최. 『제2차 월례 토론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유은수. 1985. 『지방이전대학의 지역개발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윤귀성. 1991. 『首都圏 人口集中現象과 分散政策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서울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윤철현·손태민. 1996. "수도권 분산정책의 평가와 대응권 개발논리". 『국토계획』 v.31 n.5 (96. 10) : 29-46.
- 이건영. 1997. "都市의 適正規模と各國의 首都圏政策". 『土地總合研究』 v.5 n.4 (97. 09) : 42-58.
- 이건철. 2001. “지방분권의 현상과 제도적 추진방안”.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주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 21세기 국가발전전략과 국토균형발전』. 대한상공회의소.
- 이번송·홍성효. 2001. “시·군·구별 제조업 생산성 성장요인과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효과”. 『국제경제연구』 제7권 1호 (2001. 4) : 125~146.
- 이정식·황창윤. 1985. “中樞管理 機能의 地方分散 效果에 관한 研究”. 『國土研究』 n.4 (85. 12) : 1-16.
- 이정훈. 1999. 『동경대도시권에서 도심고차업무기능의 교외이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덕순. 1999. 『지정학 : 이론과 실제』. 서울 : 법문사.
- 임정덕. 2001. “수도권 집중의 현실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주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 21세기 국가발전전략과 국토균형발전』. 대한상공회의소.

임현규. 1991.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가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토지연구(토지개발)』 v.2 n.4 (91. 08) : 59-76.

정세욱. 1993. “首都圏開發과 地域開發의 衡平性”. 『지방행정』 n.478 (93. 08) : 11-19.

초의수. 2000.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분권과 혁신』

2002년 12월호. 대구 : 대구사회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2001. 『VISION 2011 : 열린세상 유연한경제』.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허재완. 1998. “首都圏 集中抑制政策의 效果에 관한 研究”. 『국토계획』 v.33 n.6 (98. 12) : 255-268.

홍기용. 1985. 『지역경제론』. 서울 : 박영사.

_____. 1991. “首都圏 人口集中과 主要機能의 地方分散”. 『토지연구(토지개발)』 v.2 n.4 (91. 08) : 13-24.

2010年地域居住ビジョン研究會. 1991. 『2010年の 地域と 居住 : 東京一極集中の豊かな 居住を目指して』. 日本 東京 : ぎょうせい.

高田實. 1999. “業務核都市の發展可能性”. 『運輸と經濟』 v.59 n.9 (99. 09) : 33-39.

國會等移轉審議會. 2000. 『國會等移轉審議會答申參考資料』. 日本 東京 : 國土交通省.

_____. 1999. 『國會等移轉審議會答申報告書』. 日本 東京 : 國土交通省.

國會等移轉調查會. 1995. 『國會等移轉調查會報告書』. 日本 東京 : 國土交通省.

國土交通省(류시균 역). 2001. 『平成 2001年版 首都圏白書』. 日本 東京 : 財務省 印刷局 (경기 : 경기개발연구원).

國土廳 大都市圏整備局. 1981. 『東京圏における事務所の立地に關する調査』. 日本 東京 : 國土廳 大都市圏整備局.

_____. 1981. 『業務機能集積の動向と將來に關する調査 : 核都市における業務機能集積を中心として』. 日本 東京 : 國土廳 大都市圏整備局.

_____. 1981. 『地方中心都市との比較による核都市整備の現狀に關する調査』. 日本 東京 : 國土廳 大都市圏整備局.

國土廳. 1989. 『90年代の情報據點戰略 : 地域における情報・通信據點の形成に關する

- 調査』. 日本 東京 : 大藏省印刷局.
- 宮良眞, 木村宏. 1997. “一極集中から多心型へ再編誘導 : 臨海副都心線二期工事”. 『新都市開発』 v.35 n.11 (97. 11) : 47-50.
- 大木健一. 1994. “業務核都市の現状と課題”. 『人と国土』 n.119 (94. 05) : 88-89
- 大川政三. 1987. “東京圏集中化のメリットとデメリット”. 『地方財政』 v.26 n.8 (87. 08) : 4-12.
- 東京都. 1995. “八王子・立川業務核都市基本構想”. 『新都市開発』 v.33 n.9 (95. 09) : 20-36
- 東北産業活性化センター. 1995. 『首都機能の地方移転 : 緊急提言-東北遷都の建設』. 日本 東京 : 日本地域社会研究所.
- 藤本建夫. 1992. 『東京一極集中のメンタリテイ-』. 東京 : ミネルヴァ書房.
- 三浦郁也. 1992. “企業経営の多角化と地方分散”. 『産業立地』 v.31 n.6 (92. 06) : 4-21.
- 小田切國宣. 1997. “業務核都市整備のトリガ-としての役割 : 千葉中央港土地地区劃整理事業”. 『新都市開発』 v.35 n.5 (97. 05) : 44-48.
- 小澤雅子 等著. 1993. “地方都市の活性化 : 東京一極集中の是正と地方據點都市法の役割”. 『建設月報』 v.46 n.8 (93. 8) : 16-29.
- 首都機能移轉研究会(編). 1994. 『首都が移る 時代が変わる : 國會等移轉調査中間報告: 解説&資料(明日の日本と新しい首都)』. 日本 東京 : 住宅新報社.
- 神奈川縣(編). 1989. 『地方の未來と東京問題』. 日本 東京 : ぎょうせい.
- 岩田規久男. 1988. 『土地改革の基本戦略』. 日本 東京 : 日本經濟新聞社.
- オフィス分散研究会. 1989. 『脱東京戦略 : オフィスの地方立地』. 日本 東京 : ぎょうせい.
- 宇澤弘文, 堀内行藏(共編). 1992. 『最適都市を考える』. 日本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 運輸經濟研究センター. 1990. 『數字でみる東京一極集中の軌跡 : 東京區部就業者(從業地)および通學者(通學地)の30年間の推移』. 日本 東京 : 運輸經濟研究センター.
- 依田和夫, 廣瀬良一. 1994. “業務核都市「横浜」と「みなとみらい21」事業”. 『新都市開発』 v.32 n.6 (94. 06) : 2-7.
- 日本經濟調查協議會. 1984. 『本社機能の集中と分散の相互關係に關する調査報告書』.

- 日本 東京：日本経済調査協議会。
- 日本学術協力財団. 1993. 『首都機能の一極集中問題：日本学術会議主催公開シンポジウムにおける記録』. 日本 東京：日本学術協力財団。
- 井上勝之. 1993. “東京一極集中の是正と地域の活性化へ向けて”. 『産業立地』 v.32 n.4 (93. 04) : 9-13.
- 中村良平. 1995. 『いま都市が選ばれる：競争と連携の時代へ』. 日本 東京：山陽新聞社。
- 地方シンタンク協議会. 1989. 『地域活性化と東京一極集中』. 日本 東京：総合研究開発機構。
- 天野光三. 1994. 『国土再編計画：リニア・遷都・道州制による21世紀のランドデザイン』. 日本 東京：PHP研究所。
- 太田勝敏 等著. 1994. “一極集中と交通の課題”. 『運輸と経済』 v.54 n.7 (94. 07) : 4-36.
- 八田達夫(編). 1995. 『東京一極集中の経済分析』. 日本 東京：日本経済新聞社。
- 黒川和美. 1995. “集中是正と地方主権の首都移轉”. 『人と国土』 n.128 (95. 11) : 39-42.
- Alexander, Ian. 1979. *Office location and public policy*. London: Longman Group.
- Batten, D. F. 1995. "Network Cities: Creative Urban Agglomerations for the 21st Century". *Urban Studies* v.32 n.3: 313-327.
- Chinmoy Ghosh and Mauricio Rodriguez and C. F. Sirmans. 1995. "Gains from corporate headquarters relocations: Evidence from the stock market". *Journal of Urban Economics* v.38 n.3 (95. 10) : 291-311.
- Camagni, R. P. and C. Salone. 1993. "Network Urban Structures in Northern Italy: Elements for a Theoretical Framework". *Urban Studies* v.30 n.6 : 1053-1064.
- Campbell, Scott D. 2000. "The Changing Role and Identity of Capital Cities in Global Era". <http://www-personal.umich.edu/~sdcamp/cc1.html>.
- Clapp, J. M. 1983. "A Model of public policy toward office relocation". *Environment & Planning A :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 Regional Research* v.15 n.10 (83. 10) : 1299-1310.

- Friedrich, Peter. 1987. "Regional Effects of the Establishment of Public Offices".
in *Urban and Regional Policy in Korea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Seoul
: Kon-kuk University Express : 325-350.
- Galbraith, John K.(박현채 옮김). 1983. *The Anatomy of Power*.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서울 : 도서출판 한벗).
- Graham, S. 1997. "Cities in the Real-time Age: the Paradigm Challenge of
Telecommunications to the Concept and Planning of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A v.29 n.1: 105-127.
- Hartshorn, Truman A. 1992. *Interpreting the City: An Urban Geography*. John
Wiley & Sons (안재학 옮김. 1997. 『도시학개론』. 서울 : 도서출판 새날).
- Hitz, Hansruedi and Christian Schmid and Richard Wolff. 1994. "Urbanization in
Zurich : Headquarter economy and city-belt". *Environment & Planning D :
Society & Space* v.12 n.2 (94. 04) : 167-186.
- Holloway, Steven R. and James O. Wheeler. 1991. "Corporate headquarters
relocation and changes in metropolitan corporate dominance, 1980-1987".
Economic Geography. v.67 n.1 (91. 1) : 54-74.
- Lyons, D. I. 1994. "Changing patterns of corporate headquarter influence,
1974-89". *Environment & Planning A :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
Regional Research*. v.26 n.5 (94. 05) : 733-748.
- Olbrich, J. 1984. "Regional policy and management jobs : the locational behaviour
of corporate headquarters in West Germany". *Environment & Planning C :
Government & Policy* v.2 n.2 (84. 5) : 219-238.
- Porter, Michael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 Scott, A. J. 1982. "Locational Patterns and Dynamics of Industrial Activity in the
Modern Metropolis". *Urban Studies* Vol. 12(2).
- Stephens, John D. and Brian P. Holly. 1981. "City system behaviour and corporate

influence : The headquarters location of US industrial firms, 1955-75". *Urban Studies*. v.18 n.3 (81. 9).

Strickland, Donald and Michael Aiken. 1984. "Corporate influence and the German urban system : Headquarters location of German industrial corporations, 1950-1982". *Economic Geography*. v.60 n.1 (84. 1) : 38-54.

Taylor, M. J. and N. J. Thrift. 1981. "Spatial variations in Australian enterprise : the case of large firms headquartered in Melbourne and Sydney". *Environment & Planning A :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 Regional Research* v.13 n.2 (81. 2) : 137-146.

Ward, Sally K. 1994. "Trends in the location of corporate headquarters, 1969-1989". *Urban Affairs Review (Urban Affairs Quarterly)* v.29 n.3 (94. 04) : 468-478.

SUMMARY

Locational Analysis and Spatial Reorganization Strategies of Central Management Functions in Korea

Yang-Ho Park, Chang-Hyun Kim

Even though various policies related to regional and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over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major functions in the capital region has not been mitigated. Furthermore, the socio-economic structure of local regions has become more dependent on that of the capital region. In brief, the concentration of central functions in the industrial, academic and administrative sectors has been the key factor for the over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CONCENTRATION OF CENTRAL FUNCTIONS IN THE CAPITAL REGION

While the concentration ratio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capital region has been decreased from 100% to 78% during last decade, 83.2% of head offices of public enterprises are still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as of 2002. The concentration ratio of head offices of the 100 largest private enterprises decreased from 94% to 91%, but that of head offices of the 3000 largest companies increased from 68.9% to 71.9% during 1990 to 2000. Sixty five percent of top twenty universities are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as of 2001. Considering that 46.3% of the population is concentrated in the capital region as of 2000, the concentration ratio of central functions in the capital region is absolutely high.

Due to the high concentration of central functions, the capital region exerts tremendous influence on the national territorial economy. In comparison between regions by influence of central functions calculated with the gravity model, the influence rate of the capital region on the interaction of central functions in Korea shows more than 95%. It means that the capital region is dominating all over the country in the interaction of central functions. Especially, areas within a 20-km radius of Seoul Metropolitan city shows of 82% of influence rate in the overall interaction of pivotal functions, becoming a core of central functions in Korea.

< Regional Distribution of Population, Industries and Central Functions(%) : 2000 >

Region	Population	Employment in manufacturing industry	Central administration (No. of agencies)	Head offices of public enterprises (No. of offices)	Head offices of the 100 largest enterprises (No. of offices)	Top 20 universities (No. of universities)
Capital	46.3	46.6	78.7	83.2	91.0	65.0
Choongcheong	10.1	10.2	21.3	11.2	4.0	10.0
Honam	11.4	7.1	0.0	0.9	0.0	0.0
Youngnam	27.9	34.8	0.0	4.7	5.0	20.0
Gangwon/Jeju	4.3	1.4	0.0	0.0	0.0	5.0
Nationwide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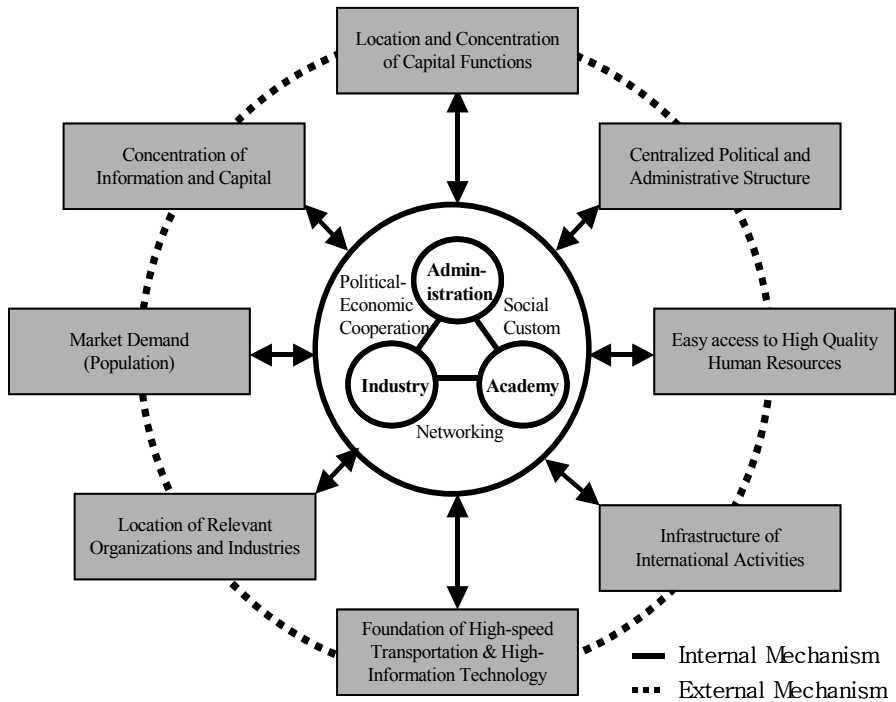
In regards to location of head offices of private companies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regional development, the concentration of head

offices of enterprises in the capital region is primarily affected by the concentration of information, capital and public agencies such as the government in the capital region. Reasons for preferring to locate business headquarters in the capital region include large market, easy access to information and abundant capital due to the concentration of public agenc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ubstantial foundation of international interchange, accumulation of high quality human resources, and adequate traffic and living environment. Other regions have advantages only in the business linkage of headquarters with their main factories. Therefore, the trend of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future.

CONCENTRATION MECHANISM OF CENTRAL FUNCTION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analysis, the concentration mechanism of central functions in the capital region has two kinds of dynamic mechanism. One is the internal dynamic mechanism, which arises from the coexistence of public agencies, head offices of enterprises, top universities and the other is the external dynamic mechanism, which is derived from the agglomeration of complementary factor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centralize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tructure, concentration of information and capital, market demand(population), easy access to high quality human resources, location of relevant organizations and companies, foundation of high-speed transportation and high-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 activity, etc. In addition, these internal and external mechanisms are closely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operated in the concept of political-economic cooperation, and social customs and networking.

< Concentration Mechanism of Central Functions in the Capital Region >



SPECIALIZED MULTI-CAPITALS SYSTEM

It is necessary to rearrange our territorial space into "Specialized Multi-Capitals" system, whereby central functions are selectively relocated to local regions and then regional hub cities are promoted to specialize in certain sectors. In the Single-Capital system, the capital region has super power of control with public agencies, head offices of enterprises and key bodies of top universities which function as a magnet for the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The national spatial reorganization of central functions should be approached in view of decentralization, not within the capital region but outside of the capital region. In addition, the relocation of central functions toward provincial

cities should be carried out under the consideration of strengthening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o achieve a substantial decentralization of central functions, relocation should be carried out first for the functions which can be easily relocated into local areas and promoted there. In this regard, a strategic model of spatial rearrangement is suggested: the "Inducement Strategy" to relocate first leading organizations which have capacities to induce other organizations toward provincial cities; the "Hub Strategy" to accommodate the major organizations which are relocated by the inducement strategy in key provincial cities, the "Chain Strategy" to relocate successively major organizations toward hub cities following the leading organizations or in parallel just like the "Chain Migration"; the "Specialization Strategy" to specialize leading organizations and following major organizations in specific functions of hub cities; the "Cluster Strategy" to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by clustering of specified but inter-related manufacturing companies, service companies, supporting organizations, cooperatives,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in a place, and the "Networking Strategy" to build up a cluster's networking foundation with the capital region, other regions and foreign countries for interchange and efficient business cooperation. It is desirable to carry out these strategies in sequential steps.

부 록

주요 참고자료

I. 국가행정기관 지방분산 관련 외국사례

1)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유형별 외국사례

① 정부부처의 행정수도 입지유형

□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 조성경위
 - 1889년 제정 헌법에 신수도 건설을 규정
 - 1955년 브라질리아를 수도로 선정하고, 1956년 수도건설 착수
 - 1960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브라질리아로 수도 이전
- 브라질리아의 수도기능
 - 입법, 사법, 행정부의 핵심부처 이전
 - 관련부처는 단계적으로 이전
 - 일부부처는 리오데자네이로에 잔류(예: 철도청)

- 사회·노동부
- 가정·복지부
- 건설교통부
- 교육·연구부
- 국방부
- 보건부
- 환경·자연보호부
- 경제협력·개발부

● 통일당시 수도기능 분담

○ 본(수도)

- 입법기관
- 행정기관 :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사회복지부, 건설부, 노동부, 교통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우편·통신부, 환경보건부, 보건부, 농림부, 경제개발협력부 등 15개 부처

○ 지방

- 주요 청단위 기관인 연방환경청(베를린), 연방통계청(비스바덴), 연방노동청(뉴른베르그) 등
- 연방헌법재판소(칼스루헤)

● 베를린과 본의 정부부처 분포

베를린(10개)	본(6개)
내무부, 법무부, 노동사회부, 재무부, 경제기술부, 교통건설주택부, 복지부, 외무부, 홍보처, 총리실,	국방부, 교육연구부, 소비자보호및농림부, 보건부, 환경자연보호및원자력안전부, 경제협력부
※ 연방정부의 이전구상에 따르면 총리실과 홍보처를 포함한 10개 연방부처는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본에는 부속사무소를 두도록 하며, 본에는 6개의 연방부처가 잔류하고 베를린에는 부속사무소를 두도록 함	

③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유형

영 국

- 추진시기 및 목적
 - 1960년대 : 런던의 과밀 완화 및 지역 활성화
 - 1979년 이후 : 행정개혁(재정적자 감축, 작은 정부 지향)에 따른 지방이전
- 이전대상 지역
 - 신설 부속기관을 런던 대도시권 밖에 입지
 - 동남 잉글랜드 지역 이외의 지역
 - 실업률이 높은 지역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
- 이전대상 기관
 - 행정 효율성의 저하가 적고 독립적 단위로 통합된 기관
 - 정책 입안기관
- 이전실적
 - 1988년까지 40,900명 이전

도 시 명	인구 (만명)	런던으로부터 거리(km)	이전기관	이전직원(명)
브랙 폴	14	330	보험사회보장부 일부	11,000
글래스고우	72	550	국민저축부 일부 국방부 일부	7,000 5,500
카디프	28	210	국방부 일부 회사등기소 일부	5,000 1,000
티즈사이드	14	350	관재서비스청	3,000
맨체스터	45	260	내국세수입부 일부	2,100
사우스랜드	16	60	관세세무국 일부	1,200
부리스틀	38	170	환경부 일부	1,000
에딘버그 등 기타	76	-	식량청, 인쇄국, 행정관리청 등 의 일부	4,100
계	153	-	-	40,900

□ 프랑스

- 추진시기 및 목적
 - 1950년대 이후: 지역간 불균형 개발 해소를 위해 산업 및 인구의 지방분산 추진
 - 1990년대: EC통합에 따른 국가경쟁력 극대화 및 사회적 연대감 응집
- 추진시책
 - 지방입지 기업체에 대한 금융 및 재정지원
 - 파리권에 대한 엄격한 입지규제
- 이전대상 기관
 - 1990년대에 들어와 모든 새로운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 배치
- 지역별 이전예정기관

지역(주)	이전도시	이전기관	이전직원(명)
수 도 권	생드니, 르부쉐, 사르셀 등 6개 도시	핵보호소, 경제협력중앙소, 계획일반위원회, 국토계획집행처 등 13개 기관	1,808
동부지역	스트라스부르, 낭시, 메츠 등 9개 도시	국립과학연구소, 국립행정학교, 국립통신교육센터 등 19개 기관	1,188
중부지역	끄레몽페랑, 올리양, 리용, 그레노블 등 17개 도시	국립농업기계화연구소, 국립산림사무소, 농업개발청 등 35개 기관	2,479
남부지역	마르세이유, 니스, 뚜루우즈, 몽뻬리에 등 13개 도시	국립미술품재생소, 항법기술소, 국립실업방지협회 등 32개 기관	2,747
서부지역	보르도, 르느, 낭뜨 등 19개 도시	국립산림연구소, 해양기술연구소, 전매청, 세무법률사무소 등 40개 기관	2,677
북부지역	깡, 릴르, 끄레이 등 14개 도시	산림통계및전략연구소, 재향군인연금국, 개발연구소 등 31개 기관	2,446
계	78개 도시	-	13,345

□ 스웨덴

- 추진시기
 - 1969년 지방분산위원회 설치(지방이전 가능성 조사)
 - 1971년 1차 이전기관 결정(36개 기관, 7,350명)
 - 1973년 2차 이전기관 결정(16개 기관, 4,000명)
- 추진목적
 - 스톡홀름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이전대상 기관
 - 행정효율성에 지장이 없는 중앙정부의 집행기능 및 연구기능
- 이전지역
 - 3대 도시권인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를 제외한 인구 10만 이상인 16개 도시
- 지역별 이전기관

도 시 명	인구 (만명)	수도로부터 거리(km)	이전기관	이전직원(명)
보르렌게	5	190	도로청, 교통안정청	800
보 라 스	10	350	공업시험원, 기업육성재단	500
에스킬스투나	9	200	방위요새국	500
이에브로	9	150	국립지리원, 건축연구소	1,000
칼스타트	8	250	민간방위청, 방위기재국	500
선 즈 발	9	340	기상청, 사회보험청일부	800
에르부로	12	160	통계청일부	800
읍 살 라	15	60	식품청, 사회청의약국	500
팔룬, 연쇄핑 등 8개 도시	76	-	삼림공사, 농업청, 임업청 등	1,900
계(16개)	153	-	-	7,300

2) 일본의 국회 등 수도기능 이전논의

(1) 일본의 국회 등 수도기능 이전에 관한 주요 논점

① 이전의 필요성

< 총론(역사관 등) >

적극론	신중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일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 이전이 필요 • 역사적으로 수도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정치·행정시스템을 형성하여 성공함 • 일본은 변화한다,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 국민에 부여 • 수도이전은 시대변화를 크게 촉진시키는 사회적 촉매기능으로 미래의 출발점 • 수도이전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일원으로서 내외에 개방된 국가시스템의 구축을 표방하는 것 • 이전논거 : 국정전반의 개혁, 동경일극집중의 시정, 재해대응력의 강화 • 이전지는 21세기 일본을 상징하는 신수도가 됨 • 동경의 역할은 끝났으며, 새로운 수도에서는 가든아일랜드의 모범이 되는 도시상이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미래로 연결되는 프로젝트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주거환경과 정보인프라 정비를 위한 중핵사업 ②환경보전형 실험도시에의 도전 ③문화성 중시의 신수도 건설 ④국제중핵도시로서의 신수도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사유가 희박 • 수도이전은 새로운 정치권력을 형성시키는 국가의 본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사유가 희박함 • 4백년에 걸친 문화적 전통을 가진 동경으로부터의 수도기능 이전은 역사에 대한 모독 • 아시아, 세계 속에서 큰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는 일본의 수도를 가볍게 옮기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분사(逆噴射) • 이전논거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이전발상은 시대착오 • 인터넷시대에 물리적인 도시소재지를 문제로 삼는 것은 시대착오 • 정보화의 진진으로 Anywhere you can do anything 사회가 되면 수도가 갖는 지리적 의미는 퇴색

적 극 론	신 중 론
<p>⑤정경분리 메리트의 탐구를 실현하는 『고부가가치형 신수도건설』의 건설에 있어 젊은층, 여성의 감성을 수용하고 1만명 NPO의 지혜를 집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나라에서 일본을 배우고 동경에서 일본 근대화의 역사·경제를 체험하며, 신도시에서 21세기의 일본이 세계 속에서 행할 역할을 배우도록 해야함 • 국제정치문화도시-국제적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도시-를 지향 • 자연과의 공생, 환경부하 적은 도시 등 21세기 도시상이나 라이프스타일을 세계에 어필. 신도시는 온가족이 한 데 모여사는 휴먼도시 • 지금이야말로 이전의 결단이 필요 • 패러다임 점프가 필요. 국권의 최고기관인 국회가 지도력을 발휘하여 특단을 내려야 함 • 국회는 이전의결, 이전법의 제정으로 국회 등의 이전을 국민에게 약속. 재정난, 지가하락, 행정개혁, 지방분권의 진전 등을 이유로 하는 지연에는 애석함을 느낌 • 이전결의 후 거의 10년이 경과, 이제 논의는 충분, 결론을 내릴 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개발 중심의 이전은 구태적 발상이며, 지방분권, 규제완화나 성숙 시대에의 대응이 시급한 과제. 빛을 후세에 남기는 일은 중단 • 막다른 지경에 이르면 이전한다는 것은 화전(火田)농업적 발상

< 구체적인 의의와 효과 >

적 극 론	신 중 론
<p>(1) 국정전반의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은 국정전반의 개혁을 촉진 • 이전은 국정전반을 발본적으로 개혁하는 중요한 기회이자 계기이며, 정경분리의 실체임 • 이전과 제반개혁은 수레의 양 바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보다 지방분권·규제완화를 우선 • 정면으로 개혁에 대처하지 않고 이전에 의해 폐색감이 타파된다든가 국정개혁, 지방분권이 추진된다고 하는 것은 정서적이며, 현실도피

적 극 론	신 중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은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분권을 철저히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수단 • 지금의 정치·행정시스템은 제도피로(制度疲勞)를 나타냄. 이러한 시스템으로 21세기를 넘길 수는 없음 • 수도기능이전은 지방의 자립성을 제고 • 지방분권추진법은 분권의 제1보이고 이전에 의한 분권의 새로운 추진이 필요 • 동경에 정치·행정이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의 관점이 동경중심으로 되고 경제효율을 중시하는 경향. 정보중립성이 있는 곳에 공무원을 두고 정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 • 정책결정의 중추를 담당하는 이전지에는 즐거운 대화나 맛있는 음식 등 여유있는 환경이 가장 필요. 비좁은 빌딩의 비좁은 방에서 100년 후의 일본을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하더라도 스트레스로 막다른 곳에 봉착 • 『새로운 정치·행정도시』를 지향하는 신도시의 정치·행정시스템에서는 투명성, 효율성이 중시되고, 정보공개나 행정사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기할 수 있음. 이러한 시스템이 전국의 지역으로 확산됨으로써 주민참여형의 행정이 진전 • 수도기능을 동경으로부터 이전하여 동경이 하나의 지방으로 되면, 지금까지의 『큰 중앙』 『작은 지방』이라는 국가와 지방의 역학관계가 변화하게 될 것. 그 효과로 동경중심의 서열의식이 붕괴되고 정책입안의 관점도 생활자우선으로 변화하여 전국 각 지역의 자립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이 개혁으로 연결되는 필연성은 없으며, 지방분권이나 규제개혁의 선행이 필요 • 기능분산을 위해서는 이전(移轉)보다 중앙정부의 슬림화, 도주제, 연방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음

적 극 론	신 중 론
<p>(2) 동경 일극 집중의 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 일극집중은 앞으로도 큰 문제 • 동경 일극집중은 통근문제, 주택문제, 교통혼잡, 재해에의 취약성 등 제반 폐해를 낳고 이미 허용한계를 초과 • 동경권에는 국토의 3.6%에 인구의 1/4 인 3,200만 명이 집중. 23구(區)로의 통근인구는 최근 10년 동안에 26% 증가 하여 322만 명에 달하여 다른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통근러쉬가 지속 • 동경의 지하철이 1km에 300억 엔, 고속도로 1km 1,000억 엔이나 소요되는 가운데 동경개조는 일조일석에는 실현 불가능 • 일극집중의 배경에는 동경중심의 의식구조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동경과 지방간에 문화·정보면에서의 격차가 발생 • 정보발신면에서의 일극집중은 더욱 격심 • 높은 지가와 유지비용으로 인해 국제연합가맹국 189개국 중 재일(在日)대사관을 동경에 두지 않는 국가가 65개, 그 중 22개국은 북경 등 국외 소재 대사관이 겸무하고 있어 외교상 마이너스로 작용 • 동경을 정점으로 하는 태평양벨트에의 집중은 『다양성을 존중한 창조보다도 획일화에 의한 효율』 『생활의 질보다도 경제성장 우선』이라는 가치관에 의거한 것이며 과밀의 폐해나 국토이용의 왜곡을 초래 • 기능면에서의 일극집중의 결과, 동경에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태로 되어 이의 해결을 위해 이전을 행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 일극집중은 향후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일본인구는 2007년경을 피크로 그 후 감소 예상. 동경도·동경권으로의 인구 집중압력도 크게 약화. (주: 동경권은 2011년경을 피크로 인구감소시대에 들어설 전망) • 인구감소기에 들면, 동경 일극집중은 과거의 유물이 됨. 동경의 흡인력은 이미 감퇴하기 시작 • 네트워크사회가 형성되고 지방분권이 나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수도에 집중할 필요성은 크게 감소 • 동경이 수도라는 것에 지장은 없고, 앞으로도 지리적, 기후적 조건 등으로 보아 오히려 최적지임. 현재 동경의 도시인프라집적은 귀중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

적 극 론	신 증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가 감소로 반전되더라도 과밀이 약간 완화될 뿐 일극집중의 시정은 요원 (주: 동경권 인구비중 26%(‘95)→27%(‘25)) • 불황 속에서도 동경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경제사회정세가 호전되면 인구가 증가 기조로 반전될 개연성이 있음 • 동경의 과밀해소효과는 적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따라 과밀폐해의 완화효과가 있음 (조사회보고에 의하면 최대 60만 명의 인구감소 외에 지하철혼잡이 피크시의 10%, 도심환상선의 교통량이 3% 정도 감소) • 약 210ha의 이전적지의 이용으로 동경을 생활공간으로 재생하는 계기가 되고 방재성의 향상이 가능 • 동경의 활력저하로는 연결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만 명을 넘는 동경권 인구에 비해 이전인구는 적어 활력저하는 초래되지 않음. 장래에도 동경은 경제, 문화의 중심지. 오히려 일터로서만이 아니라 생활의 장으로서 여유와 활력 있는 도시로 정비할 계기가 됨 • 성가신 관공서나 국회가 이전하고 고향이 동경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동경거주자에게도 있음 • 동경을 정점으로 하는 서열의식이 타파되고 국토의 재편이 기대가능 • 동경에 모든 것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피해를 보는 것은 지방.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음. 앞으로 몇 백년 동안이 지나도 동경이 계속 일본의 수도인 것은 생각할 수 없음 • 이전이 일본인의 『마음의 규제완화』로 연결되어 동경중심의 의식구조가 시정되고 정보, 문화면에서의 다원화가 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의 과밀해소효과는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의한 동경의 인구감소는 수십만 명 정도에 그쳐 과밀해소효과는 적음 • 업무핵도시 정비 등의 『展都』의 추진에 의한 수도권 재정비가 현실적인 유효한 대응책 • 직주근접, 매력있는 생활은 동경에서도 가능. 도심부의 토지를 고도로 이용하면 여유있는 오픈스페이스 확보 가능 • 이상한 형태로 이전되어 이전적지가 어떻게 될지 걱정. 이전비용을 충당코자 토지 등을 매각한다면 큰 일 • 세계도시 동경이 국제경쟁력을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한 도시간 경쟁 속에서 동경의 매력을 없애고 동경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피해야 하며, 토지의 고도이용이나 도심거주에서 동경의 매력을 제고하는 것이 선결

적 극 론	신 중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동경입지향성이 변화하여 지역활성화가 촉진 • 이전에 의해 동경권도 하나의 지방권으로서 다른 지방권과 다양한 면에서 공평한 경쟁이 이뤄져 일본 전체의 활력이 증가 • 동경에 모이는 정보는 치우쳐있어 동경중심형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 이전에 의해 동경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지역정보를 서로 발신하는 것에서 지역활성화를 기대가능 	
<p>(3) 재해대응력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행정과 경제의 중추를 분리함으로써 리스크분산이 가능 • 정부를 비롯 금융·경제, 대기업 등 국가중추기능이 동경에 집중되어 있어 지진 등 재해발생시 국가기능 손실이라는 미증유의 위기직면 가능 • 내셔널 시큐리티나 일본의 재해대응력 강화차원에서 이전은 불가결. 리스크분산 차원에서 이전 후의 수도기능도 분산이 바람직 • 동경에서의 재해발생시 신도시가 위기관리·복구의 사령탑으로 기능 • 阪神·淡路대지진시 국회, 중앙성청 모두 동경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함으로써 복구·부흥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였음 (주: 지진발생 후 2개월 사이에 16개 특별입법이 제정되어 신속한 구원·복구활동이 이뤄짐) • 동경권의 방재성 향상이 기대가능 • 동경권의 발본적인 방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 • 이전적지의 활용 등을 통해 동경의 방재성 향상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기능이전보다도 기능의 이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필요한 것은 기능의 이원화. 展都·重都에 의한 리스크 분산과 정보 백업체제의 정비가 우선 • 수도의 방재성 향상은 행정기관의 전자화로 대응 • 안전보장상 정치기능이 민간기능과 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 • 현재의 관청가인 霞ヶ關, 永田町는 가장 내진성이 좋은 곳. 직하형 지진의 피해범위는 20~30km이어서 응급대책은 가능 • 수도기능이전보다도 동경의 재해대응력 강화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전에 대비하는 것보다 긴급대응으로서 동경의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 목조주택 밀집 시가지에서의 방재성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

② 이전방법론

< 기본인식 >

적극론	신중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지 선정에 관한 기본인식 • 이전에 수반한 기본논의에서 국민적 합의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후보지 선정은 그 다음의 문제 	

< 이전규모 >

적극론	신중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단계(국회도시)에서 약 10만 명, 성숙단계에서 약 60만 명(최대규모) • 향후 지방분권·규제완화 등의 국정전반 개혁 등의 진척상황에 따라 이전해야 할 수도기능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당초 10년 동안 인구 10만 명의 국회도시 건설, 성숙단계에서도 최대 약 60만 명 정도로 상정 • 이전규모는 구체적인 계획단계에서 재정리되어야 하지만 행정개혁 등을 토대로 하여 가능한 한 최소한의 이전에 노력필요. 조사회보고에서도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실현을 지향하여 추진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음 (주: 국회 등 이전심의회에서의 이전인구의 모델적 시산 - 제1단계(국회를 중심으로 이전, 건설개시 후 10년 정도) 10만 명, 최대의 경우(행정기관이 모두 이전) 56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권형 사회에서는 수도의 역할은 축소됨 • 중앙정부의 슬림화의 관점에서, 이전의 핵심기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지(移轉地)만을 논의하는 것은 본말전도 • 지방분권이 진행되면 중앙성청은 상당부분 슬림화될 것이므로 현재의霞ヶ關(관청가)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낭비

< 이전방식 >

적 극 론	신 증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이전이 적절 ①국기기능의 원활한 발휘를 위해서는 국가기능의 일체가 필요 ②내정과 국제관계의 긴밀화, 외교 등 국제활동의 중요성 등으로부터 대외적으로도 국가의 삼권을 대표하는 기능이 한 장소에 모여있는 것이 중요 ③구미국가들의 예를 보더라도 삼권은 한 곳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分都는 적절하지 않음 • 신도시로의 이전은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 관저 및 중앙성청의 중추부문에 한정하고, 독립행정법인적인 실무부문이나 특허청, 문화청 등은 전국의 중추도시로 분산배치하는 것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分都방식을 취할 것 • 교통망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수도기능의 분산·복선화도 불가능하지는 않음. 전국의 중추도시를 네트워크화 하여 일체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 分都방식을 취하면 지역활성화의 효과도 크고 국민적 컨센서스도 얻기가 쉬움 • 重都구조 • 동경에서의 지진대책이 긴급함으로 방재센터로서의 수도기능이전을 우선해야함. 문화적 수도는 100년 동안 차분하게 건설한다는 인식이 필요

< 관저 등 개축과의 관계 >

적 극 론	신 증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저 등의 개축과 수도기능이전은 모순되지 않음 • 현 관저는 건축된 지 70년이 경과되어 노후·협소하고 내진성에도 불안. 특히, 총리관저의 위기관리기능 충실은 절박한 문제. 새로운 국회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하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동경과 이전지의 重都상황이 지속. 이전 후에도 동경에서의 정부활동거점으로서 유효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저 등 개축과 수도기능이전은 모순 • 수도기능이전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신관저, 霞ヶ關의 신청사의 개축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 이전을 진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③ 기 타

< 재정적·경제적 관점 >

적 극 론	신 중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은 일본이 투자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실현하여야 할 긴급과제 • 수도권기능 이전의 의의와 효과인 『국정전반의 개혁』, 『동경 일극집중의 시정』, 『방재대응력의 강화』 모두 조기에 대책이 필요. 향후 일본경제사회의 성숙을 고려하면 수도권기능이전은 일본이 투자여력을 갖고 있는 동안에 실현해야 할 과제 • 제1단계(약 10년간)의 건설비는 4조 엔, 그 중 공공부담은 23조 엔으로 연평균 2천억 엔 남짓의 금액(이전기간을 30년으로 잡으면 최종단계까지의 공공부담은 연평균 1천5백억 엔 정도), 국가의 공공사업관계비 약 9.4조 엔('99)의 약 2%정도로 일본의 경제력, 재정규모에서 보아 부담할 수 없는 규모는 아님 (주. 행정투자실적 약 49조 엔('96), 동경도의 건설국 예산 약 5,000억 엔('99)) • 수도권기능 이전은 시대의 방향에 따른 자연적인 흐름으로서 경제사정 등의 단기적 사정에 좌우되지 않고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생각하여야 할 과제 • 비용이 높은 동경에 계속 거주하는 것은 이사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를 포기하고 높은 임대료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과 같은 것 • 신도시개발이 전국의 모델이 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 • 신도시에의 집중투자는 민간수요유발 등 과급효과가 큰 내수확대의 모범적 프로젝트 • 세계 각 국으로부터 환경공생, 정보, 국제교류 등의 면에서 최첨단의 도시개발이나 노하우를 끌어들이 수 있고, 지금 베를린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전과 같이 해외에 대하여 강한 어필력을 가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숙사회를 맞이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인 국토개발에 투자해야함 • 12조 3천억 엔에 달하는 총사업비는 거액으로, 현재의 경제정세, 재정사정으로 보아 이전을 일시 동결 혹은 철회하는 용기를 가져야 함 • 동경도 시산에 의하면, 지방으로의 이전이 이전 않는 경우에 비하여 GDP가 20년간 누계로 1~14조 엔 감소 이전지에 대한 집중투자보다도 동경권에서 사회자본을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 (공공고정자본형성 기준의 시산으로 용지비를 포함하는 사업비 기준의 시산이 아님) • 경기대책이라면 동경개조를 지향한 도시형 투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과밀시가지의 재개발, 지하철선도로의 건설 등 해야 할 것이 산적 • 저성장의 성숙사회에서는 기존스톡의 유효활용이야말로 중요. 이전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젊은 세대에 빚으로 남겨서는 곤란 • 고령사회에서 복지·개호의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국민생활과 관련한 논의가 부족하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 • 이전지에만 혜택, 다른 지역엔 희생 • 신도시건설과 같은 일점집중형 투자는 공공사업의 생산과급효과 중 약 80%가 이전지에 한정됨 • 이전지의 좁은 지역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풍부한 자연환경과 전원은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그곳에서 육성되어 온 역사전통, 인간관계가 상실되어 버림 • 환경, 정보, 국제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도시에서만 실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전국의 도시 중에서 의욕적인 곳을 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 • 이전계획은 이권의 상징. 후보지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혈세의 낭비

< 국민적 합의형성·정보공개 >

- 국민적 논의에 관하여
 - 이전에는 국민적 논의가 불가결. 국민의 소리를 수용하면서 국민들이 이전의 의의·효과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중요. 아직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기 못하고 있고 시기상조이며, 이대로는 국민부채의 프로젝트가 되기 쉬움
 - 이전문제는 알고 있지만 실현은 어렵다고 생각. 후보지의 적합성여부는 잘 모르겠음
 - 동경기능을 모두 이전하는 대규모 『천도』 혹은 『수도이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야 함
 - 이전이 이전지 이외의 각 지역에 주는 효과나 각 지역과의 관련방식을 분석하여 PR하면 국민적 논의도 고조될 것임

- 동경도민의 논의에 관하여
 - 이 문제는 동경도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중요할 수 있음. 동경이 모든 것을 독점할 이유가 없는 이상 국회나 중앙성청이 이전하더라도 경제적 지위나 문화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동경도민에게는 악영향을 낳지 않음
 - 霞ヶ關·永田町지구 61ha를 포함한 이전적지 210ha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긴급한 동경의 매력향상이나 방재성의 향상 등 동경도민이 지금까지 이룰 수 없었던 동경재생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동경은 이전에 의해 질 높은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문화·경제수도로서 재생됨

- 이전지, 이전당사자의 논의에 대하여
 - 이전지에 있어서는 뜻하지 않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논외로 하고 그 나름대로의 각오가 필요
 - 이전당사자인 중앙성청 직원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서는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 동경과의 比較考量 >

- 본래의 검토주체
 - 법률상 동경도와의 비교고량은 심의회 답신이 국회에 보고된 후 국회에 의한 최종 이전지의 결정에 앞서서 행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답신의 국회보고 후 최종판단권자인 국회의 심의에서 검토될 사항 (국민합의형성의 상황, 사회경제정세의 제반사정에 대한 배려도 마찬가지)
- 비교의 대상
 - 동경도와의 비교고량은 이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행하는 것이므로 수도기능을 『동경도에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의 득실』과 『이전후보지로 이전하는 경우의 득실』을 비교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 (국회 등 이전조사회가 제시한 9가지 조건은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할 때의 기준임)

(참고)

- 국회등의이전에관한법률(1992년 법률 제109호)

제4장 이전에 관한 결정

제22조 심의회의 답신이 있을 때는 국민의 합의형성의 상황, 사회경제정세의 제반 사정에 배려하고 동경도와의 비교고량을 통하여 이전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제23조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총리로부터 국회에 대한 답신의 보고]에 의거하여 이전지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 橋本내각총리대신의 국회답변

『동경도와의 비교고량에 관해서는, 이진후보지에 국회 등을 이전하였을 경우 각 분야에서 어떠한 장점이 있고, 또한 단점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종합평가를 현재 국회 등이 소재하고 있는 동경도와 비교고량하고 검토함으로써 국회 등 이전의 의의가 이 법률에서 기대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보다 나은 장소를 선택하는 데 공헌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관점을 명확히 하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됨』

(2) 일본 수도기능 이전에 관한 논의에서의 수도기능 이전유형과 평가

① 이전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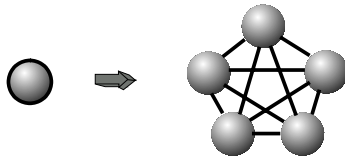
개도(改都)

수도기능을 이전하거나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경만(東京灣) 상의 신도시나 현 시가지의 적극적인 재개발을 통하여 양적·질적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 나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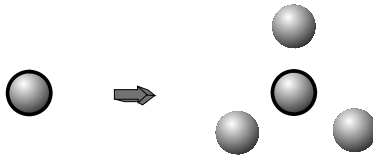
전도(展都)

수도 동경의 기능을 관동평야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으로 전개함으로써 동경의 과밀화 현상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



분도(分都)

동경의 수도기능 중 일부, 이를테면 연구·학원기능이나 일부 정치기능, 산업기능 등을 동경 이외의 한 지구·지역으로 모아서 이전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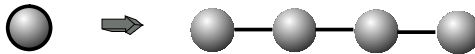
천도(遷都)

동경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신도시 혹은 기존도시에 수도기능을 일괄적으로 이전하여 동경에 대한 집적도를 완화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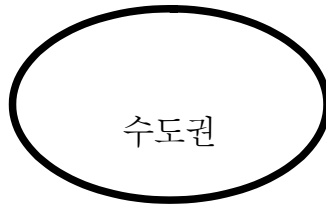
확도(擴都)

리니어 모터카 등의 초고속교통기관으로 연결하여 수도기능을 복수의 도시로 이전하여 동경을 포함하는 다극수도를 형성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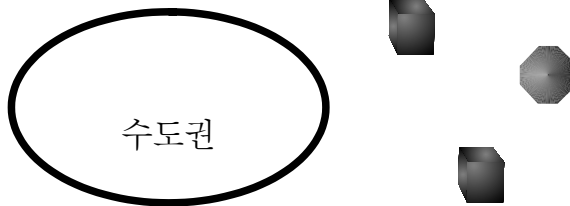
일괄천도형(一括遷都型)

수도기능을 일괄적으로 수도권 외의 신수도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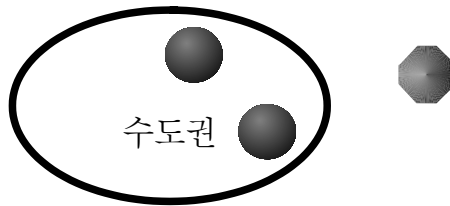
분천도형(分遷都型)

수도기능의 일부(分都대상기능)는 수도권 외로 이전하고 나머지(중추기능)는 일괄하여 수도권 외 신수도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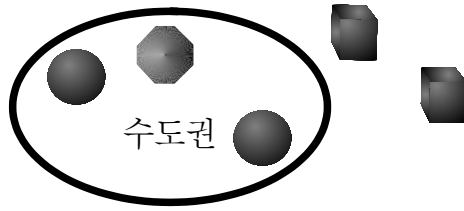
전천도형(展遷都型)

수도기능의 일부(展都대상기능)는 수도권 내에서 이전하고 나머지(중추기능)는 일괄하여 수도권 외의 신수도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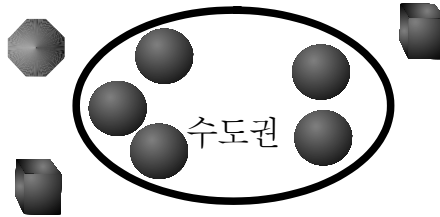
전분도형(展分都型)

수도기능의 일부(展都대상기능)는 수도권 내에서 이전하고, 다른 일부(分都대상기능)는 수도권 외로 이전하며, 나머지(중추기능)는 현 상태로 유지



전·분·천도형(展·分·遷都型)

수도기능의 전분도형 이전 후에 증추적 수도기능을 일괄하여 천도하는 것으로 전분도를 적절히 하여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증추수도기능을 일괄하여 이전



중도(重都)

긴급시에 수도기능을 보완·대체하는 제2수도를 건설. 수도기능의 중핵인 국회기능, 정부기능의 안전관리를 기하기 위함. 긴급시에 수도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제2국회의사당, 국회정보·행정정보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등을 정비

휴도(休都)

계절적으로 수도기능을 일시 휴업. 전력·가스 등에 대한 수요피크, 광화학스모그 등 공해에 대한 대응을 기하기 위함. 여름 등에 제2국회의사당을 이용하여 국회를 개최

② 평 가

개도(改都)

- 도시시설 : 사회자본의 효율에 있어 지가고등(地價高騰)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됨. 21세기의 수도기능에서는 해상도시 이외에는 누덕누덕 기운 모습으

- 로 됨. 기존 수도 주민의 생활수준에서는 주택난·원거리통근은 더욱 악화됨
- 국토의 유효이용 : 토지보유의 불공평,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기능의 안전성 측면에서 향후 최악의 사태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실행가능성 : 사업비에 있어 전체사업비의 95%는 토지매입에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상태의 연장이므로 정치적·사회적 합의는 원만하게 이뤄질 것임

전도(展都)

- 도시시설 : 사회자본의 효율에 있어 사전에 지가고등을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관건임. 21세기의 수도기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기존 수도 주민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나아질 것임
- 국토의 유효이용 : 토지보유의 불공평은 동경집중보다는 완화될 것임. 국토의 균형발전에서는 수도권만의 고밀도화가 더욱 진전됨. 수도기능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위험 존재
- 실행가능성 : 사업비에 있어 전체사업비 중 토지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임. 정치적·사회적 합의 형성과정에서 지방의 반대가 예상

분도(分都)

- 도시시설 : 분산기능이 적은 경우에는 사회자본의 효율, 21세기의 수도기능, 기존 수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에 대한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려우나 상당히 대담한 분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토의 유효이용 : 분산기능이 적은 경우에는 토지보유의 불공평 완화,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기능의 안전성 향상 등에 대한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지만 수도기능을 대폭적으로 분산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실행가능성 : 분산기능의 폭에 따라 사업비의 규모가 결정됨. 분산기능의 폭에 관계없이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음

천도(遷都)

- 도시시설 : 사회자본의 효율이 매우 좋음. 21세기의 수도기능 측면에서는 충

분한 토지의 확보여부에 따라 달라짐. 기존수도에서의 시설정비가 이루어져 기존수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가능함

- 국토의 유효이용 : 토지보유의 불공평은 상당히 시정됨. 수도권 일극집중이 크게 완화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함. 신수도 건설시 방재에 충분히 배려함으로써 수도기능의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음
- 실행가능성 : 중추기능 전체를 이전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 동경이 더 이상 수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음

확도(擴都)

- 도시시설 : 기성시가지와 분리된 미개발의 신천지에 건설되면 사회자본의 효율은 매우 좋음. 신천지에 이상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21세기의 수도기능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
- 국토의 유효이용 : 수도기능이 입지한 다극이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가장 뛰어난 수도기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실행가능성 : 리니어 모터 등 초고속교통기관, 건축비 등이 소요되는 대신 토지비용의 절감이 가능. 기존 수도를 포함하여 다극수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폭넓은 지지기반의 확보가 가능하여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가 비교적 용이함

< 수도기능 이전유형의 평가 >

구 분	도시시설			국토의 유효이용			실행가능성	
	사회자본의 효율	21세기의 수도기능	기존수도의 시민생활수준	토지보유 불공평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기능 안전성	사업비	정치적·사회적 합의형성
개도(改都)	×	△	×	×	×	×	×	◎
전도(展都)	△	○	○	△	×	×	△	△
분도(分都)	소분산	×	×	×	×	×	△	○
	대분산	△	△	△	△	△		
천도(遷都)	○	△	○	○	○	○	△	△
확도(擴都)	◎	◎	—	—	◎	◎	○	○

II. 중추기능 관련 통계자료

1) 중추기능 입지동향의 지역간 비교

(1) 인구·산업의 공간적 분포

<부표 1> 인구의 지역간 분포

구 분	인구규모(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1970	1980	1990	2000	1970	1980	1990	2000
전 국	30,882	37,436	43,411	46,136	100.0	100.0	100.0	100.0
서 울	5,433	8,364	10,613	9,895	17.6	22.3	24.4	21.4
부 산	1,848	3,164	3,798	3,663	6.0	8.5	8.7	7.9
대 구	1,191	1,767	2,323	2,481	3.9	4.7	5.4	5.4
인 천	797	1,215	1,910	2,475	2.6	3.2	4.4	5.4
광 주	623	857	1,139	1,353	2.0	2.3	2.6	2.9
대 전	527	804	1,050	1,368	1.7	2.1	2.4	3.0
울 산	271	535	805	1,014	0.9	1.4	1.9	2.2
경 기	2,500	3,719	6,064	8,984	8.1	9.9	14.0	19.5
강 원	1,837	1,791	1,580	1,487	5.9	4.8	3.6	3.2
충 북	1,454	1,424	1,390	1,467	4.7	3.8	3.2	3.2
충 남	2,281	2,152	2,014	1,845	7.4	5.7	4.6	4.0
전 북	2,386	2,288	2,070	1,891	7.7	6.1	4.8	4.1
전 남	3,310	2,923	2,507	1,996	10.7	7.8	5.8	4.3
경 북	3,285	3,188	2,767	2,725	10.6	8.5	6.4	5.9
경 남	2,781	2,782	2,867	2,979	9.0	7.4	6.6	6.5
제 주	358	463	515	513	1.2	1.2	1.2	1.1
전 국	30,882	37,436	43,411	46,136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8,730	13,298	18,586	21,354	28.3	35.5	42.8	46.3
충청권	4,262	4,380	4,453	4,680	13.8	11.7	10.3	10.1
호남권	6,319	6,067	5,716	5,240	20.5	16.2	13.2	11.4
영남권	9,376	11,436	12,560	12,861	30.4	30.5	28.9	27.9
강원·제주	2,195	2,254	2,095	2,000	7.1	6.0	4.8	4.3
지 방	22,152	24,138	24,825	24,782	71.7	64.5	57.2	53.7

<부표 2> 제조업고용기회의 지역간 분포

구 분	제조업고용기회(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1983	1990	2000	1983	1990	2000
전 국	2,215	3,020	2,653	100.0	100.0	100.0
서 울	468	471	279	21.1	15.6	10.5
부 산	355	368	185	16.0	12.2	7.0
대 구	157	188	128	7.1	6.2	4.8
인 천	158	238	208	7.1	7.9	7.8
광 주	22	43	48	1.0	1.4	1.8
대 전	46	49	38	2.1	1.6	1.4
울 산	90	127	132	4.1	4.2	5.0
경 기	395	735	748	17.9	24.3	28.2
강 원	21	35	32	0.9	1.2	1.2
충 북	42	83	104	1.9	2.7	3.9
충 남	45	73	129	2.0	2.4	4.9
전 북	57	74	73	2.6	2.5	2.8
전 남	43	72	67	2.0	2.4	2.5
경 북	123	187	206	5.6	6.2	7.8
경 남	187	273	272	8.4	9.0	10.3
제 주	4	5	4	0.2	0.2	0.2
전 국	2,215	3,020	2,653	100.0	100.0	100.0
수도권	1,022	1,443	1,235	46.1	47.8	46.6
충청권	134	205	271	6.0	6.8	10.2
호남권	122	189	187	5.5	6.3	7.1
영남권	913	1,143	923	41.2	37.8	34.8
강원·제주	25	40	37	1.1	1.3	1.4
지 방	1,194	1,576	1,418	53.9	52.2	53.4

(2) 중추기능의 공간적 분포

① 국가공공기관의 지역간 분포 : 政

<부표 3> 중앙행정기관의 지역간 분포

구 분	지역간 분포(개소, 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기관수		근무인원		기관수		근무인원	
	1992	2000	1992	2000	1992	2000	1992	2000
전 국	46	47	21.5	18.8	100.0	100.0	100.0	100.0
서 울	32	23	15.0	9.3	69.6	48.9	69.7	49.3
부 산	0	0	0	0	0.0	0.0	0.0	0.0
대 구	0	0	0	0	0.0	0.0	0.0	0.0
인 천	1	1	0.1	0.3	2.2	2.1	0.5	1.9
광 주	0	0	0	0	0.0	0.0	0.0	0.0
대 전	0	10	0	3.9	0.0	21.3	0.0	20.5
울 산	0	0	0	0	0.0	0.0	0.0	0.0
경 기	13	13	6.4	5.3	28.3	27.7	29.8	28.4
강 원	0	0	0	0	0.0	0.0	0.0	0.0
충 북	0	0	0	0	0.0	0.0	0.0	0.0
충 남	0	0	0	0	0.0	0.0	0.0	0.0
전 북	0	0	0	0	0.0	0.0	0.0	0.0
전 남	0	0	0	0	0.0	0.0	0.0	0.0
경 북	0	0	0	0	0.0	0.0	0.0	0.0
경 남	0	0	0	0	0.0	0.0	0.0	0.0
제 주	0	0	0	0	0.0	0.0	0.0	0.0
전 국	46	47	21.5	18.8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46	37	21.5	14.9	100.0	78.7	100.0	79.5
충청권	0	10	0	3.9	0.0	21.3	0.0	20.5
호남권	0	0	0	0	0.0	0.0	0.0	0.0
영남권	0	0	0	0	0.0	0.0	0.0	0.0
강원·제주	0	0	0	0	0.0	0.0	0.0	0.0
지 방	0	10	0	3.9	0.0	21.3	0.0	20.5

<부표 4> 공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

구 분	지역간 분포(개소, 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기관수		근무인원		기관수		근무인원	
	1992	2002	1992	2002	1992	2002	1992	2002
전 국	281	214	84.8	54.7	100.0	100.0	100.0	100.0
서 울	221	143	64.2	29.8	78.6	66.8	75.7	54.5
부 산	7	5	0.9	1.0	2.5	2.3	1.1	1.9
대 구	4	2	0.4	0.1	1.4	0.9	0.5	0.2
인 천	0	4	0.0	1.3	0.0	1.9	0.0	2.4
광 주	4	1	0.4	0.1	1.4	0.5	0.4	0.2
대 전	21	21	12.3	10.9	7.5	9.8	14.5	19.9
울 산	1	0	0.1	0.0	0.4	0.0	0.2	0.0
경 기	16	31	4.6	10.5	5.7	14.5	5.4	19.1
강 원	0	0	0.0	0.0	0.0	0.0	0.0	0.0
충 북	0	0	0.0	0.0	0.0	0.0	0.0	0.0
충 남	2	3	0.7	0.5	0.7	1.4	0.9	0.9
전 북	0	0	0.0	0.0	0.0	0.0	0.0	0.0
전 남	0	1	0.0	0.0	0.0	0.5	0.0	0.0
경 북	1	1	0.1	0.1	0.4	0.5	0.1	0.1
경 남	4	2	1.1	0.3	1.4	0.9	1.3	0.5
제 주	0	0	0.0	0.0	0.0	0.0	0.0	0.0
전 국	281	214	84.8	54.7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237	178	68.8	41.6	84.3	83.2	81.1	76.1
충청권	23	24	13.0	11.4	8.2	11.2	15.3	20.8
호남권	4	2	0.4	0.1	1.4	0.9	0.4	0.3
영남권	17	10	2.7	1.5	6.0	4.7	3.1	2.8
강원·제주	0	0	0.0	0.0	0.0	0.0	0.0	0.0
지 방	44	36	16.0	13.1	15.7	16.8	18.9	23.9

② 대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 : 産

<부표 5> 100대 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

구 분	지역간 분포(개소, 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본사수		종업원수		본사수		종업원수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전 국	100	100	840.2	718.0	100.0	100.0	100.0	100.0
서 울	86	77	673.3	513.0	86.0	77.0	80.1	71.5
부 산	1	1	1.5	4.5	1.0	1.0	0.2	0.6
대 구	0	0	0.0	0.0	0.0	0.0	0.0	0.0
인 천	3	4	28.1	25.3	3.0	4.0	3.3	3.5
광 주	1	0	3.5	0.0	1.0	0.0	0.4	0.0
대 전	0	1	0.0	4.5	0.0	1.0	0.0	0.6
울 산	1	1	21.0	25.8	1.0	1.0	2.5	3.6
경 기	5	10	66.9	113.0	5.0	10.0	8.0	15.7
강 원	0	0	0.0	0.0	0.0	0.0	0.0	0.0
충 북	0	0	0.0	0.0	0.0	0.0	0.0	0.0
충 남	0	3	0.0	5.3	0.0	3.0	0.0	0.7
전 북	0	0	0.0	0.0	0.0	0.0	0.0	0.0
전 남	0	0	0.0	0.0	0.0	0.0	0.0	0.0
경 북	1	1	22.5	19.3	1.0	1.0	2.7	2.7
경 남	2	2	23.4	7.3	2.0	2.0	2.8	1.0
제 주	0	0	0.0	0.0	0.0	0.0	0.0	0.0
전 국	100	100	840.2	718.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4	91	768.2	651.3	94.0	91.0	91.4	90.7
충청권	0	4	0.0	9.8	0.0	4.0	0.0	1.4
호남권	1	0	3.5	0.0	1.0	0.0	0.4	0.0
영남권	5	5	68.5	56.9	5.0	5.0	8.1	7.9
강원·제주	0	0	0.0	0.0	0.0	0.0	0.0	0.0
지 방	6	9	72.0	66.6	6.0	9.0	8.6	9.3

<부표 6> 100대 기업 본사 수의 업종별 지역간 분포(개소) : 1990

구 분	합 계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 타
전 국	100	54	1	9	14	5	16	1
서 울	86	41	1	8	14	5	16	1
부 산	1	1	0	0	0	0	0	0
인 천	3	3	0	0	0	0	0	0
광 주	1	0	0	1	0	0	0	0
대 전	0	0	0	0	0	0	0	0
울 산	1	1	0	0	0	0	0	0
경 기	5	5	0	0	0	0	0	0
충 남	0	0	0	0	0	0	0	0
경 북	1	1	0	0	0	0	0	0
경 남	2	2	0	0	0	0	0	0
전 국	100	54	1	9	14	5	16	1
수도권	94	49	1	8	14	5	16	1
충청권	0	0	0	0	0	0	0	0
호남권	1	0	0	1	0	0	0	0
영남권	5	5	0	0	0	0	0	0
강원·제주	0	0	0	0	0	0	0	0
지 방	6	5	0	1	0	0	0	0

<부표 7> 100대 기업 본사 수의 업종별 지역간 분포(개소) : 2000

구 분	합 계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기 타
전 국	100	38	4	8	12	9	28	1
서 울	77	21	3	5	11	8	28	1
부 산	1	1	0	0	0	0	0	0
인 천	4	3	0	0	1	0	0	0
광 주	0	0	0	0	0	0	0	0
대 전	1	1	0	0	0	0	0	0
울 산	1	1	0	0	0	0	0	0
경 기	10	5	1	3	0	1	0	0
충 남	3	3	0	0	0	0	0	0
경 북	1	1	0	0	0	0	0	0
경 남	2	2	0	0	0	0	0	0
전 국	100	38	4	8	12	9	28	1
수도권	91	29	4	8	12	9	28	1
충청권	4	4	0	0	0	0	0	0
호남권	0	0	0	0	0	0	0	0
영남권	5	5	0	0	0	0	0	0
강원·제주	0	0	0	0	0	0	0	0
지 방	9	9	0	0	0	0	0	0

<부표 8> 100대 기업 본사 수의 업종별 지역간 분포변화(개소) : 1990~2000

구 분	합 계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 타
전 국	0	-16	3	-1	-2	4	12	0
서 울	-9	-20	2	-3	-3	3	12	0
부 산	0	0	0	0	0	0	0	0
인 천	1	0	0	0	1	0	0	0
광 주	-1	0	0	-1	0	0	0	0
대 전	1	1	0	0	0	0	0	0
울 산	0	0	0	0	0	0	0	0
경 기	5	0	1	3	0	1	0	0
충 남	3	3	0	0	0	0	0	0
경 북	0	0	0	0	0	0	0	0
경 남	0	0	0	0	0	0	0	0
전 국	0	-16	3	-1	-2	4	12	0
수도권	-3	-20	3	0	-2	4	12	0
충청권	4	4	0	0	0	0	0	0
호남권	-1	0	0	-1	0	0	0	0
영남권	0	0	0	0	0	0	0	0
강원·제주	0	0	0	0	0	0	0	0
지 방	3	4	0	-1	0	0	0	0

<부표 9> 500대 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

구 분	지역간 분포(개소, 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본사수		종업원수		본사수		종업원수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전 국	500	500	1,537.8	1,193.7	100.0	100.0	100.0	100.0
서 울	367	360	1,133.6	856.4	73.4	72.0	73.7	71.7
부 산	21	9	66.5	13.6	4.2	1.8	4.3	1.1
대 구	11	10	14.1	12.1	2.2	2.0	0.9	1.0
인 천	21	9	64.9	36.5	4.2	1.8	4.2	3.1
광 주	4	6	5.6	7.8	0.8	1.2	0.4	0.7
대 전	4	5	4.0	7.6	0.8	1.0	0.3	0.6
울 산	9	12	30.1	34.7	1.8	2.4	2.0	2.9
경 기	25	44	101.1	150.1	5.0	8.8	6.6	12.6
강 원	0	2	0.0	1.0	0.0	0.4	0.0	0.1
충 북	2	2	5.0	1.5	0.4	0.4	0.3	0.1
충 남	2	9	13.9	9.0	0.4	1.8	0.9	0.8
전 북	3	5	3.4	4.0	0.6	1.0	0.2	0.3
전 남	2	2	1.7	4.3	0.4	0.4	0.1	0.4
경 북	9	11	36.0	31.4	1.8	2.2	2.3	2.6
경 남	20	14	57.8	23.5	4.0	2.8	3.8	2.0
제 주	0	0	0.0	0.0	0.0	0.0	0.0	0.0
전 국	500	500	1,537.8	1,193.7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413	413	1,299.6	1,043.1	82.6	82.6	84.5	87.4
충청권	8	16	22.9	18.2	1.6	3.2	1.5	1.5
호남권	9	13	10.8	16.1	1.8	2.6	0.7	1.4
영남권	70	56	204.5	115.3	14.0	11.2	13.3	9.7
강원·제주	0	2	0.0	1.0	0.0	0.4	0.0	0.1
지 방	87	87	238.2	150.6	17.4	17.4	15.5	12.6

<부표 10> 500대 기업 본사 수의 업종별 지역간 분포(개소) : 1990

구 분	A	B	C	D	E	F	G	H	I	K	L	N	합계
전 국	7	0	1	296	3	39	56	2	14	70	10	2	500
서 울	6	0	1	183	3	35	52	2	14	61	9	1	367
부 산	1	0	0	18	0	0	0	0	0	2	0	0	21
대 구	0	0	0	5	0	2	3	0	0	1	0	0	11
인 천	0	0	0	19	0	0	1	0	0	1	0	0	21
광 주	0	0	0	1	0	1	0	0	0	1	1	0	4
대 전	0	0	0	3	0	0	0	0	0	1	0	0	4
울 산	0	0	0	9	0	0	0	0	0	0	0	0	9
경 기	0	0	0	23	0	1	0	0	0	0	0	1	25
강 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충 북	0	0	0	1	0	0	0	0	0	1	0	0	2
충 남	0	0	0	2	0	0	0	0	0	0	0	0	2
전 북	0	0	0	2	0	0	0	0	0	1	0	0	3
전 남	0	0	0	2	0	0	0	0	0	0	0	0	2
경 북	0	0	0	9	0	0	0	0	0	0	0	0	9
경 남	0	0	0	19	0	0	0	0	0	1	0	0	20
제 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 국	7	0	1	296	3	39	56	2	14	70	10	2	500
수도권	6	0	1	225	3	36	53	2	14	62	9	2	413
충청권	0	0	0	6	0	0	0	0	0	2	0	0	8
호남권	0	0	0	5	0	1	0	0	0	2	1	0	9
영남권	1	0	0	60	0	2	3	0	0	4	0	0	70
강원·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 방	1	0	0	71	0	3	3	0	0	8	1	0	87

주 : A(농업 및 임업), B(어업), C(광업),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 창고 및 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N(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표 11> 500대 기업 본사 수의 업종별 지역간 분포(개소) : 2000

구 분	A	B	C	D	E	F	G	H	I	K	L	N	합계
전 국	0	1	1	221	12	46	63	3	25	106	14	8	500
서 울	0	1	0	130	8	27	53	2	24	95	13	7	360
부 산	0	0	0	2	1	0	2	1	0	3	0	0	9
대 구	0	0	0	4	1	0	3	0	0	2	0	0	10
인 천	0	0	0	8	0	0	1	0	0	0	0	0	9
광 주	0	0	0	3	0	1	1	0	0	1	0	0	6
대 전	0	0	0	3	0	1	0	0	0	1	0	0	5
울 산	0	0	0	9	1	0	2	0	0	0	0	0	12
경 기	0	0	1	26	1	10	1	0	1	2	1	1	44
강 원	0	0	0	1	0	1	0	0	0	0	0	0	2
충 북	0	0	0	2	0	0	0	0	0	0	0	0	2
충 남	0	0	0	7	0	2	0	0	0	0	0	0	9
전 북	0	0	0	2	0	2	0	0	0	1	0	0	5
전 남	0	0	0	2	0	0	0	0	0	0	0	0	2
경 북	0	0	0	10	0	1	0	0	0	0	0	0	11
경 남	0	0	0	12	0	1	0	0	0	1	0	0	14
제 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 국	0	1	1	221	12	46	63	3	25	106	14	8	500
수도권	0	1	1	164	9	37	55	2	25	97	14	8	413
충청권	0	0	0	12	0	3	0	0	0	1	0	0	16
호남권	0	0	0	7	0	3	1	0	0	2	0	0	13
영남권	0	0	0	37	3	2	7	1	0	6	0	0	56
강원·제주	0	0	0	1	0	1	0	0	0	0	0	0	2
지 방	0	0	0	57	3	9	8	1	0	9	0	0	87

주 : A(농업 및 임업), B(어업), C(광업),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 창고 및 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N(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표 12> 500대 기업 본사 수의 업종별 지역간 분포변화(개소) : 1990~2000

구 분	A	B	C	D	E	F	G	H	I	K	L	N	합계
전 국	-7	1	0	-75	9	7	7	1	11	36	4	6	0
서 울	-6	1	-1	-53	5	-8	1	0	10	34	4	6	-7
부 산	-1	0	0	-16	1	0	2	1	0	1	0	0	-12
대 구	0	0	0	-1	1	-2	0	0	0	1	0	0	-1
인 천	0	0	0	-11	0	0	0	0	0	-1	0	0	-12
광 주	0	0	0	2	0	0	1	0	0	0	-1	0	2
대 전	0	0	0	0	0	1	0	0	0	0	0	0	1
울 산	0	0	0	0	1	0	2	0	0	0	0	0	3
경 기	0	0	1	3	1	9	1	0	1	2	1	0	19
강 원	0	0	0	1	0	1	0	0	0	0	0	0	2
충 북	0	0	0	1	0	0	0	0	0	-1	0	0	0
충 남	0	0	0	5	0	2	0	0	0	0	0	0	7
전 북	0	0	0	0	0	2	0	0	0	0	0	0	2
전 남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 북	0	0	0	1	0	1	0	0	0	0	0	0	2
경 남	0	0	0	-7	0	1	0	0	0	0	0	0	-6
제 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 국	-7	1	0	-75	9	7	7	1	11	36	4	6	0
수도권	-6	1	0	-61	6	1	2	0	11	35	5	6	0
충청권	0	0	0	6	0	3	0	0	0	-1	0	0	8
호남권	0	0	0	2	0	2	1	0	0	0	-1	0	4
영남권	-1	0	0	-23	3	0	4	1	0	2	0	0	-14
강원·제주	0	0	0	1	0	1	0	0	0	0	0	0	2
지 방	-1	0	0	-14	3	6	5	1	0	1	-1	0	0

주 : A(농업 및 임업), B(어업), C(광업),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 창고 및 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N(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표 13> 1000대 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

구 분	지역간 분포(개소, 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본사수		종업원수		본사수		종업원수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전 국	1,000	1,000	1,859	1,436	100.0	100.0	100.0	100.0
서 울	622	616	1,289	987	62.2	61.6	69.3	68.7
부 산	68	38	103	24	6.8	3.8	5.5	1.7
대 구	29	24	25	19	2.9	2.4	1.3	1.3
인 천	45	28	86	45	4.5	2.8	4.6	3.1
광 주	14	18	9	11	1.4	1.8	0.5	0.8
대 전	13	15	9	13	1.3	1.5	0.5	0.9
울 산	16	19	33	37	1.6	1.9	1.8	2.6
경 기	95	107	144	181	9.5	10.7	7.7	12.6
강 원	3	7	3	2	0.3	0.7	0.2	0.2
충 북	8	14	9	8	0.8	1.4	0.5	0.5
충 남	4	25	14	15	0.4	2.5	0.8	1.1
전 북	7	11	5	7	0.7	1.1	0.3	0.5
전 남	5	10	3	7	0.5	1.0	0.2	0.5
경 북	24	30	46	42	2.4	3.0	2.5	2.9
경 남	46	36	80	36	4.6	3.6	4.3	2.5
제 주	1	2	1	1	0.1	0.2	0.0	0.0
전 국	1,000	1,000	1,859	1,436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762	751	1,519	1,213	76.2	75.1	81.7	84.5
충청권	25	54	32	36	2.5	5.4	1.7	2.5
호남권	26	39	17	25	2.6	3.9	0.9	1.7
영남권	183	147	287	159	18.3	14.7	15.5	11.1
강원·제주	4	9	4	3	0.4	0.9	0.2	0.2
지 방	238	249	340	223	23.8	24.9	18.3	15.5

<부표 14> 3000대 기업 본사의 지역간 분포

구 분	지역간 분포(개소, 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본사수		종업원수		본사수		종업원수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전 국	3,000	3,000	2,350	1,855	100.0	100.0	100.0	100.0
서 울	1,424	1,585	1,480	1,194	47.6	52.8	63.0	64.4
부 산	273	166	156	52	9.1	5.5	6.6	2.8
대 구	126	77	50	30	4.2	2.6	2.1	1.6
인 천	154	115	114	63	5.1	3.8	4.9	3.4
광 주	37	41	13	15	1.2	1.4	0.6	0.8
대 전	55	42	20	18	1.8	1.4	0.9	0.9
울 산	40	46	37	43	1.3	1.5	1.6	2.3
경 기	484	458	232	255	16.2	15.3	9.9	13.8
강 원	23	20	10	7	0.8	0.7	0.4	0.4
충 북	42	48	20	14	1.4	1.6	0.8	0.7
충 남	23	90	20	27	0.8	3.0	0.9	1.4
전 북	33	35	11	12	1.1	1.2	0.5	0.6
전 남	17	26	6	11	0.6	0.9	0.3	0.6
경 북	95	105	69	55	3.2	3.5	2.9	3.0
경 남	160	139	111	59	5.3	4.6	4.7	3.2
제 주	7	7	2	1	0.2	0.2	0.1	0.1
전 국	3,000	3,000	2,350	1,855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2,062	2,158	1,826	1,512	68.9	71.9	77.7	81.5
충청권	120	180	60	58	4.0	6.0	2.5	3.1
호남권	87	102	30	37	2.9	3.4	1.3	2.0
영남권	694	533	422	239	23.2	17.8	18.0	12.9
강원·제주	30	27	12	8	1.0	0.9	0.5	0.5
지 방	931	842	524	343	31.1	28.1	22.3	18.5

<부표 15> 3000대 기업 본사 수의 업종별 지역간 분포(개소) : 1990

구 분	A	B	C	D	E	F	G	H	I	K	L	N	합계
전 국	43	1	20	2,030	18	270	249	36	100	157	50	19	3,000
서 울	35	1	12	799	8	140	163	25	62	120	44	15	1,424
부 산	6	0	0	178	2	28	25	2	20	11	1	0	273
대 구	1	0	1	94	1	13	9	0	1	5	1	0	126
인 천	0	0	0	139	1	4	4	0	4	2	0	0	154
광 주	0	0	0	10	1	13	7	0	1	4	1	0	37
대 전	0	0	0	34	1	8	7	0	1	4	0	0	55
울 산	0	0	0	31	0	6	0	0	1	1	1	0	40
경 기	0	0	1	441	3	15	13	2	5	2	0	2	484
강 원	0	0	5	8	0	7	0	0	2	1	0	0	23
충 북	0	0	0	33	0	3	3	0	1	2	0	0	42
충 남	0	0	0	19	0	3	0	0	1	0	0	0	23
전 북	0	0	0	23	0	4	5	0	0	1	0	0	33
전 남	0	0	0	14	0	3	0	0	0	0	0	0	17
경 북	1	0	1	71	0	7	5	4	1	1	2	2	95
경 남	0	0	0	136	1	13	7	1	0	2	0	0	160
제 주	0	0	0	0	0	3	1	2	0	1	0	0	7
전 국	43	1	20	2,030	18	270	249	36	100	157	50	19	3,000
수도권	35	1	13	1,379	12	159	180	27	71	124	44	17	2,062
충청권	0	0	0	86	1	14	10	0	3	6	0	0	120
호남권	0	0	0	47	1	20	12	0	1	5	1	0	87
영남권	8	0	2	510	4	67	46	7	23	20	5	2	694
강원·제주	0	0	5	8	0	10	1	2	2	2	0	0	30
지 방	8	0	7	651	6	111	69	9	29	33	6	2	931

주 : 1. 합계에는 소재지 불명의 7개 업체 포함.

2. A(농업 및 임업), B(어업), C(광업),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 창고 및 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N(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표 16> 3000대 기업 본사 수의 업종별 지역간 분포(%) : 1990

구 분	A	B	C	D	E	F	G	H	I	K	L	N	합계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 울	81.4	100.0	60.0	39.4	44.4	51.9	65.5	69.4	62.0	76.4	88.0	78.9	47.6
부 산	14.0	0.0	0.0	8.8	11.1	10.4	10.0	5.6	20.0	7.0	2.0	0.0	9.1
대 구	2.3	0.0	5.0	4.6	5.6	4.8	3.6	0.0	1.0	3.2	2.0	0.0	4.2
인 천	0.0	0.0	0.0	6.8	5.6	1.5	1.6	0.0	4.0	1.3	0.0	0.0	5.1
광 주	0.0	0.0	0.0	0.5	5.6	4.8	2.8	0.0	1.0	2.5	2.0	0.0	1.2
대 전	0.0	0.0	0.0	1.7	5.6	3.0	2.8	0.0	1.0	2.5	0.0	0.0	1.8
울 산	0.0	0.0	0.0	1.5	0.0	2.2	0.0	0.0	1.0	0.6	2.0	0.0	1.3
경 기	0.0	0.0	5.0	21.7	16.7	5.6	5.2	5.6	5.0	1.3	0.0	10.5	16.2
강 원	0.0	0.0	25.0	0.4	0.0	2.6	0.0	0.0	2.0	0.6	0.0	0.0	0.8
충 북	0.0	0.0	0.0	1.6	0.0	1.1	1.2	0.0	1.0	1.3	0.0	0.0	1.4
충 남	0.0	0.0	0.0	0.9	0.0	1.1	0.0	0.0	1.0	0.0	0.0	0.0	0.8
전 북	0.0	0.0	0.0	1.1	0.0	1.5	2.0	0.0	0.0	0.6	0.0	0.0	1.1
전 남	0.0	0.0	0.0	0.7	0.0	1.1	0.0	0.0	0.0	0.0	0.0	0.0	0.6
경 북	2.3	0.0	5.0	3.5	0.0	2.6	2.0	11.1	1.0	0.6	4.0	10.5	3.2
경 남	0.0	0.0	0.0	6.7	5.6	4.8	2.8	2.8	0.0	1.3	0.0	0.0	5.3
제 주	0.0	0.0	0.0	0.0	0.0	1.1	0.4	5.6	0.0	0.6	0.0	0.0	0.2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81.4	100.0	65.0	67.9	66.7	58.9	72.3	75.0	71.0	79.0	88.0	89.5	68.9
충청권	0.0	0.0	0.0	4.2	5.6	5.2	4.0	0.0	3.0	3.8	0.0	0.0	4.0
호남권	0.0	0.0	0.0	2.3	5.6	7.4	4.8	0.0	1.0	3.2	2.0	0.0	2.9
영남권	18.6	0.0	10.0	25.1	22.2	24.8	18.5	19.4	23.0	12.7	10.0	10.5	23.2
강원·제주	0.0	0.0	25.0	0.4	0.0	3.7	0.4	5.6	2.0	1.3	0.0	0.0	1.0
지 방	18.6	0.0	35.0	32.1	33.3	41.1	27.7	25.0	29.0	21.0	12.0	10.5	31.1

주 : 1. 합계에는 소재지 불명의 7개 업체 포함.

2. A(농업 및 임업), B(어업), C(광업),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 창고 및 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N(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표 17> 3000대 기업 본사 수의 업종별 지역간 분포(개소) : 2000

구 분	A	B	C	D	E	F	G	H	I	K	L	N	합계
전 국	4	10	12	1,731	27	289	397	30	118	195	149	38	3,000
서 울	2	8	7	710	10	155	274	23	82	165	127	22	1,585
부 산	0	1	0	94	1	19	29	3	9	6	2	2	166
대 구	1	0	0	57	1	5	8	0	0	2	0	3	77
인 천	0	0	0	92	1	7	5	0	6	2	0	2	115
광 주	0	0	1	14	1	11	9	0	1	2	1	1	41
대 전	0	0	0	21	1	6	5	0	1	5	2	1	42
울 산	0	0	0	37	2	1	4	0	0	0	1	1	46
경 기	1	1	3	350	1	39	32	0	13	5	10	3	458
강 원	0	0	1	7	0	5	1	2	0	0	3	1	20
충 북	0	0	0	40	1	2	5	0	0	0	0	0	48
충 남	0	0	0	73	2	10	4	0	1	0	0	0	90
전 북	0	0	0	20	1	3	7	0	1	3	0	0	35
전 남	0	0	0	19	1	4	0	0	0	0	1	1	26
경 북	0	0	0	85	2	7	5	0	4	1	0	1	105
경 남	0	0	0	112	2	15	7	0	0	2	1	0	139
제 주	0	0	0	0	0	0	2	2	0	2	1	0	7
전 국	4	10	12	1,731	27	289	397	30	118	195	149	38	3,000
수도권	3	9	10	1,152	12	201	311	23	101	172	137	27	2,158
충청권	0	0	0	134	4	18	14	0	2	5	2	1	180
호남권	0	0	1	53	3	18	16	0	2	5	2	2	102
영남권	1	1	0	385	8	47	53	3	13	11	4	7	533
강원·제주	0	0	1	7	0	5	3	4	0	2	4	1	27
지 방	1	1	2	579	15	88	86	7	17	23	12	11	842

주 : 1. 합계에는 소재지 불명의 7개 업체 포함.

2. A(농업 및 임업), B(어업), C(광업),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 창고 및 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N(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표 18> 3000대 기업 본사 수의 업종별 지역간 분포(%) : 2000

구 분	A	B	C	D	E	F	G	H	I	K	L	N	합계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 울	50.0	80.0	58.3	41.0	37.0	53.6	69.0	76.7	69.5	84.6	85.2	57.9	52.8
부 산	0.0	10.0	0.0	5.4	3.7	6.6	7.3	10.0	7.6	3.1	1.3	5.3	5.5
대 구	25.0	0.0	0.0	3.3	3.7	1.7	2.0	0.0	0.0	1.0	0.0	7.9	2.6
인 천	0.0	0.0	0.0	5.3	3.7	2.4	1.3	0.0	5.1	1.0	0.0	5.3	3.8
광 주	0.0	0.0	8.3	0.8	3.7	3.8	2.3	0.0	0.8	1.0	0.7	2.6	1.4
대 전	0.0	0.0	0.0	1.2	3.7	2.1	1.3	0.0	0.8	2.6	1.3	2.6	1.4
울 산	0.0	0.0	0.0	2.1	7.4	0.3	1.0	0.0	0.0	0.0	0.7	2.6	1.5
경 기	25.0	10.0	25.0	20.2	3.7	13.5	8.1	0.0	11.0	2.6	6.7	7.9	15.3
강 원	0.0	0.0	8.3	0.4	0.0	1.7	0.3	6.7	0.0	0.0	2.0	2.6	0.7
충 북	0.0	0.0	0.0	2.3	3.7	0.7	1.3	0.0	0.0	0.0	0.0	0.0	1.6
충 남	0.0	0.0	0.0	4.2	7.4	3.5	1.0	0.0	0.8	0.0	0.0	0.0	3.0
전 북	0.0	0.0	0.0	1.2	3.7	1.0	1.8	0.0	0.8	1.5	0.0	0.0	1.2
전 남	0.0	0.0	0.0	1.1	3.7	1.4	0.0	0.0	0.0	0.0	0.7	2.6	0.9
경 북	0.0	0.0	0.0	4.9	7.4	2.4	1.3	0.0	3.4	0.5	0.0	2.6	3.5
경 남	0.0	0.0	0.0	6.5	7.4	5.2	1.8	0.0	0.0	1.0	0.7	0.0	4.6
제 주	0.0	0.0	0.0	0.0	0.0	0.0	0.5	6.7	0.0	1.0	0.7	0.0	0.2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75.0	90.0	83.3	66.6	44.4	69.6	78.3	76.7	85.6	88.2	91.9	71.1	71.9
충청권	0.0	0.0	0.0	7.7	14.8	6.2	3.5	0.0	1.7	2.6	1.3	2.6	6.0
호남권	0.0	0.0	8.3	3.1	11.1	6.2	4.0	0.0	1.7	2.6	1.3	5.3	3.4
영남권	25.0	10.0	0.0	22.2	29.6	16.3	13.4	10.0	11.0	5.6	2.7	18.4	17.8
강원·제주	0.0	0.0	8.3	0.4	0.0	1.7	0.8	13.3	0.0	1.0	2.7	2.6	0.9
지 방	25.0	10.0	16.7	33.4	55.6	30.4	21.7	23.3	14.4	11.8	8.1	28.9	28.1

주 : 1. 합계에는 소재지 불명의 7개 업체 포함.

2. A(농업 및 임업), B(어업), C(광업),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 창고 및 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N(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표 19> 3000대 기업 본사 수의 업종별 지역간 분포(개소) : 1990~2000

구 분	A	B	C	D	E	F	G	H	I	K	L	N	합계
전 국	-39	9	-8	-299	9	19	148	-6	18	38	99	19	0
서 울	-33	7	-5	-89	2	15	111	-2	20	45	83	7	161
부 산	-6	1	0	-84	-1	-9	4	1	-11	-5	1	2	-107
대 구	0	0	-1	-37	0	-8	-1	0	-1	-3	-1	3	-49
인 천	0	0	0	-47	0	3	1	0	2	0	0	2	-39
광 주	0	0	1	4	0	-2	2	0	0	-2	0	1	4
대 전	0	0	0	-13	0	-2	-2	0	0	1	2	1	-13
울 산	0	0	0	6	2	-5	4	0	-1	-1	0	1	6
경 기	1	1	2	-91	-2	24	19	-2	8	3	10	1	-26
강 원	0	0	-4	-1	0	-2	1	2	-2	-1	3	1	-3
충 북	0	0	0	7	1	-1	2	0	-1	-2	0	0	6
충 남	0	0	0	54	2	7	4	0	0	0	0	0	67
전 북	0	0	0	-3	1	-1	2	0	1	2	0	0	2
전 남	0	0	0	5	1	1	0	0	0	0	1	1	9
경 북	-1	0	-1	14	2	0	0	-4	3	0	-2	-1	10
경 남	0	0	0	-24	1	2	0	-1	0	0	1	0	-21
제 주	0	0	0	0	0	-3	1	0	0	1	1	0	0
전 국	-39	9	-8	-299	9	19	148	-6	18	38	99	19	0
수도권	-32	8	-3	-227	0	42	131	-4	30	48	93	10	96
충청권	0	0	0	48	3	4	4	0	-1	-1	2	1	60
호남권	0	0	1	6	2	-2	4	0	1	0	1	2	15
영남권	-7	1	-2	-125	4	-20	7	-4	-10	-9	-1	5	-161
강원·제주	0	0	-4	-1	0	-5	2	2	-2	0	4	1	-3
지 방	-7	1	-5	-72	9	-23	17	-2	-12	-10	6	9	-89

주 : 1. 합계에는 소재지 불명의 7개 업체 포함.

2. A(농업 및 임업), B(어업), C(광업),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 창고 및 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N(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③ 명문대학의 지역간 분포 : 學

<부표 20> 20대 명문대학의 지역간 분포

구 분	지역간 분포(개소, 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학교수		학생수		교수수		학교수		학생수		교수수	
	1996	2001	1993	2001	1993	2001	1996	2001	1993	2001	1993	2001
전 국	20	20	312.7	400.7	12.0	1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 울	11	11	210.3	277.7	8.0	7.9	55.0	55.0	67.2	69.3	66.4	64.9
부 산	1	1	20.4	30.6	0.8	0.8	5.0	5.0	6.5	7.6	6.3	6.6
대 구	1	1	21.0	32.6	0.8	0.8	5.0	5.0	6.7	8.1	6.3	6.6
인 천	1	1	16.2	19.3	0.5	0.6	5.0	5.0	5.2	4.8	3.7	5.1
광 주	-	-	-	-	-	-	0.0	0.0	0.0	0.0	0.0	0.0
대 전	1	1	5.7	6.7	0.3	0.4	5.0	5.0	1.8	1.7	2.8	3.0
울 산	1	-	10.1	-	0.4	-	5.0	0.0	3.2	0.0	3.4	0.0
경 기	1	1	8.3	8.6	0.2	0.4	5.0	5.0	2.7	2.1	1.8	3.5
강 원	2	1	18.7	7.4	0.9	0.6	10.0	5.0	6.0	1.9	7.5	5.2
충 북	-	-	-	-	-	-	0.0	0.0	0.0	0.0	0.0	0.0
충 남	-	1	-	2.2	-	0.1	0.0	5.0	0.0	0.5	0.0	1.2
전 북	-	-	-	-	-	-	0.0	0.0	0.0	0.0	0.0	0.0
전 남	-	-	-	-	-	-	0.0	0.0	0.0	0.0	0.0	0.0
경 북	1	1	2.0	2.8	0.2	0.2	5.0	5.0	0.6	0.7	1.7	1.7
경 남	-	1	-	12.9	-	0.3	0.0	5.0	0.0	3.2	0.0	2.2
제 주	-	-	-	-	-	-	0.0	0.0	0.0	0.0	0.0	0.0
전 국	20	20	312.7	400.7	12.0	1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13	13	234.8	305.6	8.7	8.9	65.0	65.0	75.1	76.3	72.0	73.5
충청권	1	2	5.7	8.8	0.3	0.5	5.0	10.0	1.8	2.2	2.8	4.2
호남권	-	-	-	-	-	-	0.0	0.0	0.0	0.0	0.0	0.0
영남권	4	4	53.5	78.9	2.1	2.1	20.0	20.0	17.1	19.7	17.7	17.1
강원·제주	2	1	18.7	7.4	0.9	0.6	10.0	5.0	6.0	1.9	7.5	5.2
지 방	7	7	77.9	95.1	3.4	3.2	35.0	35.0	24.9	23.7	28.0	26.5

<부표 21> 30대 명문대학의 지역간 분포

구 분	학교수	지역간 분포(천인)				지역간 분포비율(%)			
		교원수		학생수		교원수		학생수	
		1993	2001	1993	2001	1993	2001	1993	2001
전 국	30	16.0	17.4	428.9	608.6	100.0	100.0	100.0	100.0
서 울	14	8.9	8.7	243.2	332.9	55.2	49.8	56.7	54.7
부 산	1	0.8	0.8	20.4	30.6	4.7	4.6	4.8	5.0
대 구	1	0.8	0.8	21.0	32.6	4.7	4.6	4.9	5.4
인 천	1	0.5	0.6	16.2	19.3	2.8	3.6	3.8	3.2
광 주	1	0.7	0.8	20.1	23.2	4.6	4.6	4.7	3.8
대 전	2	1.0	1.1	23.9	35.8	6.3	6.4	5.6	5.9
울 산	1	0.4	0.7	10.1	20.0	2.6	4.1	2.4	3.3
경 기	2	0.3	0.6	9.1	18.0	1.7	3.6	2.1	3.0
강 원	2	0.9	1.2	18.7	23.7	5.7	7.1	4.4	3.9
충 북	-	0.0	0.0	0.0	0.0	0.0	0.0	0.0	0.0
충 남	1	0.1	0.1	0.4	2.2	0.4	0.8	0.1	0.4
전 북	1	0.7	0.8	17.5	20.0	4.4	4.4	4.1	3.3
전 남	-	0.0	0.0	0.0	0.0	0.0	0.0	0.0	0.0
경 북	2	0.8	0.9	23.4	37.4	4.7	4.9	5.5	6.2
경 남	1	0.4	0.3	4.8	12.9	2.4	1.5	1.1	2.1
제 주	-	0.0	0.0	0.0	0.0	0.0	0.0	0.0	0.0
전 국	20	16.0	17.4	428.9	608.6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17	9.6	9.9	268.5	370.2	59.7	56.9	62.6	60.8
충청권	3	1.1	1.3	24.4	37.9	6.7	7.2	5.7	6.2
호남권	2	1.4	1.6	37.5	43.3	9.0	9.1	8.8	7.1
영남권	6	3.1	3.4	79.7	133.5	19.1	19.7	18.6	21.9
강원·제주	2	0.9	1.2	18.7	23.7	5.7	7.1	4.4	3.9
지 방	13	6.5	7.5	160.3	238.4	40.3	43.1	37.4	39.2

주 : 학교수는 선정기준 상 기간중 변동이 없으며, 선정기준은 본문 내용 참조.

2) 중추기능 지역중력지수(RGI)의 지역간 비교

① 인구·산업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부표 22> 인구·산업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구 분	인 구		제조업고용기회	
	1990	2000	1990	20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서 울	48.4	42.8	25.9	17.1
부 산	3.3	2.6	5.3	3.2
대 구	2.1	1.6	1.8	1.6
인 천	11.1	12.3	19.4	19.2
광 주	0.8	0.6	0.1	0.2
대 전	1.0	0.9	0.3	0.3
울 산	0.6	0.6	1.4	1.7
경 기	23.6	32.0	39.3	47.0
강 원	0.5	0.3	0.1	0.1
충 북	1.1	0.9	0.6	1.4
충 남	1.3	0.9	0.5	1.6
전 북	1.5	1.0	0.3	0.5
전 남	1.0	0.5	0.1	0.2
경 북	1.3	1.0	1.0	1.6
경 남	2.2	1.8	3.8	4.4
제 주	0.1	0.1	0.0	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83.1	87.1	84.6	83.3
충청권	3.4	2.8	1.4	3.3
호남권	3.4	2.0	0.6	0.8
영남권	9.5	7.7	13.3	12.5
강원·제주	0.6	0.4	0.1	0.1
지 방	16.9	12.9	15.4	16.7

② 국가공공기관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 政

<부표 23> 중앙행정기관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구 분	부서수		근무원원	
	1992	2000	1992	20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서 울	61.5	57.1	60.8	56.8
부 산	0.0	0.0	0.0	0.0
대 구	0.0	0.0	0.0	0.0
인 천	0.4	0.4	0.0	0.4
광 주	0.0	0.0	0.0	0.0
대 전	0.0	0.4	0.0	0.4
울 산	0.0	0.0	0.0	0.0
경 기	38.1	42.1	39.1	42.4
강 원	0.0	0.0	0.0	0.0
충 북	0.0	0.0	0.0	0.0
충 남	0.0	0.0	0.0	0.0
전 북	0.0	0.0	0.0	0.0
전 남	0.0	0.0	0.0	0.0
경 북	0.0	0.0	0.0	0.0
경 남	0.0	0.0	0.0	0.0
제 주	0.0	0.0	0.0	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100.0	99.6	100.0	99.6
충청권	0.0	0.4	0.0	0.4
호남권	0.0	0.0	0.0	0.0
영남권	0.0	0.0	0.0	0.0
강원·제주	0.0	0.0	0.0	0.0
지 방	0.0	0.4	0.0	0.4

<부표 24> 공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구 분	기관수		근무인원	
	1992	2002	1992	2002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서 울	85.5	75.3	83.8	66.4
부 산	0.2	0.1	0.1	0.0
대 구	0.1	0.0	0.0	0.0
인 천	0.0	1.4	0.0	1.6
광 주	0.0	0.0	0.0	0.0
대 전	1.0	0.7	2.7	1.3
울 산	0.0	0.0	0.0	0.0
경 기	12.9	22.3	13.0	30.5
강 원	0.0	0.0	0.0	0.0
충 북	0.0	0.0	0.0	0.0
충 남	0.1	0.2	0.3	0.1
전 북	0.0	0.0	0.0	0.0
전 남	0.0	0.0	0.0	0.0
경 북	0.0	0.0	0.0	0.0
경 남	0.1	0.0	0.1	0.0
제 주	0.0	0.0	0.0	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8.4	99.0	96.8	98.6
충청권	1.1	0.9	3.0	1.4
호남권	0.0	0.0	0.0	0.0
영남권	0.4	0.1	0.2	0.0
강원·제주	0.0	0.0	0.0	0.0
지 방	1.6	1.0	3.2	1.4

③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 産

<부표 25> 100대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구 분	본사수		종업원수	
	1990	2000	1990	20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서 울	82.1	77.0	78.4	71.3
부 산	0.1	0.1	0.0	0.0
대 구	0.0	0.0	0.0	0.0
인 천	5.5	5.0	5.9	3.2
광 주	0.0	0.0	0.0	0.0
대 전	0.0	0.0	0.0	0.0
울 산	0.1	0.0	0.2	0.2
경 기	11.8	17.3	14.9	25.1
강 원	0.0	0.0	0.0	0.0
충 북	0.0	0.0	0.0	0.0
충 남	0.0	0.3	0.0	0.0
전 북	0.0	0.0	0.0	0.0
전 남	0.0	0.0	0.0	0.0
경 북	0.0	0.0	0.2	0.1
경 남	0.3	0.2	0.4	0.0
제 주	0.0	0.0	0.0	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9.5	99.3	99.2	99.6
충청권	0.0	0.4	0.0	0.1
호남권	0.0	0.0	0.0	0.0
영남권	0.5	0.3	0.8	0.3
강원·제주	0.0	0.0	0.0	0.0
지 방	0.5	0.7	0.8	0.4

<부표 26> 500대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구 분	본사수		종업원수	
	1990	2000	1990	20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서 울	80.8	80.9	79.6	76.5
부 산	1.0	0.2	0.9	0.1
대 구	0.3	0.2	0.1	0.1
인 천	7.4	2.3	7.3	3.3
광 주	0.0	0.0	0.0	0.0
대 전	0.1	0.1	0.0	0.0
울 산	0.3	0.2	0.3	0.2
경 기	8.6	15.0	10.4	19.4
강 원	0.0	0.0	0.0	0.0
충 북	0.0	0.0	0.0	0.0
충 남	0.0	0.2	0.2	0.0
전 북	0.0	0.1	0.0	0.0
전 남	0.0	0.0	0.0	0.0
경 북	0.1	0.1	0.2	0.1
경 남	1.1	0.5	0.9	0.2
제 주	0.0	0.0	0.0	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6.9	98.3	97.4	99.3
충청권	0.2	0.4	0.2	0.1
호남권	0.1	0.1	0.0	0.0
영남권	2.9	1.2	2.4	0.6
강원·제주	0.0	0.0	0.0	0.0
지 방	3.1	1.7	2.6	0.7

<부표 27> 1000대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구 분	본사수		종업원수	
	1990	2000	1990	20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서 울	70.8	74.9	76.3	76.0
부 산	1.9	0.8	1.4	0.2
대 구	0.4	0.3	0.2	0.1
인 천	9.3	4.1	8.5	3.6
광 주	0.1	0.1	0.0	0.0
대 전	0.1	0.2	0.0	0.1
울 산	0.3	0.3	0.4	0.3
경 기	15.4	17.0	11.7	19.1
강 원	0.0	0.1	0.0	0.0
충 북	0.1	0.4	0.1	0.1
충 남	0.0	0.6	0.1	0.1
전 북	0.0	0.1	0.0	0.0
전 남	0.0	0.0	0.0	0.0
경 북	0.2	0.3	0.2	0.2
경 남	1.3	0.8	1.1	0.3
제 주	0.0	0.0	0.0	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5.5	96.0	96.5	98.7
충청권	0.3	1.2	0.2	0.2
호남권	0.1	0.2	0.0	0.0
영남권	4.1	2.5	3.2	1.1
강원·제주	0.0	0.1	0.0	0.0
지 방	4.5	4.0	3.5	1.3

<부표 28> 3000대 기업본사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구 분	본사수		종업원수	
	1990	2000	1990	20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서 울	59.7	66.0	72.4	74.2
부 산	2.1	1.3	1.6	0.4
대 구	0.7	0.4	0.3	0.2
인 천	10.6	6.5	9.4	4.6
광 주	0.1	0.1	0.0	0.0
대 전	0.2	0.2	0.1	0.1
울 산	0.2	0.3	0.3	0.3
경 기	24.2	22.8	14.2	19.2
강 원	0.0	0.0	0.0	0.0
충 북	0.2	0.3	0.1	0.1
충 남	0.1	0.7	0.1	0.2
전 북	0.1	0.1	0.0	0.0
전 남	0.0	0.0	0.0	0.0
경 북	0.3	0.3	0.3	0.2
경 남	1.3	1.0	1.1	0.5
제 주	0.0	0.0	0.0	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4.6	95.3	96.0	98.0
충청권	0.5	1.2	0.3	0.3
호남권	0.1	0.2	0.0	0.1
영남권	4.7	3.3	3.6	1.6
강원·제주	0.0	0.0	0.0	0.0
지 방	5.4	4.7	4.0	2.0

③ 명문대학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부표 29> 20대 명문대학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교수수	
	1996	2001	1993	2001	1993	2001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 울	69.3	65.3	75.2	71.0	75.6	72.2
부 산	1.3	3.9	1.5	5.8	2.0	3.3
대 구	1.1	1.1	1.3	1.7	1.7	1.2
인 천	11.4	10.8	14.0	13.3	11.3	12.6
광 주	0.0	0.0	0.0	0.0	0.0	0.0
대 전	0.8	1.2	0.2	0.2	0.5	0.5
울 산	1.7	0.0	1.0	0.0	1.4	0.0
경 기	9.6	9.3	4.7	3.7	3.6	6.3
강 원	3.7	1.5	2.1	0.4	3.6	1.6
충 북	0.0	0.0	0.0	0.0	0.0	0.0
충 남	0.0	2.1	0.0	0.1	0.0	0.3
전 북	0.0	0.0	0.0	0.0	0.0	0.0
전 남	0.0	0.0	0.0	0.0	0.0	0.0
경 북	1.1	0.8	0.1	0.1	0.3	0.2
경 남	0.0	4.0	0.0	3.6	0.0	1.7
제 주	0.0	0.0	0.0	0.0	0.0	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90.3	85.4	93.9	88.0	90.5	91.1
충청권	0.8	3.3	0.2	0.3	0.5	0.8
호남권	0.0	0.0	0.0	0.0	0.0	0.0
영남권	5.2	9.8	3.8	11.2	5.4	6.4
강원·제주	3.7	1.5	2.1	0.4	3.6	1.6
지 방	9.7	14.6	6.1	12.0	9.5	8.9

<부표 30> 30대 명문대학 지역중력지수의 지역간 비교

구 분	교수수		학생수	
	1993	2001	1993	2001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서 울	60.9	61.1	63.5	57.9
부 산	4.9	3.4	2.9	4.6
대 구	5.7	4.8	5.9	7.7
인 천	8.1	9.0	10.4	8.4
광 주	0.8	0.7	0.7	0.5
대 전	2.7	2.4	1.8	2.0
울 산	1.6	2.3	1.1	2.0
경 기	2.7	5.2	3.6	3.3
강 원	2.8	3.4	1.7	1.7
충 북	0.0	0.0	0.0	0.0
충 남	0.1	0.3	0.0	0.1
전 북	1.6	1.4	1.2	0.9
전 남	0.0	0.0	0.0	0.0
경 북	5.1	4.7	6.3	8.4
경 남	3.0	1.4	0.9	2.5
제 주	0.0	0.0	0.0	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71.7	75.4	77.5	69.5
충청권	2.8	2.7	1.8	2.1
호남권	2.4	2.1	1.8	1.5
영남권	20.3	16.5	17.1	25.2
강원·제주	2.8	3.4	1.7	1.7
지 방	28.3	24.6	22.5	30.5

3) 우리나라 100대 기업과 본사 소재지

<부표 30> 우리나라 100대 기업 : 1990

순위	업종	회사명	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	자산규모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 규모	설립 년도
1	G	삼성물산	서울 중구	서울 구로구	583,678	7,613,165	5,245	1935
2	G	현대종합상사	서울 종로구	-	225,541	5,702,951	781	1976
3	K	삼성생명보험	서울 중구	-	8,180,116	4,921,716	6,200	1957
4	G	(주)대우	서울 중구	경남 양산시	3,083,997	4,789,626	14,286	1967
5	E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	13,021,769	4,568,253	32,353	1961
6	D	포항종합제철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8,944,004	4,364,288	22,537	1968
7	D	삼성전자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시	2,909,542	4,006,807	43,180	1969
8	D	현대자동차	서울 종로구	울산 중구	3,557,198	3,806,510	37,760	1967
9	K	대한교육보험	서울 종로구	-	6,396,909	3,096,948	44,068	1958
10	I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 종로구	-	7,115,850	2,904,803	52,950	1982
11	D	금성사	서울 영등포구	경남 창원시	2,361,513	2,604,987	33,023	1958
12	G	럭키금성상사	서울 영등포구	부산 금정구	610,010	2,565,477	4,114	1953
13	D	유공	서울 영등포구	울산 남구	1,843,694	2,544,915	4,909	1962
14	K	대한생명보험	서울 영등포구	-	2,935,717	2,408,916	31,960	1946
15	D	호남정유	서울 영등포구	전남 여수시	1,303,554	2,015,677	1,793	1967
16	D	기아자동차	서울 영등포구	경기 광명시	1,885,274	1,837,110	17,979	1944
17	G	선경	서울 중구	울산 중구	631,683	1,631,459	1,996	1956
18	G	쌍용	서울 중구	인천 중구	249,377	1,592,469	799	1954
19	I	대한항공	서울 중구	-	2,403,949	1,557,474	11,778	1962
20	K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	18,578,409	1,420,141	7,812	1966
21	F	현대건설	서울 종로구	-	2,188,494	1,372,325	35,461	1947
22	D	럭키	서울 영등포구	충북 청주시	1,358,221	1,285,448	9,985	1947
23	D	대우전자	서울 중구	경북 구미시	1,381,368	1,200,887	15,902	1972
24	G	호성물산	서울 중구	-	268,299	1,191,643	830	1952
25	D	대우자동차	인천 부평구	인천 부평구	1,536,601	1,141,306	16,006	1972
26	K	흥국생명보험	서울 중구	-	1,575,058	1,124,779	2,678	1950
27	K	제일생명보험	서울 서초구	-	1,597,767	1,112,549	16,500	1954
28	D	현대중공업	울산 동구	울산 동구	1,492,055	978,923	21,000	1972
29	D	삼성중공업	서울 중구	경남 창원시	1,134,406	926,800	7,000	1974
30	K	동아생명보험	서울 종로구	-	1,087,384	899,962	18,173	1973
31	F	대림산업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1,482,048	891,742	4,034	1939
32	K	한일은행	서울 중구	-	12,567,200	872,504	8,919	1932
33	F	동아건설산업	서울 중구	인천 북구	1,130,714	861,320	3,838	1945
34	K	한국상업은행	서울 중구	-	13,326,134	851,523	8,130	1950
35	K	제일은행	서울 종로구	-	12,447,017	851,310	8,840	1929

순위	업종	회사명	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	자산규모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 규모	설립 년도
36	K	국민은행	서울 중구	-	8,946,465	829,953	11,732	1963
37	K	조흥은행	서울 중구	-	12,318,556	804,392	9,139	1997
38	D	제일제당	서울 중구	부산 부산진구	612,285	784,924	6,513	1953
39	N	현대자동차서비스	서울 용산구	-	560,466	757,909	4,819	1974
40	K	서울신탁은행	서울 중구	-	11,063,235	726,885	9,683	1959
41	D	대우중공업	인천 동구	경기 시흥시	1,080,952	716,319	9,188	1937
42	D	현대정공	서울 종로구	울산 남구	670,100	676,821	7,851	1977
43	G	코오롱상사	서울 중구	서울 구로구	232,297	674,231	2,354	1954
44	D	쌍용정유	서울 중구	울산 울주군	647,483	640,290	1,085	1975
45	F	삼성종합건설	서울 중구	-	581,727	630,607	1,723	1957
46	D	한양화학	서울 중구	울산 남구	757,137	629,320	3,201	1974
47	I	현대상선	서울 종로구	-	1,182,223	619,546	1,801	1976
48	D	쌍용양회공업	서울 중구	강원 동해시	1,248,965	609,150	4,244	1962
49	D	삼성전관	서울 중구	경기 화성군	555,464	607,683	10,735	1970
50	D	동부제강	서울 중구	인천 서구	489,463	601,046	1,828	1982
51	G	삼미	서울 서초구	인천 동구	407,175	589,128	657	1959
52	D	력키금속	서울 중구	울산 울주군	393,605	577,232	1,759	1936
53	D	금성전선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양시	506,146	558,042	5,695	1962
54	D	현대전자산업	경기 이천시	경기 이천시	857,730	538,345	9,231	1983
55	D	삼양사	서울 종로구	-	502,861	534,347	2,952	1924
56	D	아세아자동차	서울 영등포구	광주 서구	474,182	516,227	5,107	1965
57	D	코오롱	서울 중구	대구 수성구	682,009	514,176	5,944	1957
58	D	동양나이론	서울 중구	울산 남구	740,058	513,691	5,102	1957
59	D	인천제철	인천 동구	인천 동구	564,282	500,369	2,866	1964
60	D	경인에너지	서울 중구	인천 북구	511,954	494,715	826	1969
61	F	현대산업개발	서울 강남구	-	573,824	493,512	998	1977
62	I	한진해운	서울 중구	-	1,114,563	493,500	1,587	1950
63	G	롯데쇼핑	서울 중구	-	423,445	493,020	3,068	1970
64	G	흥국상사	서울 중구	-	149,484	470,704	1,000	1965
65	D	삼미종합특수강	서울 서초구	경남 창원시	739,856	466,251	4,136	1966
66	D	동국제강	서울 중구	부산 남구	506,261	460,821	2,627	1954
67	D	풍산	서울 중구	인천 북구	602,446	446,824	9,337	1968
68	D	대우조선공업	서울 중구	경남 거제시	1,685,590	432,680	12,527	1978
69	F	력키개발	서울 중구	-	487,910	427,284	1,093	1969
70	D	고려합섬	경기 의왕시	경기 의왕시	557,707	424,282	1,829	1966
71	D	제일합섬	서울 중구	경북 경산시	342,061	422,917	2,987	1972
72	D	한국중공업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	778,223	416,670	6,745	1962
73	D	극동정유	서울 종로구	부산 남구	1,147,576	412,488	975	1964
74	D	태광산업	서울 중구	울산 남구	349,933	406,686	9,903	1961

순위	업종	회사명	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	자산규모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 규모	설립 년도
75	D	한국타이어제조	서울 구로구	서울 구로구	286,242	405,842	4,210	1941
76	D	삼성전기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시	401,947	402,064	7,549	1973
77	F	우성건설	서울 서초구	-	533,318	395,039	976	1973
78	K	신한은행	서울 중구	-	6,190,834	394,911	2,957	1981
79	D	한일합성섬유공업	경남 마산시	경남 김해시	885,611	388,108	16,652	1964
80	I	범양상선	서울 중구	-	747,678	382,281	2,900	1966
81	D	금호	서울 중구	광주 광산구	642,117	369,711	5,086	1960
82	F	광주고속	광주 동구	서울 강남구	519,696	363,244	3,505	1948
83	D	만도기계	경기 안양시	경기 평택시	364,742	350,216	5,084	1962
84	D	선경인더스트리	서울 중구	경기 수원시	547,493	346,409	3,922	1966
85	D	금성정보통신	서울 영등포구	경북 구미시	234,727	339,762	4,500	1976
86	D	화승	부산 중구	부산 사하구	68,178	338,433	1,539	1980
87	G	신세계백화점	서울 중구	-	286,056	337,034	2,699	1955
88	D	강원산업	서울 종로구	경북 포항시	354,964	335,767	2,473	1952
89	D	태평양화학	서울 용산구	경기 용인시	354,350	330,980	6,717	1945
90	D	금성산전	서울 영등포구	경남 창원시	322,408	326,872	3,362	1974
91	F	선경건설	서울 종로구	-	243,307	326,287	1,112	1962
92	K	한국장기신용은행	서울 영등포구	-	3,922,239	325,080	645	1967
93	D	롯데제과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201,796	322,000	6,123	1967
94	D	농심	서울 용산구	경기 군포시	147,475	320,223	4,782	1965
95	K	한국자동차보험	서울 중구	-	272,586	319,305	2,054	1962
96	G	세방석유	서울 강남구	-	97,782	316,225	507	1970
97	D	에스케이시	서울 중구	경기 수원시	451,616	314,792	4,605	1976
98	G	동부산업	서울 중구	강원 동해시	90,019	312,758	390	1964
99	D	대한전선	서울 중구	서울 구로구	293,246	311,708	2,873	1955
100	D	제일모직	서울 중구	대구 북구	547,445	303,742	5,277	1954

주 : 1. 순위는 매출액 기준이며, 회사명, 종업원규모, 자산액, 매출액 등은 1990년 당시 기준임.
2. A(농업 및 임업), B(어업), C(광업),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 창고 및 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N(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료: 한국능률협회. 1990. 『한국의 3000대 기업』. 서울 : 한국능률협회.

<부표 31> 우리나라 100대 기업 : 2000

순위	업종	회사명	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	종업원 규모	자산액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설립 년도
1	G	현대종합상사(주)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464	995,923	40,751,552	1976
2	G	삼성물산(주)	서울 중구	충북 음성군	4,740	7,321,044	40641602	1952
3	D	삼성전자(주)	서울 중구	경북 구미시	43,996	26,895,046	34283752	1969
4	K	삼성생명보험(주)	서울 중구	-	8,100	46,597,713	20576341	1957
5	G	(주)엘지상사	서울 영등포구	경남 양산시	2,801	1,657,827	19839220	1953
6	E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	29,522	64,529,738	18252800	1961
7	D	현대자동차(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49,023	17,967,634	18230980	1967
8	D	엘지전자(주)	서울 영등포구	경남 김해시	31,774	11,880,126	14835674	1959
9	D	에스케이(주)	서울 종로구	울산 남구	4,434	15,110,086	14021615	1962
10	G	에스케이글로벌(주)	서울 종로구	-	2,412	8,048,660	14020670	1956
11	K	교보생명보험(주)	서울 종로구	-	7,000	23,571,527	12715868	1958
12	D	포항종합제철(주)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19,275	17,766,566	11692000	1968
13	D	기아자동차(주)	서울 서초구	경기 광명시	29,857	8,169,282	10806045	1944
14	D	엘지칼텍스정유(주)	서울 강남구	-	2,650	6,242,991	10357372	1967
15	G	(주)대우	서울 중구	-	18,000	1,223,112	10338516	1963
16	J	한국전기통신공사	경기 성남시	-	46,095	23,232,592	10322157	1981
17	D	(주)하이닉스반도체	경기 이천시	경기 이천시	19,000	17,899,846	8902435	1949
18	K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	10,978	81,521,573	8851893	1963
19	K	대한생명보험(주)	서울 영등포구	-	5,962	15,796,311	8762098	1946
20	D	에스오일(주)	서울 영등포구	울산 울주군	2,500	5,063,167	8083287	1976
21	K	(주)한빛은행	서울 중구	-	9,924	69,845,987	7382216	1899
22	D	현대정유(주)	충남 서산시	-	2,770	4,652,459	7152002	1964
23	D	현대중공업(주)	울산 동구	울산 동구	25,788	9,942,139	6626143	1973
24	F	현대건설(주)	서울 종로구	-	24,238	7,257,750	6384858	1947
25	E	한국가스공사	경기 성남시	-	2,386	8,402,125	6111900	1983
26	K	(주)한국주택은행	서울 영등포구	-	12,310	60,436,610	6000607	1967
27	J	에스케이텔레콤(주)	서울 종로구	-	2,962	9,053,632	5760945	1984
28	I	(주)대한항공	서울 중구	-	14,484	10,747,959	5558992	1962
29	D	(주)엘지씨아이	서울 영등포구	전북 익산시	12,257	6,472,787	5420738	1962
30	K	(주)조흥은행	서울 중구	-	6,809	50,331,452	5225147	1943
31	I	현대상선(주)	서울 종로구	-	3,889	7,372,892	5189503	1976
32	K	(주)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	4,964	45,518,737	4752753	1967
33	G	롯데쇼핑(주)	서울 중구	경기 안산시	5,000	5,154,880	4550421	1979
34	K	성화재해상보험(주)	서울 중구	-	4,188	7,295,602	4467041	1952
35	K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	6,505	49,557,219	4364221	1961

순위	업종	회사명	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	종업원 규모	자산액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설립 년도
36	K	(주)신한은행	서울 중구	-	4,241	47,511,481	4,344,501	1981
37	I	(주)한진해운	서울 영등포구	-	2,117	5,350,839	4,267,014	1949
38	D	삼성전기(주)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시	26,000	3,440,332	4,228,960	1973
39	F	대한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	3,247	14,565,287	4,165,094	1962
40	D	삼성에스디아이(주)	서울 중구	울산 울주군	19,743	4,037,088	4,161,789	1970
41	D	(주)삼보컴퓨터	경기 안산시	경기 안산시	1,769	1,308,136	4,010,895	1980
42	G	대우자동차판매(주)	인천 부평구	-	4,428	1,822,900	3,932,406	1966
43	D	(주)호성	서울 마포구	울산 남구	7,098	4,701,205	3,893,292	1957
44	D	인천정유(주)	인천 서구	-	639	2,590,602	3,878,772	1969
45	K	(주)하나은행	서울 중구	-	3,387	41,774,149	3,610,630	1971
46	D	삼성중공업(주)	서울 강남구	경남 거제시	7,165	5,820,040	3,583,545	1974
47	G	(주)신세계	서울 중구	-	7,066	2,675,295	3,501,837	1963
48	F	한국토지공사	경기 성남시	-	1,870	14,090,951	3,277,147	1980
49	G	(주)한화	서울 중구	인천 남동구	4,974	3,960,366	3,247,738	1952
50	D	대우전자(주)	서울 중구	인천 서구	5,831	2,623,160	3,194,008	1971
51	D	대우중공업(주)	인천 동구	서울 구로구	15,602	357,304	3,150,519	1937
52	K	체이스맨햇던은행	서울 중구	-	100	2,772,208	3,145,765	1968
53	J	케이티프리텔(주)	서울 강남구	-	1,409	3,316,764	2,780,254	1997
54	D	(주)노키아티엘씨	경남 마산시	경남 마산시	800	756,988	2,749,339	1984
55	F	엘지건설(주)	서울 중구	-	2,819	2,382,534	2,707,864	1969
56	K	(주)한미은행	서울 중구	-	3,841	28,168,812	2,685,488	1983
57	D	인천제철(주)	인천 동구	인천 동구	4,668	3,880,876	2,608,218	1964
58	D	금호산업(주)	서울 종로구	광주 광산구	9,839	4,490,092	2,548,706	1960
59	G	(주)쌍용	서울 중구	-	369	523,140	2,515,302	1954
60	F	대림산업(주)	서울 영등포구	전남 여수시	5,500	3,295,873	2,489,432	1947
61	K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서울 중구	-	2,980	2,541,197	2,430,813	1968
62	K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서울 종로구	-	3,130	2,938,542	2,430,182	1955
63	D	두산중공업(주)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	6,500	3,559,475	2,409,059	1962
64	D	엘지필립스엘시디(주)	서울 영등포구	경북 구미시	3,500	3,428,839	2,389,712	1985
65	K	엘지캐피탈(주)	서울 강남구	-	2,588	11,335,666	2,387,087	1988
66	K	(주)제일은행	서울 종로구	-	4,574	25,452,572	2,341,470	1929
67	K	현대증권(주)	서울 영등포구	-	3,325	5,137,248	2,284,105	1962
68	D	현대석유화학(주)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	1,440	3,353,912	2,215,603	1988
69	M	(주)스포츠펙크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	15	4,230	2,215,171	1999
70	K	엘지화재해상보험(주)	서울 중구	-	3,125	2,783,243	2,212,049	1959
71	D	제일제당(주)	서울 중구	서울 강서구	4,902	2,925,224	2,182,477	1953
72	I	아시아나항공(주)	서울 강서구	-	6,789	3,932,188	2,097,142	1988
73	G	(주)포스텔	서울 강남구	-	233	562,338	2,090,204	1983
74	F	에스케이건설(주)	서울 종로구	-	2,605	1,703,722	2,065,151	1962

순위	업종	회사명	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	종업원 규모	자산액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설립 년도
75	J	(주)신세기통신	서울 중구	-	1,024	2,182,651	2,053,877	1994
76	K	(주)서울은행	서울 중구	-	3,949	19,139,511	2,001,492	1959
77	D	현대모비스(주)	서울 영등포구	경남 창원시	4,872	2,402,297	1,976,189	1977
78	F	한국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	4,040	22,743,623	1,936,560	1969
79	D	(주)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부산 영도구	4,493	3,052,772	1,926,160	1962
80	D	엘지전선(주)	서울 영등포구	경기 군포시	3,606	1,641,533	1,926,139	1969
81	K	동양해상보험(주)	서울 영등포구	-	1,933	1,571,275	1,920,154	1922
82	F	현대산업개발(주)	서울 강남구	경기 여주군	2,302	3,950,054	1,908,135	1977
83	D	여천엔씨씨(주)	서울 중구	-	1,003	1,648,960	1,894,137	1999
84	K	삼성카드(주)	서울 중구	-	1,800	10,585,890	1,866,880	1988
85	J	(주)엘지텔레콤	서울 강남구	-	1,545	2,259,841	1,850,641	1996
86	K	흥국생명보험(주)	서울 종로구	-	2,000	3,543,965	1,848,609	1958
87	K	대한재보험(주)	서울 종로구	-	194	1,500,856	1,834,974	1963
88	K	알인제일생명보험(주)	서울 서초구	-	2,300	3,982,777	1,783,340	1954
89	D	한화석유화학(주)	서울 중구	전남 여수시	1,908	3,484,747	1,782,992	1974
90	D	삼성종합화학(주)	충남 서산시	-	1,100	2,390,756	1,779,171	1988
91	D	쌍용자동차(주)	경기 평택시	경남 창원시	5,700	2,093,233	1,778,479	1954
92	E	에스케이가스(주)	서울 영등포구	울산 남구	207	718,540	1,768,564	1985
93	K	엘지투자증권(주)	서울 영등포구	-	2,505	7,358,298	1,752,280	1969
94	D	한국담배인삼공사	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	4,468	3,827,117	1,705,003	1987
95	E	엘지칼텍스(주)	서울 서초구	-	215	679,919	1,697,453	1984
96	D	(주)두산	서울 중구	경기 부천시	4,426	3,355,995	1,681,454	1933
97	G	(주)현대백화점	서울 강남구	경기 안양시	4,653	1,587,955	1,668,231	1968
98	D	제일모직(주)	서울 강남구	경북 구미시	2,179	1,571,646	1,660,659	1954
99	K	대우증권(주)	서울 영등포구	-	3,391	4,860,463	1,630,840	1970
100	D	대우통신(주)	경기 성남시	인천 서구	2,863	1,266,141	1,588,476	1967

주 : 1. 순위는 매출액 기준이며, 회사명, 종업원규모, 자산액, 매출액 등은 2000년 당시 기준임.
2. A(농업 및 임업), B(어업), C(광업),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 창고 및 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N(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료: 매일경제신문사. 2000. 『회사연감』.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4) 2002년 경영혁신 대상기관 :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 공기업

<부표 32> 2002년 경영혁신 대상 공공기관

부처	계	투자·출자기관	출연(자)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계	214	21	101	33	59
재정 경제 부	15	한국조폐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증권연구원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증권전산
한국 은행	1				한국은행
교육 인적 자원 부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민족문화추진회	사립학교교원연금 관리공단
외교 통상 부	3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법무 부	2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국방 부	4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전쟁기념사업회	
행정 자치 부	7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과학 기술 부	11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병원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 과학문화재단	대덕연구단지관리본 부

부처	계	투자·출자기관	출연(자)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문화 관광 부	25	한국관광공사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서울예술단 영화진흥위원회 청소년상담원 한국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대한체육회 생체협 한국방송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언론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 자회사(6개) >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서울평화상문화재단 경북관광개발공사
농림 부	4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마사회
산업 자원 부	34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산업기술평가원 요업기술원 한국수출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산업디자인진흥원	대한상사중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신발피혁연구소 염색기술연구소 한국건축연구원 섬유개발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기기유회시험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자: 한국무역정보통신 종합전시장)
정보 통신 부	13	한국전기통신공사 - 자회사(1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센터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우체국예금보험 지원단 별정우체국연합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우정사업진흥회
보건 복지 부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처	계	투자·출자기관	출연(자)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환경부	3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노동부	8		근로복지공단 (자산재의료관리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학교법인기능대학		
건설교통부	15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고속철도건설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부산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
해양수산부	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부산항부두관리협회 인천항부두관리공사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상위험물검사소 컨테이너부두공단
경찰청	2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중소기업청	3		중소기업진흥공단 (자회사 :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인증센터)		
국가보훈처	2		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금융감독위	2		자산관리공사		금감원
총리실	42		연합회소속 출연(연) - 경제사회연구회 - 인문사회연구회 - 기초기술연구회 - 산업기술연구회 - 공공기술연구회		

주 : 통상 정부투자·출자기관을 공기업으로 분류하나 본 연구에서는 출연(자)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도 공기업에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기획예산처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pb.go.kr/>).

5) 시·군별 센터좌표

<부표 33> 시·군별 센터좌표

행정구역	X축 좌표	Y축 좌표	지역CODE	행정구역	X축 좌표	Y축 좌표	지역CODE
서울특별시	198470.84	450725.72	1100000	원주시	283377.75	422978.72	3202000
부산광역시	388470.75	192416.25	2100000	강릉시	365920.03	470159.75	3203000
대구광역시	344658.81	258757.50	2200000	동해시	381846.59	446930.59	3204000
인천광역시	173003.81	444923.03	2300000	태백시	377604.66	406669.28	3205000
광주광역시	184569.28	186132.47	2400000	속초시	333528.38	521817.00	3206000
대전광역시	234742.97	317535.19	2500000	삼척시	387827.25	419952.56	3207000
울산광역시	401635.22	231329.27	2600000	홍천군	293966.78	469599.56	3231000
경기도	-	-	3100000	횡성군	292641.88	448415.38	3232000
수원시	201801.66	421805.84	3101000	영월군	331502.59	411354.44	3233000
성남시	210723.39	435705.56	3102000	평창군	332732.81	457276.03	3234000
의정부시	205897.88	473686.03	3103000	정선군	351390.41	431702.00	3235000
안양시	194381.97	435066.25	3104000	철원군	231565.23	526611.63	3236000
부천시	180746.66	446523.09	3105000	화천군	260433.59	517482.47	3237000
광명시	187648.66	440062.22	3106000	양구군	286957.38	520429.72	3238000
평택시	199065.59	394296.09	3107000	인제군	309987.00	511723.09	3239000
동두천시	206864.41	492231.13	3108000	고성군	322089.69	541567.88	3240000
안산시	183581.83	425626.25	3109000	양양군	342812.81	503650.50	3241000
고양시	186835.83	464143.25	3110000	충청북도	-	-	3300000
과천시	201102.91	439281.72	3111000	청주시	242353.31	350362.00	3301000
구리시	212414.00	457808.53	3112000	충주시	277572.38	391043.97	3302000
남양주시	221110.84	465197.56	3113000	제천시	303455.88	398701.59	3303000
오산시	204776.88	408774.94	3114000	청원군	241594.56	360155.28	3331000
시흥시	182785.41	433883.22	3115000	보은군	264712.25	333386.88	3332000
군포시	194144.88	429941.50	3116000	옥천군	258347.06	313383.78	3333000
의왕시	199141.56	430416.84	3117000	영동군	271262.75	297911.47	3334000
하남시	219519.53	448341.19	3118000	진천군	239742.33	376865.00	3335000
용인시	218676.31	416056.56	3119000	괴산군	272184.59	365443.31	3336000
파주시	183896.63	484727.00	3120000	음성군	252019.03	386738.25	3337000
이천시	239997.03	412802.63	3121000	단양군	325547.50	391483.84	3338000
안성시	226654.98	395778.94	3122000	충청남도	-	-	3400000
김포시	165768.53	463657.16	3123000	천안시	221908.13	368237.75	3401000
양주군	201444.41	480054.97	3131000	공주시	206202.03	332292.19	3402000
여주군	257684.39	425469.53	3132000	보령시	164144.91	316031.69	3403000
화성군	185504.13	411149.34	3133000	아산시	197947.67	367622.94	3404000
광주군	226890.44	435112.56	3134000	서산시	145341.63	364648.97	3405000
연천군	204981.59	512887.63	3135000	논산시	214869.78	302856.81	3406000
포천군	221051.13	498522.31	3136000	금산군	241793.27	293577.28	3431000
가평군	237394.97	485532.28	3137000	연기군	224351.47	343226.44	3432000
양평군	251423.72	447871.75	3138000	부여군	188412.44	304956.97	3433000
강원도	-	-	3200000	서천군	174938.44	292024.38	3434000
춘천시	268961.34	487939.19	3201000	청양군	186875.45	326187.84	3435000

행정구역	X축 좌표	Y축 좌표	지역CODE	행정구역	X축 좌표	Y축 좌표	지역CODE
홍성군	164378.64	340961.06	3436000	안동시	358177.56	347021.88	3704000
예산군	180327.44	355984.09	3437000	구미시	323300.63	302838.22	3705000
태안군	126200.00	361060.19	3439000	영주시	339320.63	374057.59	3706000
당진군	169568.63	376942.00	3439000	영천시	373796.88	280555.94	3707000
전라북도	-	-	3500000	상주시	298619.91	328698.59	3708000
전주시	211288.59	262910.97	3501000	문경시	301278.63	356065.16	3709000
군산시	178955.38	274701.97	3502000	경산시	364032.69	262452.75	3710000
익산시	200117.06	281921.09	3503000	군위군	354960.91	301145.59	3731000
정읍시	191522.97	236112.41	3504000	의성군	343342.00	319386.47	3732000
남원시	240757.19	213982.28	3505000	청송군	389496.16	317759.13	3733000
김제시	192407.88	256898.59	3506000	영양군	390986.63	356460.44	3734000
완주군	218736.27	270679.19	3531000	영덕군	405234.50	332303.78	3735000
진안군	241467.44	260134.78	3532000	청도군	362306.88	244648.44	3736000
무주군	265023.38	271382.97	3533000	고령군	318757.66	249725.70	3737000
장수군	250087.47	240848.20	3534000	성주군	311818.09	269886.38	3738000
임실군	220986.02	233927.31	3535000	칠곡군	332726.44	280374.03	3739000
순창군	215058.41	218519.94	3536000	예천군	331456.56	352143.06	3740000
고창군	163645.48	220397.77	3537000	봉화군	369646.44	382705.31	3741000
부안군	170340.03	244598.92	3538000	울진군	403678.69	380026.75	3742000
전라남도	-	-	3600000	울릉군	417392.00	469419.84	3743000
목포시	144349.06	148091.55	3601000	경상남도	-	-	3800000
여수시	260402.81	144281.08	3602000	창원시	351327.94	198377.64	3801000
순천시	235012.31	166460.36	3603000	마산시	334655.06	186886.36	3802000
나주시	175608.25	167845.17	3604000	진주시	300959.56	191920.80	3803000
광양시	261538.66	170718.03	3606000	진해시	360419.25	184302.44	3804000
담양군	197419.44	201269.77	3631000	통영시	328090.75	151180.75	3805000
곡성군	221459.19	194338.33	3632000	사천시	291237.47	179772.92	3806000
구례군	245645.09	194369.56	3633000	김해시	370337.75	198922.61	3807000
고흥군	231477.50	129074.71	3635000	밀양시	361612.75	224598.53	3808000
보성군	215568.75	148234.22	3636000	거제시	346965.75	154160.42	3809000
화순군	202766.50	171043.05	3637000	양산시	386714.84	213428.09	3810000
장흥군	191847.78	135698.56	3638000	의령군	317792.50	211162.31	3831000
강진군	179531.69	128808.02	3639000	합안군	331540.69	199776.44	3832000
해남군	160517.39	112263.93	3640000	장녕군	336097.81	223811.47	3833000
영암군	166939.27	144854.70	3641000	고성군	316825.13	171753.45	3834000
무안군	151216.44	165107.00	3642000	남해군	286564.38	146236.70	3835000
함평군	156955.13	183199.45	3643000	하동군	271951.97	183669.98	3836000
영광군	151469.22	199881.28	3644000	산청군	283950.31	208882.20	3837000
장성군	178157.55	206097.22	3645000	함양군	265496.13	229074.36	3838000
완도군	204230.63	107173.38	3646000	거창군	279625.56	251586.20	3839000
진도군	130860.73	108921.69	3647000	합천군	306177.78	231119.97	3840000
신안군	115963.47	180949.23	3648000	제주도	-	-	3900000
경상북도	-	-	3700000	제주시	159074.41	12132.16	3901000
포항시	404493.75	289840.59	3701000	서귀포시	154714.63	-6715.64	3902000
경주시	404549.50	260239.20	3702000	북제주군	179107.61	15965.71	3931000
김천시	295245.84	284405.16	3703000	남제주군	137337.03	-6490.40	3932000

Ⅲ. 기업본사의 입지결정에 관한 설문조사표

1) 기업본사 이전경험이 없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표

기업본사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중추기능을 대표하는 기업본사의 이전과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응답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관련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순수한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방경제의 앞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 월
국토연구원장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우 431-712)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 김창현

☎ (031) 380-0155 ; FAX (031) 380-0482~3 ; chyunkim@krihs.re.kr

< 일 반 사 항 >

- 회사명 : (업종 :)
- 기업본사
 - 소재지 :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 본사근무인원() 전체 종사자수()
- 주력공장
 - 소재지 :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 근무인원 :
- 응답자 연락처
전화번호 : E-mail :

(※ 좋은 의견을 제안하신 분께 저희 연구원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거나 자리를 마련하여
고견을 좀더 자세히 듣고자 하오니 연락처를 부탁드립니다)

1. 귀사의 본사가 현재 소재지에 입지함으로써 기업운영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다음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기입해 주십
시오.....

- | | |
|----------------------|--------------------------|
| ① 구입·판매 등 영업활동이 유리 | ⑦ 관련단체·업계와의 정보교환과 수집이 용이 |
| ② 자금조달 등 금융거래가 유리 | ⑧ 지점·공장 등 회사전체의 관리가 편리 |
| ③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용이 | ⑨ 교통·생활환경이 쾌적 |
| ④ 정부·행정기관 등과의 접촉이 편리 | ⑩ 관련업종의 집중 |
| ⑤ 국제적 업무활동이 편리 | ⑪ 대학·연구시설의 집중 |
| ⑥ 기술정보의 입수가 용이 | ⑫ 기업이미지 향상 |
- ※기타 ()

2. 귀사의 본사가 현재 소재지에 입지함으로써 기업운영상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다음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기입
해 주십시오.

- | | |
|----------------------|--------------------------|
| ① 구입·판매 등 영업활동이 불리 | ⑦ 관련단체·업계와의 정보교환과 수집이 곤란 |
| ② 자금조달 등 금융거래가 불리 | ⑧ 지점·공장 등 회사전체의 관리가 불편 |
| ③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곤란 | ⑨ 교통·생활환경이 불량 |
| ④ 정부·행정기관 등과의 접촉이 불편 | ⑩ 관련업종의 부재 |
| ⑤ 국제적 영업활동이 불편 | ⑪ 대학·연구시설의 미비 |
| ⑥ 기술정보의 입수가 곤란 | ⑫ 기업이미지가 나빠짐 |
- ※ 기타 ()

- ① 높은 땅값과 사무실 임대료
- ② 교통혼잡 등 도시환경이 나쁨
- ③ 사업확장에 따른 공간부족을 해소
- ④ 사업축소에 따른 사무실 이전
- ⑤ 본사기능의 집약화
- ⑥ 주력공장으로의 이전
- ⑦ 고객에 대한 영업활동의 강화
- ※ 기타 ()
- ⑧ 인건비·교통비·복리후생비 등이 증가
- ⑨ 기업의 이미지 제고
- ⑩ 관련 업종의 집중
- ⑪ 종업원의 주거·문화환경이 나쁨
- ⑫ 대학·연구시설의 집적
- ⑬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유치열의

8.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이전지원센터(건설교통부)를 통하여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지원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①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의 감면과 과세이연
- ②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의 감면과 면제
- ③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장기저리 지원
- ④ 토지공사에 의한 이전부지의 매입
- 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배후도시 개발권의 부여
- ⑥ 국가·지자체에 의한 진입도로 등 SOC시설 지원
- ※ 기타 ()

9.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요인 몇 가지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 중요도에 따라 2가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 ① 국가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
- ② 각종 정보의 수도권 집중
- ③ 각종 권한의 중앙집중
- ④ 양호한 교육기관의 부족
- ⑤ 주거환경의 불량
- ⑥ 도로·철도 등 인프라 부족
- ⑦ 농지전용 등 토지이용규제
- ⑧ 높은 물류·통신비용
- ⑨ 문화·여가공간의 부족
- ※ 기타 ()

10. 향후 교통·정보통신수단이 더욱 고속화·고도화되는 등 각 부문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업본사의 지방분산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요소를 다음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

- ① 정보통신수단의 고도화
- ② 고속전철 등 교통수단의 발달
- ③ 정부의 권한과 역할 축소
- ※ 기타 ()

11. 향후 귀사의 본사를 이전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 주십시오.

- ① 선호지역 :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② 선호이유 :

12. 만일 장래에 귀사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어느 부문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순서대로 2가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

- | | | | |
|------------|----------------------|-----------|--------------|
| ① 본사 전체 | ④ 영업기획·관리 | ⑤ 국제업무 | ⑧ 정보처리·시스템개발 |
| ② 총괄기획·경영 | ⑥ 총괄업무관리(생산·구매·유통관리) | ⑨ 기술·연구개발 | |
| ③ 재무·회계·총무 | ⑦ 광고·선전·조사 | ⑩ 교육·연수 | |
| ※ 기타 () | | | |

13. 기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설문조사표를 통하여 충분한 내용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별도자료의 첨부나 E-mail을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실 경우 저희 연구결과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2) 기업본사 이전경험이 있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표

기업본사의 이전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중추기능을 대표하는 기업본사의 이전과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응답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관련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순수한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방경제의 앞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 월
국토연구원장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우 431-712)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 김창현

☎ (031) 380-0155 ; FAX (031) 380-0482~3 ; chyunkim@krihs.re.kr

< 일 반 사 항 >

- 회사명 : (업종 :)
- 기업본사
 - 소재지 :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 본사근무인원() 전체 종사자수()
- 주력공장
 - 소재지 :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 근무인원 :
- 응답자 연락처
전화번호 : E-mail :

(※ 좋은 의견을 제안하신 분께 저희 연구원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거나 자리를 마련하여 고견을 좀더 자세히 듣고자 하오니 연락처를 부탁드립니다)

1. 귀사의 본사를 이전한 연도와 이전하기 이전의 본사소재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① 본사의 이전연도 : 년도(월 무렵)

② 이전하기 전의 본사소재지 :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2. 귀사의 본사를 이전함에 있어서 본사전체를 이전하였습니까? 아니면 본사의 일부기능만을 이전하였습니까?

① 본사 전체를 이전

② 본사의 일부기능만을 이전

3. 본사의 일부기능만을 이전하였을 경우 이전한 부문을 아래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총괄기획·경영 ④ 국제업무 ⑦ 정보처리·시스템개발

② 재무·회계·총무 ⑤ 총괄업무관리(생산·구매·유통관리) ⑧ 기술·연구개발

③ 영업기획·관리 ⑥ 광고·선전·조사 ⑨ 교육·연수

※ 기타 ()

4. 귀사의 본사 전체 또는 일부기능을 이전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중에서 그 중요도에 따라 2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 ① 높은 땅값과 사무실 임대료
- ② 교통혼잡 등 도시환경이 나쁨
- ③ 사업확장에 따른 공간부족을 해소
- ④ 사업축소에 따른 사무실 이전
- ⑤ 본사기능의 집약화
- ⑥ 주력공장으로의 이전
- ⑦ 고객에 대한 영업활동의 강화
- ※ 기타 ()
- ⑧ 인건비·교통비·복리후생비 등이 증가
- ⑨ 기업의 이미지 제고
- ⑩ 관련 업종의 집중
- ⑪ 종업원의 주거·문화환경이 나쁨
- ⑫ 대학·연구시설의 집적
- ⑬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유치열의

5. 귀사의 본사가 현재 소재지에 입지함으로써 기업운영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다음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 ① 구입·판매 등 영업활동이 유리
- ② 자금조달 등 금융거래가 유리
- ③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용이
- ④ 정부·행정기관 등과의 접촉이 편리
- ⑤ 국제적 업무활동이 편리
- ※ 기타 ()
- ⑥ 기술정보의 입수가 용이
- ⑦ 관련단체·업계와의 정보교환과 수집이 용이
- ⑧ 지점·공장 등 회사전체의 관리가 편리
- ⑨ 교통·생활환경이 쾌적
- ⑩ 기업이미지 향상

6. 귀사의 본사가 현재 소재지에 입지함으로써 기업운영상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다음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 ① 구입·판매 등 영업활동이 불리
- ② 자금조달 등 금융거래가 불리
- ③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곤란
- ④ 정부·행정기관 등과의 접촉이 불편
- ⑤ 국제적 영업활동이 불편
- ※ 기타 ()
- ⑥ 기술정보의 입수가 곤란
- ⑦ 관련단체·업계와의 정보교환과 수집이 곤란
- ⑧ 지점·공장 등 회사전체의 관리가 불편
- ⑨ 교통·생활환경이 불량
- ⑩ 기업이미지가 나빠짐

7. (본사를 서울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만 해당) 귀사에서 서울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서울지사(지점)가 수행하는 기능을 2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 ① 총괄기획·경영
- ② 재무·회계·총무
- ③ 영업기획·관리
- ④ 국제업무
- ⑤ 총괄업무관리(생산·구매·유통관리)
- ⑥ 광고·선전·조사
- ⑦ 정보처리·시스템개발
- ⑧ 기술·연구개발
- ⑨ 교육·연수
- ※ 기타 ()

8. 귀사의 본사를 이전함에 있어서 정부지원이 있었거나 향후 기업의 본사이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지원사항에 대해 그 중요도에 따라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①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의 감면과 과세이연 | ④ 토지공사에 의한 이전부지의 매입 |
| ②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의 감면과 면제 | 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배후도시 개발권의 부여 |
| ③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장기저리 지원 | ⑥ 국가·지자체에 의한 진입도로 등 SOC시설 지원 |

※ 기타 ()

9.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요인 몇 가지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 중요도에 따라 2가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 | | | |
|------------------|------------------|-----------------|
| ① 국가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 | ④ 양호한 교육기관의 부족 | ⑦ 농지전용 등 토지이용규제 |
| ② 각종 정보의 수도권 집중 | ⑤ 주거환경의 불량 | ⑧ 높은 물류·통신비용 |
| ③ 각종 권한의 중앙집중 | ⑥ 도로·철도 등 인프라 부족 | ⑨ 문화·여가공간의 부족 |

※ 기타 ()

10. 향후 교통·정보통신수단이 더욱 고속화·고도화되는 등 각 부문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업본사의 지방분산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요소를 다음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 ① 정보통신수단의 고도화 ② 고속전철 등 교통수단의 발달 ③ 정부의 권한과 역할 축소
 ※ 기타 ()

11. 향후 귀사의 본사를 이전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 주십시오.

- ① 선호지역 :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② 선호이유 :

12. 만일 장래에 귀사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어느 부문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 | | | | |
|------------|----------------------|-----------|--------------|
| ① 본사 전체 | ④ 영업기획·관리 | ⑤ 국제업무 | ⑧ 정보처리·시스템개발 |
| ② 총괄기획·경영 | ⑥ 총괄업무관리(생산·구매·유통관리) | ⑨ 기술·연구개발 | |
| ③ 재무·회계·총무 | ⑦ 광고·선전·조사 | ⑩ 교육·연수 | |
| ※ 기타 () | | | |

13. 기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설문조사표를 통하여 충분한 내용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별도자료의 첨부나 E-mail을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실 경우 저희 연구결과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